

연구보고서 2018-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정해식 · 김미곤 · 여유진 · 김성근 · 류연규 · 우선희 · 김근혜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실장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8-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정해식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다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ISBN 978-89-6827-554-8 93330

한국 사회가 구성원들의 불안, 불신과 불만의 팽배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진통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임에도, 우리는 애써 이런 진통을 무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걱정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가 설정했던 발전의 길 위에서 모든 구성원을 적절히 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발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로 주장을 수용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구성원과 사회의 역량 강화가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만들어 가는 전제가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을 개념 정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각 주제의 사회조사를 2014년부터 지속 실시하면서,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려 왔다. 2018년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갈등의 지점을 계층, 젠더, 세대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각종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9월 중 전국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는 ‘사회통합’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개발한 2018년의 조사 자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해식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위원, 김근혜 연구위원과 서울신학대학교 류연규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김성근 박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우리의 사회통합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본 보고서는 사회갈등이라는 광범위한

주제가 가지는 모호함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선명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일부의 문제의식 설정과 표현들은 연구진 각자의 의견에 따라 서술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0
제2장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31
제1절 뉴스와 통계로 본 사회갈등	33
제2절 이론적 논의	65
제3장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73
제1절 서론	75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76
제3절 분석 결과	8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7
제4장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119
제1절 서론	12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22
제3절 분석 결과	129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4
제5장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159
제1절 서론	16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63

제3절 분석 결과	17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91
제6장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193
제1절 서론	195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96
제3절 분석 결과	200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23
제7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25
제1절 연구 요약	22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231
참고문헌	237
부록 1: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243
부록 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69
부록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292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5개년 지속 문항 비교	379

표 목차

〈표 1-1〉 각 연도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주제와 문제의식	19
〈표 1-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3
〈표 1-3〉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24
〈표 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2014-2018년) 지속 문항	25
〈표 1-5〉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26
〈표 1-6〉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27
〈표 1-7〉 2014년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문항	27
〈표 1-8〉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28
〈표 1-9〉 2016년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문항	29
〈표 1-10〉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주요 문항	29
〈표 2-1〉 계층갈등 연관어	36
〈표 2-2〉 세대갈등 연관어	41
〈표 2-3〉 젠더갈등 연관어	46
〈표 2-4〉 부모소득과 대학유형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 수준	58
〈표 2-5〉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61
〈표 2-6〉 연령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63
〈표 2-7〉 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68
〈표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76
〈표 3-2〉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항	79
〈표 3-3〉 평등에 대한 인식 문항	80
〈표 3-4〉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문항	81
〈표 3-5〉 (재)분배에 대한 태도 문항	81
〈표 3-6〉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에 대한 태도 문항	82
〈표 3-7〉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 문항	83
〈표 3-8〉 객관적·주관적 계층 분포	84
〈표 3-9〉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일치도	85
〈표 3-10〉 객관적·주관적 계층별 가구 규모와 경제적 상태	86
〈표 3-11〉 객관적 소득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8
〈표 3-12〉 주관적 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9
〈표 3-13〉 절대적 박탈 경험 여부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0

〈표 3-14〉 근로 형태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1
〈표 3-15〉 직종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1
〈표 3-16〉 경제갈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93
〈표 3-17〉 객관적 소득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94
〈표 3-18〉 주관적 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95
〈표 3-19〉 불공정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96
〈표 3-2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97
〈표 3-21〉 주관적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98
〈표 3-22〉 불평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99
〈표 3-23〉 객관적 소득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100
〈표 3-24〉 주관적 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101
〈표 3-25〉 객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102
〈표 3-26〉 주관적 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102
〈표 3-27〉 객관적 소득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104
〈표 3-28〉 주관적 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105
〈표 3-29〉 정부 개입 선호도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106
〈표 3-3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07
〈표 3-31〉 주관적 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10
〈표 3-32〉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112
〈표 3-33〉 주관적 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113
〈표 3-34〉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114
〈표 3-35〉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안	115
〈표 3-36〉 객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115
〈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안	116
〈표 3-38〉 주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116
〈표 4-1〉 성역할태도 문항	128
〈표 4-2〉 성별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129
〈표 4-3〉 집단별 젠더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31
〈표 4-4〉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젠더 불평등 일반, 가정 내 역할, 회사 내 역할	132
〈표 4-5〉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취업 및 승진, 임금, 전반적 사회참여	135
〈표 4-6〉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	137

〈표 4-7〉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 두려움 정도	139
〈표 4-8〉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140
〈표 4-9〉 인구학적·경제적 특성별 성별 갈등 원인 인식 차이	142
〈표 4-10〉 미투운동 효과에 대한 인식	143
〈표 4-11〉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별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144
〈표 4-12〉 분야별 여성 수 증가의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145
〈표 4-1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146
〈표 4-14〉 인구·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147
〈표 4-15〉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인적 태도·경험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149
〈표 4-16〉 젠더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열 로짓 분석	151
〈표 4-17〉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3
〈표 5-1〉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2
〈표 5-2〉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3〉 연령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4〉 분배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5〉 세대별 평균 가구소득(균등화)과 개인소득	175
〈표 5-6〉 세대별 정부 개입에 대한 동의 정도	188
〈표 6-1〉 공공갈등의 유형	199
〈표 6-2〉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의 인구학적 변수 분포 분석	209
〈표 6-3〉 다양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중요성에 대한 의견	214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243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244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244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245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246
〈부표 1-6〉 지역별 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49
〈부표 1-7〉 지역별 소득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0
〈부표 1-8〉 지역별 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1
〈부표 1-9〉 지역별 거주 유형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1
〈부표 1-10〉 지역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2

〈부표 1-11〉 지역별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3
〈부표 1-12〉 지역별 가구원 수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4
〈부표 1-13〉 지역별 거주 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4
〈부표 1-14〉 지역별 거주 유형별 총소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5
〈부표 1-15〉 표본 집계구배분: 방안 1	256
〈부표 1-16〉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2	257
〈부표 1-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3	258
〈부표 1-18〉 표본 집계구의 추출가중치 기초통계	262
〈부표 1-19〉 표본 집계구의 가중치 조정	262
〈부표 1-20〉 표본 집계구의 래킹 가중치의 기초통계	263
〈부표 1-21〉 가구 기본 가중치 기초통계	264
〈부표 1-22〉 래킹비 조정 인자	264
〈부표 1-23〉 가구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265
〈부표 1-24〉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266
〈부표 1-25〉 개인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267
〈부표 1-26〉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268
〈부표 3-1〉 가구소득과 현재 생활에 대한 인식	292
〈부표 3-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293
〈부표 3-3〉 어제 행복했던 정도	294
〈부표 3-4〉 어제 우울했던 정도	295
〈부표 3-5〉 삶에 만족하는 정도	296
〈부표 3-6〉 사회 신뢰도	297
〈부표 3-7〉 타인신뢰	298
〈부표 3-8〉 타인이 나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299
〈부표 3-9〉 타인의 이기심에 대한 인식	300
〈부표 3-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301
〈부표 3-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302
〈부표 3-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03
〈부표 3-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04
〈부표 3-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305
〈부표 3-15〉 자원봉사	306

〈부표 3-16〉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07
〈부표 3-17〉 투표여부	308
〈부표 3-18〉 이념적 성향	309
〈부표 3-19〉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310
〈부표 3-20〉 자신이 속하는 사회의 소득계층	311
〈부표 3-21〉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312
〈부표 3-22〉 일생동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313
〈부표 3-23〉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314
〈부표 3-24〉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	315
〈부표 3-25〉 현재 우리 사회 평가: 배려/포용도	317
〈부표 3-26〉 현재 우리 사회 평가: 신뢰도	317
〈부표 3-27〉 현재 우리 사회 평가: 활력도	318
〈부표 3-28〉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제/미래에 대한 희망도	318
〈부표 3-29〉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청/이해도	319
〈부표 3-30〉 집단 간 갈등 정도	320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323
〈부표 3-3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327
〈부표 3-33〉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328
〈부표 3-34〉 직업별 적정 월평균 수입(실수령액 기준)	330
〈부표 3-35〉 존경할 만한 정도	335
〈부표 3-36〉 정부 개입의 정당성	337
〈부표 3-37〉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	339
〈부표 3-38〉 다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출 정도	340
〈부표 3-39〉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동의하는 의견	343
〈부표 3-40〉 우리 사회에 대한 다음의 3가지 태도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	344
〈부표 3-41〉 다음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345
〈부표 3-42〉 세대 간 인식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347
〈부표 3-43〉 이슈에 대한 의견	348
〈부표 3-44〉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진술 동의 정도	351
〈부표 3-45〉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이 이루어진 정도	352
〈부표 3-46〉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중복 응답)	353

〈부표 3-47〉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겪는 빈도	355
〈부표 3-48〉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진술 동의 정도	357
〈부표 3-49〉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 중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360
〈부표 3-50〉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일·가정양립을 위한 선택	361
〈부표 3-51〉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	362
〈부표 3-52〉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1) 성폭력 감소	363
〈부표 3-53〉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성차별 완화	364
〈부표 3-54〉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3) 성별 갈등 완화	365
〈부표 3-55〉 다음 분야의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정도	366
〈부표 3-56〉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	368
〈부표 3-57〉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69
〈부표 3-58〉 각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도	370
〈부표 3-59〉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372
〈부표 3-60〉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시민들의 참여,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도	374
〈부표 3-61〉 정부가 현재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375
〈부표 3-62〉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377
〈부표 3-63〉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적절한 역할	378
〈부표 4-1〉 응답자 특성별 행복도	379
〈부표 4-2〉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380
〈부표 4-3〉 응답자 특성별 우울도	381
〈부표 4-4〉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대한 신뢰도	382
〈부표 4-5〉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383
〈부표 4-6〉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384
〈부표 4-7〉 자원봉사 횟수	385
〈부표 4-8〉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85
〈부표 4-9〉 국가 자긍심	386
〈부표 4-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	388
〈부표 4-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 정도	389
〈부표 4-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0

〈부표 4-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1
〈부표 4-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2
〈부표 4-15〉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수준	393
〈부표 4-1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394
〈부표 4-1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간의 갈등	395
〈부표 4-1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396
〈부표 4-19〉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397
〈부표 4-2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98
〈부표 4-21〉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399
〈부표 4-22〉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400

그림 목차

[그림 2-1] 계층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35
[그림 2-2] 계층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36
[그림 2-3] 199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7
[그림 2-4] 200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8
[그림 2-5] 201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9
[그림 2-6] 세대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40
[그림 2-7] 세대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41
[그림 2-8] 199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2
[그림 2-9] 200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3
[그림 2-10] 201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4
[그림 2-11] 젠더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44
[그림 2-12] 젠더갈등에 대한 시기 및 분야별 기사 빈도(1990~2017)	45
[그림 2-13] 2010년대 젠더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6
[그림 2-14] 갈등의 보도 건수 추이	47
[그림 2-15] 영역별 갈등 보도 건수 추이	48
[그림 2-16] 지니계수 추이	50
[그림 2-17] 중산층 인구 비율 추이	51
[그림 2-18]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 중위소득 격차	51
[그림 2-19] 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52
[그림 2-20]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8월 기준)	53
[그림 2-21] 성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54
[그림 2-2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54
[그림 2-23] 연령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55
[그림 2-24]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25~64세)의 교육 수준	56
[그림 2-25] 소득분위별 월 교육비 지출 수준	57
[그림 2-26] 부모소득에 따른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	57
[그림 2-27]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
[그림 2-28] 연도별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	60
[그림 2-2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62
[그림 2-30]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71

[그림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77
[그림 3-2] 객관적 계층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 분포	85
[그림 3-3]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	95
[그림 3-4] 객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100
[그림 3-5]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101
[그림 5-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각 연도 8월 기준)	165
[그림 5-2]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8월 기준)	166
[그림 5-3]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별 근로자 비율 변화	166
[그림 5-4]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집단별 종사직종 변화	168
[그림 5-5] 연령집단별 소득, 순자산의 변화	169
[그림 5-6] 시기별·연령계층별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70
[그림 5-7] 세대별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분포	175
[그림 5-8] 세대별 이념적 성향 분포	176
[그림 5-9] 세대별 이념적 성향-주관적 계층과의 결합	176
[그림 5-10] 세대별 사회통합 평가 점수	177
[그림 5-11] 세대별 갈등 인식 점수	178
[그림 5-1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2018)	179
[그림 5-13]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자유와 평등 우선에 대한 응답 분포	180
[그림 5-14] 세대별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 분포	180
[그림 5-15]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응답 분포	181
[그림 5-16] 세대별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 분포	182
[그림 5-17] 사회 이슈에 대한 세대별 지향	183
[그림 5-18] 세대별 사회변화 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	184
[그림 5-19]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한 동의 정도	185
[그림 5-20] 세대별 성공을 위한 요소-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186
[그림 5-21] 세대별 분배 기준에 대한 인식-동의 비율	187
[그림 5-22]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	189
[그림 5-23]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평균과의 차이	190
[그림 6-1]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 발생 원인별	201
[그림 6-2] 성별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203
[그림 6-3] 교육수준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204

[그림 6-4] 지역 간 갈등 인식과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 차이 관계	205
[그림 6-5] 환경-개발 갈등에 대한 인식과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 관계	206
[그림 6-6]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208
[그림 6-7] 갈등 발생 빈도와 발생 원인 - 갈등 유형별로	212
[그림 6-8] 정부의 민주적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의견	213
[그림 6-9]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관한 의견	215
[그림 6-10] 공공갈등 주체에 관한 의견의 분해	216
[그림 6-11]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견	217
[그림 6-12]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 분해	218
[그림 6-13] 여러 집단 간 협력에 관한 인식	219
[그림 6-14]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의견	221
[그림 6-15]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지역갈등 수준 분석	221
[그림 6-16]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소통문화 정착의 필요성 분석	222
[그림 7-1] 사회갈등 유형별 관리 및 조정 방향	234

Abstract <<

A Stud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¹⁾Project Head: Jung,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conflicts as people perceive and experience them. We also examine social conflicts in the context of social cohesion. To do this, we analyzed people's resources and levels of power possession, differences in values, and experiences with social conflicts. We then examined if these individual differences give ris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men and women,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socioeconomic groups. In addition, we considered public conflict to better underst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nflict management. The structural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of social conflicts and their factors this study may prove of us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 study is an extension of an earlier study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where we claimed that not only the solution to disparities and decrease of material instability are important but also the belief on the society is normally function is crucial to promote social cohesion. For that, we suggested to grasp causes and aspects of various social conflicts that most Koreans have experienced.

As a part of this study, the surve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onditions and levels of social conflicts that people perceived. The survey is especially focused on economic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power resources. And it includes questions to figure out

responses' perception of class, generation, gender and public conflicts and to analyze in-depth characters of responses and their households. Also, the questionnaires include continuous questions of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to measure the condition of social cohesion in Korea.

The report, an analysis of crucial parts of questionnaire, consists of 7 chapter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port.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it describes an outline of the study and questions of the questionnaire.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social conflicts was reviewed in Chapter 2. The chapter describes how the media has depicted generation, class, and gender conflicts since 1990. Also a problem of disparity, a cause of social conflict, is profoundly examined through data analysis on the chapter.

Chapter 3 focuses on public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s and people's attitude about redistribution. The subjective income class is a more significant axis for recognizing class conflicts than objective income class. Lower income group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our society as unfair and unequal. Regarding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elfare attitude, middle income class tends to be more conservative and to show self-interested attitudes.

Chapter 4 is about the gender conflict. On the chapter we review present and potential state of gender conflict with the social and individual aspects. Moreover, it demonstrates aspects of gender conflict and state of social and personal gender conflict based on demographical,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eople who experienced and perceived sexual discrimination or sexual abuse.

The topic of Chapter 5 is the generation conflict, specifically,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The conflict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and following value changes are mainly reviewed on the chapter. Chapter 6 is an analysis of public conflict. It in-

cludes various opinions regarding public conflicts,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frequency of occurrenc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main agent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and their roles.

Finally, Chapter 7 is a summary of th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social cohesion, conflicts, which is caus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of members' needs, scarce resources and power, should be well managed. To deal with that, it is essential to intervene and response based on interested parties in the case of various government plans.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Conflict, Gender Conflict, Generation Confli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올해 제5차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우리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사회통합과 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 사업 연도별로 2014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인식조사(1차)’, 2015년에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차)’, 2016년에는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조사(3차)’, 2017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4차)’를 수행한 바 있다.

2018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인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해식 외, 2017, p. 182). 경제·사회적 상황이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이에 갈등 유형별 갈등의 양상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경험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2018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에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권력 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갈등 상황을 주목하여,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이를 개인 특성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매년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지속 문항들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거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짚어보고, 3장부터 6장까지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공공갈등에 대해 각각 심층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7장에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다음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먼저 3장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계층갈등의 승화 방식과 사회통합의 제고 방안에 대해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축은 무엇인가, 객관적 계층(계급)인가, 주관적 계층인식인가. 둘째, 현재의 갈등 수준, 분배 상태, 사회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인식에서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자세와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변수를 갈등의 중심축으로써 사회계층으로 규정하였다. 주관적 계층인식(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이상), 객관적 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절대적 박탈 경험자, 근로 형태(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직종(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생산직, 단순노무직, 비경제활동인구)으로 구분하여 갈등 인식의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은 객관적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실제 소득보다는 종합적으로 인식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갈등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이 소득, 경제활동상태, 직종과 같은 단일 차원의 지위 변수보다는 다차원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요인의 총합으로서의 주관적 계층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격차뿐 아니라 다차원적 격차와 편견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22점,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2.59점을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법집행의 불평등 수준이 부(재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의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신뢰는 낮고, 묻지마 범죄, 가정 해체,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세대 내·세대 간 계층이동은 열린사회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징표이며,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에 기대어 열정과 노력을 담보해 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다양한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 세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저소득층 혹은 하위계층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회가 다소 불평등하더라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열려 있거나(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97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상당히 닫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평등한 사회인 경우(대표적으로 서구 복지국가)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조차 닫혀 있는 사회에서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너무 늦지 않게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이동의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치 영역—경제갈등, 공정성과 평등 등에 대한 인식—에서 중산층 혹은 중간층이 고소득층 혹은 중상층에 비

해 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생활 영역—국가 개입, 복지 확대, 증세 등—에서 고소득층이나 중상층보다 더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간층이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간계층의 경우 복지를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될 경우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잔여적 복지국가일수록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강하고 제도적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일수록 친복지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현 상황에서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확대되는 것은 중장기적 복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통해 친복지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현대 사회에서 젠더갈등의 현상은 다른 갈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살인, 상해와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는 신체적 폭행, 성폭행, 성희롱 등의 폭력으로, 역할 갈등이나 모순으로, 최근에는 SNS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두려움, 공포, 긴장 상황 역시 젠더갈등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성별 인식 또는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역시 젠더갈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분석의 일환으로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젠더갈등의 현재적, 잠재적 현황을 파악하고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차별 혹은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젠더갈등 양상과 젠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찾아본 결과, 성별보다는 미혼, 청년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투운동 등으로 젠더갈등이 첨예화된 시점에서 보수적 성향의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심각해진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갈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성폭력·성차별 위험 수준이 사회적 젠더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야간 통행 시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이나 두려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이혼 또는 미혼의 경우, 청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성폭력 성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두려움과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돌봄 부담, 세대, 노동시장 취약성, 성폭력·성차별 위험 등의 군열 지점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돌봄 부담, 청년 세대, 취약한 노동자 등은 이미 사회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 이들이 젠더갈등 측면에서도 취약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성별 갈등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따라서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의 섹슈얼리티 관련 젠더갈등의 표출은 그 자체로 성폭력과 성차별 완화의 효과를 꾀하면서도 또 다른 젠더갈등의 이슈 촉발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갈등 관리 기제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조사 대상 중에서는 소수만 관찰되었지만, 모집단 내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폭력·성차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폭력·성차별을 경

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 즉 스트레스 관리, 심리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며,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만연한 성폭력, 성차별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사회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젠더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며,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상적 폭력과 갈등의 구체적 발생지점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예방적,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한국 사회에서 세대를 다룸에 있어서는 세대의 가치관을 살피는 동시에 세대의 규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이때 주도적 가치관의 변화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특정한 인구학적 세대의 규모가 아니라 가치관 중심으로 연대한 세대의 규모이다. 2010년 이래 우리 사회가 세대갈등을 주제로 다루는 양상은 점차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을 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이 정치적 의도로 설정되었다는 비판(조현연, 김정석, 2016)과 세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세대 게임’에서 세대가 편의적으로 활용되어(전상진, 2018) 세대 간 갈등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5장에서는 세대 문제를 가치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별 가치 경향이 과연 서로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을 글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세대 간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 특히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세대일수록 부정적 평가가 심해지며,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는 우리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포용사회, 역동적 사회라는 판단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갈등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젠더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였다.

한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다. 성공의 요소와 분배 기준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1974~1989년생이 부유한 집안 출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산업화 세대(1942~1953년생)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1990년 이후 출생 세대 역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집단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언론매체의 세대 간 갈등 과장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와 산업화 세대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즉, 이들은 언론이 어느 정도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견해에 가까운 경향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인에 대한 강조,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젊은 세대는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주거, 일자리는 개인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청년들의 반대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주거 방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 정책의 답습에 대한 의견 표시이며, 적절한 임금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일자리에 대한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요구가 새롭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이해와 이를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실천이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공공갈등이란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관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공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관의 충돌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갈등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모두 줄 수

있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체적인 갈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갈등의 경우와 달리 공공갈등은 오히려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과 깊이 관련된 이슈를 둘러싸고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갈등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공공갈등이란 언제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6장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갖가지 의견으로부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의 기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와 역할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아직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기제를 정교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론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공공갈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험적인 사실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현실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나 지자체, 혹은 다른 정책집행 주체들이 정책 집행 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혹은 갈등이 아닌 단순한 의견 차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공공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통문화의 부재'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었다. '정책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주민의 요구 증대', 혹은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 또한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책 과정이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신뢰 회복'과 '소통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지적된 점도 이러한 시사점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통령이 존재할 뿐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네 번째로 공공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정책관련 집단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위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점점 더 공공갈등 발생의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실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공공갈등 해결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공갈등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때로 정부는 공공갈등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조사에서도 사람들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공권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한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8년 현재 집단 간의 갈등 지점, 분배 공정성, 복지 정책의 지향, 사회 가치관, 성평등과 성역할 인식, 공공갈등 등 우리 사회의 제반 사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사회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을 경제적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계층, 젠더, 세대의 프리즘을 이용

하여 살펴봄으로써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제 설정은 갈등은 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능적 갈등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도 한국 사회의 갈등,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최근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자원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를 통합된 사회라 부를 수 있다. 기존의 분배 체계, 가치관 체계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갈등 조정의 과정과 능력이 장기적으로 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통합된 사회를 위해 필요함을 전체 구성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명확하였다.

다양한 갈등 심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대안 모색의 시작은 단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체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협상 조정자의 행위로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틀로 접근하는 것(서문기, 2004, p. 209)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갈등의 지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것인지 가치관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정부가 당사자인지 조정자인지에 따라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운영 체계가 달라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밝히는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복합적 지점에 있었다. 이를 위한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역할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해관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정자로서 각종 이해관계의 배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공공갈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적 상황이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갈등 유형별 갈등 경험과 갈등 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증가하고 있는 갈등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잠식하여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등을 일거에 제거할 수는 없다. 갈등의 여러 지점들은 서로 '비지배적 상호의존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박길성, 2013, p. 11). 보수와 진보의 가치 충돌 지점인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은 대립적일 수는 있지만 배타적일 수는 없다. 세대갈등에서도 산업화 세대의 주된 가치인 물질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가 퇴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배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 갈등은 서로의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갈등 양상이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홍덕률(2003)이 산업화 세대가 물질주의와 성장주의, 반공·반북·친미·냉전의식, 국가주의·권위주의·집단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배경을, 정보화 세대가 탈정치·탈이념의 첫 세대일 배경을 설명하고서도, 세대만을 사회변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이유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를 묘사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에 기반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 표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는 이들에게는 청년, 풍요로움, 자유로움의 일반적인 생각의 연결고리가 작동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작동한다. 세대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한 갈등을 다른 갈등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경시하는 태도도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의 복잡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세대갈등을 중심

축으로 보더라도 권력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의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한다(박재홍, 2010). 이에 박길성(2013, p. 63)은 한국의 갈등 양상을 복합(compound), 복잡(complex), 압축(compressed)의 3C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사회통합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사회통합 저해 요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취약한 상태이다. 일정 정도의 사회갈등은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2009년 기준 정치적, 경제적, 민족문화적,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요인지수는 28개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음에도,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나타났다(정영호, 고숙자, 2014).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갈등 표출을 억압하던 시기를 지나 갈등 관리의 시기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다. 한때는 갈등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경험도 있었고, 다른 한때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배격과 일방적 가치 전파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도 있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갈등에 대한 접근은 공공갈등의 관리, 갈등의 해소 및 통합 도모와 같이 단기적인 특정 사안 중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갈등의 지점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에서 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 반복되는 이해 시도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 분배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은 이전 시기보다 더 다양해지고, 심도가 깊어지는 상황에 있다. 이에 갈등의 유형별로 양상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경험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갈등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위해서는 사회갈등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년 사회통합과 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에서는 심리적·정서적 차원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회적·개인적 불안 인식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인식 수준을 매개로 하여 사회통합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정해식 외, 2017). 그리고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 사회제도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정해식 외, 2017, p. 182).

〈표 1-1〉 각 연도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주제와 문제의식

연도	주제	문제의식
2014	사회통합과 행복	사회통합이 잘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 사회통합 요소 특성 분석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신뢰도, 사회활동, 사회갈등 인식, 불공정 인식 - 사회통합 요소 특성과 행복도의 관계 분석
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한국의 낮아지는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세대별 사회이동 현황, 교육성취와 사회이동, 사회이동 경험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	사회통합 국민 인식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모습은 무엇인가? - 사회의 모습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 희망 사회로 구분하고, 한국사회의 모습을 각각의 지점에서 평가 -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 박탈, 갈등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개인의 심리·정서적 차원의 문제 상황 경험, 물질적 문제 상황 경험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우리 국민의 심리, 정서적 불안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공정성, 부패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자료: 1)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3)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4)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2017년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다루면서 사회적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질 체계로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다뤘다(정해식 외, 2017, p. 42). 사회통합을 도덕적 통합, 정서적 유대를 넘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정해식 외, 2017, pp. 42-43).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과잉통합(over-integration)의 문제, 갈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정해식 외, 2017, p. 43). 이것이 2018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의 주제를 ‘사회갈등’이라고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2018년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은 사회갈등의 실태와 요인을 밝힘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근거 기반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경제적 불평등

의 한 측면인 소득 및 자산 격차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 교육의 질적 차이의 심화, 사회적 지위의 격차 문제, 정보 접근과 활용 등에 있어서의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임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격차는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동시에 다층적이다. 청년 비정규직의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M자 곡선,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중고령 임시·일용직의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를 보여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출산과 양육의 문제, 노후 준비의 문제를 함께 끄집어낸다. 이러한 다차원, 다층의 격차 및 불평등의 원인은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즉 사회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구조를 살펴볼 때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보수되면서 가져왔던 구조-경제·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구조 자체가 갈등을 내재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앞서 진행하였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조사와 동일 문항을 일부 구성하여 한국인의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이러한 시계열적 조망이 가능하도록 매해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각 연도별로 주요한 설문 특성을 정리한다.¹⁾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짚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논한다. 대부분의 갈등 관련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에도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경향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갈등

1) 이러한 지속문항에 대한 기초분석 값은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5개년 지속 문항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차원이 개인, 집단,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갈등 원인도 사회적 자원의 분배 및 보상을 둘러싼 구체적 내용부터 체제나 이념 등 가치갈등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문기, 2004, p. 199). 이에 본 연구는 가치관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며, 본 보고서의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우리 국민의 인식을 살피는 사회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의 현실과 관련한 주요 담론을 미리 짚어 볼 필요가 있어, 이를 2장의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2장의 뒷부분에는 사회갈등과 관련한 일반 이론과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 연구 사업으로서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이론적 입장을 설명하도록 한다.

3장은 사회갈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본 연구가 계층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계층을 중심으로 희소 자원과 생산물, 부를 둘러싼 분배, 재분배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의 심각성,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놓고, 사회계층에 따라 갈등 인식과 분배 지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4장은 젠더갈등과 사회통합을 다룬다. 젠더갈등이 다차원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의 젠더갈등만을 다루기에는 2018년 현재 한국 사회는 광범위하고 격렬한 젠더갈등을 경험 중이다. 이에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젠더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젠더와 성차별 혹은 성폭력의 경험 및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5장은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을 다룬다. 한국 사회는 뒤 세대가 앞 세대가 보여 왔던 사회·경제적 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고, 젊은 세대가 보이는 가치관의 차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세대, 특히 청년세대가 한국 사회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6장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을 다룬다. 정부가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양식은 200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고, 갈등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견이 점점 더 반영되고 있다. 이에 공공갈등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다음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가. 연구 방법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논의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조사 결과 자료의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외 문헌 검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조사 설계를 위한 것으로, 사회갈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설문조사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선행 조사와 연구 배경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섯 번째 조사로서, 올해 조사는 우리 국민의 사회갈등의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표 개발, 이론 및 실증 연구 방법론 검토, 원자료 분석 등 조사 연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연구에 반영하였다.

나. 조사 설계

1)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경험과 인식 수준, 그리고 갈등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의 만 19세~75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²⁾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대면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집계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집

2) 이 조사는 면접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문서번호 제2018-28호, 2018.6.27.)의 연구승인을 득하였다.

계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서비스(GLS) 용도로 별도 선정한 단위로서 평균적으로 약 200개 가구가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된다. 집계구는 조사구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사구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집계구 내 세대 수, 가구 수, 1인가구 수(비율), 아파트 수(비율)의 정보가 제공되어 확률비례 표집이 가능하고,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LS)를 활용하여 집계구 지도를 출력하여 기존의 조사구 요도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500개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으로 추출하였으며 각 집계구 당 8개 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총 4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가구 내 최종 응답자는 무작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생일법(1~12월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가 가구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³⁾

〈표 1-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1999년 5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5세 이하(1942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빠른 생일자)
표본 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 내 4,000명(완료 3,873명)
표본 추출	집계구 활용 조사 -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기간	2016년 6월 22일~9월 4일
조사 내용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응답자 일반사항,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유형별(계층, 세대, 젠더, 공공)갈등 경험 및 인식 등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위와 같은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 완료된 총 사례 수는 3873명으로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표본 설계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길 바란다.

2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표 1-3〉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873	100.00
성별	남성	1,967	50.79
	여성	1,906	49.21
연령	20대 이하	734	18.96
	30대	722	18.65
	40대	826	21.32
	50대	822	21.23
	60대 이상	768	19.84
지역1	수도권	1,948	50.30
	비수도권	1,925	49.70
지역2	대도시	1,700	43.89
	중소도시	1,752	45.24
	농어촌	421	10.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0	16.00
	중하층	1,419	36.65
	중간층	1,639	42.32
	중상층(상층)	195	5.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0	13.96
	200만 원대	580	14.99
	300만 원대	744	19.22
	400만 원대	572	14.77
	500만 원 이상	1,435	37.07
학력	중졸 이하	549	14.41
	고졸	1,580	41.48
	대졸 이상	1,680	44.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39	34.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66	12.02
	고용주, 자영자	825	21.31
	무급가족 종사자	108	2.80
	실업자	147	3.79
	비경제활동인구	988	25.5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6	12.2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82	61.45
	숙련 및 기술직	503	18.35
	단순노무 종사자	217	7.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53	69.43
	비정규직	552	30.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1	24.82
	중도적	1,785	46.08
	진보적	1,127	29.11

주: 1) 월평균 소득, 학력 독립변수는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하였음.

2) 개인표준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설문 개요

가) 5개년 지속 문항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수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신규로 개발된 문항 이외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연속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조사까지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된 문항은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위한 ‘가구 및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 경제 상태’, ‘행복 및 만족도’, ‘사회적 자본’,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에 관한 것이다. 5개년 지속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2014-2018년) 지속 문항

구분		주요 문항
가구 및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원 구성 및 가구 형태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가구 형태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직업, 직업안정성, 고용 형태 등
	주택 및 거주 형태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구 경제 상태	생활비	총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소득	가구 총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자산과 부채	거주 주택 가격,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부채 총액
행복 및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행복도, 우울감
사회적 자본		대인 및 사회 신뢰도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기부 활동
		투표 여부
		사회집단 간 갈등 인식 정도
		정부의 역할 인식 정도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		주관적 소득계층인식, 이념적 성향, 국가에 대한 자긍심

나) 2018년 주요 문항

2018년 조사는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갈등에 초점을 맞춰 문항을 개발하였다.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의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며, 사회갈등의 적절한 관리와 극복은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회갈등이 나타나는 현시점에서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통합의 수준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분배 정의와 관련한 문제는 계층 집단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은 세대갈등, 성평등 인식과 성차별 경험 등은 젠더를 둘러싸고 이뤄질 갈등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표 1-5〉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구분	문항
계층갈등	계층갈등 정도, 집단 간 계층갈등 정도, 불평등 정도, 성공 요인 인식, 임금의 결정 요인 및 직종별 적정 임금 수준,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 정부 개입의 타당성 인식, 중세에 대한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지출 선호, 부모 부양 인식, 직장 폭력 경험 및 대응 방법 등
세대갈등	자유와 평등 선호, 가치관 변화에 대한 선호, 세대갈등 인식, 경제성장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선호, 통일에 대한 인식 등
젠더갈등	분야별 성평등 달성 정도, 성차별 경험 여부 및 원인, 외모 비하 및 밤길 두려움 경험 정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 육아에 대한 인식, 미투운동 취지 및 효과 인식 등
공공갈등	공공갈등의 빈도 인식,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 인식, 공공갈등 관리 정도 및 주제, 방법 인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력 정도 인식,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식 등

다) 이전 연도 주요 문항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해석을 위한 기본 문항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각 연도별 주제 모듈을 설정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행복, 2015년 조사에서는 사회이동, 2016년 조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문제를 주제 모듈로 설정하였다.

〈표 1-6〉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연도	주제
2014년	사회통합과 행복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2016년	사회통합 국민 인식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4년 1차 연도 조사에서는 사회통합 수준 제고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행복의 수준과 그 결정 요인, 그리고 사회통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때 개발된 행복 및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문항은 이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는 행복을 주제로 한 모듈로서 이후 조사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의 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1-7〉 2014년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문항

구분	문항
스스로에 대한 평가	- 평소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매사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평가
행복의 조건	- 행복의 조건 (공정한 민주사회에 사는 것, 적절한 수입,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등) - 행복할 수 있는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6.

다음으로 2차 연도 2015년 조사에서는 OECD가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회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응답자 본인(현 세대)과 응답자 부모(전 세대) 및 자녀(미래 세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조사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응답자 본인의 첫 직장 입사 당시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변화를 통해 세대 내 이동도 함께 파악하였다.

〈표 1-8〉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세대	시점	주요 조사 항목
본인 (destination, second origin)	현재(2015. 5. 31.)	가구 특성 및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위세, 경제 상태(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은 3개월 평균) 사회통합 인식 등
	첫 직장 입사 당시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본인이 15세(중3) 즈음	성장한 곳, 경제적 수준, 학업 성적 등
부모(origin)	본인이 15세(중3) 즈음 (부모가 40세 즈음)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첫째 자녀 (second destination)	첫째 자녀가 15세(중3) 즈음	첫째 자녀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6.

2016년 3차 연도 조사에서는 사회자본과 사회이동성 등을 통해 파악되는 사회통합의 상태와 더불어 이 조건들과 무관하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통합 상태를 파악하였다. 주관적인 사회통합의 상태는 직관적인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문항과 다양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상에 우리 사회가 근접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진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6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태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국제비교를 위해 기존 문항을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보완하거나 대체하였다.

4차 연도인 2017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와 신뢰 및 갈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사회병리적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접근하여 우울, 자살 생각, 음주, 스트레스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사회·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공정성 및 다툼이나 갈등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사회·심리적 상태와의 관계, 나아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는 개인적 차원의 불안, 후자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불안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표 1-9〉 2016년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문항

구분	문항		
사회통합 수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 평가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	사회적 배제(포용성) 수준	경제적 지원, 그룹 간 격차 축소, 다양성 인정	
	사회적 자본 수준	신뢰 증대, 참여 증진	
	사회이동성 수준	기회의 제공, 두터운 중산층	
	갈등 관리 수준	갈등 조정, 그룹 간 협력 등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 (10년 전 — 현재 — 10년 후)	(배제 사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포용 사회)
	(불신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신뢰 사회)
	(침체된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 사회)
	(불안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 사회)
	(갈등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협조 사회)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7.

〈표 1-10〉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주요 문항

구분	문항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우울	
	자살 생각	자살 생각 및 자살 생각의 이유
	부정적 생활 경험	경험 유무 및 가장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시기
	흡연	현재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	음주 빈도, 폭음의 빈도
	사행활동 경험	사행활동 경험, 장시간 또는 고비용 투자한 사행활동
	스트레스	
	아노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신뢰 및 갈등 인식	위험 인식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이용 여부, 이용 시 어려움, 그 이유
	사회문제의 원인	
	다툼이나 갈등 경험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 가족 이외 갈등 경험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p. 18.

제 2 장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제1절 뉴스와 통계로 본 사회갈등

제2절 이론적 논의

2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제1절 뉴스와 통계로 본 사회갈등

2장 1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담론의 변화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격차와 관련된 실태를 뉴스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 담론은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의 보도 양상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인즈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격차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단면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뉴스로 보는 사회갈등 담론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인즈’를 활용하였다. 빅인즈는 1990년부터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47개 언론사로부터 수집된 뉴스를 빅데이터화하여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이다. 뉴스는 정치, 경제, 문화 등 8개 분야(상세 77개)로 분류되며, 범죄, 사고, 사회, 재해 4개 분야(상세 54개)로도 분류된다. 뉴스 분석을 위한 키워드 분석 방법으로는 형태소 분석과 바이그램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형태소 분석은 키워드를 문장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검색하여 키워드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바이그램은 키워드를 두 글자 단위로 잘라 검색하여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뉴스를 검색할 수 있지만 두 글자 이상 키워드의 경우 잘못된 뉴스가 검색될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⁵⁾

본 보고서에서는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

4) 여기서 갈등 관련 사안을 뉴스기사를 통해 살펴보는 이유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이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이다.

5) ‘여론조사’ 검색 시 형태소 분석은 ‘여론조사 AND 여론 AND 조사’로 검색, 바이그램은 ‘여론 AND 론조 AND 조사’로 검색된다.

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 단어나 형태소가 같지만 주제와 연관되지 않은 기사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추출된 기사를 검토하여 중복기사(동일 언론사의 동일 기사)와 단순한 도서 및 공연·영화 내용 소개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실태와 관련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⁶⁾ 분석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이며, 10년 단위로 각 유형의 갈등 경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언론사⁷⁾는 지역종합지를 제외한 중앙지, 경제지, 방송사를 포함하였으며, 주제 분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IT_과학 분야, 사건 사고 분류에서는 범죄, 사회 분야를 선택하였다.

가. 계층갈등

계층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계층갈등) OR (빈부갈등)’으로 검색하였다. 이는 계층갈등은 일반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갈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자와 부자 간의 갈등에 대한 기사를 함께 검색하기 위함이다. 계층갈등에는 이외에도 노사갈등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특정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갈등담론 검토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득계층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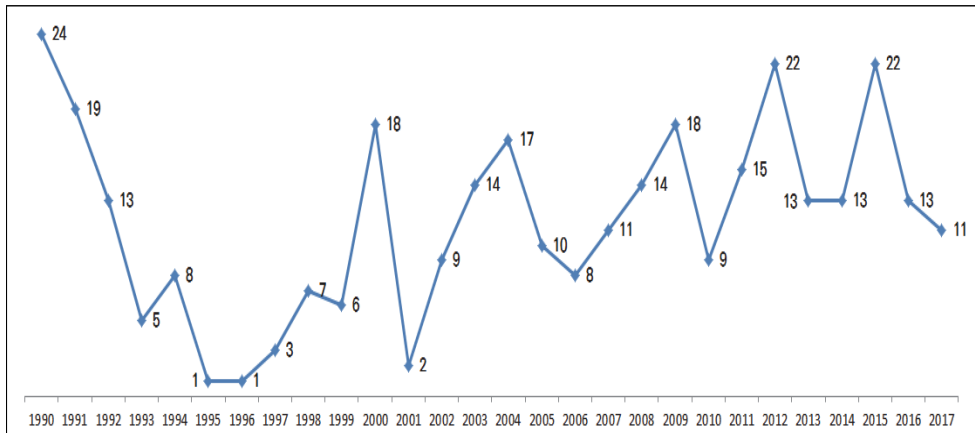
계층갈등에 대한 분석 결과, 1990년대 기사는 103건이 추출되었으나 중복 기사 및 해당 단어를 포함하지만 계층갈등과 관련 없는 기사를 제외한 87건의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2017년) 기사는 각각 169건, 210건이 추출되었으나, 121건, 118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에 계층갈등에 관한 기사가 가장 적었으며,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0년대가 2017년까지 분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층갈등’이 언급된 기사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빅카인즈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된 기사 중 인사, 부고, 동정, 포토 기사를 분석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있다.

7) 빅카인즈에 수집된 기사는 중앙지 중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박대민(2016)에 따르면 방송사를 포함해 더 많은 수의 뉴스 미디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2-1] 계층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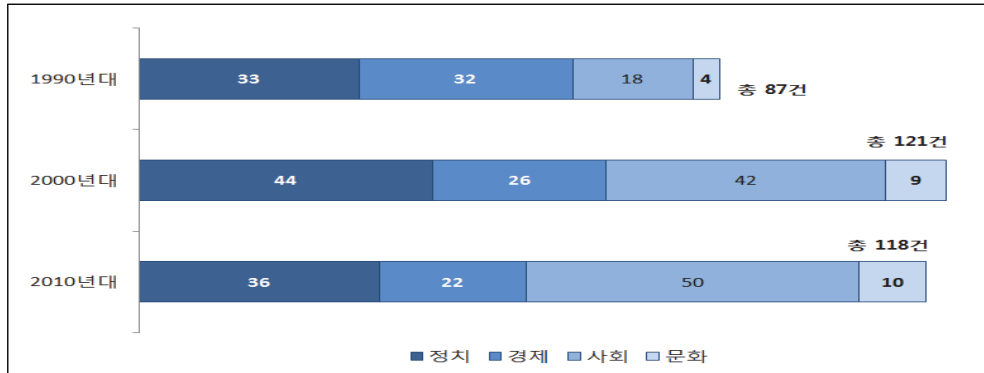
(단위: 건)



‘계층갈등’으로 추출된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치’영역은 선거, 정계 인사의 발언 및 인터뷰,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관한 기사이며, ‘경제’영역은 경제정책과 향후 경제전망, 경제적 양극화 및 빈곤, 일자리 등에 관한 기사이고, ‘사회’영역은 일반적인 사회현상 진단(사회조사 결과) 및 개선 과제, 사건·사고 등에 관한 기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영역은 종교계 인사의 발언과 (특정 작품이 아닌) 방송·문화 경향에 대한 기사 등이 포함된다.

1990년대에는 사회영역보다는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계층갈등에 대한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영역에서 계층갈등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사회영역 계층갈등 보도는 18건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보도는 42건으로 약 35%, 2010년대 보도는 50건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영역의 기사들은 정계 인사의 계층갈등에 대한 선언적 발언이 주를 이루고, 경제영역의 기사들은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IMF 등의 경제대책 및 경기상황 등과 관련되어 계층갈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사회영역의 기사들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범죄 등 보다 피부로 와 닿는 계층갈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층갈등의 문제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점차 넘어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 계층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시기(10년 단위)별 계층갈등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층갈등과 연관된 키워드 중 관련성이 높은 5개(동일 가중치인 경우 6개) 단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지역간’, ‘중산층’, ‘과소비’, ‘불로소득’, ‘경제민주화’, ‘금융실명제’, 2000년대에는 ‘사람들’, ‘정치권’, ‘집단지기주(의)’, ‘저소득층’, ‘공직자’, 2010년대에는 ‘양극화’, ‘대한민국’,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사람들’,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표 2-1〉 계층갈등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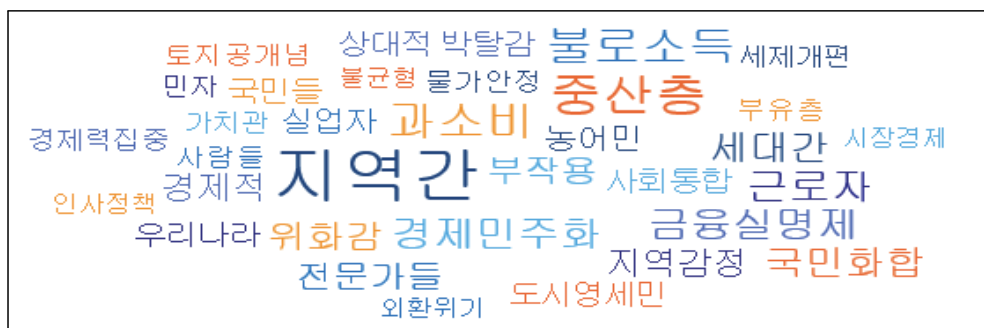
시기	계층갈등 연관어
1990년대	지역간, 중산층, 과소비, 불로소득, 경제민주화, 금융실명제
2000년대	사람들, 정치권, 집단이기주(의), 저소득층, 공직자
2010년대	양극화, 대한민국,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사람들, 우리나라

주: 연관성 정도 순으로 5위(가중치가 같을 경우 공동 5위, 6개)까지 나열된 것임.

먼저 1990년대 계층갈등 보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계층갈등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지역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계층갈등 기사에서 ‘지역간’ 갈등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계층갈등 보도는 정치영역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정치영역의 계층갈등 기사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지역갈등이 계층갈등 못지않은 갈등의 주요 영역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나머지 4개의 계층갈등을

보면 이 당시 계층갈등은 부유층(일부 중산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제도 정착 과정에서 음성자금의 양성화가 과소비를 조장하여 계층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보도, 1997년 IMF 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상황에서 일부 부유층 및 불로소득자의 과소비가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보는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제별 문제, 각종 경제 부조리 등)이 계층 간 갈등 폭을 심화시킨다는 기사 등도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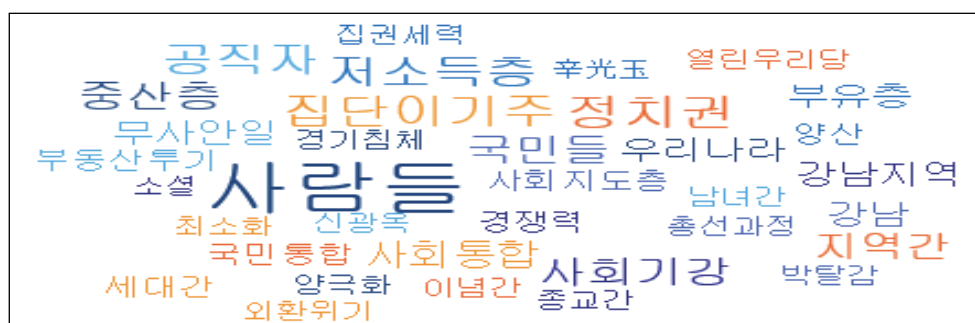
[그림 2-3] 199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한편 2000년대에는 ‘사람들’이란 단어가 계층갈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선 시기 후보자들의 공약 기사, 사건·사고(용산참사, 고급승용차 방화 등) 기사, 집회(쇠고기 촛불시위 등) 기사 등이 주로 계층갈등과 ‘사람들’이 함께 언급된 기사들인데, 이는 앞서 계층갈등의 유형별 빈도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층갈등이 좀 더 사람들의 실생활 영역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계층갈등을 관리 및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 16~18대 국회의원 선거, 17대 대선 후보 선출 등과 관련하여 계층갈등을 조장,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으며, 2000년 총선 과정에서 지역·계층 간 갈등과 함께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또한 연관어 ‘공직자’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계층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지도층과 ‘공직자’ 등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들이 다수 보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연관어 ‘저소득층’은 계층갈등을 다룬 기사에서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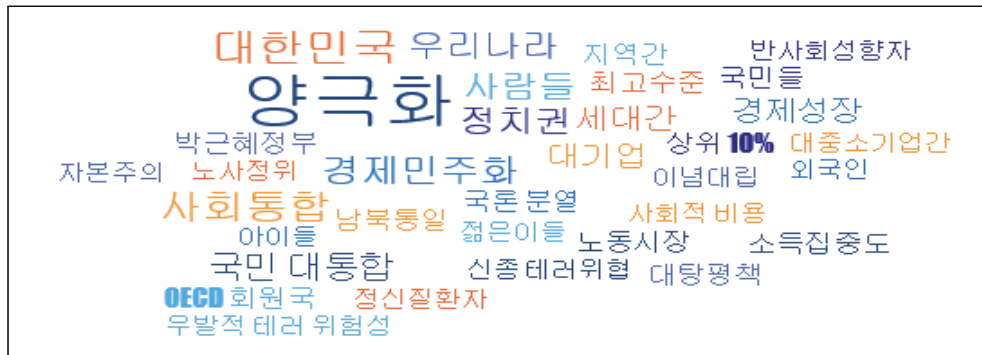
되는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사회진단 기사와 주택공급과 관련한 기사에서 계층갈등과 함께 자주 언급되었다.

[그림 2-4] 200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2010년대 계층갈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양극화’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지속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2010년대에 ‘양극화’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계층갈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의견의 양극화’, ‘분노’, ‘사회불안’, ‘범죄’,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양극화에 대해 언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양극화 고착으로 인한 계층갈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와 정부 및 정치인, 그리고 기업 등의 책임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적 불균형과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사,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로 제안된 대기업 규제의 부작용, 경제성장을 위한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기사도 보도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및 ‘우리나라’가 ‘계층갈등’과 함께 언급된 기사가 많다는 사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비해 계층갈등의 문제가 보다 국가 전체의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에 비해서는 연관성이 높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사회갈등 극복을 통해 달성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의 모습으로 사회갈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계층갈등 극복을 위한 경제적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가 언급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기사는 정권 및 이념 진영에 따라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그림 2-5] 201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주: 2010년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의미함.

앞서 살펴본 세 시기(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을 통한 계층갈등의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는 주로 경제적 문제의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특정 소득계층,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사람들’의 문제로 좀 더 일상의 영역, 각 개인의 영역으로 계층갈등의 문제가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고, 201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된 계층갈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우선 해결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의 측면에서 1990년대에는 ‘중산층’, 2000년대에는 ‘저소득층’, 2010년대에는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계층갈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는 계층갈등이 중산층 이상의 문제로서 부유층 및 일부 중산층의 ‘불로소득’과 ‘과소비’ 등이 계층갈등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터널을 지나는 2000년대에는 계층갈등이 야기되는 주요 영역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양극화’의 문제로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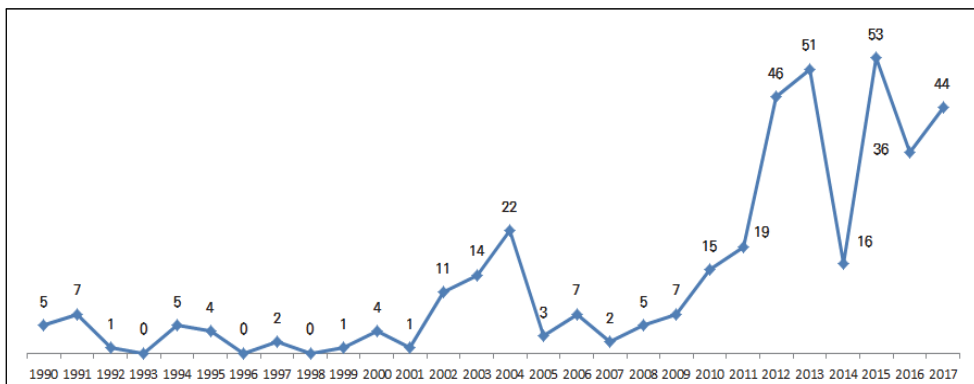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990년대 ‘지역간’ 갈등의 문제는 계층갈등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보도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연관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의 문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세대갈등

세대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은 키워드 ‘(세대갈등) OR (연령갈등)’을 통해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대 37건, 2000년대 120건, 2010년대(~2017년) 446건의 기사가 추출되었고, 중복 기사 및 해당 단어를 포함하지만 세대갈등과 관련성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90년대 25건, 2000년대 76건, 2010년대 280건 총 381건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대갈등의 기사 역시 계층갈등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대에 세대갈등 기사 빈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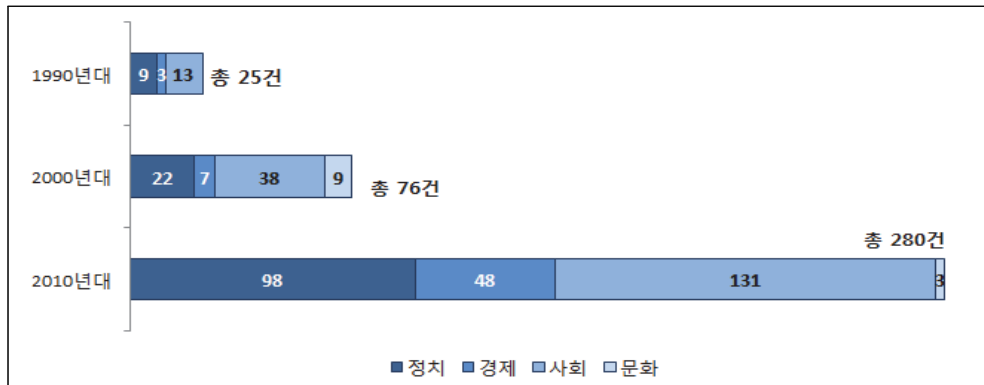
[그림 2-6] 세대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단위: 건)



세대갈등에 대한 기사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영역으로 구분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세대갈등 보도 건수 총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총 보도 건수 대비 영역별 보도 건수의 비중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세대갈등 기사는 사회영역이 약 50%(47~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영역(29~36%), 경제영역(9~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세대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시기(10년 단위)별 세대갈등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대갈등과 연관된 키워드 중 관련성이 높은 5개 단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계층간’, ‘지역감정’, ‘민주화’, ‘지역간’, ‘청소년들’, 2000년대에는 ‘사람들’, ‘빈부격차’, ‘정치권’, ‘노인들’, ‘민주화’, 2010년대에는 ‘일자리’, ‘양극화’, ‘정년연장’,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로 나타났다.

〈표 2-2〉 세대갈등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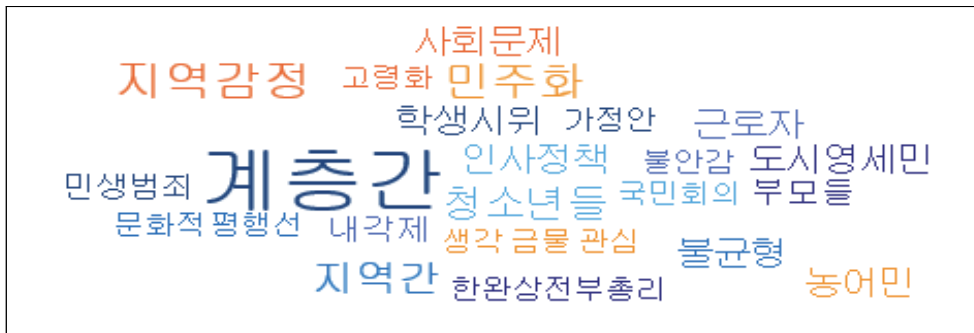
시기	세대갈등 연관어
1990년대	계층간, 지역감정, 민주화, 지역간, 청소년들
2000년대	사람들, 빈부격차, 정치권, 노인들, 민주화
2010년대	일자리, 양극화, 정년연장,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주: 연관성 정도 순으로 5위까지 나열된 것임.

먼저 1990년대의 세대갈등은 ‘계층간’ 갈등과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함께 언급되는 기사가 많았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의 동질성이 무너짐에 따라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세대갈등과 지역갈등, 계층갈등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한편 1990년대의 세대갈등은 ‘민주화’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사는 정치권의 현 세대와 이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세대 사이의 갈등을 다루기도 하였고, 세대갈등 해소와 함께 달성해야 할 문제로서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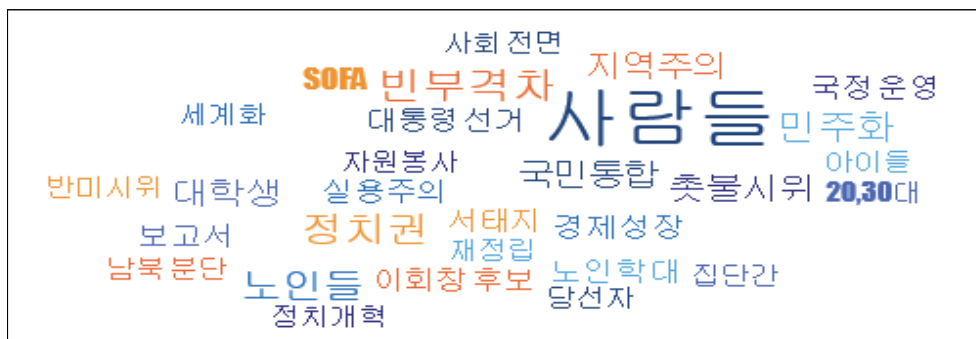
화를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세대갈등은 가정 내의 문제로 가족관계의 ‘민주화’가 언급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가정 내 문제로서의 세대갈등은 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사화되었다.

[그림 2-8] 199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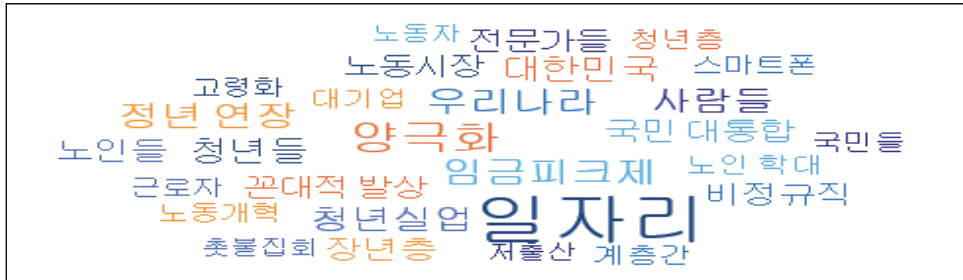
2000년대 세대갈등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촛불 광장과 선거 관련 기사에서 젊은 사람들과 고령층 사람들 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빈부격차’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계층간’이란 연관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00년대의 세대갈등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대갈등과 계층갈등 등의 문제가 함께 언급된 기사들은 대통령 및 정부, 국회 등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이 세대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17대 총선, 16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은 오히려 세대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했다는 비판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청소년들’이 세대갈등 기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상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노인들’이 갈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부양과 관련한 자식세대들과의 갈등, 전통적인 효도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 등에 대한 기사들이 이러한 시대상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라는 단어는 세대갈등과 관련한 배경으로 많이 언급되었는데, 군사정부의 장기집권으로 늦어진 민주화,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등에 관한 내용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그림 2-9] 200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언론을 통해 살펴본 2010년대 세대갈등은 ‘일자리’ 문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시대의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정년연장’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또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라는 문제의 완충장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정 갈등이 첨예했고,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즉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청년층에게 기득권 세력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양극화’는 ‘일자리’ 다음으로 세대갈등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두 측면에서 세대갈등과 연관되어 언급되었다. 다수의 기사에서 소득 양극화가 계층갈등은 물론 세대갈등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언급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고용시장 양극화 또한 사실상 세대 간 갈등의 뇌관으로 언급되었다. 연관어 ‘우리나라’는 세대갈등의 문제가 2010년대에 들어 이전 시기보다 국가 차원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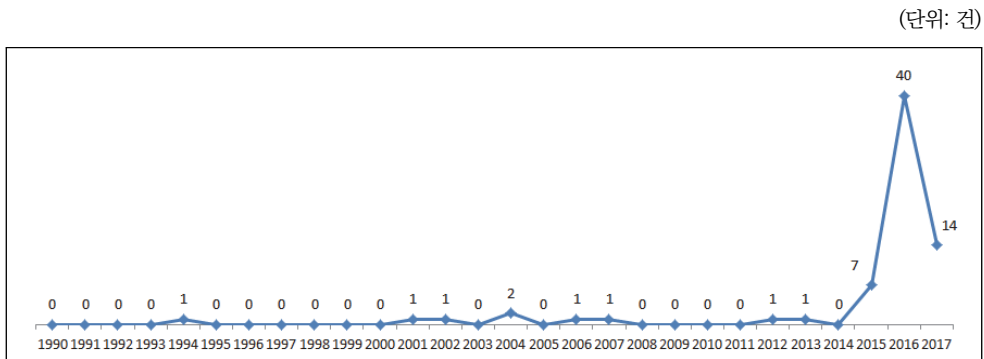
[그림 2-10] 201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다. 젠더갈등

젠더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키워드는 ‘(젠더갈등) OR (남녀갈등) OR (성별갈등)’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1990년대 2건, 2000년대 9건, 2010년대 119건, 총 130건의 기사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기사 중 중복 및 공연, 도서 등에 대한 단순 소개 기사 등을 제외하여 각각 1건, 6건, 63건, 총 70건의 유효한 기사가 정리되었다. 2000년대까지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젠더갈등을 다루는 기사는 2010년대(~2017년)에 들어 6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8년 각계 각층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을 감안하면 2010년대의 젠더갈등은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급속하게 수면 위로 올라온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1] 젠더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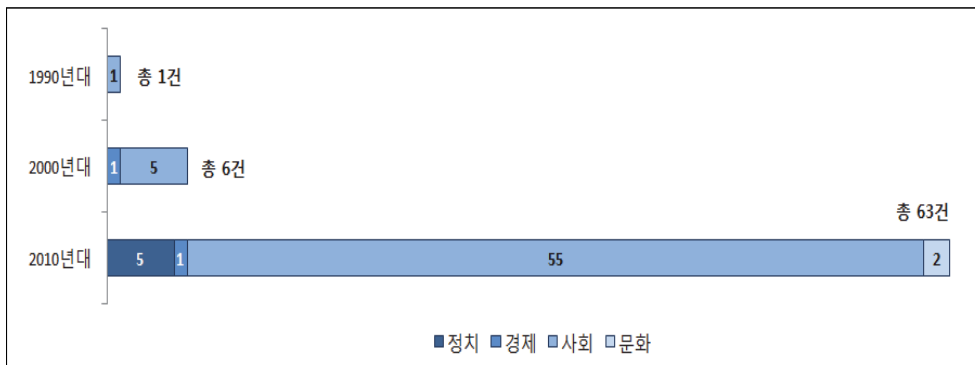


젠더갈등 기사를 계층갈등과 세대갈등과 같은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분류하면 대다수가 사회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젠더

갈등 기사는 1994년에 보도된 1건에 불과하다. 해당 기사는 사회영역으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첫 배상판결 사실을 다루며 이 판결로 인해 직장 내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남녀 모럴이 필요함을 다루고 있다(경향신문, 1994)⁸⁾. 한편 2000년대의 젠더갈등 기사는 총 6건 중 사회영역 기사가 5건, 경제영역의 기사가 1건이었으며, 젠더갈등 기사가 급증한 2010년대 역시 총 63건 중 55건(87%)이 사회영역 기사였고 정치영역 기사 5건, 경제영역 기사 1건, 문화영역 기사가 2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계층 및 세대갈등 기사의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정치 및 경제영역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다수 보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대갈등의 경우 경제영역의 기사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2000년대 접어들어 증가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젠더갈등에 관한 보도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 젠더갈등 문제가 다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치 및 경제영역에까지 젠더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자원배분과 관련된 경제적(일자리, 임금격차 등) 문제의 측면에서 젠더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흡하다는 점은 갈등의 이면을 좀 더 면밀히 살펴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권(국회 및 정부 등)에서도 고착된 성인식으로 젠더갈등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2] 젠더갈등에 대한 시기 및 분야별 기사 빈도(1990~2017)



8) 1999년 군 가산점 폐지와 관련된 남녀 간 갈등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관련 기사는 ‘공방’, ‘논쟁’ 등으로 표현되고 ‘갈등’으로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에 본 분석에서 1990년대의 ‘군 가산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젠더갈등으로 추출된 기사의 수가 각 1건, 6건으로 적어 연 관어 분석은 2010년대만 수행하였다. 2010년대 젠더갈등 연관어는 ‘여성혐오’가 가장 연관성이 높았으며, ‘여성들’, ‘피해자’, ‘살인 사건’, ‘강남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관어는 모두 2016년 5월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 살인사건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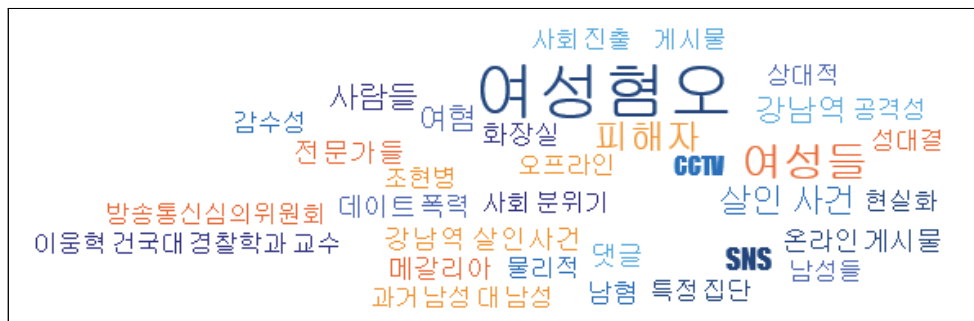
〈표 2-3〉 젠더갈등 연관어

시기	계층갈등 연관어
2010년대 (2010~2017)	여성혐오, 여성들, 피해자, 살인 사건, 강남역

주: 연관성 정도 순으로 5위까지 나열된 것임.

‘강남역’ ‘살인사건’은 범죄자의 진술(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과 사건 정황(공용 화장실에서 1시간 이상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지만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 다수 기사화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공포에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축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물결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의 젠더갈등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건 이후 메갈리아를 필두로 하는 페미니즘 측과 이를 비판하는 측 간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에서 ‘여성혐오’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3] 2010년대 젠더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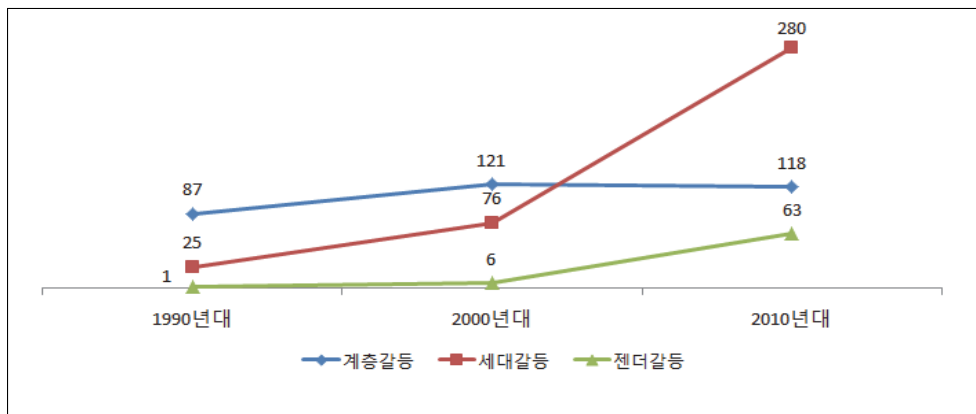


라. 사회갈등 담론의 변화 요약

계층과 세대, 그리고 젠더갈등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계층갈등의 보도건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치로 2000년대에 비해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3년간 보도될 계층갈등 기사를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대갈등은 2010년 들어 다른 갈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보도량이 많았으며, 2000년대에 비해 증가폭도 높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대 세대갈등은 ‘일자리’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았는데,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중첩되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젠더갈등에 대한 기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1건, 6건으로 매우 적었으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증폭되었다. 2010년대 젠더갈등 보도는 6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14] 갈등의 보도 건수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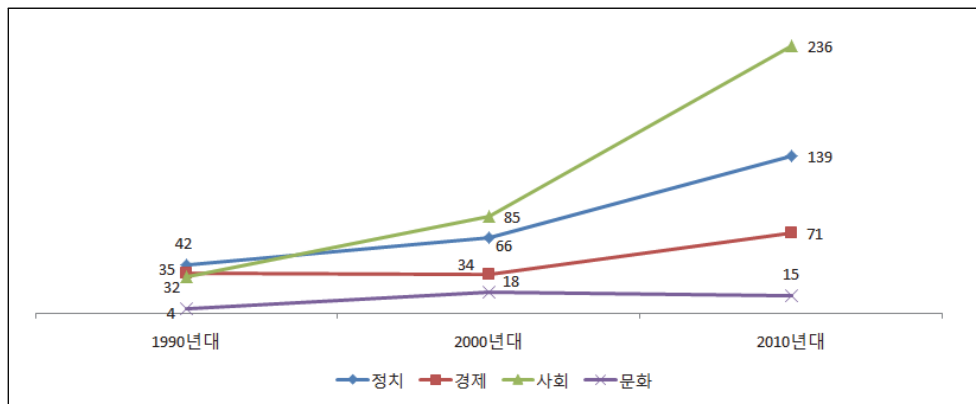
한편 갈등에 관한 기사를 다시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1990년대는 정치영역 갈등 기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는 사회영역에서 갈등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2010년 들어 그 증가폭도 컸다. 이에 비해 문화영역에서 갈등을 다루는

기사의 보도 건수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갈등의 유형별 보도 추이 및 연관어 검색 결과를 보면, 2000년대 계층 및 세대갈등의 기사는 사회영역으로 다수 분류되고, 연관어 분석 결과도 계층 및 세대갈등 모두 ‘사람들’이란 연관어가 중요하게 추출된 바 있다. 이는 1990년대 정치·경제영역에서 다루어지던 갈등의 문제가 사회영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갈등에 관한 기사는 경기 상황 및 경제정책 등과 함께 언급되거나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로 선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2010년대 갈등에 관한 기사는 사건·사고 및 사회적 현상, 정부정책 등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2-15] 영역별 갈등 보도 건수 추이

(단위: 건)



또한 앞서 분석한 갈등 유형별 연관어 분석 결과를 보면, 1990년대에는 지역갈등이나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이 함께 언급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각 갈등의 구체적인 실태들이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역별 갈등 보도 건수의 추이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에는 정치영역 갈등 기사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영역의 갈등 기사는 대체로 정치권에서 선언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지역갈등이나 계층갈등, 세대갈등이 함께 언급되었다.

2. 통계로 본 사회갈등의 발생 지점

사회갈등은 사회적 자원이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서 분배될 때, 그로 인한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불평등한 상태가 심화될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사회적 격차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격차는 경제적 부문과 사회적 부문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실태는 소득 및 자산 격차와 고용 및 임금격차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 실태는 교육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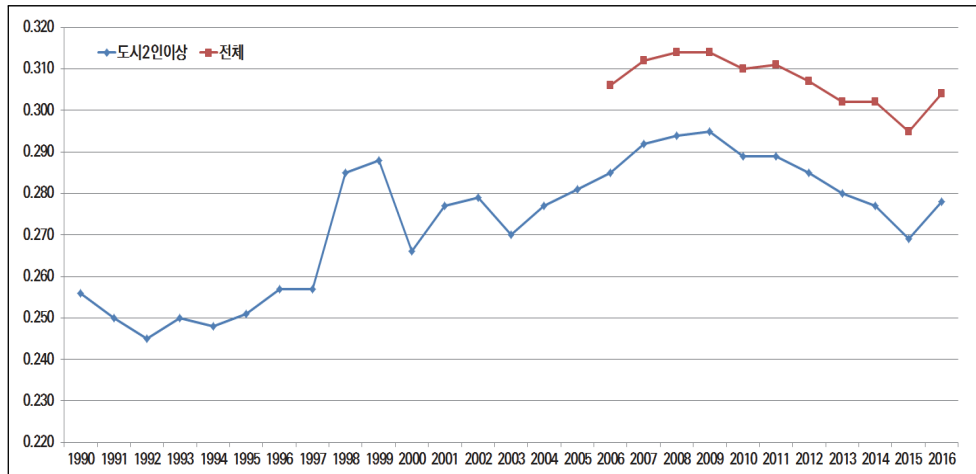
가. 경제적 불평등

1) 소득 및 자산 격차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경제적 불평등은 계층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국내·외 경기 상황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더욱 확장되어 세대갈등 및 젠더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들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도시 2인 가구 기준으로 1990년 지니계수는 0.25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1992년 0.245로 낮아졌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0.288까지 치솟았다. 2000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6년 지니계수는 0.278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인 가구 및 농어가를 포함한 전체 인구 기준의 지니계수는 2006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향성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와 유사하다. 2008년과 2009년 0.314로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증가 추세로 돌아서 0.304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지니계수의 수준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16]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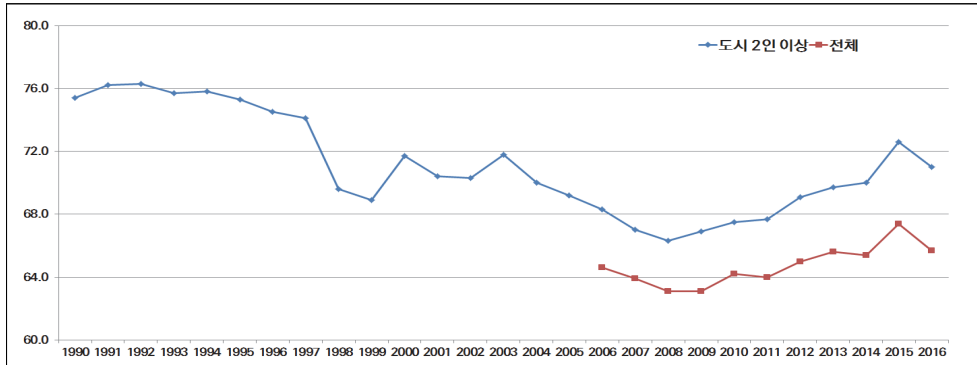
주: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13에서 2018. 9. 28. 인출.

소득불평등도는 중산층의 규모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소득 5분위의 경우 3분위 또는 중위 가처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1990년 중산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75.4%였으나 1999년 68.9%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다소 반등하였으나 2008년(66.3%)까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중산층 인구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72.6%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다시 하락하여 71.0%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인구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그 경향성은 도시 2인 이상 인구와 유사하다. 구조적으로 중산층이 두꺼운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라 볼 수 있다. 중산층은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으로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으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층이다. 김호기, 고동현, 김영범, 최성수(2015)에 따르면, 중산층의 감소는 사회계층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하면 중산층은 하층으로의 하강 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과 빈곤층을 구분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중산층 인구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1990년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17] 중산층 인구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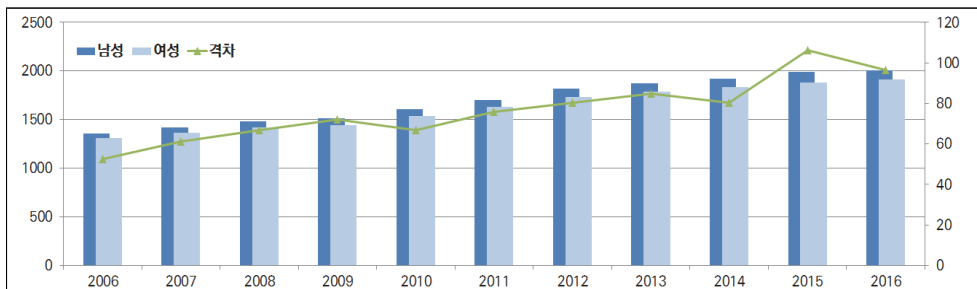
주: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성별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의 균등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균등화 중위소득이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두 집단 간 균등화 중위소득의 격차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격차는 2015년 10만 6000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6년 다소 감소하여 9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간의 균등화 중위소득 격차는 남녀 간 고용형태 및 임금격차 등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서 뉴스를 통해 본 사회갈등의 담론에서 젠더갈등의 문제가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직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언젠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임을 보여 준다.

[그림 2-18]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 중위소득 격차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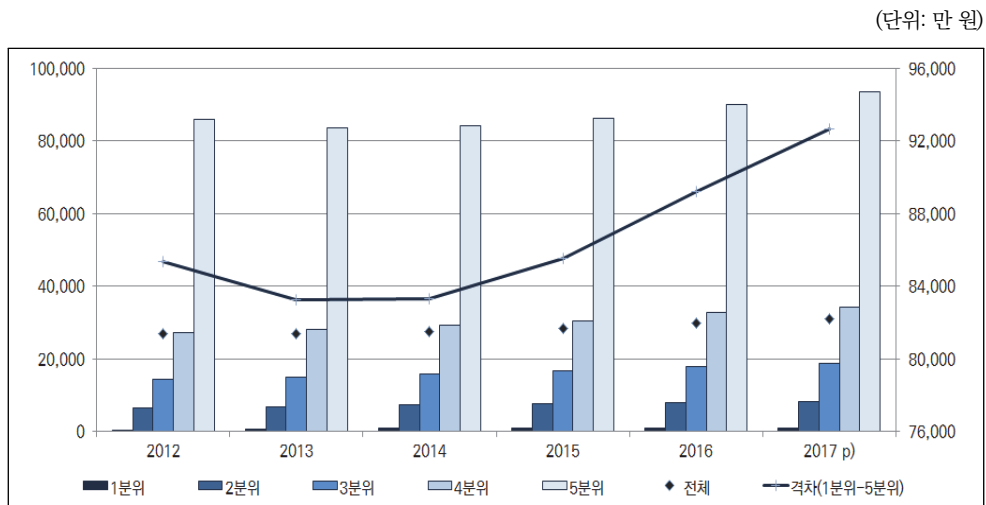


주: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가구주 기준이며, 가처분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3&conn_path=I1에서 2018. 9. 28. 인출

한편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분위별 순자산의 평균금액은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평균금액에 있어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상당하고, 1분위와 5분위 간 순자산 평균금액의 격차는 2012년(8억 5349만 원)보다 2013년(8억 3242만 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 현재 1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 평균금액 격차는 9억 265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순자산 역시 계층별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분배의 편중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19] 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주: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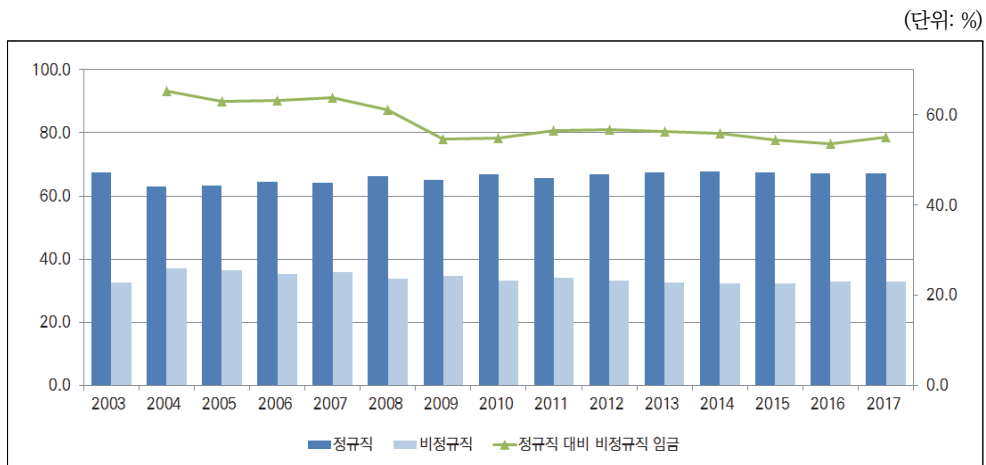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03&conn_path=13에서 2018. 09. 28. 인출

2) 고용 및 임금격차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오랜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고용안정성 및 임금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고, 결국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규직은 63~67%, 비정규직은 32~3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53.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다소 증가하여 55.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0]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8월 기준)



주: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자료: 1) 근로 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중: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2) 근로 형태별 월평균임금: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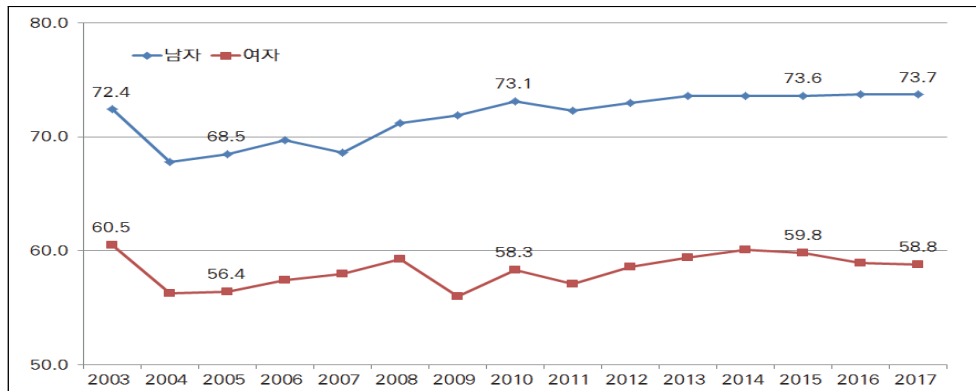
근로 형태의 성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남성 비중은 2003년 72.4%로 나타나고 2000년대 후반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대 약 7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규직 여성의 비중은 2003년 60.5%가 비교 가능 연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60%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별 고용형태의 격차는 고용안정성 및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08년 62.4%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64.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회원국의 남녀 평균 임금격차를 보면 OECD 평균은 14.6%, 일본 25.7%, 미국 18.9%, 영국 17.1%, 덴마크 5.8%인 것에 반해 한국은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37% 정도의 임금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7).

[그림 2-21] 성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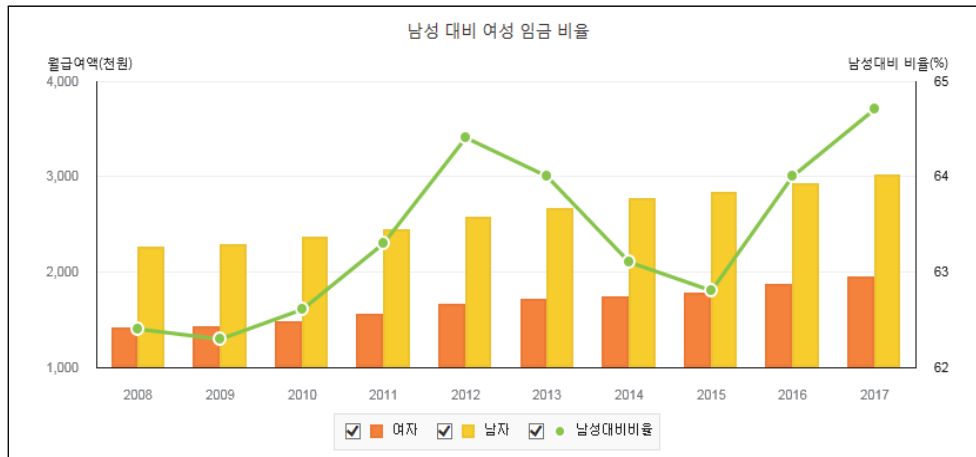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13에서 2018. 10. 1. 인출.

[그림 2-2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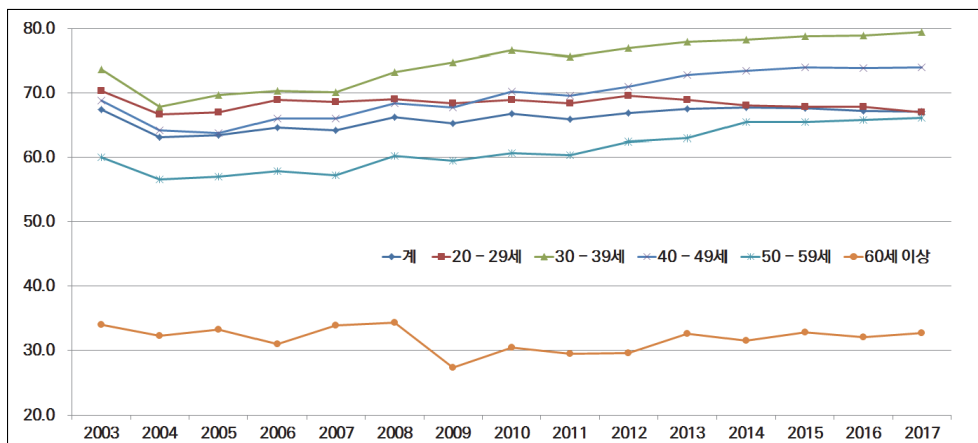
주: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에서 2018. 10. 1. 인출.

한편 연령별 정규직 비중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2009년까지는 20대보다 정규직 비중이 낮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20대보다 정규직 비중이 높아졌다. 20대는 정규직 비중이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대의 노동시장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세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림 2-23] 연령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13에서 2018. 10. 1. 인출.

나. 사회적 불평등

1) 교육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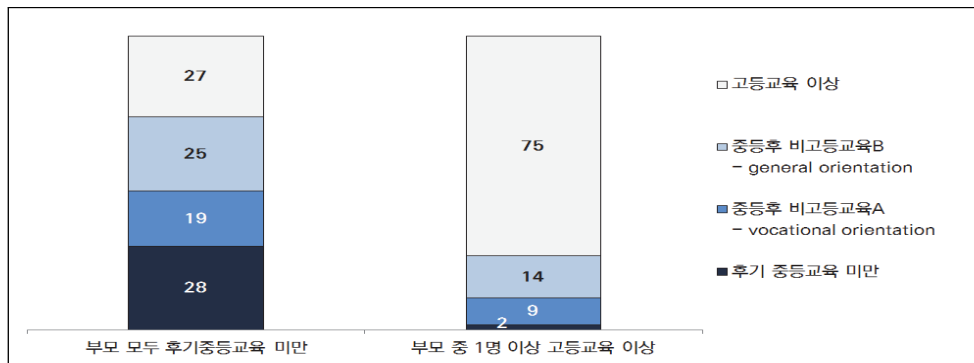
교육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다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교육수준이 상승하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질적 측면에서 계층 간 불평등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수준 차이에서 쉽게 발견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 모두 후기중등(Upper Secondary)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가구의 자녀는 27%만이 고등(Tertiary)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고등교육을 이수한 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자녀는 75%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 기준).

[그림 2-24]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25~64세)의 교육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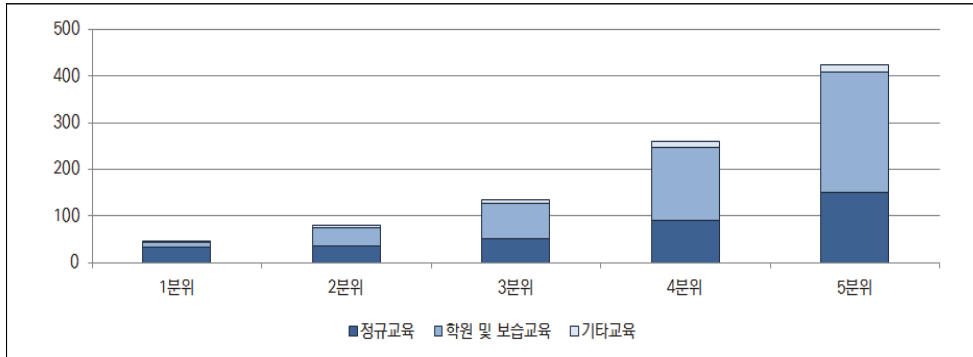
주: 교육수준 분류는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97)에 따른 것이며, 한국의 경우 후기중등교육(upper secondary)은 고등학교, 고등교육(Tertiary)은 전문대학 이상을 의미함.

자료: OECD(2018)의 Tables A1.a와 A1.b 한국 정보 추출하여 재구성.

위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교육의지 및 가정의 교육 환경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득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소득이 높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의 차이를 만들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계층별 교육비 실태를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는 월 총 42만 3578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4만 5652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하위 20% 가구는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의 약 11%만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정규교육비 지출에서도 나타나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상위 20% 가구의 약 5%만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5] 소득분위별 월 교육비 지출 수준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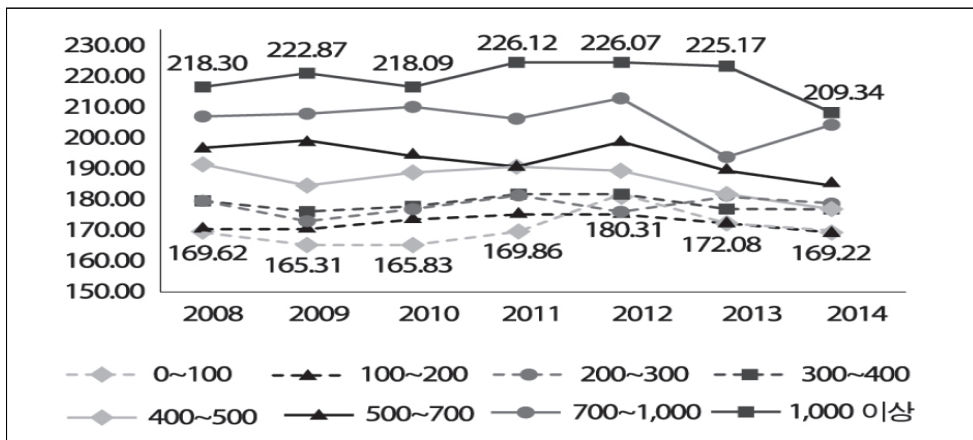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9R003&conn_path=I3에서 2018. 10. 19. 인출.

한편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입학 당시 부모소득과 자녀의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자녀가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6] 부모소득에 따른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단위: 만 원)



자료: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 한금영.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격차가 대학교육(유형)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도 부모소득이 하위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녀는 전문대학에 46.4%가 진학한 반면 서울 4년제 대학 진학은 8.8%에 불과하며, 각각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160만 4000원, 188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소득이 상위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은 24.3%로 증가하고,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 또한 242만 3000원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경호 외, 2017).

〈표 2-4〉 부모소득과 대학유형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단위: %, 만 원)

구분	전문대학				지방사립				서울 4년제			
	소득하위		소득상위		소득하위		소득상위		소득하위		소득상위	
	비율	임금	비율	임금	비율	임금	비율	임금	비율	임금	비율	임금
2008	46.0	156.0	26.0	170.7	22.4	168.7	24.2	205.9	10.1	206.7	27.1	242.4
2009	47.8	153.2	15.5	170.7	21.7	166.9	22.9	211.8	9.0	206.9	32.6	235.7
2010	44.0	156.0	19.2	179.9	21.9	171.7	24.5	210.3	10.4	209.8	29.4	242.0
2011	43.2	158.9	19.2	194.7	22.1	175.0	26.0	196.4	12.4	208.7	30.3	243.8
2012	44.5	158.1	21.7	219.3	21.1	169.1	23.0	209.8	10.9	201.9	26.9	242.7
2013	43.9	157.2	23.6	182.7	24.3	170.6	23.1	181.9	10.2	197.9	29.2	241.4
2014	46.4	160.4	26.6	174.0	24.2	169.1	24.9	184.8	8.8	188.3	24.3	242.3

주: 소득하위 집단은 월소득 300만 원 이하, 상위 집단은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을 의미함.
 자료: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 한금영.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교육은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최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오히려 계층 간 장벽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이동성 저하는 계층 간 분절을 심화시키고 고착시켜 사회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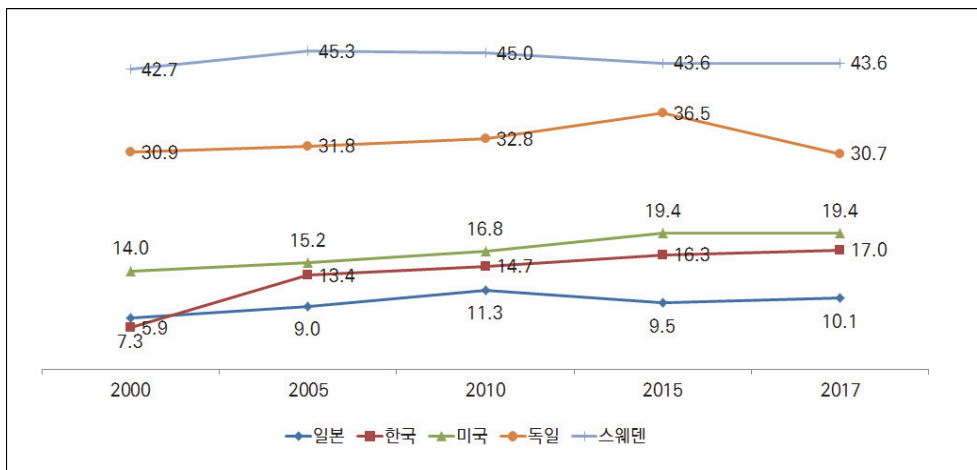
2) 사회적 지위 격차

사회적 불평등의 또 다른 면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은 성별에 따라 그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2010년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였으며, 점차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7.0%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10.1%)보다 높으나 미국(19.4%)보다 다소 낮으며, 독일(30.7%)과 스웨덴(43.6%)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Inter-Parliamentary Union, 2018).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 국회의원의 선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례대표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16%(제 20대 국회,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의 전체 비중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7]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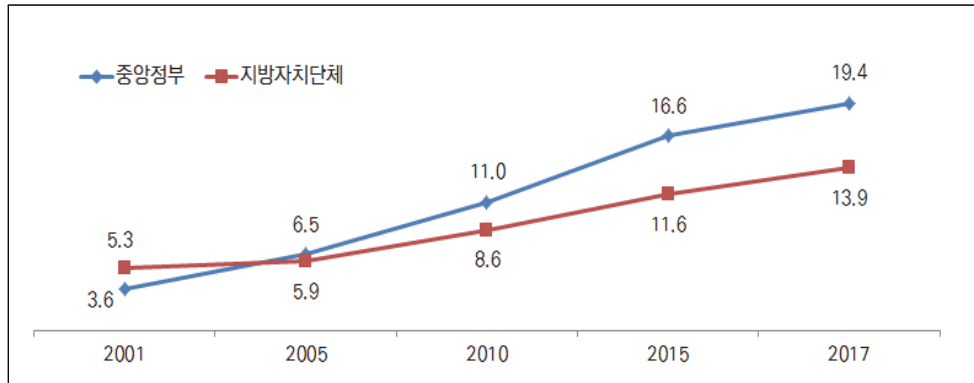


자료: Inter-Parliamentary Union, 「Women in Parliaments Data」, <http://archive.ipu.org/wmn-e/arc/classif010918.htm>에서 2018. 10. 17. 인출.

관리자 공무원 성비도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여성 관리자 공무원은 2001년 3.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9.4%에 이르렀으며, 지방정부 여성 관리자 공무원은 5.3%에서 13.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 중앙정부 여성 공무원이 전체의 50.2%로 남성보다 많고, 지자체 공무원도 36.4%에 이르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성 관리자 공무원 수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인사혁신처, 2018; 행정안전부, 2018).

[그림 2-28] 연도별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

(단위: %)



주: 1) 중앙정부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은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우정직, 연구직과 지도직은 제외)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 1~5급, 일반임기제 6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 상당~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64&stts_cd=406402에서 2018. 10. 18. 인출.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17.12.31. 기준).

이러한 성별 지위의 격차 문제는 공적 영역의 일만은 아니다. 사적 영역에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의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이 2.4%로 매우 낮다. 이는 북유럽지역의 여성 임원 비율이 35.6%, 서유럽 23.6%, 미국/캐나다 20.9%, 동유럽 15.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Corporate Women Directors International, 2017).

공공영역의 국회의원 및 관리자 공무원과 사적영역의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낮은 현실은 한국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유리천장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성 불균등은 결과적인 상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성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국회 및 정부의 낮은 여성 비율은 젠더 감수성이 낮은 법률의 입법과 정책 수행의 우려가 있으며, 공적·사적 영역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는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및 관리자 공무원, 나아가 사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중 증가는 성 불평등 및 성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정보화 격차

오늘날 또 다른 불평등은 정보지식 부문에서도 발생한다. 정보사회의 도래에 앞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일반화하고 계층 간 소통을 확장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보사회의 이점은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보 접근의 기회 정도(접근), 정보의 기본적인 이용 정도(역량), 정보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활용)로 측정되는데, ‘2017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⁹⁾은 일반 국민 대비 65.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4년 50.1% 대비 15.0%포인트, 2016년 58.6% 대비 6.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디지털정보화의 부문에서는 디지털정보화 역량 부문이 51.9%로 정보의 접근이나 활용부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계층별로는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표 2-5〉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디지털정보 부문	접근	72.3	73.7	84.5	91.0
	역량	34.6	37.4	45.2	51.9
	활용	47.7	51.6	59.0	65.3
	평균	50.1	52.4	58.6	65.1
취약계층 유형	장애인	60.2	62.5	65.4	70.0
	저소득층	72.5	74.5	77.3	81.4
	농어민	51.4	55.2	61.1	64.8
	장노년층	42.4	45.6	54.0	58.3
	평균	50.1	52.4	58.6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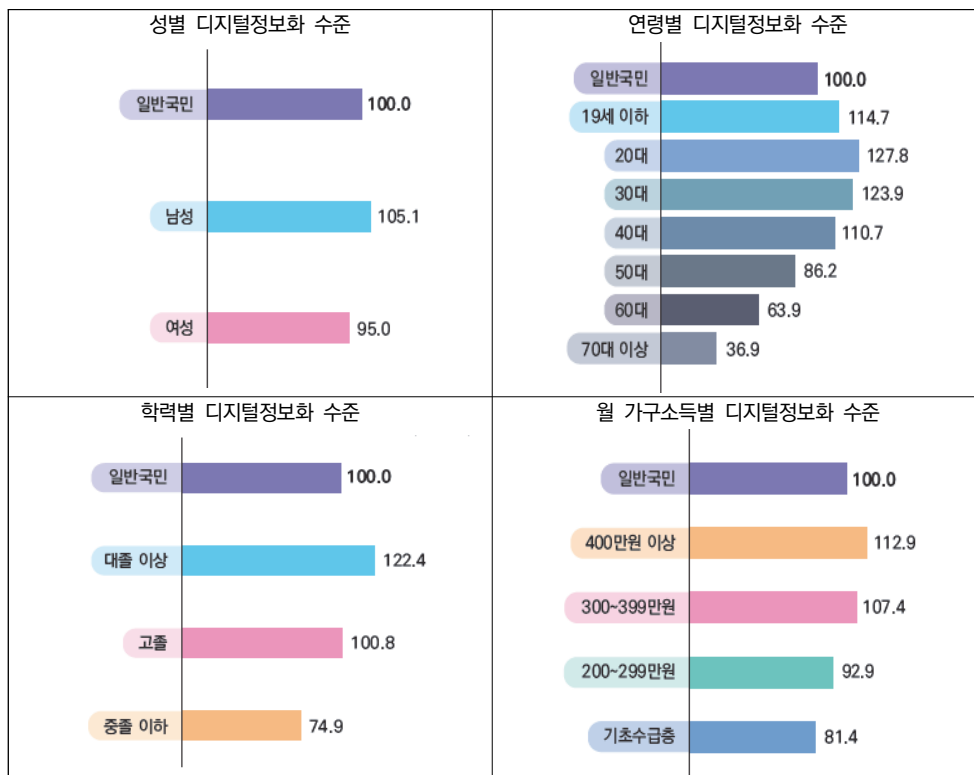
주: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부문 및 취약계층 유형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나타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9)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접근 수준(0.2) + 디지털정보역량 수준(0.4) + 디지털정보활용 수준(0.4)으로 측정된다. 또한 세부적으로 접근수준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역량수준은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활용수준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0.2)로 측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또한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성,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낮고, 연령(20대 이상)이 높을수록, 학력과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그림 2-2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관련한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향수, 이성훈(2017)은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에의 접근수준,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인터넷 활용능력 등의 역량수준, PC 이용 여부, 인터넷 이용 여부 등의 양적 활용 및 정보검색 등 질적 활용

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는 계층 간 단절과 고립을 가져와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장노년층은 일반 국민에 비해 PC 및 스마트기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¹⁰⁾ 장노년층의 낮은 정보화 수준은 이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미디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에서는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임, 2017). 이러한 세대 간 정보 습득 경로의 차이는 같은 정보에 대한 다른 결의 정보를 접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 방식 등에 차이를 만들어 세대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2-6〉 연령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단위: %)

구분	TV	스마트폰	PC/노트북	신문	라디오
10대	6.2	88.7	3.5	0.0	0.0
20대	9.1	83.6	5.8	0.0	0.0
30대	17.6	75.4	4.7	0.3	0.3
40대	30.0	61.1	3.9	1.0	0.8
50대	52.0	43.6	1.8	1.1	0.7
60대	79.2	17.6	1.0	0.6	0.5
70대 이상	94.7	3.2	0.2	0.6	0.6

자료: 김영임. (2017). 미디어와 세대갈등: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다. 사회갈등 발생 지점의 요약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사회갈등의 발생 지점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의 한 측면인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였고, 2008년과

10) 2017년 기준 장노년 가구의 PC 보유율은 56.4%로 일반 국민 보유율 82.6%보다 26.2%포인트 낮으며,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 역시 65.7%로 일반 국민 보유율 88.7%보다 23.0%포인트 낮다. 또한 이용률에 있어서도 장노년 가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66.5%로 일반 국민 이용률 90.3%보다 23.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09년 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남성과 여성 간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격차도 소득격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순자산 격차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고용 및 임금의 집단 간 격차도 결코 양호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5.0%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7%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 수준의 격차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약 74%가 정규직인 것에 반해 여성은 6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문제는 연령에 있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지점으로는 교육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 부문에서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 격차의 문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는데, 자녀의 교육격차는 다시 일자리의 질과 관련되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 교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은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격차 문제는 여성에게 존재하는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관리자 공무원, 그리고 사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종 및 직급에 여성 비율이 낮은 현실은 젠더 감수성이 반영된 입법, 정책 수행, 조직 문화 조성 등에 한계를 가져와 성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접근과 활용 등에 있어서의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임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정보 습득 경로 및 활용 방식의 차이가 문화적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갈등주의

기능주의는 사회를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작동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결속을 유지하는 복잡한 체계로 설명한다(Giddens, 2012, p. 38). 이에 비해 갈등론은 사회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서는 유사하지만, 합의가 아닌 분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학의 여러 딜레마 중 하나인 사회 내의 조화와 갈등에 관한 것이다. 기능주의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고, 질서의 체계가 변한다 하더라도 지속성과 조화가 사회의 특징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갈등론은 사회적 갈등이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하고, 사회에 분열·긴장·투쟁이 만연하며, 공공연한 갈등이 없을 때조차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실제적인 갈등으로 폭발하기 쉬운 깊은 이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갈등주의는 사회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권력 불평등과 투쟁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본다. 사회현실은 질서, 안정, 합의보다는 무질서, 변화, 갈등과 투쟁이 항시 존재한다고 본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주의적 시각이 경합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대 사회학의 이론적 딜레마 중 하나인 ‘조화와 갈등’의 관점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주의적 시각의 변화가 확인된다. 송복(1990, p. 7)은 그의 책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설명하면서, 갈등구조는 ‘갈등을 창출해내는 구조’라고 말한다. 그는 왜 한국 학계에서 갈등이라는 용어를 1980년대 들어서야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갈등론의 반대되는 구조기능론이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이론의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는 갈등보다는 화해, 변동보다는 안정, 불일치보다는 일치, 해체보다는 단합이 사회적 가치였고 결과적으로 기능주의를 통한 설명이 더 수월했다. 그렇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사회에 와서는 경쟁과 반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반대에 대한 훈련이 없다 보니 반대할 줄도 모르고 반대 받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조와 행위 간의 격심한 격차로 더 큰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갈등연구가 성행하게 되었다고 보았다(송복, 1990, pp. 6-7).

현대갈등주의 이론에는 마르크스(Marx)의 “모든 사회 현상은 대립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모순은 새로운 사회체계를 발생시킨다”는 개념에 기반한 변증법적 갈등주의, “사회 현상에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편재하고 있지만 갈등은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짐멜(Simmel)의 개념에 기반한 기능적 갈등주의, “사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위에 바탕을 둔 관료주의에 의해 지배되며 분배의 단절과 사회적 이동이 낮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은 합리주의의 적용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베버(Weber)의 생각에 바탕을 둔 교환적 갈등주의와 비판이론이 있다(최일섭, 최성재 편, 1996, p. 57). “변증법적 갈등주의에서 사회현실은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경쟁과 투쟁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기능적 갈등주의에서는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희소자원을 소유 또는 지배하려고 갈등을 계속하면서도 통합과 적응을 이루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상태”로, “변증법적 갈등주의에서 갈등은 사회체계의 와해 또는 변동을 가져오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하여 기능적 갈등주의에서 갈등은 오히려 사회체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다(최일섭, 최성재 편, 1996, p. 58). 변증법적 갈등주의는 “현재의 인간의 갈등적 성격은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갈등의 결과로 형성된 제도적 영향 때문이므로 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기능적 갈등주의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부와 권력, 사회적 인정, 기타의 보상을 얻으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어 갈등은 “이기적인 본성과 적대적 본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최일섭, 최성재 편, 1996, p. 59).

갈등주의 시각에 기반한 사회문제 접근 이론으로는 가치갈등주의가 있다. 가치갈등론은 사회의 모든 갈등이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지닌 집단들의 가치차이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에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권력투쟁을 벌여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 문제는 사회문제로 정의되고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최일섭, 최성재 편, 1996, pp. 61-62).

2. 갈등의 유형

이상의 사회갈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갈등은 다음과 같다.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려는 집단들 간의 갈등으로서 권력 갈등, 경제적 갈등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가치관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치관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변증법적 변화로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해소 과정을 사회변화의 유익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갈등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것인가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의 유형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당사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조직, 국가와 같은 갈등 사안의 당사자가 누구지에 주목하는 구분이다. 둘째, 갈등이 일어나는 주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 가치나 신념, 선호나 관심, 관계, 정체성 영역으로 갈등의 주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Menkel-Meadow, 2003; 김영옥, 2015, p. 22 재인용). 셋째, 갈등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 구조적인 문제 갈등, 관계 갈등, 가치 갈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발전 단계에 따라 잠재 갈등, 떠오르는 갈등, 명백한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Moore, 2003; 김영옥, 2015, p. 22 재인용).

갈등을 분명하게 유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갈등이 가진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갈등 해소 방법을 탐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이다(김영옥, 2015, p. 23). 갈등의 실체를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 보다 정확하게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지점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의 내용은 서로 조금씩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갈등의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갈등 내재화 모델(A Nested Model of Conflict)은 갈등을 크게 쟁점 중점, 관계 중점, 하위 시스템 중점, 그리고 시스템 중점 갈등으로 구분한다(Dugan, 1996; 김영옥, 2015, p. 23 재인용). 각각 하위 단계의 갈등이 상위 단계의 갈등에 내재화되어 있는 방식이며, 이에 따르면 갈등의 표면적 사유보다는 관계, 조직구성, 사회 맥락 등과 관련지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영옥, 2015, p. 24). 이는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한 갈등도 살펴보면 그간의 지속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는 다시 하위 조직 시스템이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의 문제, 그리고 더 크게는 전체 사회시스템 또는 맥락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갈등 당사자 간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갈등의 이유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 조직의 구성, 사회 맥락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영옥, 2015, p. 24).

이러한 점에서 Deutsch(1973)는 갈등을 표면적 속성과 실질적 속성의 반영 형태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실재적(veridical) 갈등, 우발적(contingent) 갈등, 치환적(displaced) 갈등, 비속성적(misattributed) 갈등, 잠재적(latent) 갈등, 허위적(false) 갈등이 그것이다.

〈표 2-7〉 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유형	A와 B 사이의 객관적 갈등 상황 존재 여부	A와 B 사이의 경험한 갈등 상황 ¹⁾	오해(misperception)의 유형 ¹⁾		갈등 동맹의 존재 여부
			갈등의 유발성	갈등의 주제	
I. 실재적(veridical) 갈등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I. 우발적(contingent) 갈등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III. 치환적(displaced) 갈등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IV. 비속성적(misattributed) 갈등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V. 잠재적(latent) 갈등	예	아니요			
VI. 허위적(false) 갈등	아니요	예	예 또는	예 또는	예

주: 1) 갈등의 한 당사자의 경험이나 인식을 의미한다. 이때 다른 당사자는 다르게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A의 갈등은 치환된 것일 수 있지만, B에게는 잠재적인 것일 수 있음.

자료: Deutsch, M.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pp. 12-15.

첫째, 실재적(veridical) 갈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A와 B 모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Deutsch, 1973, p. 12). 실재적 갈등은 마치 부부가 집의 한 공간을 공부방과 미술실과 같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 사용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다. 실재적 갈등은 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조나, 우선권의 확보에 관한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구속력이 있는 조정, 동전 던지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평화롭게 해결되기 어렵다(Deutsch, 1973, p. 12).

둘째, 우발적(contingent) 갈등은 재정립되는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지만, 충돌하는 갈등의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인다(Deutsch, 1973, p.

12). 그래서 앞서의 실제적 갈등에서 다른 대안이 존재할 경우, 우발적 갈등이 된다. 즉, 다른 대안이 존재함에도 갈등 당사자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의 문제에서 부부에게 집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경우에 갈등 상황은 쉽게 해결된다. 우발적 갈등은 충돌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 사라지지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과도한 감정적 긴장 상태에 따라 갈등 당사자의 시각이 편협하거나 완고한 경우에 해결되기 어렵다(Deutsch, 1973, p. 13).

셋째, 치환적(displaced) 갈등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말한다(Deutsch, 1973, p. 13). 즉, 갈등의 주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다. 경험하고 있는 갈등은 나타나고 드러난 상태로서 갈등이며, 수면 아래 있는 갈등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드러난 형태의 갈등은 보통 상징적, 관용적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간접적 방식이 직접적인 문제 제기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활용된다. 드러난 형태의 갈등은 감춰진 갈등이 해결되거나, 감춰진 갈등과 드러난 형태의 갈등이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시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언제든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

넷째, 비속성적(misattributed) 갈등은 잘못된 당사자 간의, 그래서 잘못된 이슈에 대한 갈등을 말한다(Deutsch, 1973, p. 14). 즉, 두 갈등 당사자 간에 경험해 본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식적으로 갈등한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백인과 흑인 노동자 사이에 협력하지 않고 어려움을 산업구조나 정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 그룹과의 경쟁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비속성적 갈등의 예이다. 그래서 비속성적 갈등은 갈등 당사자 간의 동맹이 이뤄진다. 사회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력이 약한 집단들 사이에 이러한 비속성적인, 잘못된, 분열적인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Deutsch, 1973, p. 14).

다섯째, 잠재적(latent) 갈등은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갈등이다(Deutsch, 1973, p. 14). 갈등이 억압되어 있거나, 치환되어 있거나, 그 원인을 잘못 찾았거나 등의 이유로 아직 갈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갈등 상황은 존재하는데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갈등의 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갈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갈등 동맹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우월의 가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개량 운동에서의 관심은

잠재적 갈등을 인식된 갈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회개량 운동은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자각하게 하는 의식적 고양(consciousness-raising)이 나타나며, 그 아이덴티티를 폄하하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부각시킨다(Deutsch, 1973, p. 14).

여섯째, 허위적(false) 갈등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잘못된 상황인식을 통해 나타난다(Deutsch, 1973, p. 14). 이러한 갈등은 오해나 잘못된 이해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갈등이 허위적 갈등으로 시작하였더라도, 새로운 동기나 태도에 이끌려서 실제의 갈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하고 진실된 상황보다는 경쟁하고 의심하는 환경에서 보다 잘 일어난다(Deutsch, 1973, p. 15).

Deutsch(1973)는 이러한 갈등 유형 구분이 상호배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치환적 갈등, 비속성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되지 못한 또는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 갈등 당사자 간의 상호 작용이 갈등 유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갈등은 매우 복잡해서 여러 이슈가 여러 당사자 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등하는가? 앞서 예를 들었던 부부는 집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슈로 갈등하였다. Deutsch(1973)는 크게 다섯 가지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자원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이슈이다. 자원은 공간, 돈, 소유권, 권력, 우선권, 음식 등이 있다. 둘째, 선호와 뉘앙스에 대한 것이다. 셋째, 가치에 대한 것이다. 넷째, 신념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두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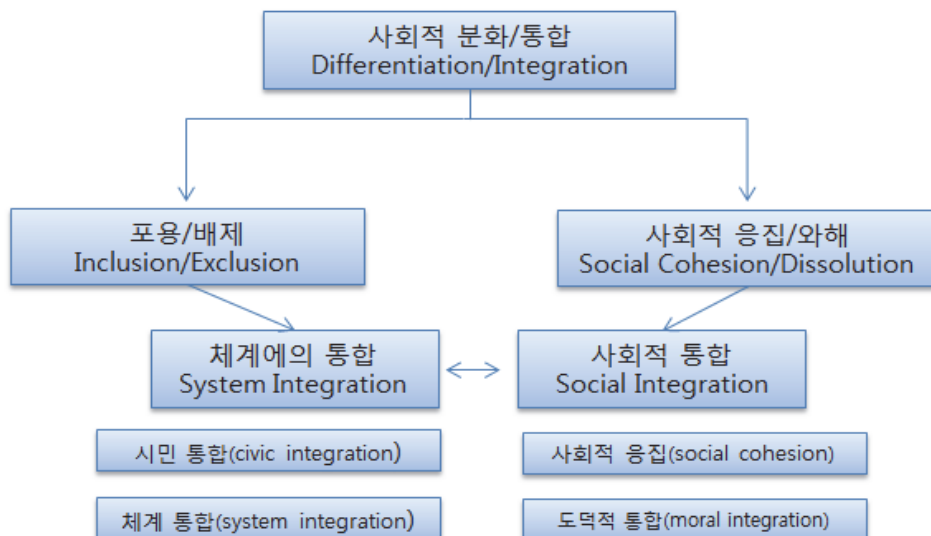
Deutsch(1973)의 갈등 모델은 양자모델로 발전하여 다섯 가지 갈등 해소 형태로 분류되어 쓰이는데, 경쟁, 수용, 회피, 타협, 그리고 협력의 갈등 해소 형태가 그것이다(김영옥, 2015, p. 25). 갈등 해소의 큰 두 가지 접근은 경쟁적인 접근과 협력적인 접근이 있다. 경쟁적 접근은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나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협력적 접근은 기존 가치를 분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편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갈등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이다(김영옥, 2015, p. 25). 최근의 갈등 해소 방식은 협력적 접근에 더 가까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당사자 간의 인간적인 유대,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정해식 외(2017, p.39)는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포용(포괄)의 개념과 연대의식과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치로 사회통합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구분은 록우드(Lockwood, 1964)가 체계에의 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명명하여 분류한 바와 같은데, 록우드는 1999년 저작에서 이를 각각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 구분하였다(Lockwood, 1999, p. 64; 정해식 외, 2017, p. 40 재인용).

[그림 2-30]과 같이 ‘체계에의 통합’은 사회제도의 틀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가용한 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 통합’은 서로 다른 구성원의 이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다양성이 공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평의회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가용한 자원에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책임감 있는 참여’로 정의하였다(Council of Europe, 2005, p. 30; 정해식 외, 2017, p. 41 재인용).

[그림 2-30]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 문제와 사회통합. p. 40.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한 관점으로 갈등을 논하고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존재한다.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의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주어진 자원의 한계 내에서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회를 통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갈등의 처리 과정이 체계 내에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는 갈등의 형태와 내용이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자원과 권력의 분배 방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 관계 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시민, 당사자와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 존엄성을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서로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갈등의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통합의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상태와 그러한 갈등을 둘러싼 우리 안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이 그것이고 공공이 갈등의 조정자 또는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갈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3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제1절 서론

계층갈등 혹은 계급갈등은 한 사회의 갈등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갈등 유형이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회의 변동과 혁신을 추동해 온 원동력이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층-계급갈등은 국가와 시장 내에서의 갈등으로 현시화된다. 즉, 계층(계급)갈등의 표출 방식은 주로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와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정치적 아레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중심의 정치갈등과, 노사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둘러싸고 사업장 내 혹은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시장 중심의 경제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계층갈등은 조직화된 갈등 양상보다는 개별화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국가주도적인 개발경제하에서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연대’ 혹은 ‘조직화’의 억압 결과로 갈등이 조직적으로 분출되기보다는 개별화된 형태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개발독재적 통치방식이 와해되면서 노사, 부자와 빈자, 갑과 을 간의 계층-계급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의 촛불혁명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개발연대에 맞서 ‘느슨하지만 거대한’ 연대를 형성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장의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계층갈등의 승화 방식과 사회통합의 제고 방안에 대해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주요 연구문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축은 무엇인가, 객관적 계층(계급)인가, 주관적 계층인식인가, 둘째, 현재의 갈등 수준, 분배 상태, 사회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인식에서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조세와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이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계층과 계급은 불평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계급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 생산관계에 기초한 대자적·갈등적 집단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계층 현상은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성층적으로 나타나며, 각층 간에는 경제적·사회명망적·권력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홍두승, 구혜근, 2001, p. 28). 즉, 계급은 집단 간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이를 전제하는 반면, 계층은 연속선상의 불명확하고 흐릿한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 갈등은 특히 생산수단과 생산체제를 둘러싼 좀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으로부터 유래하는 갈등이라면, 계층 갈등은 생산 체제의 근원적 모순보다는 희소 자원과 생산물, 부(wealth)를 둘러싼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급갈등보다는 계층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층갈등은 지속적으로 심각도가 가장 높은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표 3-1>과 [그림 3-1]에 따르면, 계층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74%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2016년에는 83.3%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층갈등	76.5	75.6	82.1	74.0	78.2	75.0	83.3
이념갈등	68.1	48.4	63.8	72.7	74.1	67.7	76.5
노사갈등	67.0	74.4	63.7	66.7	68.5	68.9	75.4
지역갈등	58.6	51.6	56.1	62.2	58.6	55.9	57.3
세대갈등	49.1	49.8	58.1	53.5	48.6	50.1	59.6
환경갈등	57.8	49.7	51.6	51.6	51.5	43.5	54.1
다문화갈등	34.8	39.9	36.9	47.8	47.8	46.8	43.7
남녀갈등	25.2	28.0	32.2	30.9	42.5	34.4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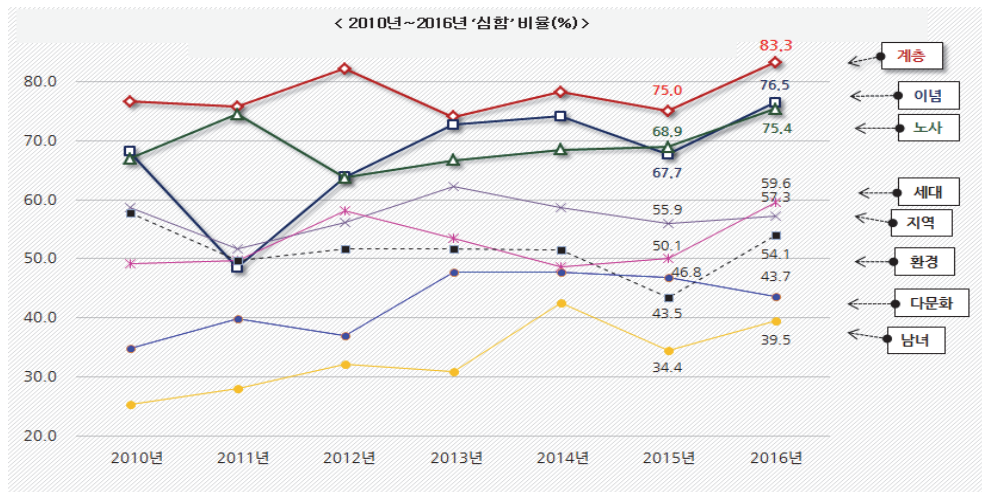
자료: 1)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1, 2012). 사회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2)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3)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015, 2016).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단위: %)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 5.

특히,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갈등의 하위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사갈등 역시 이념갈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심각성이 높은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실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같은 사회양극화의 징후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호, 고숙자(201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 중 5위(2011년 기준)로 사회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효과성, 규제,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수준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정영호, 고숙자, 2014, p. 74). 즉 갈등의 수준은 높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 OECD 회원국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개선시킬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에서 21%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준, 2013). 이때의 사회갈등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 갈등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계층갈등의 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갈등을 포함한 사회갈등, 분배상태, 공정성 수준, 재분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 격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계층갈등의 현시화 가능성과 양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분석 항목은 크게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분배 상태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다.

1)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먼저,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인 갈등 수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경영자와 노동자,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고령자와 젊은이, 진보와 보수, 지역, 다문화, 개발과 환경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항목들이다.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를 0점, ‘갈등이 매우 심하다’ 3점을 부여하는 역코딩을 실시하였으며, 15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갈등 합산점수’를 산출하였다. 전반적 갈등 수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경영자와 노동자,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발과 환경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합산하여 ‘경제적 갈등 합산점수’를 측정하였다.

〈표 3-2〉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항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0)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11)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12)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14)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2)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은 공정성과 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 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공정성과 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5점 척도, 문 22-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5점 척도, 문 22-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 출신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각 5점 척도, 문 36-1, 36-3)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재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네 개 문항을 합산하여 ‘불공정성 합산점수’를 산출하였다.

평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에서와 같이 10개 항목들에 대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우 평등’을 0점으로 ‘매우 불평등’을 4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불평등 합산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3-3〉 평등에 대한 인식 문항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1)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승진·승급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8) 소득 분배	①	②	③	④	⑤
(9) 부(재산)의 분배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간 발전수준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5점 척도, 문 28),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문 29),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문 30)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세 개 문항은 단순 합산할 경우 의미가 모호해진다는 판단 하에 개별 문항만을 분석하였으며 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3) (재)분배에 대한 태도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에 대한 태도, 정부 개입에 대한 태도, 구체적인 정부 정책(지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증세에 대한 태도로 세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은 아래 표와 같은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월평균 수입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위하여 가상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각 직업군의 적절한 월수입 수준을 제시하라는 문항이다.

〈표 3-4〉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문항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35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실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버는 액수와 상관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사	(1) 의사		(2) 대학교수		(3) 국회의원		(4) 청소부		
350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5) 대기업 CEO	(6) 대기업 신입사원		(7) 제조업 숙련기술자		(8) 공장 비숙련 근로자		(9) 가게(매장)점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둘째,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국가 책임성 문항과 항목별 정부 개입의 정당성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국가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의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정부 책임에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재코딩하였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사정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 제한’,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 제한’,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저임금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 제공’,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의 정당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3-5〉 (재)분배에 대한 태도 문항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부 개입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모르겠다
(1)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셋째,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나이 든 본인의 부모님이 빈곤한 상태라면’, 혹은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그러한 노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 보조를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가 일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소득지원을 확대하거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한 문항도 분석에 추가하였다.

〈표 3-6〉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에 대한 태도 문항

(본인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나이 든 부모님이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본인과 형제·자매들이 조금씩 거두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본인을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아동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다음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자녀장려세제, 아동수당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맞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주택보조금,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마지막으로,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각 영역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지 덜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문항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과 증세 계층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3-7〉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 문항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복지 확대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증세	복지를 늘리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귀하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세금을 더 거두어서 ②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 ③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④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 ⑤ 기타 ()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은 어느 소득계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답해주십시오.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내야 한다면 1로 표시해 주십시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계층갈등의 중심축인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분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변수를 갈등의 중심축으로써 사회계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관적 계층인식(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이상¹¹⁾), 객관적 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절대적 박탈 경험자,¹²⁾ 근로 형태(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직종

11) 본인을 상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0.28%, 11명에 불과하여 불가피하게 중상층과 상층을 합하여 '중상층(상층)'으로 분류하였다.

12)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교육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의 7개 문항 중 1개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생산직, 단순노무직, 비경제활동인구)으로 구분하여 갈등 인식의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 분석 방법

먼저, 현상에 대한 단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서,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공정성과 분배에 대한 인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값을 제시한다. 이러한 계층 간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층별 차이 검증(ANOVA 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계층 분포와 계층별 경제 상태

객관적 소득계층으로서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인구는 11.3%, 중위소득 50~150%의 중간 계층은 69.2%,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위계층은 19.5%로 산출되었다.

〈표 3-8〉 객관적·주관적 계층 분포

(단위: %)

객관적 계층	분포	주관적 계층	분포
중위소득 50% 미만	11.3	하층	16.0
중위소득 50~100%	38.6	중하층	36.7
중위소득 100~150%	30.6	중간층	42.3
중위소득 150% 이상	19.5	중상층(상층)	5.0
계	100.0	계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에 비해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계층으로서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조사 대상 중 16%, 중하층 36.7%, 중간층 42.3%이었으며, 중상층과 상층을 합쳐 5%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사람들은 소득 기준의 객관적 계층에 비해 자신이 속한 계층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해하자면,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50~150%가 중산층이라는 규정은 현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래 표를 보면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계층과 주관적인 인식계층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64%(음영 처리된 부분), 자신의 실제 계층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8.9%(빛금 부분), 자신의 실제 계층보다 낮게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은 27.2%(나머지 부분)에 이른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저소득층 중 자신이 중하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9.6%이며,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의 상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이 중간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5.8%에 이른다. 이와 같이 소득계층과 인식계층 간의 불일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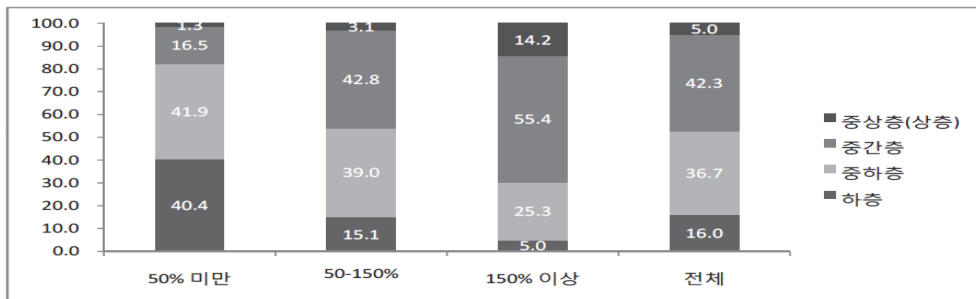
〈표 3-9〉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일치도

(단위: %)

구분	구분	객관적 계층(중위소득 대비)			계
		50% 미만	50~150%	150%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4.6	10.5	1.0	16.0
	중하층	4.8	27.0	4.9	36.7
	중간층	1.9	29.6	10.8	42.3
	중상층(상층)	0.1	2.1	2.8	5.0
	계	11.3	69.2	1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2] 객관적 계층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아래 표는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속 계층별 가구 규모와 경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10〉 객관적·주관적 계층별 가구 규모와 경제적 상태

(단위: 명, 만 원)

구분	전체	소득계층		
		50% 미만	50~150%	150% 이상
가구원 수	2.97	2.12	3.06	3.13
가구총소비	255	112	247	370
가구총소득	428	110	377	796
균등화된소득	250	76	220	460
본인소득	187	46	175	314
주거용재산	21,375	9,625	18,829	37,170
금융재산	3,384	1,248	2,937	6,201
기타재산	4,188	2,399	3,074	9,195
가구총부채	2,991	1,183	2,429	6,058
가구총자산	28,756	13,173	24,668	52,336
가구순자산	25,596	11,990	22,154	45,822
구분	주관적 계층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가구원 수	2.28	2.91	3.25	3.27
가구총소비	177	231	292	375
가구총소득	261	373	502	734
균등화된소득	173	224	282	421
본인소득	123	160	219	324
주거용재산	10,078	16,643	28,137	34,553
금융재산	1,907	2,260	4,458	7,299
기타재산	1,415	3,228	5,117	12,171
가구총부채	1,545	2,350	3,601	7,202
가구총자산	13,351	21,875	37,566	53,804
가구순자산	11,804	19,367	33,998	44,4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저소득계층에 비해 고소득계층은 평균 가구원 수가 1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평균 소득 261만 원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평균소득 11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가구 규모를 감안한 균등화 소득을 보더라도 전자는 173만 원으로 후자의 110만 원에 비해 63만 원 더 높은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자신의 실제 소득계층보다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평균소득(373만 원)이 중상층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377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 되어

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보는 사람의 평균 가구소득은 502만 원이며, 주거용 재산은 2억 8000여만 원, 가구 순자산은 약 3억 4000만 원이다.

2. 무엇이 갈등 인식의 중심축인가?

가. 계층 분류 방식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갈등 인식의 차이를 낳는 중심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계급) 변수를 활용하여 갈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계층(계급) 변수에는 객관적 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박탈경험(지난 1년간 절대적 박탈을 하나라도 경험했는지의 여부), 근로 형태(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직종(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생산직, 단순노무직, 비경제활동인구)의 5개 변수이다.

분석 결과, 객관적 계층(계급)보다는 주관적인 계층인식이 갈등 인식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축으로 확인된다. 계층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객관적 변수, 예컨대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위소득 50%와 150% 기준을 활용한 소득계층 변수¹³⁾나 계급 구분에 가장 많이 활용되곤 하는 직종 변수에 따른 갈등 인식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주관적 계층에 따른 집단 간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에 따른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고령자와 젊은이, 다문화와 관련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갈등보다는 문화적·가치관 갈등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갈등 합산점수와 경제적 갈등 합산점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13) 중위소득 50~100%, 중위소득 100~150%로 세분해서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해서도 분석해 보았으나, 오히려 3개 계층으로 구분한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객관적 소득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갈등의 영역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이상		
(0) 전반적인 갈등 수준	1.88	1.84	1.88	1.91	2.67	0.0693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1.91	1.85	1.91	1.95	2.92	0.0543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1.75	1.72	1.74	1.77	0.80	0.4476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1.53	1.48	1.53	1.54	1.03	0.3560
(4) 경영자와 노동자	2.09	2.08	2.08	2.13	1.39	0.2486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1.56	1.53	1.54	1.62	3.01	0.0494
(6) 정규직과 비정규직	2.05	1.98	2.05	2.09	3.60	0.0275
(7) 여성과 남성	1.59	1.50	1.58	1.64	4.36	0.0128
(8) 고령자와 젊은이	1.56	1.54	1.53	1.67	8.69	0.0002
(9) 진보와 보수	2.35	2.28	2.35	2.36	2.28	0.1019
(10) 지역	1.74	1.72	1.75	1.75	0.22	0.8006
(11) 다문화	1.56	1.48	1.55	1.66	8.16	0.0003
(12) 개발과 환경보호	1.78	1.75	1.77	1.80	0.88	0.4166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1.88	1.88	1.88	1.90	0.29	0.7471
(14) 기업과 소비자	1.64	1.67	1.63	1.65	0.76	0.4656
갈등 합산점수	26.85	26.17	26.75	27.55	6.55	0.0014
경제갈등 합산점수	18.05	17.56	18.00	18.45	5.33	0.00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 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점이 이채롭다. 즉,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또한 소득계층과는 달리 대부분의 갈등에 대해 집단 간 심각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적 갈등과 관련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대체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으며, 하층일수록 이러한 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낄 확률이 컸다. 전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고령자와 젊은이, 다문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다만, 갈등 합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세부 항목에서의 집단적 차이가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즉, 대부분의 경제갈등의 경우 하층일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과 남성, 고령자와 젊은이, 진보와 보수, 지역 간의 갈등의 경우 중상층일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들 항목을 합산하였을 때 차이가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경영자와 노동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개발과 환경보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등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주관적 계층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관적 계층이 다른 계층 지표에 비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3-12〉 주관적 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갈등의 영역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0) 전반적인 갈등 수준	1.95	1.88	1.85	1.89	5.38	0.0011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2.01	1.92	1.87	1.80	8.56	0.0000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1.83	1.76	1.72	1.64	5.73	0.0007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1.53	1.55	1.50	1.55	1.06	0.3643
(4) 경영자와 노동자	2.18	2.11	2.04	1.99	7.86	0.0000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1.55	1.59	1.54	1.43	2.91	0.0332
(6) 정규직과 비정규직	2.13	2.06	2.02	2.02	3.53	0.0142
(7) 여성과 남성	1.49	1.62	1.59	1.62	4.32	0.0048
(8) 고령자와 젊은이	1.53	1.58	1.54	1.63	1.26	0.2875
(9) 진보와 보수	2.27	2.38	2.34	2.40	4.36	0.0045
(10) 지역	1.63	1.73	1.80	1.74	6.84	0.0001
(11) 다문화	1.61	1.58	1.54	1.53	1.48	0.2167
(12) 개발과 환경보호	1.84	1.82	1.74	1.60	8.49	0.0000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1.93	1.91	1.86	1.67	7.94	0.0000
(14) 기업과 소비자	1.63	1.69	1.61	1.51	5.88	0.0005
갈등 합산점수	26.99	27.15	26.62	26.22	2.22	0.0834
경제갈등 합산점수	18.52	18.27	17.77	17.31	6.81	0.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오히려 갈등의 심각성을 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박탈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경영자와 노동자

간,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다문화, 개발과 환경보호 간,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을 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갈등 합산점수와 경제적 갈등의 합산점수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로 형태별 집단 간에는 전반적으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여성과 남성 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0.0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전반적인 갈등과 여성과 남성 간 갈등뿐이었다.

〈표 3-13〉 절대적 박탈 경험 여부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갈등의 영역	지난 1년간 절대박탈		F	Prob>F
	경험 안함	경험함		
(0) 전반적인 갈등 수준	1.88	1.94	1.51	0.2190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1.90	2.01	3.21	0.0733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1.74	1.87	4.32	0.0377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1.52	1.65	3.60	0.0580
(4) 경영자와 노동자	2.08	2.25	6.74	0.0095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1.55	1.77	9.08	0.0026
(6) 정규직과 비정규직	2.05	2.05	0.00	0.9596
(7) 여성과 남성	1.58	1.70	2.56	0.1099
(8) 고령자와 젊은이	1.56	1.70	3.89	0.0486
(9) 진보와 보수	2.35	2.30	0.53	0.4649
(10) 지역	1.74	1.88	3.67	0.0556
(11) 다문화	1.55	1.86	18.76	0.0000
(12) 개발과 환경보호	1.77	1.99	11.01	0.0009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1.87	2.06	7.93	0.0049
(14) 기업과 소비자	1.63	1.79	6.10	0.0135
갈등 합산점수	26.79	28.87	10.68	0.0011
경제갈등 합산점수	18.00	19.45	10.79	0.00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14〉 근로 형태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갈등의 영역	근로 형태					F	Prob>F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활자		
(0) 전반적인 갈등 수준	1.84	1.90	1.93	1.86	1.88	4.11	0.0025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1.94	1.88	1.94	1.82	1.87	2.85	0.0227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1.75	1.74	1.79	1.75	1.70	1.84	0.1189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1.52	1.56	1.54	1.54	1.51	0.70	0.5941
(4) 경영자와 노동자	2.08	2.12	2.11	2.11	2.05	1.28	0.2759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1.57	1.57	1.51	1.74	1.54	3.08	0.0153
(6) 정규직과 비정규직	2.05	2.08	2.06	2.00	2.04	0.45	0.7701
(7) 여성과 남성	1.59	1.62	1.52	1.77	1.60	3.89	0.0037
(8) 고령자와 젊은이	1.52	1.56	1.59	1.68	1.57	1.74	0.1390
(9) 진보와 보수	2.34	2.39	2.39	2.24	2.31	2.61	0.0339
(10) 지역	1.76	1.79	1.74	1.76	1.71	1.01	0.4027
(11) 다문화	1.56	1.61	1.51	1.60	1.58	1.88	0.1115
(12) 개발과 환경보호	1.75	1.76	1.80	1.78	1.80	1.10	0.3530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1.88	1.87	1.92	1.93	1.84	1.62	0.1657
(14) 기업과 소비자	1.62	1.64	1.66	1.70	1.62	0.83	0.5082
갈등 합산점수	26.80	27.05	26.95	27.37	26.64	0.63	0.6404
경제갈등 합산점수	18.06	18.08	18.23	18.20	17.82	1.01	0.40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15〉 직종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갈등의 영역	직종					F	Prob>F
	단순 노무직	숙련 기능직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관리 전문직		
(0) 전반적인 갈등 수준	1.89	1.83	1.91	1.86	1.91	2.48	0.0418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1.93	1.92	1.91	1.94	1.99	1.15	0.3292
(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1.86	1.73	1.77	1.76	1.72	1.71	0.1444
(3)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1.68	1.50	1.52	1.54	1.54	2.38	0.0499
(4) 경영자와 노동자	2.12	2.12	2.07	2.09	2.18	1.59	0.1736
(5)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1.62	1.47	1.53	1.59	1.64	3.55	0.0067
(6) 정규직과 비정규직	2.13	2.03	2.04	2.08	2.07	1.08	0.3669
(7) 여성과 남성	1.63	1.48	1.56	1.63	1.62	3.18	0.0128
(8) 고령자와 젊은이	1.61	1.52	1.56	1.56	1.52	0.74	0.5618
(9) 진보와 보수	2.41	2.35	2.36	2.31	2.47	3.17	0.0131
(10) 지역	1.73	1.65	1.78	1.75	1.88	4.41	0.0015
(11) 다문화	1.58	1.48	1.54	1.56	1.70	4.08	0.0027
(12) 개발과 환경보호	1.73	1.77	1.76	1.71	1.93	5.08	0.0004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1.88	1.90	1.89	1.83	2.01	3.45	0.0081
(14) 기업과 소비자	1.62	1.64	1.66	1.59	1.67	1.38	0.2371
갈등 합산점수	27.21	26.37	26.80	26.80	28.09	3.65	0.0057
경제갈등 합산점수	18.23	17.89	18.02	18.05	18.86	2.68	0.02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직종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직종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관리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이 대체적으로 갈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여성과 남성 간, 진보와 보수 간, 지역 간, 다문화, 개발과 환경보호 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관리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은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나. 경제적 갈등의 심각성 인식 결정 요인

앞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특히 경제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주관적 계층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층일수록 경제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갈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재산 등 개인의 특성과 가구의 자원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관적 계층인식은 경제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즉,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된 소득을 빼고 계층변수(중위소득 50%와 150%를 기준으로 한 계층)를 투입한 경우, 계층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는 객관적인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인 인식계층 간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중간층 혹은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계층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6〉 경제갈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항목	주관적 계층 모형 b/se	객관적 계층 모형 b/se
성별	남자	0.728 (0.496)	0.811 (0.498)
연령	25~34세	3.397** (1.034)	3.643*** (1.041)
	35~44세	3.634*** (1.014)	4.041*** (1.021)
	45~54세	1.639 (0.949)	1.842 (0.956)
	55~64세	3.016** (1.016)	3.441*** (1.021)
	65세 이상	1.640 (1.234)	1.887 (1.250)
교육수준	고졸	2.199* (0.893)	1.832* (0.910)
	대학 이상	1.702 (0.985)	0.921 (0.995)
균등화된 소득		0.006** (0.002)	
가구총재산		0.000*** (0.000)	0.000** (0.000)
주관적 계층	중하층	-1.751* (0.755)	
	중간층	-4.327*** (0.777)	
	중상층(상층)	-7.156*** (1.341)	
중위소득	50~150%		0.175 (0.944)
	150% 이상		0.958 (1.153)
상수		56.128*** (1.312)	54.885*** (1.354)
N		3,464	3,464
r ²		0.027	0.0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계층에 따라 공정성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 공정성 인식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사회갈등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객관적 소득계층별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는 반면, 주관적 계층 간에는 공정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층과 중하층은 중간층과 중상층에 비해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자신이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금수저·흙수저’ 논란에서와 같이 노력보다는 부모 세대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망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계층 간에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3-17〉 객관적 소득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공정성 인식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3.22	3.24	3.22	3.23	0.23	0.7913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59	2.56	2.62	2.50	5.20	0.0056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	3.04	3.00	3.05	3.04	0.57	0.566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0.88	0.84	0.86	0.99	7.60	0.0005
불공정성 합산 점수	9.74	9.64	9.75	9.76	0.57	0.56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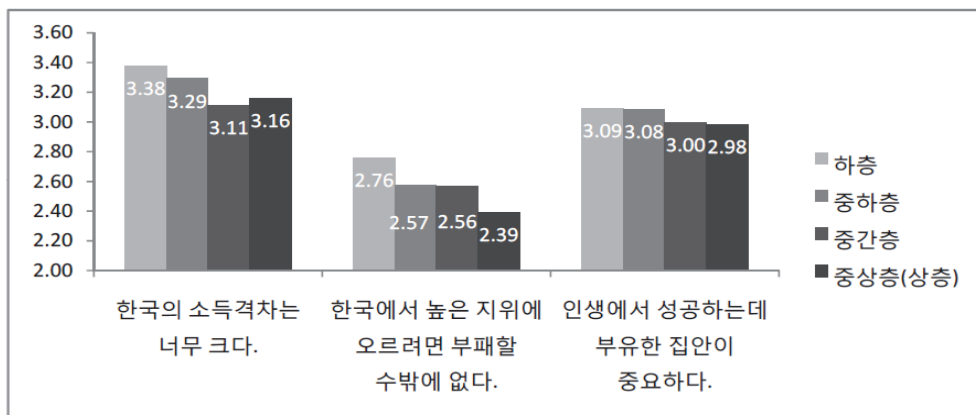
〈표 3-18〉 주관적 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공정성 인식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3.38	3.29	3.11	3.16	25.06	0.0000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76	2.57	2.56	2.39	9.73	0.0000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	3.09	3.08	3.00	2.98	3.53	0.0143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0.84	0.90	0.88	0.83	1.09	0.3517
불공정성 합산 점수	10.07	9.85	9.56	9.36	14.30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3]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불공정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항목	주관적 계층 모형 b/se	객관적 계층 모형 b/se
성별	남자	0.432 (0.395)	0.489 (0.398)
연령 (65세 이상=0)	19~24세	-0.786 (0.959)	-0.821 (0.972)
	25~34세	2.715** (0.891)	3.037*** (0.911)
	35~44세	4.581*** (0.869)	4.957*** (0.890)
	45~54세	1.628* (0.806)	1.901* (0.825)
	55~64세	1.947* (0.775)	2.364** (0.789)
교육수준	고졸	2.285*** (0.692)	2.201** (0.707)
	대학 이상	2.227** (0.770)	1.772* (0.779)
균등화소득		0.003 (0.002)	
총재산		0.000 (0.0000)	0.000 (0.000)
주관적 계층	중하층	-2.201*** (0.598)	
	중간층	-4.661*** (0.618)	
	중상층(상층)	-6.435*** (1.075)	
가구총소득			-1.484* (0.715)
중위소득	50~150%		-1.693 (0.884)
	150% 이상	58.820*** (0.728)	57.997*** (0.720)
상수		58.820*** (0.728)	57.990*** (0.721)
N		3.870	3.870
r ²		0.041	0.0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평등 인식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와 소득의 분배, 법 앞의 평등,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

에서는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저소득층은 중간계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취업 기회, 소득분배, 부의 분배에 있어 더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승진 기회와 여성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는 중간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의 기회에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낮은 소득과 재산으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는 데 비해, 중간계층은 취업 후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나 유리천장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평등 인식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교육 기회	1.72	1.67	1.74	1.66	2.91	0.0547
취업 기회	2.34	2.41	2.37	2.17	17.86	0.0000
승진(승급) 기회	2.45	2.40	2.49	2.37	6.97	0.0010
법의 집행	2.58	2.60	2.59	2.54	1.05	0.3504
여성에 대한 대우	2.17	2.07	2.20	2.11	7.09	0.0008
장애인에 대한 대우	2.40	2.36	2.40	2.41	0.65	0.5200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2.46	2.41	2.46	2.45	0.93	0.3962
소득 분배	2.55	2.63	2.57	2.45	9.09	0.0001
부(재산) 분배	2.61	2.68	2.62	2.52	6.86	0.0011
지역에 따른 발전수준	2.49	2.48	2.51	2.43	2.97	0.0513
불평등 합산점수	23.77	23.70	23.96	23.12	6.73	0.00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경우,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부의 분배, 취업 기회, 승진 기회, 교육 기회, 법의 집행 등에서 하층은 중간층이나 중상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다만 여성에 대한 대우와 지역에 따른 발전 수준의 불평등에 있어서는 주관적 계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21〉 주관적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평등 인식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교육 기회	1.79	1.70	1.72	1.53	4.61	0.0032
취업 기회	2.50	2.35	2.30	2.04	17.01	0.0000
승진(승급) 기회	2.59	2.46	2.44	2.15	14.89	0.0000
법의 집행	2.68	2.61	2.55	2.46	4.76	0.0026
여성에 대한 대우	2.17	2.17	2.19	2.04	1.92	0.1249
장애인에 대한 대우	2.49	2.38	2.39	2.31	3.34	0.0186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2.55	2.42	2.46	2.34	4.71	0.0028
소득 분배	2.73	2.55	2.51	2.32	18.00	0.0000
부(재산) 분배	2.77	2.59	2.58	2.41	13.73	0.0000
지역에 따른 발전수준	2.51	2.47	2.51	2.42	1.37	0.2496
불평등 합산점수	24.78	23.71	23.63	22.01	14.03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불평등도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주관적 계층에 따라 불평등도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하위계층은 중간층이나 중상층에 비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 중간계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소득층과는 불평등도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회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인에 비해 젊은 층이 불평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학력자보다는 고졸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현재의 불평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불평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항목	주관적 계층 모형 b/se	객관적 계층 모형 b/se
성별	남자	-0.573 (0.443)	-0.573 (0.445)
연령 (65세 이상=0)	19~24세	2.926** (1.076)	2.891** (1.087)
	25~34세	2.610** (1.000)	2.955** (1.019)
	35~44세	3.326*** (0.976)	3.594*** (0.995)
	45~54세	1.777* (0.904)	2.013* (0.922)
	55~64세	1.202 (0.870)	1.484 (0.882)
교육수준	고졸	2.711*** (0.777)	2.474** (0.791)
	대학 이상	2.441** (0.864)	1.998* (0.871)
균등화소득		(0.003) (0.002)	
총재산		0.000* (0.000)	0.000 (0.000)
주관적 계층	중하층	-3.461*** (0.671)	
	중간층	-4.090*** (0.694)	
	중상층(상층)	-8.118*** (1.206)	
중위소득	50~150%		-1.672* (0.800)
	150% 이상		-4.371*** (0.989)
상수		59.137*** (0.817)	57.291*** (0.805)
N		3,870	3,870
r ²		0.025	0.0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모두 계층이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난 10년간 생활수준은—변화의 결과가 현재의 계층이라는 점에서 동어반복의 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고소득층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졌고, 다음으로 중간층, 저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였다.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모두에서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과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 세대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상위 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층은 중상층에 비해 노력해도 세대 내 계층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관적 전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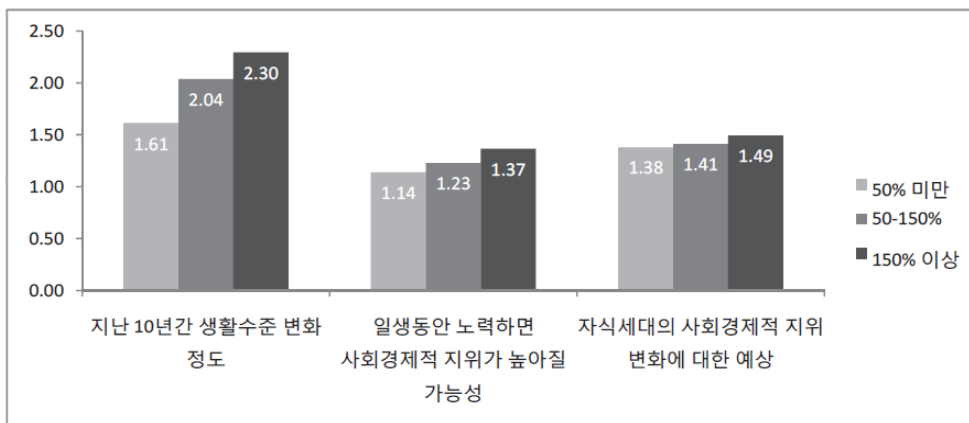
〈표 3-23〉 객관적 소득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계층이동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	150% 이상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2.04	1.61	2.04	2.30	116.71	0.0000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1.24	1.14	1.23	1.37	14.45	0.0000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1.42	1.38	1.41	1.49	4.57	0.0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4〕 객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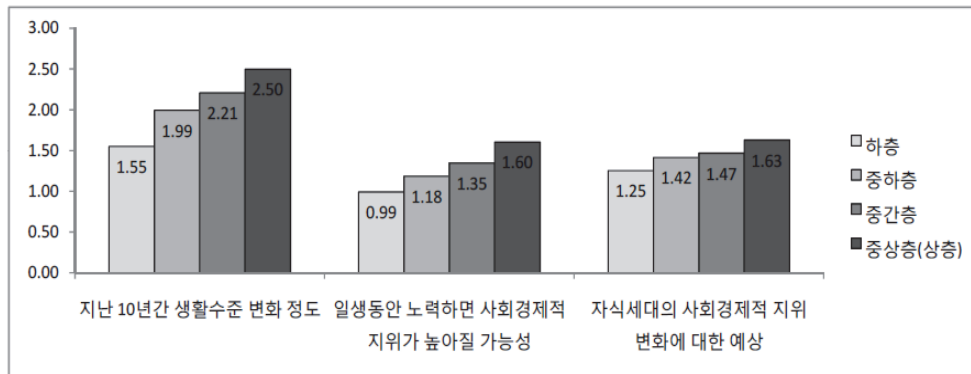
〈표 3-24〉 주관적 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계층이동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1.55	1.99	2.21	2.50	151.40	0.0000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0.99	1.18	1.35	1.60	51.94	0.0000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1.25	1.42	1.47	1.63	18.96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5〕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계층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가.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월평균 수입에 대한 규범적 접근(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350만 원일 때 각 직업의 적절한 월수입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근접한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적정 수입의 크기는 대기업 CEO, 의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제조업 숙련기술자, 대기업 신입사원, 청소부, 공장 비숙련근로자, 가게점원의 순이었다. 다만 대기업 CEO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의 격차가 상당히 커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의 평균 6.82배 정도의 수입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CEO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을 이끄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대해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부터 가게점원까지의 격차는 현실에 비해 낮아서, 평균적으로 의사는 가게점원보다 3.36배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객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단위: 점)

적정수입배율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대기업 CEO	6.82	5.66	6.56	8.41	5.44	0.0044
의사	2.11	1.94	2.11	2.24	8.12	0.0003
대학교수	1.71	1.65	1.71	1.73	2.39	0.0915
국회의원	1.33	1.38	1.31	1.39	1.52	0.2190
제조업 숙련기술자	1.12	1.07	1.12	1.15	3.86	0.0212
대기업 신입사원	0.92	0.89	0.91	1.00	7.15	0.0008
청소부	0.73	0.69	0.74	0.74	7.50	0.0006
공장 비숙련근로자	0.71	0.68	0.71	0.71	1.85	0.1571
가게(매장)점원	0.63	0.60	0.63	0.65	7.92	0.0004
의사/가게점원 배율	3.36	3.24	3.36	3.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26〉 주관적 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단위: 점)

적정수입배율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대기업 CEO	6.51	7.06	6.62	7.81	0.54	0.6554
의사	2.06	2.13	2.09	2.31	2.21	0.0846
대학교수	1.63	1.71	1.72	1.77	4.32	0.0047
국회의원	1.19	1.35	1.34	1.62	6.02	0.0004
제조업 숙련기술자	1.09	1.11	1.12	1.29	8.46	0.0000
대기업 신입사원	0.91	0.92	0.91	1.11	6.54	0.0002
청소부	0.73	0.72	0.74	0.79	6.20	0.0003
공장 비숙련근로자	0.70	0.70	0.72	0.73	1.48	0.2166
가게(매장)점원	0.62	0.62	0.63	0.71	9.59	0.0000
의사/가게점원	3.34	3.46	3.30	3.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소득계층별 적정임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중간계층에 비해 모든 직업군에서 좀 더 높은 소득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기업 CEO의 평균 수입이 초등학교 교사의 수입보다 8.41배 정도 더 높은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중간계층의 6.56배, 저소득층의 5.66배

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와 가게점원 간의 소득격차는 저소득층이 3.24배, 중간계층이 3.36배, 고소득층이 3.43배로 저소득층의 임금압축(wage compression)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계층에 있어서는 의사와 가게점원 간의 소득배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오히려 중상층(3.26배)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간층(3.30배), 하층(3.34배), 중하층(3.46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가게점원의 수입은 초등학교 교사의 0.71배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하층과 중하층의 0.62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나. (재)분배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계층별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실업자,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즉,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실업자나 빈곤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더 큰 동의를 표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동의를 표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이해적(self-interested)’ 관점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7〉 객관적 소득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평등 인식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	150% 이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55	2.62	2.56	2.50	2.56	0.077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2.49	2.61	2.48	2.44	4.87	0.0077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24	2.41	2.22	2.19	7.17	0.0008
정부 개입의 정당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1.84	1.79	1.83	1.90	2.00	0.1348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1.88	1.86	1.87	1.92	0.78	0.4596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1.77	1.68	1.78	1.79	3.66	0.0257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1.90	1.92	1.90	1.90	0.22	0.8033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2.03	2.05	2.02	2.04	0.23	0.7950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1.51	1.58	1.51	1.46	2.36	0.0949
정부 개입 선호도 합산점수		18.25	18.64	18.21	18.19	1.91	0.1490

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의 세 항목은 0~4점의 5점 척도이며, 나머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0~3점의 4점 척도임.

2)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역코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인식 차이는 자기이해적 관점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층이나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하는 것, 빈곤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 또한 하층은 대기업이 영세자영 업종이나 영세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근로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특이한 점은 대기업의 영세업종이나 영세 상권 진입 제한이나,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보호노동에 대해서는 중상층에 비해 중간층의 동의 정도가 더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상층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가부장적(paternalism)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저소득층과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상당 정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간층의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 이득을 얻는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8〉 주관적 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평등 인식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72	2.59	2.47	2.41	13.30	0.0000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2.66	2.48	2.44	2.37	10.43	0.0000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49	2.22	2.16	2.20	16.52	0.0000
정부 개입의 정당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1.95	1.84	1.80	1.87	4.21	0.0055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2.00	1.87	1.83	1.98	5.62	0.0008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1.78	1.77	1.75	1.91	2.59	0.0512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1.94	1.93	1.87	1.86	2.64	0.0480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2.07	2.05	1.99	2.11	3.97	0.0078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1.55	1.51	1.48	1.56	1.15	0.3289
정부 개입 선호도 합산점수		19.31	18.32	17.79	18.31	18.28	0.0000

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의 세 항목은 0~4점의 5점 척도이며, 나머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0~3점의 4점 척도임.

2)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역코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계층 변수가 정부 개입 선호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정부 개입의 선호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재확인되었다. 즉,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재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하층은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보다 정부 개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상층에 비해서 중간층이 하층보다 복지 개입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객관적 계층에 있어서도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계층은 중위소득 50~150%의 중상층에 비해 정부 개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층 혹은 중간계급이 정부 개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3-29〉 정부 개입 선호도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항목	주관적 계층 모형 b/se	객관적 계층 모형 b/se
성별	남자	0.456 (0.468)	0.549 (0.470)
연령 (65세 이상=0)	19~24세	-0.432 (1.144)	-0.592 (1.158)
	25~34세	1.694 (1.055)	1.799 (1.079)
	35~44세	3.037** (1.026)	3.301** (1.052)
	45~54세	2.989** (0.947)	3.252*** (0.970)
	55~64세	1.612 (0.917)	1.939* (0.935)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104 (0.816)	-0.235 (0.835)
	대학 이상	0.784 (0.908)	0.243 (0.917)
균등화소득		-0.001 (0.002)	
총재산		0.000 (0.000)	-0.000* (0.000)
주관적 계층 (하층=0)	중하층	-3.344*** (0.710)	
	중간층	-5.231*** (0.733)	
	중상층(상층)	-3.341** (1.255)	
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0)	50~150%		-2.413** (0.869)
	150% 이상		-2.052 (1.062)
상수		62.594*** (0.868)	61.221*** (0.854)
N		3,626	3,626
r ²		0.025	0.01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계층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가정에 따른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을 묻는 문항을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인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빈곤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하여, 대체로 절대 다수가 공·사 공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87.1%, 자식들의 생활비 보조에 대해서는 8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지원에 대해서는 81.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했다.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자식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위 50% 미만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그나마 안정수단 혹은 유산인 주택을 유동화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꺼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3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본인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나이 든 부모님이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50% 미만	37.5	43.3	13.9	5.0	0.4	100.0
	50~150%	35.7	52.0	9.9	2.2	0.2	100.0
	150% 이상	35.8	52.8	10.2	1.2	0.1	100.0
	전체	35.9	51.2	10.4	2.3	0.2	100.0
		Pearsonchi2(8)= 32.3297 Pr = 0.000					
본인과 형제·자매들이 조금씩 거두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50% 미만	31.6	46.7	16.4	4.8	0.5	100.0
	50~150%	29.0	50.4	18.9	1.3	0.4	100.0
	150% 이상	31.4	51.7	14.7	1.5	0.8	100.0
	전체	29.8	50.2	17.8	1.7	0.5	100.0
		Pearsonchi2(8)= 36.9940 Pr =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50% 미만	35.9	46.0	14.2	2.6	1.3	100.0
	50~150%	35.4	47.0	14.2	3.1	0.3	100.0
	150% 이상	28.5	50.4	16.8	3.3	1.0	100.0
	전체	34.1	47.6	14.7	3.1	0.6	100.0
		Pearsonchi2(8)= 12.1837 Pr = 0.143					

(본인을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50% 미만	30.2	47.2	15.4	6.4	0.9	100.0
	50~150%	33.8	47.1	15.0	3.6	0.5	100.0
	150% 이상	33.5	49.1	12.5	3.9	1.0	100.0
	전체	33.3	47.5	14.5	4.0	0.7	100.0
		Pearsonchi2(8)= 12.9557 Pr = 0.113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50% 미만	50.9	34.6	11.1	2.7	0.7	100.0
	50~150%	45.3	41.0	11.6	1.9	0.3	100.0
	150% 이상	42.6	40.7	12.6	3.9	0.3	100.0
	전체	45.4	40.2	11.7	2.4	0.3	100.0
		Pearsonchi2(8)= 25.2108 Pr = 0.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50% 미만	14.8	32.9	22.9	18.4	11.1	100.0
	50~150%	15.8	32.0	24.7	16.6	10.9	100.0
	150% 이상	14.1	35.0	25.6	15.5	9.8	100.0
	전체	15.3	32.7	24.7	16.6	10.7	100.0
		Pearsonchi2(8)= 11.0121 Pr = 0.201					
(아동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자녀장려세제, 아동수당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의 확대	50% 미만	25.1	56.2	16.2	2.1	0.4	100.0
	50~150%	24.6	56.7	17.2	1.4	0.1	100.0
	150% 이상	24.6	56.7	17.6	1.0	0.0	100.0
	전체	24.7	56.7	17.2	1.4	0.2	100.0
		Pearsonchi2(8)= 3.7199 Pr = 0.881					
맞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	50% 미만	31.1	52.9	14.8	0.9	0.4	100.0
	50~150%	37.8	50.1	11.0	1.1	0.1	100.0
	150% 이상	36.3	52.6	10.8	0.2	0.0	100.0
	전체	36.7	50.9	11.4	0.9	0.1	100.0
		Pearsonchi2(8)= 11.0285 Pr = 0.200					
주택보조금,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의 확대	50% 미만	28.5	52.9	16.9	1.3	0.4	100.0
	50~150%	32.6	50.8	15.4	1.1	0.1	100.0
	150% 이상	34.3	50.5	14.7	0.4	0.0	100.0
	전체	32.4	51.0	15.5	1.0	0.1	100.0
		Pearsonchi2(8)= 11.0121 Pr = 0.201					

주: Person chi2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상태의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에 비해 부유한 자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주택연금 가입보다는 부유한 자녀의 생활비 보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크게 낮아졌다.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데 대한 동의는 85.6%,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는 80.8%에 이르는 반면, 공적 지원에 대한 동의는 48%에 머물렀다. 주택연금과 공적지원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강한 동의 수준이 좀 더 높았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81.4%,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87.6%, 주거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83.4%가 동의 또는 적극 동의의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에 대한 태도 차이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의 경우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모두에서 적극적 찬성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빈곤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지원이 강화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계층임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중간층이 중상층에 비해 공적, 사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 동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빠듯한 현재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직접적 지원이든 세금이든 더 부담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유한 자녀를 가정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관적 계층별 저소득 아동가구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상층에서 적극적인 동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다. 비록 이들의 비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득지원,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모두에서 중상층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인 이들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지원에 적극적 동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나이 든 부모님이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하층	49.8	36.9	9.8	3.4	0.2	100.0
	중하층	37.3	51.2	9.1	2.1	0.3	100.0
	중간층	29.0	56.5	12.1	2.3	0.1	100.0
	중상층(상층)	38.8	52.3	8.0	0.7	0.4	100.0
	전체	35.9	51.2	10.4	2.3	0.2	100.0
		Pearson chi2(12)= 63.9320 Pr = 0.000					
본인과 형제·자매들이 조금씩 거두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하층	41.5	36.3	18.6	3.3	0.3	100.0
	중하층	28.8	50.6	18.7	1.7	0.3	100.0
	중간층	25.6	55.4	17.3	1.4	0.3	100.0
	중상층(상층)	33.9	48.4	14.0	0.2	3.5	100.0
	전체	29.7	50.2	17.8	1.7	0.5	100.0
		Pearsonchi2(12)= 49.3765 Pr =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하층	50.2	34.9	10.9	4.0	0.0	100.0
	중하층	36.0	47.1	14.1	2.0	0.8	100.0
	중간층	26.5	52.4	17.0	3.4	0.7	100.0
	중상층(상층)	32.7	50.2	11.8	5.3	0.0	100.0
	전체	34.1	47.5	14.7	3.1	0.6	100.0
		Pearsonchi2(12)= 74.1830 Pr = 0.000					
(본인을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하층	43.1	42.4	11.1	2.4	1.0	100.0
	중하층	32.7	46.2	15.6	4.8	0.7	100.0
	중간층	29.5	50.7	15.4	3.9	0.5	100.0
	중상층(상층)	40.1	46.1	10.7	3.2	0.0	100.0
	전체	33.4	47.5	14.5	4.0	0.7	100.0
		Pearsonchi2(12)= 23.5467 Pr = 0.023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하층	57.0	33.1	7.4	2.2	0.3	100.0
	중하층	46.1	40.7	11.2	1.8	0.3	100.0
	중간층	40.4	42.4	14.2	2.7	0.3	100.0
	중상층(상층)	45.9	40.6	8.7	4.7	0.0	100.0
	전체	45.4	40.2	11.8	2.4	0.3	100.0
		Pearson chi2(12)= 36.7400 Pr =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하층	17.6	29.2	20.2	17.2	15.8	100.0
	중하층	16.5	31.6	24.8	16.2	10.9	100.0
	중간층	13.0	34.5	26.9	16.7	8.9	100.0
	중상층(상층)	19.2	35.5	19.6	16.2	9.5	100.0
	전체	15.3	32.7	24.7	16.6	10.8	100.0
		Pearsonchi2(12)= 26.8829 Pr = 0.008					

(아동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계
자녀장려세제, 아동수당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의 확대	하층	22.7	60.5	15.3	1.3	0.2	100.0
	중하층	25.3	53.9	19.3	1.3	0.1	100.0
	중간층	23.3	58.4	16.8	1.4	0.2	100.0
	중상층(상층)	37.1	49.9	11.1	1.9	0.0	100.0
	전체	24.6	56.7	17.2	1.4	0.2	100.0
Pearsonchi2(12)= 16.6899 Pr = 0.162							
맞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	하층	36.1	53.2	10.1	0.5	0.1	100.0
	중하층	35.6	52.8	10.8	0.5	0.3	100.0
	중간층	36.9	48.9	12.8	1.4	0.0	100.0
	중상층(상층)	43.9	46.6	9.1	0.4	0.0	100.0
	전체	36.7	50.9	11.4	0.9	0.1	100.0
Pearsonchi2(12)= 6.3318 Pr = 0.898							
주택보조금, 임대주택등주거지원의 확대	하층	33.6	53.1	12.3	0.9	0.2	100.0
	중하층	31.8	51.8	15.3	0.9	0.2	100.0
	중간층	30.9	50.3	17.5	1.3	0.1	100.0
	중상층(상층)	46.2	44.2	9.7	0.0	0.0	100.0
	전체	32.4	51.0	15.5	1.0	0.1	100.0
Pearsonchi2(12)= 18.2245 Pr = 0.109							

주: Person chi2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상태의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에서의 계층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각 영역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3.10), 주거 복지 확대(2.74), 장애인 서비스 확대(2.55)의 순으로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에 대해서는 객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에는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특징적이다.

〈표 3-32〉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점)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38	2.50	2.38	2.32	6.77	0.001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43	2.54	2.40	2.47	6.18	0.0021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5	2.61	2.53	2.60	3.94	0.0196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2.37	2.48	2.36	2.34	5.13	0.0059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8	2.65	2.59	2.51	4.02	0.0180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74	2.76	2.76	2.68	3.04	0.0478
일자리를 만드는 것	3.10	3.11	3.10	3.06	0.76	0.4665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36	2.45	2.34	2.37	3.93	0.0197
복지 확대 선호점수	20.51	21.08	20.46	20.35	5.14	0.00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 계층별로는 의료서비스 노인 생활보장, 빈민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대학 장학금 등의 영역에서 계층 간 태도 차이가 확인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하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그 이상의 계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역시 중간층이나 중상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영역에 따라—노인 생활보장, 빈민 소득보장, 대학 장학금 제공—중간층은 중상층에 비해 복지 확대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주관적 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점)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44	2.41	2.34	2.29	4.24	0.0054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49	2.48	2.36	2.42	7.27	0.0001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3	2.57	2.53	2.64	2.12	0.095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2.53	2.37	2.30	2.40	12.45	0.000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4	2.59	2.57	2.69	1.89	0.1290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80	2.76	2.71	2.72	2.23	0.0828
일자리를 만드는 것	3.23	3.12	3.03	3.03	8.77	0.0000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36	2.36	2.34	2.47	6.58	0.0002
복지 확대 선호점수	20.92	20.68	20.18	20.68	4.24	0.00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학적 변수와 자산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에 따라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으로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계층—중하층, 중상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 역시 중상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항목	주관적 계층 모형 b/se	객관적 계층 모형 b/se
성별	남자	1.182** (0.411)	1.179** (0.411)
연령 (65세 이상=0)	19~24세	0.084 (0.998)	0.16 (1.004)
	25~34세	-0.775 (0.927)	-0.512 (0.942)
	35~44세	0.291 (0.905)	0.629 (0.919)
	45~54세	-0.784 (0.838)	-0.478 (0.852)
	55~64세	-1.226 (0.806)	-0.947 (0.815)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1.372 (0.720)	1.612* (0.730)
	대학이상	2.039* (0.801)	1.984* (0.805)
균등화소득		-0.004* (0.002)	
총재산		0 (0.000)	-0.000* (0.000)
주관적 계층 (하층=0)	중하층	-0.873 (0.622)	
	중간층	-2.293*** (0.643)	
	중상층(상층)	-0.327 (1.118)	
계층 (중위소득 50% 미만=0)	50~150%		-2.666*** (0.739)
	150% 이상		-2.780** (0.914)
상수		64.953*** (0.758)	65.096*** (0.744)
N		3,870	3,870
r2		0.014	0.01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적절
한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결과, 55.2%가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
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18.1%), 이용자가 본인부담
을 높여서(13.8%),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11.3%)의 순이었다. 저소득층은 세금이나
기부금 확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이용자 본인 부담

상향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세금을 높여야 할 경우 57.4%는 8분위 이상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88.1%는 6분위 이상 즉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세 계층에 있어서 주관적·객관적 계층에 따른 일관되고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5〉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단위: %)

구분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세금을 더 거두어서	18.1	22.9	17.4	17.6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	13.8	9.6	12.5	20.7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55.2	52.7	56.5	52.0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	11.3	14.2	11.6	8.3
기타	1.8	0.7	2.0	1.5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36〉 객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1분위	1.3	0.6	1.6	0.9
2분위	0.4	0.2	0.2	1.1
3분위	0.9	1.3	0.7	1.4
4분위	1.8	2.0	1.7	1.9
5분위	7.5	8.0	8.0	5.5
6분위	10.6	14.1	10.3	9.4
7분위	20.1	19.5	20.3	19.8
8분위	24.2	18.6	23.6	29.4
9분위	9.7	9.6	10.4	7.3
10분위	23.6	26.2	23.2	23.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단위: %)

구분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세금을 더 거두어서	19.7	19.6	15.6	22.0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	10.0	13.7	14.9	17.6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56.4	54.9	55.8	47.5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	11.4	9.9	12.6	9.9
기타	2.5	2.0	1.2	3.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38〉 주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1분위	1.1	1.2	1.5	1.5
2분위	0.1	0.7	0.1	1.4
3분위	0.9	1.2	0.6	1.5
4분위	1.0	1.9	2.1	1.0
5분위	11.3	5.7	8.4	1.0
6분위	12.7	9.4	11.3	5.9
7분위	18.3	21.9	19.2	22.1
8분위	18.7	24.8	25.6	24.5
9분위	8.3	10.3	9.7	9.1
10분위	27.6	23.1	21.4	32.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사회갈등, 공정과 평등, 분배와 재분배를 둘러싼 계층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문항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은 객관적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실제 소득보다는 종합적으로 인식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갈등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이 소득, 경제활동상태, 직종과 같은 단일 차원의 지위 변수보다는 다차원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요인의 총합으로서의 주관적 계층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격차뿐 아니라 다차원적 격차와 편견을 감소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22점,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2.59를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법집행의 불평등 수준이 부(재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의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신뢰는 낮고, 문지마 범죄, 가정 해체,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세대 내·세대 간 계층이동은 열린사회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징표이며,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에 기대어 열정과 노력을 담보해 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다양한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자식 세대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 세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저소득층 혹은 하위계층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회가 다소 불평등하더라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열려 있거나(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97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상당히 닫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평등한 사회인 경우(대표적으로 서구 복지국가)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조차 닫혀 있는 사회에서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너무 늦지 않게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이동의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치 영역—경제갈등, 공정성과 평등 등에 대한 인식—에서 중산층 혹은 중간층이 고소득층 혹은 중상층에 비해 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생활 영역—국가 개입, 복지 확대, 증세 등—에서 고소득층이나 중상층보다 더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간층이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간계층의 경우 복지를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될 경우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잔여적 복지국가일수록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강하고 제도적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일수록 친복지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현 상황에서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확대되는 것은 중장기적 복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통해 친복지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 4 장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4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

제1절 서론

갈등의 현상적 측면은 전쟁·혁명부터 토론, 긴장, 모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조대엽, 2014). 현대 사회에서 젠더갈등의 현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살인, 상해와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는 신체적 폭행, 성폭행, 성희롱 등의 폭력으로, 역할 갈등이나 모순으로, 최근에는 SNS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항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두려움, 공포, 긴장 상황 역시 젠더갈등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이슈에 대한 성별 인식 또는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역시 젠더갈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강남역 여대생 살해사건, 미투운동 등으로 촉발된 여성 혐오, 성폭력 등의 이슈로 인해 최근 들어 젠더갈등이 증폭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구조화된 차별과 불평등이 가시화된 사례일 뿐이다. 젠더갈등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는 인식,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젠더갈등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성역할로 인한 갈등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인식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갈등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구성원 집단 간의 갈등을 젠더갈등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과 생각의 차이 역시 젠더갈등이라 할 수 있다.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선입견 또는 편견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제도나 문화로 굳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젠더갈등은 다차원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성별 갈등은 이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를 포함시키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젠더갈등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성역할 인식 또는 특정 이슈(군가산점제, 호주제 폐지 등)에 대한 인식 등 젠더갈등의 지역적인 부분을 다뤄 왔

던 것으로 보인다(변화순 외, 2005; 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 2006).

특정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만을 조사 범위로 한정하기에는 2018년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격렬한 젠더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잠재적 현재적 성폭력 경험들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인식 양상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메갈’, ‘여혐’, ‘미러링’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한 젠더갈등 현상에 더하여 여전히 지속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것이 반영된 노동시장 성차별(임금격차, 고용차별, 유리천장 등),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부족과 참여 촉구를 위한 제도화, 역차별에 대한 갈등 양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젠더갈등 양상은 미시-거시, 인식-행태, 현상-관념을 넘나들며 관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분석의 일환으로 사회적·개인적 차원 젠더갈등의 현재적, 잠재적 현황을 파악하고,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차별 혹은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젠더갈등 양상과 젠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한 부분인 젠더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갈등 유발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이론적 논의: 젠더갈등의 다양한 차원

가. 사회갈등으로서의 젠더갈등

젠더갈등이란 성인 남녀의 개인적 갈등에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둘러싼 갈등,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 등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의 이해가 대립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갈등을 모두 의미한다(이재경, 2013).

사회갈등으로서의 젠더갈등은 성인 남녀의 개인적 갈등보다는 남녀의 역할규정이나 권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갈등으로, 주로 기성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변화순 외, 2005).

그런데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는 공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는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가족의 영역에서도 가부장적 지배체제로 인한 젠더갈등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Barry, 1995; Hochschild, 1989), 지역사회, 노동시장,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가부장적 질서를 둘러싼 젠더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나. 섹슈얼리티와 젠더갈등

Barry(1995)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야말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식민지화의 토대”라 하였고, 매킨논(Mackinnon)은 “섹슈얼리티는 성별 불평등을 없애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이재경 외, 2011에서 재인용). 가부장적 지배체제에서 여성들은 육체적 힘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섹슈얼리티 차원의 젠더갈등은 ‘갈등’이란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일방적 억압, 불균형, 피해, 일탈의 형태로 나타난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외모에 대한 억압과 차별 등도 섹슈얼리티 차원의 젠더갈등의 한 양상이면서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언제라도 잠재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의 정치를 수반한다. 이러한 공포로 인해 여성들은 공간적·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성폭력은 직접 경험한 여성 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시켜 잠재적 피해자로 만든다(이재경 외, 2011).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운동’은 잠재되었던 섹슈얼리티 차원의 젠더갈등이 표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정책이 아닌 사회문화적 운동을 통한 젠더갈등의 표출이 중요한 사회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지는 새롭게 제기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다. 성역할과 젠더갈등

근대적 노동시장 성립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확립 이후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체계’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확고히 하였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되고 여성의 역할도 변했지만, 여전히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은 젠더갈등을 유발한다.

노동인구 변화, 일·가족양립제도 혹은 가족친화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가정과 직장, 남성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호실드(Hochschild, 1989)는 ‘지연된 혁명’이라 언급했다. ‘지연된 혁명’이란 변화한 여성과 변하지 않은 직장·사회 간의 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역할과 젠더갈등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에도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다.

라. 노동시장과 젠더갈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지연된 혁명의 장애물을 넘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채용, 임금, 승진 관행에 의해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한다(조순경 편, 2000).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에 대해서는 인적자본이론, 선호가설, 이중노동시장이론 등 주류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해 왔지만, 페미니즘 이론들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이차적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하트만, 1985). 노동시장의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성차별은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한 긴장과 불평등은 그 자체로 ‘젠더갈등’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변화순 외(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성별갈등 현황에 대해 사례조사를 통해 접근하였다. 젠더갈등을 “한국의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젠더 규범이나 성질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정의하고, 연구 시점에서 젠더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군가산점제 폐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젠더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젠더갈등(성별갈등)’ 문제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분석하였지만, 일반 국민 대상 갈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와 직장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성격과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별갈등을 측정하기보다는 젠더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어 성평등의식, 성별 사회정체성, 상대적 지위, 성별 지위의 정당성에 대한 지각, 지위 변화의 안정성에 대한 지각, 성평등 행동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 등 의식 차원과 정책 차원에서 양성평등정책과 적극적조치,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한국 남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성역할 갈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젠더갈등을 조사했다기보다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이란 개념을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젠더갈등, 젠더갈등을 유발시키는 잠재적 불평등과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200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2015)는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젠더 가치 갈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두 연구 모두 본 연구의 조사 대상보다는 협소한 인구집단(아버지,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젠더갈등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젠더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여성의 어머니 역할, 성차별 및 성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갈등의 한 측면으로서 젠더갈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고,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잠재적 갈등 상황(성차별, 성폭력 이슈)까지 다루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재경(2013)에 따르면 사회통합 또는 사회갈등 논의에서 젠더갈등이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젠더 이슈가 여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보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모든 여성이 동일한 이해(interest)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젠더갈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젠더갈등은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결혼과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적인 영역까지 불평등의 차원(dimension)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공의 담론에 편입되기 쉽지 않은 점도 있다(이재경, 2013, p. 95).

3. 연구 방법

가.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실태조사」 원자료로, 분석단위는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일반 국민 개인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인구집단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가구 특성으로 성별(남성, 여성), 연령(청년(35세 미만)/중장년(35~64세)/노년(65세 이상), 결혼상태별(미혼, 유배우(사별 포함), 이혼·별거), 가구원 아동 수(18세 미만 아동 수/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생 아동 수), 학력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등이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균등화소득(1분위/2분위/3분위/4분위), 근로소득, 경제활동상태(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 고용안정성(비정규직/정규직), 근로시간(파트타임/풀타임)이다.

세 번째, 개인적 태도 및 경험 특성으로 이념적 성향(보수적/중도적/진보적), 성역할 태도(평등주의적~전통적), 최근 성폭력·성차별 경험 유무,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 인지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나. 주요변수 및 분석방법

1) 젠더갈등 종속변수: 사회적 젠더갈등,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젠더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다. 인식 차원에서 성별 갈등이나 성별 불평등(여성에 대한 대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분야별 성별 불평등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별 갈등(4점 척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5점 척도)을 주요한 종속변수로 삼고자 한다.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과 불평등 인식은 연구분석에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과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서열 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하였다.

한편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성별 불평등 인식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가정 내 성별 역할, 직장 내 성별 지위, 노동시장 임금, 전반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성별 불평등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기술통계로 집단 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젠더갈등 종속변수: 개인적 젠더갈등 인식

개인적 젠더갈등은 사회 전반적인 성별 불평등이나 갈등에 대한 인식보다도 실제적인 성폭력·성차별 경험 또는 그에 대한 공포를 통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에 젠더갈등의 잠재적 위험으로서의 성폭력·성차별 경험을 직접경험과 경험에의 노출 빈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성폭력·성차별 경험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내기 쉽지 않으나,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내용을 복수응답으로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직접적 경험은 조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폭력·성차별 위험 상황에서의 노출 빈도를 ‘경험하지 않음’/‘1년에 1~2번’/‘한달에 1~2번’/‘일주일에 1~2번’/‘매일’)의 5점 서열 척도로 조사하였다. 성폭력·성차별 위험상황은 경험에의 노출 빈도를 나타내는 간접경험(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 외모에 대한 지적 (2)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표현 (3) 교통 수단 이용 시 언어 폭력 (4) 야간 통행 시 성폭력 공포 (5) 공공 장소 성추행 공포 (6)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억압의 6가지로 조사하였다.

단, 성폭력·성차별 경험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경험 없음’의 빈도가 높아 독립변수로는 성폭력·성차별 직접 경험 유무, 성폭력·성차별 노출 경험 유무의 2항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젠더갈등 경험 종속변수인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은 6개 문항을 합산하여 척도(6~30점)를 구성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젠더갈등 기타 변수: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젠더갈등을 직접 드러내는 변수는 아니지만, 성역할태도에 따라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젠더갈등 분석 시 함께 분석되어야 하는 통제변수이다. ISSP(2012)의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모듈, World Value Survey wave 6(2010~2014), European Value Study(2008)의 성역할 문항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세부 문항별로 합산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돌봄노동 인식과 유급노동 인식을 통합하여 성역할태도라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4-1〉 성역할태도 문항

세부 내용		문항(4점 척도): 동의 정도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비고
성 역 할 태 도	돌 봄 노 동 인 식	취업모도 비취업모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 관계를 맺는다	
		취학 전 아동은 아동의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점수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면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점수
		대부분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다	역점수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역점수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역점수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남성도 여성과 같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 급 노 동 인 식	여성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남편이나 아내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역점수
		부부 중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별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역점수

자료: ISSP(2012)의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모듈, World Value Survey wave 6(2010~2014), European Value Study(2008)

4) 젠더갈등 기타변수: 성별 갈등 해결 방법

성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성별 갈등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적극적 조치를 통한 분야별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의 여성혐오,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사회 운동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4-2〉 성별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분류	문항	비고
일반적 성별 갈등 원인과 해결책	성별 갈등의 원인: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학습된 성별 고정관념/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가부장적 사회문화	
	성별 갈등의 해결책: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 배제/ 성별 고정관념 해소 교육/ 방송문화 개선/ 가부장적 사회문화 개선	
분야별 여성 지위 향상	다음 분야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 (1) 여성 국회의원/ (2) 여성 기업 CEO/ (3) 여성 법조인/ (4) 여성 과학자/ (5) 여성 장관/ (6) 여성 대학교수/ (7) 여성 군 장성	4점 척도
미투운동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가	5점 척도
	미투운동이 (1) 성폭력 감소/ (2) 성차별 완화/ (3)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4점 척도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조사 문항임.

제3절 분석 결과

1. 젠더갈등의 실태(기초통계)

가.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과 경험

1) 사회적 젠더갈등 및 불평등 인식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 즉 한국 사회에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심한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하다’ 11.85%, ‘대체로 심하다’ 40.43%, ‘별로 심하지 않다’ 39.07%, ‘전혀 심하지 않다’ 6.61%로 나타났고, 0점(전혀 심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심하다)으로

측정한 젠더갈등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하다’ 7.3%, ‘대체로 심하다’ 74.2%, ‘별로 심하지 않다’ 17.7%, ‘전혀 심하지 않다’ 0.9%로 나타났고, 평균 갈등 점수는 2.87점인 것에 비하면 일반적인 갈등 인식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젠더갈등 인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젠더갈등 인식 차이는 약간 존재할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의 젠더갈등 인식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일수록 젠더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차이를 보면 청년세대일수록 우리나라 젠더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젠더갈등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젠더갈등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에 따른 비정규직/정규직의 젠더갈등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적 성향일수록 오히려 젠더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진보적 성향도 중도 성향에 비해서는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다른 특성보다도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젠더갈등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 또는 두려움을 감지하는 경우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4-3〉 집단별 젠더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항목	젠더갈등	F	갈등 일반	F
전체		2.59	-	2.87	-
성별	여성	2.60	0.801	2.88	0.134
	남성	2.58		2.88	
혼인상태	유배우	2.55	10.291***	2.88	0.996
	별거	2.57		2.93	
	사별	2.40		2.89	
	이혼	2.58		2.94	
	미혼	2.71		2.87	
세대별	청년	2.72	25.011***	2.85	2.991
	중장년	2.55		2.90	
	노년	2.44		2.86	
지역별	대도시	2.65	12.231***	2.88	4.327*
	중소도시	2.52		2.89	
	농어촌	2.59		2.81	
학력수준별	중졸 이하	2.47	7.553**	2.86	1.227
	고졸	2.59		2.87	
	대졸 이상	2.62		2.89	
소득수준별	1분위	2.58	3.218*	2.88	3.184*
	2분위	2.55		2.87	
	3분위	2.57		2.85	
	4분위	2.66		2.9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	3.184**	2.84	3.10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2		2.90	
	고용주 자영자	2.53		2.93	
	무급가족종사자	2.46		2.91	
	실업자	2.77		2.86	
	비경제활동인구	2.60		2.88	
임금근로 안정성	정규직	2.59	0.742	2.84	4.737*
	비정규직	2.62		2.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5	7.191**	2.94	9.351***
	중도적	2.54		2.88	
	진보적	2.61		2.84	
성폭력· 성차별경험	무	2.55	84.09***	2.87	23.799***
	유	2.99		3.02	
성폭력성 차별 두려움	무	2.48	57.227***	2.86	4.585*
	유	2.68		2.9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편, 젠더 불평등 즉 여성에 대한 대우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평등하다’ 1.9%, ‘대체로 평등하다’ 18.2%, ‘보통이다’ 44.3%, ‘대체로 불평등하다’ 32.1%, ‘매우 불평등하다’ 3.4%로 나타났고, 0점(매우 평등하다)에서 5점(매우 불평등하다)으

로 측정한 젠더 불평등 평균 점수는 3.17점으로 다른 분야(취업 기회, 승진 기회, 법집행, 장애인, 다문화, 소득분배, 부의 분배, 지역발전)에 비해서는 불평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 내 역할에 대한 불평등은 2.68점, 회사 내 역할 3.01점, 취업 및 승진 3.30점, 임금 3.35점, 전반적 사회참여 3.09점으로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젠더 불평등 인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인식 수준은 여성일수록, 청년일수록,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수록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른 불평등 인식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에서는 최저소득계층은 1분위 집단과 최고소득계층인 4분위 집단에서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고,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나 고용주 자영자에 비해 실업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평등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표 4-4〉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젠더 불평등 일반, 가정 내 역할, 회사 내 역할

구분	항목	일반적 젠더불평등	F	가정 내 역할	F	회사 내 역할	F
전체		3.17	-	2.68	-	3.01	-
성별	여성	3.25	39.808***	2.78	50.835***	3.10	46.988***
	남성	3.09		2.58		2.91	
혼인상태별	유배우	3.16	1.891	2.63	5.286***	2.98	3.395**
	별거	3.29		2.72		3.26	
	사별	3.03		2.81		3.08	
	이혼	3.20		2.86		3.19	
	미혼	3.20		2.73		3.01	
세대별	청년	3.21	13.938***	2.69	1.152	3.04	1.302
	중장년	3.19		2.68		2.99	
	노년	2.98		2.62		2.99	
지역별	대도시	3.16	4.438*	2.75	10.191***	3.02	5.226**
	중소도시	3.20		2.63		3.02	
	농어촌	3.07		2.59		2.88	
학력수준별	중졸 이하	3.05	7.212**	2.72	3.913*	3.02	4.463*
	고졸	3.20		2.71		3.05	
	대졸 이상	3.19		2.63		2.96	

구분	항목	일반적 젠더불평등	F	가정 내 역할	F	회사 내 역할	F
소득 수준별	1분위	3.16	4.736**	2.78	13.664***	3.05	2.702*
	2분위	3.13		2.73		3.05	
	3분위	3.12		2.66		2.97	
	4분위	3.17		2.54		2.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5	4.563***	2.65	9.074***	2.92	12.8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3		2.81		3.07	
	고용주 자영자	3.07		2.54		2.9	
	무급가족종사자	3.18		2.76		3.07	
	실업자	3.26		2.88		3.24	
	비경제활동인구	3.23		2.74		3.14	
임금근로 안정성	정규직	3.15	3.4	2.62	22.71***	2.91	12.049**
	비정규직	3.22		2.83		3.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3	5.682**	2.73	4.761**	2.99	1.693
	중도적	3.14		2.69		2.99	
	진보적	3.24		2.62		3.05	
성폭력· 성차별 경험	무	3.13	84.101***	2.63	121.673***	2.96	155.359***
	유	3.58		3.20		3.58	
성폭력· 성차별 두려움	무	3.04	79.641	2.52	112.667	2.86	93.429***
	유	3.28		2.82		3.13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가정 내 역할, 회사 내 역할, 취업 및 승진, 임금, 전반적인 사회참여-로 나누어 불평등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임금에 대한 젠더 불평등(5점 만점 3.35점)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취업 및 승진(3.30점), 전반적인 사회 참여(3.09점), 회사 내 역할(3.01점), 가정 내 역할(2.68점) 순으로 젠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 더 불평등하게 인식하였고, 가정 내 역할 불평등 인식의 세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정 내 역할의 불평등을 더 인식하고 있었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정 내 역할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업자일수록,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가정 내 역할의 성별 불평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정 내 역할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성폭력·성차별 경험이나 두려움이 있는 집단일수록 가정 내 성별 역할 불평등도 강하게 인식하였다.

회사 내 성별 역할에 대해서는 성별, 혼인상태별로 여성일수록, 별거·이혼 중인 경우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회사 내 성별 역할을 불평등하게 인식하였고, 대졸이상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고졸인 경우 회사 내 성별 역할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회사 내 역할에 대해 성별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 내 성별 불평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회사 내 역할의 성별 불평등 수준 인식 차이는 없었고, 성폭력·성차별의 직접경험, 두려움이 있는 집단일수록 회사 내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았다.

취업 및 승진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이혼 상태일수록 더 강하게 불평등 수준을 인식하고 있었고, 세대별, 지역별, 학력수준별로 취업 및 승진의 성별 불평등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상태가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 승진에서의 성별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진보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일수록 취업 및 승진 성별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임금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노년 세대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 임금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록, 진보적 성향일수록 임금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사회 참여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 이혼한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불평등 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지하였다.

〈표 4-5〉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취업 및 승진, 임금, 전반적 사회참여

구분	항목	취업 및 승진	F	임금	F	사회 참여	F
전체		3.30		3.35		3.09	
성별	여성	3.41	59.359***	3.45	53.866***	3.17	40.233***
	남성	3.19		3.25		3.01	
혼인상태별	유배우	3.28	3.417**	3.35	4.722**	3.10	5.055***
	별거	3.29		3.23		3.13	
	사별	3.41		3.48		3.17	
	이혼	3.50		3.53		3.29	
	미혼	3.29		3.28		3.02	
세대별	청년	3.31	0.951	3.30	4.795**	3.04	2.163
	중장년	3.30		3.35		3.10	
	노년	3.31		3.44		3.11	
지역별	대도시	3.28	1.320	3.33	1.539	3.07	1.238
	중소도시	3.33		3.35		3.11	
	농어촌	3.27		3.41		3.05	
학력수준별	중졸 이하	3.29	2.446	3.44	31.691***	3.27	16.3***
	고졸	3.34		3.38		3.10	
	대졸 이상	3.28		3.29		3.03	
소득수준별	1분위	3.37	3.706*	3.46	12.380***	3.19	15.328***
	2분위	3.30		3.40		3.15	
	3분위	3.24		3.27		3.04	
	4분위	3.28		3.26		2.9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22	7.795***	3.25	9.004***	3.03	4.975***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3.38		3.48		3.21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3.22		3.31		3.03	
	무급가족종사자	3.44		3.55		3.16	
	실업자	3.33		3.33		3.1	
	비경제활동인구	3.41		3.43		3.14	
임금근로 안정성	정규직	3.22	10.564**	3.23	32.341***	3.02	22.310***
	비정규직	3.37		3.48		3.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8	3.511*	3.31	1.687	3.08	1.192
	중도적	3.27		3.34		3.07	
	진보적	3.36		3.38		3.12	
성폭력·성차별 경험	무	3.26	108.283***	3.31	65.562***	3.05	111.686***
	유	3.80		3.73		3.56	
성폭력·성차별 두려움	무	3.14	109.735***	3.23	62.413***	2.99	52.372***
	유	3.44		3.45		3.18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에 대해 ①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②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적 성추행, ③ 직장,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대우(인사상의 불이익, 임금차별, 업무 배제, 취업/입학 시 성차별 등), ④ 은행대출, 카드발급, 보험·부동산·자동차 (임대/매매)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⑤ 가족내 성차별(아들/딸 차별, 사위/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⑥ 가정폭력, ⑦ 데이트 폭력, ⑧ 스토킹, ⑨ 사이버 성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항목은 가족내 성차별,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적 대우 순으로 언급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년층에 비해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비경활인구인 경우 성폭력과 성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높았다.

구분		성폭력·성차별 경험											합계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추행	성차별 적 대우	일상생활 성차별	가족 내 성차별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기타	경험 없음	
학 력	중졸 이하	1 1.3%	1 1.7%	4 3.9%	1 1.6%	4 3.9%	5 22.8%	0 0.0%	0 0.0%	0 0.0%	0 0.0%	534 15.2%	549
	고졸	37 %	9 %	35 %	31 %	49 %	8 %	5 %	1 %	1 %	1466 41.8%	1580	
	대졸 이상	72 %	24 %	65 %	20 %	60 %	8 %	12 %	9 %	8 %	1505 42.9%	1680	
	1분위	11 %	3 %	26 %	25 %	28 %	8 %	5 %	2 %	1 %	0 %	897 25.2%	972
소 득 계 층	2분위	32 %	7 %	22 %	12 %	30 %	4 %	0 %	0 %	4 %	0 %	897 25.2%	971
	3분위	39 %	9 %	29 %	6 %	31 %	8 %	13 %	5 %	0 %	2 %	951 26.7%	1036
	4분위	30 %	15 %	27 %	9 %	25 %	1 %	0 %	1 %	5 %	0 %	822 23.0%	893
	상용직	58 %	15 %	46 %	21 %	27 %	7 %	7 %	5 %	4 %	2 %	1214 34.0%	1339
경 제 활 동 상 태	임시·일용직	18 %	4 %	22 %	13 %	18 %	7 %	2 %	1 %	0 %	411 11.5%	466	
	고용주· 자영업자	6 %	4 %	8 %	6 %	15 %	1 %	2 %	0 %	1 %	796 22.3%	825	
	무급가족	0 %	0 %	4 %	0 %	1 %	0 %	0 %	0 %	4 %	0 %	104 2.9%	108
	실업자	4 %	2 %	7 %	0 %	4 %	1 %	5 %	3 %	0 %	129 3.6%	147	
	비경활	26 %	8 %	18 %	12 %	48 %	5 %	5 %	0 %	0 %	912 25.6%	988	
	합계	112 %	33 %	104 %	52 %	114 %	20 %	18 %	9 %	9 %	2 %	3566 38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강화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야간 통행 시 위협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이나 두려움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여성일수록, 이혼 또는 미혼의 경우, 청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두려움과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 두려움 정도

구분	항목	점수	F
전체			
성별	여성	9.65	226.992***
	남성	9.31	
혼인상태별	유배우	8.23	8.515***
	별거	8.03	
	사별	8.42	
	이혼	8.92	
	미혼	8.94	
세대별	청년	9.11	40.623***
	중장년	8.38	
	노년	7.42	
지역별	대도시	9.05	44.295***
	중소도시	8.08	
	농어촌	7.70	
학력수준별	중졸 이하	7.40	37.715***
	고졸	8.40	
	대졸 이상	8.88	
소득수준별	1분위	8.27	3.543*
	2분위	8.30	
	3분위	8.63	
	4분위	8.6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72	7.69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92	
	고용주 자영자	7.99	
	무급가족종사자	7.51	
	실업자	8.52	
	비경제활동인구	8.41	
임금근로 안정성	정규직	8.73	0.533
	비정규직	8.87	
성폭력·성차별 경험	무	7.98	1134.094***
	유	14.2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성역할태도

사회적 젠더 불평등이나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성역할태도는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젠더갈등이나 젠더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에 대한 성역할태도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영역의 성역할태도를 통합한 성역할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 노년 세대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일용직,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전통적인 무급노동에 대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에 대한 성역할태도에서는 세대별, 학력수준별, 소득수준별, 임금근로 안정성, 이념적 성향, 성폭력·성차별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합적 성역할태도에 대해서는 남성일수록, 별거 상태인 경우, 노년 세대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일수록,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4-8〉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구분	항목	무급노동 성역할태도	F	유급노동 성역할태도	F	성역할태도	F
전체		2.22		2.47		2.34	
성별	여성	2.21	8.556**	2.45	6.843**	2.33	16.519***
	남성	2.24		2.48		2.36	
혼인 상태별	유배우	2.25	16.024***	2.48	4.183**	2.36	12.918***
	별거	2.31		2.56		2.44	
	사별	2.28		2.44		2.36	
	이혼	2.21		2.39		2.30	
	미혼	2.16		2.46		2.31	
세대별	청년	2.13	66.081***	2.48	0.769	2.31	31.504***
	중장년	2.24		2.46		2.35	
	노년	2.32		2.47		2.40	
지역별	대도시	2.24	5.569**	2.50	18.982***	2.37	18.211***
	중소도시	2.22		2.43		2.33	
	농어촌	2.18		2.47		2.32	
학력 수준별	중졸 이하	2.32	29.344***	2.45	1.065	2.38	12.088***
	고졸	2.22		2.47		2.35	
	대졸 이상	2.19		2.47		2.33	

구분	항목	무급노동 성역할태도	F	유급노동 성역할태도	F	성역할태도	F
소득 수준별	1분위	2.25	5.248***	2.45	1.052	2.35	1.074
	2분위	2.22		2.47		2.35	
	3분위	2.22		2.46		2.34	
	4분위	2.19		2.48		2.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19	4.784***	2.45	2.635*	2.32	6.564***
	임시일용직	2.25		2.47		2.36	
	고용주 자영자	2.25		2.47		2.36	
	무급가족종사자	2.24		2.53		2.38	
	실업자	2.17		2.41		2.29	
	비경제활동인 구	2.23		2.48		2.36	
임금근로 안정성	정규직	2.20	4.435*	2.46	0.008	2.33	2.207
	비정규직	2.23		2.46		2.3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9	33.778***	2.46	0.666	2.37	13.424***
	중도적	2.22		2.46		2.34	
	진보적	2.17		2.48		2.32	
성폭력· 성차별 경험	무	2.24	97.805***	2.47	2.164	2.35	67.537***
	유	2.05		2.24		2.24	
성폭력·성 차별 두려움	무	2.24	14.85***	2.46	2.593	2.35	2.738
	유	2.20		2.47		2.34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젠더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젠더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응답한 빈도(37.3%)가 가장 높았고, 가부장적 사회문화(25.2%),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23.2%),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1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응답자들도 꽤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 고정관념을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인 경우, 청년세대, 대졸 이상, 소득 1분위와 4분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표 4-9〉 인구학적·경제적 특성별 성별 갈등 원인 인식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혼인상태					세대			지역			학력			소득계층				성폭력·성차별 경험			
	남성	여성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청년	중장년	노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무	유	전체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빈도	466	435	570	3	28	42	258	262	546	93	430	410	60	115	392	378	182	239	263	216	843	57	900
	%	23.7	22.8	23.7	9.7	15.0	23.6	24.1	24.1	23.7	19.3	25.3	23.4	14.3	20.9	24.8	22.5	18.7	24.6	25.4	24.2	23.6	18.6	23.2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빈도	710	734	882	14	77	69	401	424	847	174	579	720	146	208	520	697	382	335	379	349	1318	127	1445
	%	36.1	38.5	36.6	45.2	41.2	38.8	37.5	39.0	36.8	36.2	34.1	41.1	34.7	37.9	32.9	41.5	39.3	34.5	36.6	39.1	37.0	41.5	37.3
인론 및 방송매체의 방종매체의 같은 조장	빈도	305	226	315	5	25	25	162	176	286	69	194	260	77	61	236	225	135	141	141	114	509	22	531
	%	15.5	11.9	13.1	16.1	13.4	14.0	15.2	16.2	12.4	14.3	11.4	14.8	18.3	11.1	14.9	13.4	13.9	14.5	13.6	12.8	14.3	7.2	13.7
가부장적 사회문화	빈도	471	506	633	9	57	42	237	217	615	145	487	353	138	165	424	370	271	251	248	206	880	97	977
	%	23.9	26.6	26.3	29.0	30.5	23.6	22.2	19.9	26.7	30.1	28.7	20.1	32.8	30.1	26.8	22.0	27.9	25.8	23.9	23.1	24.7	31.7	25.2
기타	빈도	15	4	8	0	0	0	11	9	10	0	9	10	0	0	9	10	2	5	5	7	16	3	19
	%	0.8	0.2	0.3	0.0	0.0	0.0	1.0	0.8	0.4	0.0	0.5	0.6	0.0	0.0	0.6	0.6	0.2	0.5	0.5	0.8	0.4	1.0	0.5
전체	빈도	1967	1905	2408	31	187	178	1069	1088	2304	481	1699	1753	421	549	1581	1680	972	971	1036	892	3566	306	38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강화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5) 미투운동과 그 효과에 대한 인식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성별 갈등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표 4-10〉 미투운동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성폭력 감소		성차별 완화		성별갈등 완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54	14.3	482	12.4	379	9.8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220	57.3	2027	52.3	1828	47.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931	24.0	1182	30.5	1380	35.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68	4.3	183	4.7	286	7.4
합계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미투운동의 효과를 점수화하여 살펴보면, 성폭력 감소(2.28점), 성차별 완화(2.28점), 성별갈등 해소(2.41점)로 성별 갈등 해소에 대한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중장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대졸 이상일 경우, 3분위 소득계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지지도가 높았다.

성차별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장년일수록,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3분위 소득계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지지도가 높았다.

성별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장년 세대일 경우, 3분위 소득계층일 경우,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도가 높았다.

〈표 4-11〉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별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항목	성폭력 감소	F	성차별 완화	F	성별갈등 해소	F
전체		2.28		2.28		2.41	
성별	여성	2.12	26.203***	2.19	47.320***	2.32	52.084***
	남성	2.24		2.35		2.49	
혼인상태별	유배우	2.15	4.063**	2.25	2.753*	2.36	3.843***
	별거	2.10		2.36		2.38	
	사별	2.26		2.26		2.38	
	이혼	2.27		2.34		2.44	
	미혼	2.24		2.33		2.50	
세대별	청년	2.20	10.584***	2.31	5.821**	2.48	6.570**
	중장년	2.15		2.24		2.37	
	노년	2.31		2.35		2.41	
지역별	대도시	2.14	6.454**	2.26	1.400	2.41	1.565
	중소도시	2.23		2.29		2.42	
	농어촌	2.16		2.24		2.33	
학력수준별	중졸 이하	2.29	8.686***	2.35	3.391*	2.43	1.034
	고졸	2.20		2.27		2.39	
	대졸 이상	2.14		2.26		2.42	
소득수준별	1분위	2.27	7.289***	2.33	6.424***	2.43	6.189***
	2분위	2.18		2.26		2.37	
	3분위	2.12		2.20		2.35	
	4분위	2.17		2.32		2.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4	8.767***	2.34	6.941**	2.44	1.182
	중도적	2.20		2.28		2.40	
	진보적	2.11		2.22		2.39	
성폭력· 성차별 경험	무	2.21	56.416***	2.30	43.013***	2.42	9.865**
	유	1.89		2.01		2.27	
성폭력· 성차별 두려움	무	2.27	44.124***	2.30	5.070*	2.40	0.190
	유	2.11		2.25		2.41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6) 분야별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여성 국회의원, 여성 CEO, 여성 법조인, 여성 과학자, 여성 장관, 여성 대학교수, 여성 군 장성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여성 법조인(매우 효과적 + 어느 정도 효과적 75.3%), 여성 CEO(72.5%), 여성 장관(68.6%), 여성 국회의원(68.2%), 여성 대학교수(66.9%), 여성 과학자(66.6%), 여성 군 장성(59.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과 CEO의 위상을 알 수 있는 한편, 과학계와 군대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12〉 분야별 여성 수 증가의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여성 지위 향상 효과	여성 국회의원		여성 CEO		여성 법조인		여성 과학자		여성장관		여성 대학교수		여성 군 장성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효과적	481	12.4	608	15.7	772	19.9	553	14.3	644	16.6	520	13.4	403	10.4
어느 정도 효과적	2161	55.8	2201	56.8	2147	55.4	2025	52.3	2015	52.0	2071	53.5	1892	48.8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1106	28.6	964	24.9	848	21.9	1164	30.0	1078	27.8	1127	29.1	1358	35.1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25	3.2	101	2.6	106	2.7	131	3.4	136	3.5	156	4.0	220	5.7
합계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387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일수록,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해당 분야 여성 수 증가의 여성 지위 향상 효과를 강하게 지지하였다. 특히 성폭력·성차별 경험자들이 여성 법조인의 수 증가(1.79점)를 강하게 지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결과이다.

〈표 4-1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항목	여성 국회의원	F	여성 CEO	F	여성 법조인	F
전체		2.23		2.14		2.07	
성별	여성	2.14	57.622***	2.07	45.549***	2.14	65.501***
	남성	2.31		2.22		2.31	
지역별	대도시	2.22	6.811**	2.14	2.380	2.22	13.047***
	중소도시	2.26		2.16		2.27	
	농어촌	2.12		2.08		2.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7	3.966*	2.18	4.225*	2.11	3.608*
	중도적	2.23		2.15		2.08	
	진보적	2.18		2.10		2.03	
성폭력· 성차별 경험	무	2.25	52.386***	2.16	25.065***	2.10	52.119***
	유	1.95		1.95		1.79	
구분	항목	여성 과학자	F	여성 장관	F	여성 대학교수	F
전체		2.23		2.18		2.24	
성별	여성	2.14	54.272***	2.08	71.184***	2.17	36.028***
	남성	2.31		2.28		2.31	
지역별	대도시	2.22	11.760***	2.14	19.389***	2.23	11.330***
	중소도시	2.27		2.26		2.28	
	농어촌	2.08		2.05		2.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9	8.630***	2.21	6.863**	2.27	2.877
	중도적	2.23		2.21		2.25	
	진보적	2.16		2.11		2.20	
성폭력· 성차별 경험	무	2.25	66.954***	2.21	51.343***	2.26	40.211***
	유	1.90		1.89		1.99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여성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 젠더갈등 인식

젠더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1), 사회경제적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2), 개인적 경험과 인식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3), 젠더갈등 인식 결정요인(모델 4)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별, 혼인상태(미혼(기준변수)/ 유배우(사별 포함)/ 이혼(별거포함), 연령, 가구 내 아동 수, 학력수준(고졸(기준변수)/ 중졸 이하/ 대졸 이상)의 영향과 함께 성별과 아동 수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 수는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 수와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생 아동 수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모델 1-1, 1-2, 1-3)에서는 연령 변수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선 교차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가구 내 아동 수,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생 아동 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자 여성일수록 아동 수,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생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젠더갈등 인식이 강해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 미취학, 초등학생인 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역할을 둘러싼 젠더갈등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표 4-14〉 인구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항목	변수	모델1-1	모델1-2	모델1-3	모델1-4	모델1-5	모델1-6
		b(SE)	b(SE)	b(SE)	b(SE)	b(SE)	b(SE)
성별 (남성)	여성	.115 (.063)	.118 (.062)	.114 (.063)	.102 (.065)	.124 (.064)	.105 (.063)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포함)	-.117 (.111)	-.189 (.079)	-.142 (.100)	-.161 (.116)	-.221** (.110)	-.153 (.102)
	이혼 (별거 포함)	-.026 (.159)	-.075 (.158)	-.027 (.066)	-.200 (.166)	-.127 (.162)	-.095 (.158)
연령	연령	-.010** (.007)	-.009* (.004)	-.009** (.003)	-.009* (.004)	-.009* (.004)	-.009** (.003)
학력수준 (고졸)	중졸 이하	-.061 (.107)	-.066 (.108)	-.063 (.108)	-.127 (.112)	-.056 (.111)	-.102 (.109)
	대졸 이상	.047 (.068)	.037 (.068)	.046 (.068)	-.019 (.071)	.017 (.069)	.002 (.069)

항목	변수	모델1-1	모델1-2	모델1-3	모델1-4	모델1-5	모델1-6
		b(SE)	b(SE)	b(SE)	b(SE)	b(SE)	b(SE)
아동 수	아동 수	-.021 (.020)			-5.199*** (.193)		
	미취학 아동 수		.023 (.082)			-6.133*** (.311)	
	초등학생 아동 수			-.114 (.084)			-5.752*** (.338)
상호 작용항	여성*아동 수				2.004*** (.072)		
	여성*미취학 아동 수					2.369*** (.116)	
	여성*초등 학생 아동 수						2.230*** (.129)
/cut1		-3.156 (.148)	-3.102 (.148)	-3.135 (.144)	-3.799 (.163)	-3.391 (.154)	-3.349 (.148)
/cut2		-.646 (.135)	-.592 (.135)	-.624 (.131)	-.685 (.141)	-.640 (.138)	-.652 (.132)
/cut3		1.477 (.139)	1.530 (.139)	1.499 (.134)	1.855 (.147)	1.681 (.143)	1.589 (.136)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경제적 특성인 주거지역(중소도시(기준변수)/대도시/농어촌), 근로소득, 취업 여부(미취업/취업)의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들이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여부는 젠더갈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적 태도와 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 3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성역할태도가 양성평등적일수록,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 성향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 4에서는 오히려 남성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주거지역, 근로소득, 정치적 성향, 성역할태도,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 및 두려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15〉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인적 태도·경험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항목	변수	모델2	모델3	모델4
		b(SE)	b(SE)	b(SE)
성별 (남성)	여성			-.162* (.070)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사별 포함)			-.018 (.112)
	이혼(별거 포함)			-.037 (.163)
연령	연령			-.013** (.004)
학력수준 (고졸)	중졸 이하			-.052 (.111)
	대졸 이상			.059 (.071)
아동 수	아동 수			-.022 (.049)
주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354*** (.064)		.364*** (.684)
	농어촌	.197 (.102)		.353** (.105)
소득	근로소득	-.001** (.000)		-.001*** (.000)
취업여부 (미취업)	취업	.034 (.083)		.055 (.085)
정치적 이념 (중도적)	보수적		.315*** (.076)	.417*** (.080)
	진보적		.090 (.073)	.038 (.074)
성역할태도 (평등주의적 -> 전통적)	성역할태도		-.933*** (.139)	-.980*** (.143)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 (없음)	있음		.874*** (.122)	.895*** (.125)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음)	있음		.363*** (.063)	.289*** (.066)
/cut1		-2.544 (.087)	-4.515 (.339)	-5.260 (.373)
/cut2		-.037 (.068)	-1.979 (.332)	-2.685 (.365)
/cut3		2.097 (.078)	.225 (.330)	-.457 (.362)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젠더 불평등 인식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젠더갈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인구·가구 특성이 미치는 영향(모델 1-1, 1-2),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모델2), 개인적 태도와 경험의 영향(모델3), 전체 변수들의 영향(모델 4)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모델 1-1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젠더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의 학력 수준에서 젠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과 아동 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1-2에서는 모델 1-1의 변수의 영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성별과 아동 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젠더 불평등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델 2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어촌 거주자가 성별 불평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일수록 젠더 불평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젠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델 3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젠더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 경우 더 젠더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수들을 투입한 모델 4에서는 여성일수록,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진보적 정치이념이 있을수록,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과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젠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젠더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열 로짓 분석

항목	변수	모델1-1	모델1-2	모델2	모델3	모델4
		b(SE)	b(SE)	b(SE)	b(SE)	b(SE)
성별 (남성)	여성	.388*** (.062)	.387*** (.062)			.202** (.069)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사별포함)	.024 (.111)	.013 (.111)			.038 (.112)
	이혼(별거포함)	.191 (.158)	.156 (.159)			.153 (.161)
연령	연령	-.008* (.004)	-.007* (.004)			-.003 (.004)
학력수준 (고졸)	중졸이하	-.238* (.106)	-.252* (.107)			-.190 (.109)
	대졸이상	-.091 (.067)	-.106 (.067)			-.089 (.070)
아동 수	아동 수	.053 (.048)	-.653*** (.127)			.049 (.049)
상호작용항	여성*아동 수		.282*** (.047)			
주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010 (.063)		-.173* (.067)
	농어촌			-.320** (.104)		-.225* (.107)
소득	근로소득			-.000 (.000)		-.000 (.000)
취업 여부 (비취업)	취업			.180* (.079)		-.141 (.081)
정치적 이념 (중도적)	보수적				.014 (.075)	.040 (.079)
	진보적				.163* (.072)	.161* (.073)
성역할태도 (평등주의적 -> 전통적)	성역할태도				-.623*** (.135)	-.597*** (.139)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없음)	있음				.776*** (.124)	.708** (.127)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없음)	있음				.433*** (.062)	.423*** (.065)
/cut1		-4.150 (.176)	-4.161 (.177)	-4.166 (.131)	-5.100 (.343)	-5.351 (.373)
/cut2		-1.592 (.136)	-1.592 (.136)	-1.616 (.072)	-2.536 (.324)	-2.778 (.355)
/cut3		.415 (.133)	.429 (.133)	.363 (.066)	-.516 (.322)	-.727 (.352)
/cut		3.170 (.156)	3.194 (.157)	3.116 (.105)	2.295 (.330)	2.087 (.359)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 변수 구성

앞서 분석한 젠더갈등과 젠더 불평등 인식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젠더갈등이라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은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1) 외모(용모, 복장,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2) 대중매체(TV 드라마·예능, 라디오 프로그램, 게임 등)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성역할 고정관념, 외모 비하 발언 등) (3)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4) 야간 통행·귀가 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5) 봄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6) 가사/돌봄 노동 강요의 경험 빈도를 조사하였고, 각 항목을 합산하여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 지수를 구성하였다(기술통계 <표 4-7> 참조).

나.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역시 인구·가구 특성의 영향(모델 1),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모델 2), 개인 경험과 태도의 영향(모델 3), 전체 변수들의 영향(모델 4)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1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은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과는 달리 여성일수록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응답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적 젠더갈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중졸 이하 혹은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 학력 수준에서 개인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모델 2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 3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개인적으로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4에서는 여성, 대졸 이상,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젠더갈등을 강하게 인식하였고, 성역할태도와 성폭력·성차별 경험도 여전히 강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목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SE)	b(SE)	b(SE)	b(SE)
	(상수항)	8.538*** (.227)	8.563*** (.278)	9.569*** (.530)	8.956*** (.851)
성별 (남성)	여성	1.859*** (.112)			1.687*** (.158)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포함)	-.457** (.172)			-.089 (.209)
	이혼 (별거 포함)	.319 (.281)			.340 (.364)
연령	연령	-.018** (.006)			.000 (.009)
학력수준 (고졸)	중졸 이하	-.751*** (.191)			-.394 (.323)
	대졸 이상	-.521*** (.121)			.455*** (.169)
주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1.385 (.184)		1.148*** (.152)
	농어촌		.171 (.340)		-.052 (.278)
소득	가구소득		-.004*** (.000)		0.000 (.000)
근로시간 (파트타임)	풀타임근로		.516 (.327)		.088 (.267)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정규직		.128 (.250)		-.029 (.213)
정치적 이념 (중도적)	보수적			-.145 (.124)	-.112 (.206)
	진보적			.278* (.118)	.188 (.257)
성역할태도 (평등주의적 → 전통적)	성역할태도			-.696* (.223)	-.986** (.320)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 (없음)	있음			6.104*** (.187)	5.996*** (.253)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5차 연도 사회통합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한 부분인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젠더 갈등의 현재적·잠재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젠더갈등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성차별 혹은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젠더갈등 양상과 사회적·개인적 젠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집단별 젠더갈등 인식 수준 차이에서는 성별보다는 미혼, 청년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근로 형태보다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점은 미투운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젠더갈등이 첨예화된 현시점에 보수적 성향의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가정 내 역할, 직장 내 역할, 취업 및 승진 기회, 임금, 전반적 사회참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갈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성폭력·성차별 위험 수준이 사회적 젠더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언급한 항목은 가족 내 성차별,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적 대우 순으로 언급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노년층에 비해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성폭력과 성차별을 경험한 빈도

가 높았다.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직접경험이 아니더라도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야간 통행 시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이나 두려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이혼 또는 미혼의 경우, 청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두려움과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이나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성역할태도는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젠더갈등이나 젠더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에 대한 성역할태도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영역의 성역할태도를 통합한 성역할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일수록, 별거 상태인 경우, 노년 세대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일수록,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었다.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성별 갈등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여성 국회의원, 여성 CEO, 여성 법조인, 여성 과학자, 여성 장관, 여성 대학교수, 여성 군 장성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여성 법조인, 여성 CEO, 여성 장관, 여성 국회의원, 여성 대학교수, 여성 과학자, 여성 군 장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성차별 경험자들이 ‘여성 법조인의 수 증가’를 강하게 지지한 것은 눈여겨볼 결과이다.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여성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젠더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1), 사회경제적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2), 개인적 경험과 인식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모델3), 젠더갈등 인식 결정요인(모델 4)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젠더갈등 영향 요인에서 특기할 점은 가구 내 아동 수,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교 아동 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자 여성일수록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교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젠더갈등 인식이 강해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역할을 둘러싼 젠더갈등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연령, 주거지역, 근로소득, 정치적 성향, 성역할태도,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 및 두려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여성과 아동 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여성, 중소도시 거주자,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 성폭력·성차별 경험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젠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은 성별의 영향력이 미약했던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과는 달리 여성일수록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응답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적 젠더갈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대졸 이상,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개인적 젠더갈등을 강하게 인식하였고, 성역할태도와 성폭력·성차별 경험도 강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젠더갈등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른 종류의 갈등과 불평등(예를 들면 소득계층 간,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세대 간 갈등)보다는 조금 약하게 인식되지만 성별, 돌봄 부담, 세대, 노동시장 취약성, 성폭력·성차별 위험 등의 균열 지점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돌봄 부담, 청년 세대, 취약한 노동자 등은 이미 사회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 이들이 젠더갈등 측면에서도 취약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둘째,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의 섹슈얼리티 관련 젠더갈등의 표출은 그 자체로 성폭력과 성차별 완화의 효과를 피하면서도 또 다른 젠더갈등의 이슈 촉발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갈등 관리 기제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성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 즉 스트레스 관리, 심리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소수만 관찰되었지만, 모집단 내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폭력·성차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사회적, 개인적 젠더갈등 인식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갈등 관리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만연한 성폭력·성차별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사회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젠더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며,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상적 폭력과 갈등의 구체적 발생 지점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예방적,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 5 장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5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

제1절 서론

한국 사회에서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 균열과 갈등은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석재은, 2014).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으로 지난 10년 동안 세대별 인구 규모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세대 인구규모의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사회에서 노령세대가 정치적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혁명(demographic revolution)’이 발생하였다. 둘째, 지난 10여 년간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의 접합이 심화되어 젊은 세대는 진보적 성향을, 노령세대는 보수적 성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의 진보적 성향이 평등보다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셋째, 젊은 세대와 노령세대는 성장과 분배,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남북관계 등 핵심 정책영역에서 매우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었다.

세대 간 단절, 분절에서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급격한 인구·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류적 가치관이 여론과 경제적 자원 배분을 주도하는 상황이 정당성을 잃을 때 나타난다. 홍덕률(2003)이 2000년대 초반 세대정치의 등장 과정을 목도하며 살펴본 2000년대의 세대갈등은 1993년의 신세대의 등장 때와 달랐다. 1993년에는 소수의 신세대를 다수의 기성세대가 ‘여유 있게’ 경계하면서 주목한 데 비해, 2002년에는 수적으로 다수가 된 도전세대가 기성세대를 압도하였다(홍덕률, 2003, p. 181). 또 도전세대가 기성세대를 수적으로 앞서고 사회적 의제 형성과 정치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도 기성세대를 위협하거나 압도하였다(홍덕률, 2003, p. 182).

한국 사회에서 세대를 다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 그러하듯이 세대의 가치관을 살펴야 한다. 세대 연구에서 세대란 ‘사회변화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함인희, 2000, p. 191)이다. 이것은 ‘세대효과’로서 뒤 세대는 앞 세대와 다른 환

경에서 자라면서 앞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앞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둘째는 세대의 규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앞서, 홍덕률(2003)이 주목한 1993년과 2003년의 차이에서는 세대의 규모가 달랐다. 물론 이때 단순히 특정한 인구학적 세대의 규모가 아니라 가치관 중심으로 연대한 세대가 주도적 가치관의 변화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함인희(2000)도 1999년 말부터 등장한 ‘세대 비약’ 개념을 소개한다. 세대 비약론은 세대 가치의 정체 현상이 심해져서 활력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앞 세대를 교체하는 세대 교체가 아닌,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는 유연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함인희(2000)는 이러한 세대 비약 논의가 젊은 세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기성세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실질적인 파워를 확보하고자 하는 논리로 작동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2010년 이래 세대갈등을 다루는 양상은 점차 세대 간의 자원 분배 경쟁을 논하고 있다. ‘88만원 세대’(우석훈, 박권일, 2007), ‘2030 vs 5060 세대전쟁’(박종훈, 2014), 렌트 추구의 사회(이재경, 2018)가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이 정치적 의도로 설정되었다는 비판(조현연·김정석, 2016)과 세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세대 게임’에서 세대가 편의적으로 활용되어 세대 간 갈등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전상진, 2018)도 존재한다.

이에 여기서는 세대 간의 자원 경쟁을 2절에서 간단히 다루고, 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대별로 가치관이 서로 많이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그렇지만 세대별 가치관 갈등의 정확한 지점을 집어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은 아니다. 본 분석에서 주되게 활용하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세대갈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이 아니어서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명명할 만큼 두드러진 차이를 세대별로 확인하기 위한 설문 구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이유이다. 후세대의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세대의 전면 등장, 즉 세대 교체를 통해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실현이 어렵다. 세대 간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

는 대안 모색은 다시금 사회경제적 현상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지, 그 가치관은 과연 기성세대의 그것과 다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세대갈등 논의의 이론적 배경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이해하는 근저에 놓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세대 갈등을 다른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다.

첫째, ‘세대 전쟁론’은 청년 세대와 노령 세대가 국가 재원이나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놓고 다툰다고 본다. 일자리,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득권의 의도적·비의도적 필요에 의해서 후세대가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갈등의 연관은 2010년대 들어서는 일자리,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와 같이 한정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세대 갈등 지점은 2018년에 들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둘째, ‘세대문제가 아니라 계층 문제’라는 관점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세대 차이는 일정 부분 계층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즉, 외형적으로는 세대의 문제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층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병유, 신진욱 편(2016)은 이를 한국 사회 청년들의 ‘구조적 하위계층화’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홍백의, 은석, 함선유, 안승재(2017, p. 3)는 전후 지속되어 온 고도성장기가 지나가고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직위를 누리는 기성세대와 ‘취업난과 저임금에 내몰린 청년 세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전상진(2018, p. 42)은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연령 세대의 관점과 동년배 세대의 관점 충돌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령세대의 관점은 과거의 발전 경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 산업구조 변화 상황에서는 발전경로 지속이라는 연령 세대의 관점이 통용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갈등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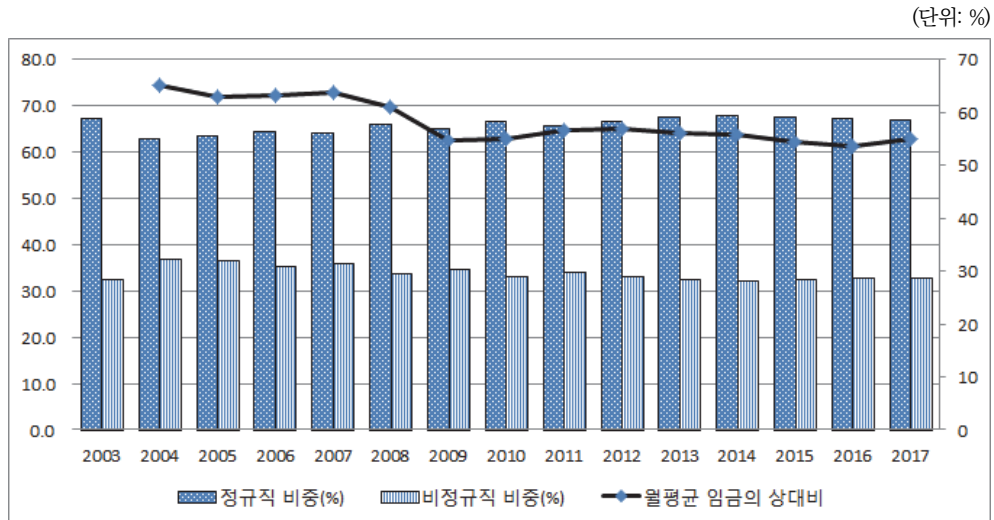
2. 세대갈등 논의의 경제적 배경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의 배경으로 흔히 경제적 배경을 적시한다. 산업화 세대는 물질주의, 성장주의의 가치를 강하게 가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배경이었던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산업화 세대는 성장을 위해 국가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를 수용하거나 강요당했다. 이들의 검약, 근면, 노동의 규범 속에서 성장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세대를 등장시켰다. 그렇지만 정보화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나설 시점에서 다시금 경제적 문제가 갈등의 초점으로 등장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¹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부문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은 적을 때는 63%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4년 한 때는 67.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8월 임금격차는 61.6만 원이었으나, 2016년 8월 130.1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8월 128.2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를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으로 계산하면, 2004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53.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다소 증가하여 55.0% 수준이었다.

14) 유종일(2018)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을 외부적 요소에 둘 것이 아니라 성장체제 변화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5-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각 연도 8월 기준)



주: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자료: 1) 근로 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중: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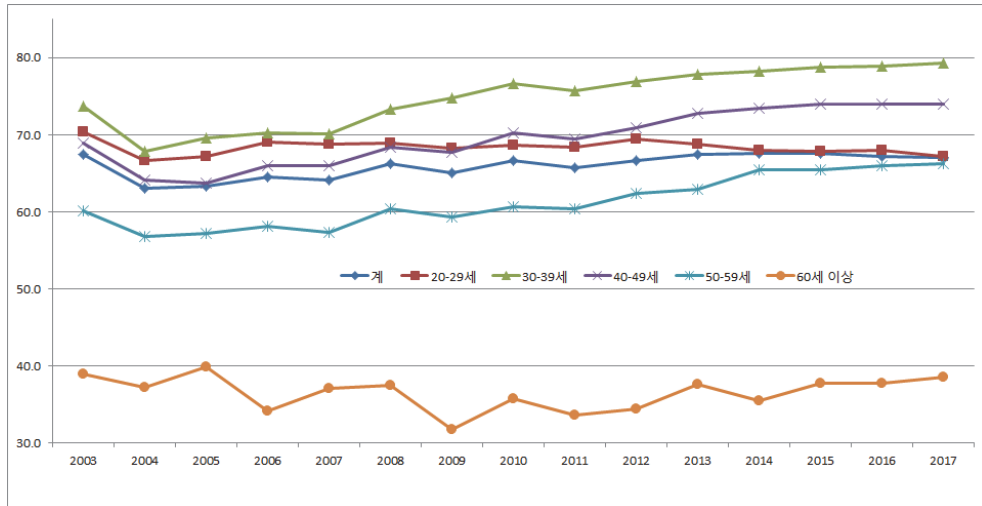
2)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다음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30대가 79.4%로 가장 높고, 40대가 73.9%, 20대가 67.2%, 50대가 66.2%, 60대 이상이 38.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9년까지는 20대보다 낮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높아졌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70.4%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60대 이상의 정규직 비중도 2003년 이래 꾸준히 35%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5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60.1%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낮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66.2%까지 증가하였다.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3년 8월 383만 명에서 2017년 8월 36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줄어든 일 자리의 대부분은 정규직 일자리였다. 60대 이상 임금근로자 수는 2003년 8월 69만 명이었으며 2017년 8월에는 228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약 51만 명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약 108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림 5-2]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8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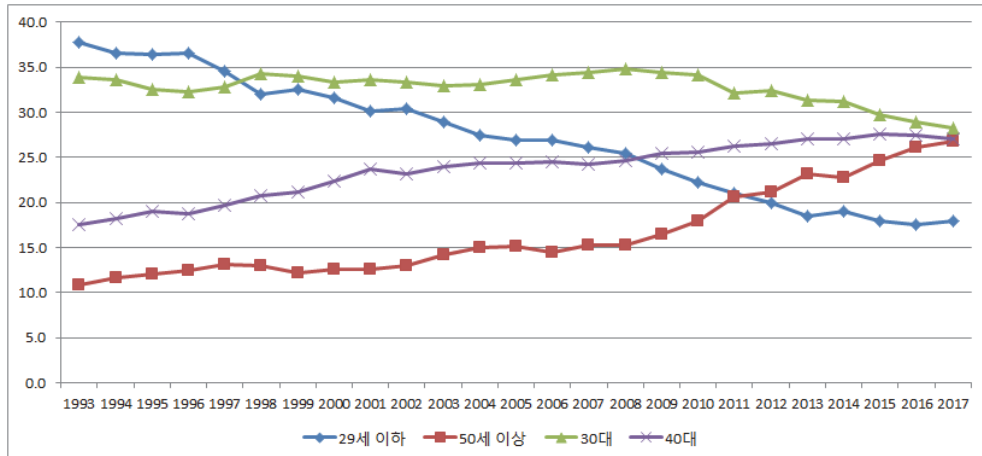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13에서 2018. 10. 1. 인출

[그림 5-3]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별 근로자 비율 변화

(단위: %)



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1993~1998년에는 상용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1999년 이후에는 상용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2&conn_path=12에서 2018.7.8. 인출.

[그림 5-3]에서와 같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에서 29세 이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37.8%에서 2017년에는 18.0%로 줄어들고,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0.8%에서 26.8%로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양상을 논하기 이전에 인구 규모 또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에서 50대 이상 연령 집단의 임금근로 종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노동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이전에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헤게모니 논쟁에서 젊은 세대가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이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에서 그 비율이 줄어든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20~24세 연령 집단과, 25~29세 연령 집단이다. 이들은 절대적 규모에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상(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제외한 20대 초반 여성과 20대 후반 남녀 모두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서 취업준비자 비중이 높았고 그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대체로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공사·공단 시험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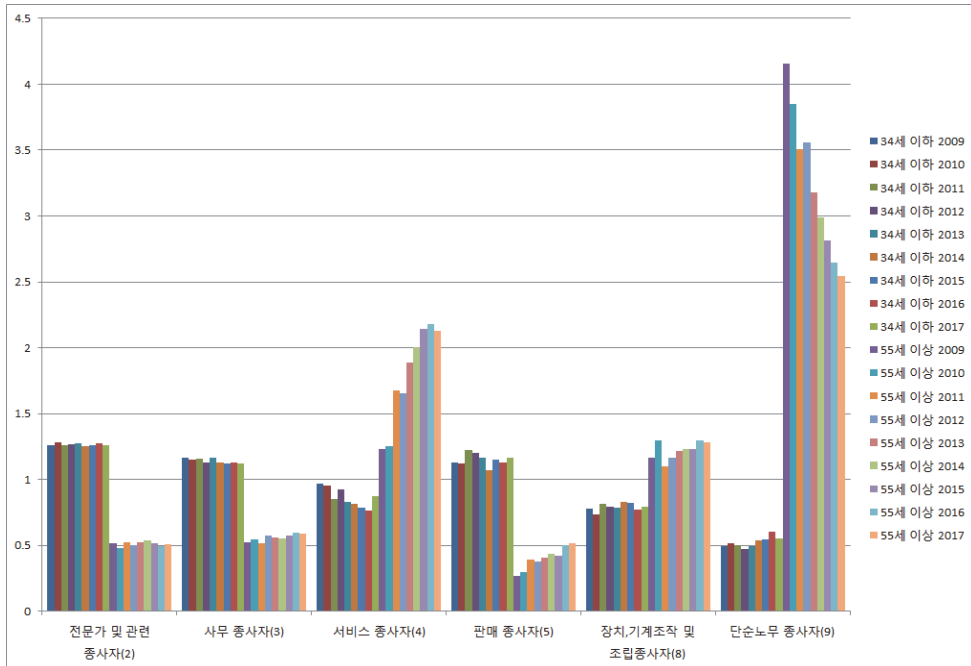
다음 [그림 5-4]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4세 이하 근로자 집단과 55세 이상 근로자 집단의 직종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각 연령집단이 전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로 하여, 해당 연령대에서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¹⁵⁾ 34세 이하 집단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51.6%에서 40.0%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이들 연령 집단의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들 연령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특징적인 변화들이 관찰된다. 이들 연령대 집단의 근로자 중에서 단순노무종사자로 참여하는 경향은 크게 줄어들어서, 4.16배에서 2.54배로 줄어든다. 반대로 서비스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향과 판매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향은 늘어나서, 각각 1.23배에서 2.13배로, 0.27배에서 0.52배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서비스 종사자에서 34세 이

15) 예를 들어, 34세 이하 연령 집단에서 2009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은 51.6%인데, 같은 해 34세 이하 연령 집단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1%이다. 그러므로 이 해에 34세 이하 연령 집단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종사 경향은 1.26배의 값을 가진다.

하 연령 집단의 참여 경향이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일부분 일자리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집단별 종사직종 변화

(단위: %)



주: 1) 각 연령집단이 전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로 하여, 해당 연령대에서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2)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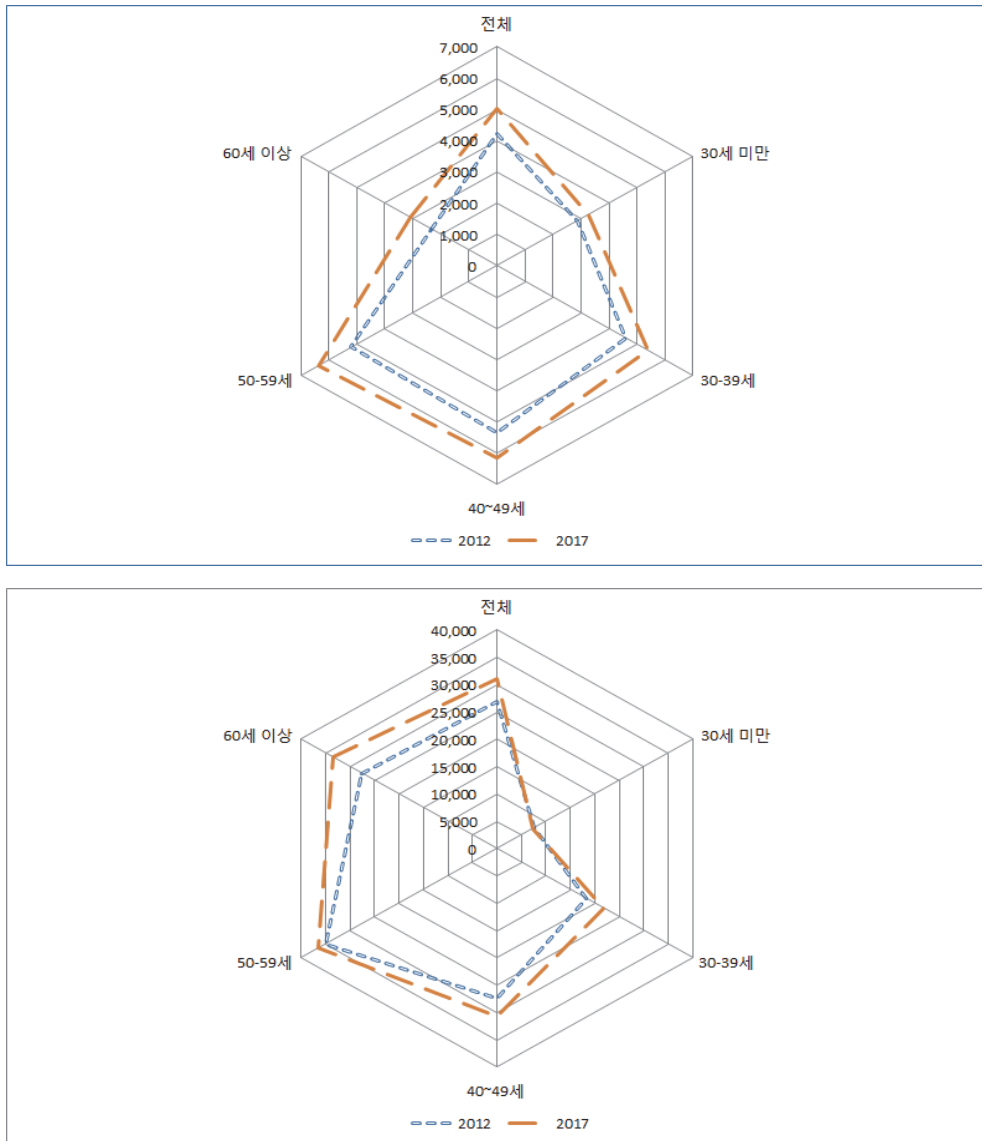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M32&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

일자리 외에도 세대별로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확인된다. 전체 집단의 경상소득은 2012년 4233만 원에서 2017년 501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30세 미만(가구주)의 경우에도 2879만 원에서 327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가구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 집단의 순자산은 2억 6875만 원에서 3억 1142만 원으로 115% 증가하였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20%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자산의 가치증가는 세대별 보유자산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임금 상승에 앞서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증가는 후세대의 자산 축

적을 어렵게 하고, 또 자산 축적에 유리한 전세가 약화되고 월세가 청년 주거비 부담 양상의 특징으로 등장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외에 자산 축적에서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발생하고 있다(이재경, 2018).

[그림 5-5] 연령집단별 소득, 순자산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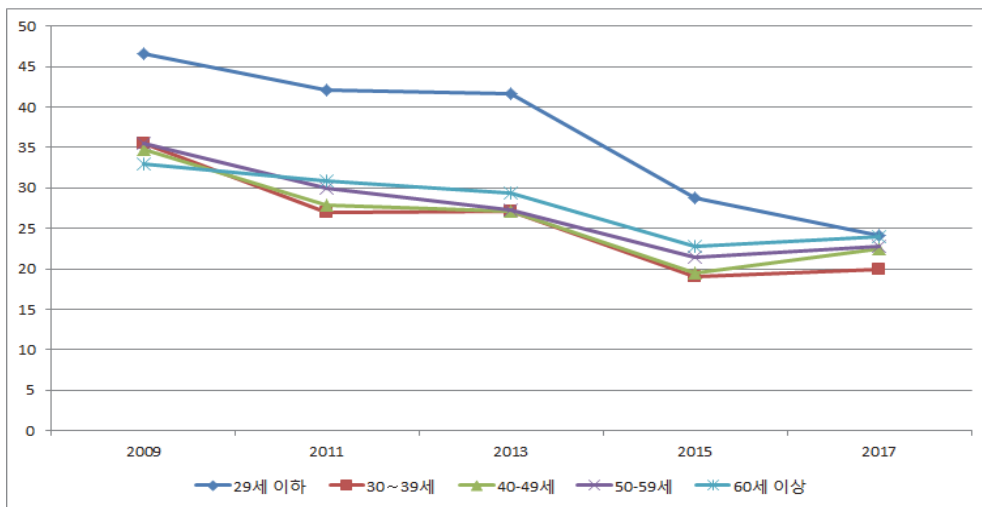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

최근 청년들의 삶의 고단함의 결과는 ‘본인 세대 내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집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본인 세대 내에서 계층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2009년 46.6%에서 2017년에는 24.1%로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모든 연령대 집단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집단이 바로 29세 이하 청년 집단이다.

[그림 5-6] 시기별·연령계층별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29세 이하 집단은 2009년은 15~29세, 2011~2015년은 13~29세, 2017년은 19~29세 대상으로 설문함.
자료: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242R&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

3. 세대갈등의 사회적 배경

세대갈등을 다룸에 있어 세대집단의 형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세대의 차이는 세대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과정, 사회적·경제적 자원 획득을 위한 기회구조의 차이에 의해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지면서 만들어진다고(박재홍, 2005; 박길성, 2011). 그러므로 세대를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한 시대를 살아온 개인이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 변화시켜왔는지 탐색하는 것이 있다(박재홍, 2005). 한편으로는 만하임의 개념으로서 ‘진짜 세대’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사회변동의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변동

의 속도가 빠를수록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대 집단,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특징적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은 각 세대가 처한 구조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박재홍, 2005; 최유석, 2016). 그래서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정치적 세대와 경제적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세대의 구분은 통상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경험하고, 그것이 상당히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세대의 문제가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때, 가치관의 차이는 어떠한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잉글하트와 웰젤은 세계가치관 조사를 이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로축에는 전통적 가치 대 세속합리적 가치의 긴장을, 가로축에는 생존적 가치 대 자기표현적 가치의 긴장을 배치한 바 있다(김우창, 송복, 송호근, 장덕진, 2017, p. 301).

우리는 세대간 가치관을 비교 평가하는데 있어 이념적 가치관, 탈물질주의 가치관, 연령관점의 가치관, 분배 가치관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런 가치관 구분은 각 세대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보다 이념·철학적 가치관에서부터 현실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단계적 변화를 보여 준다.

4. 연구 방법

가. 분석자료

세대간 가치관 비교를 위해 여기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18년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개인 단위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세대별 분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모두 5개 연령집단으로 구분한다. 1942년생부터 1953년까지, 1954년부터 1963년을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 1964년부터 1973년을 민주화 세대로 구분, 1974년부터 1989년생을 X세대 및 N세대로 구분하고, 1990년대 이후 출생자를 구분하였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세대를 분류할 때, 베이비붐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일부 겹친다. 1960년생부터 1963년생이 그들

인데, 홍덕률(2003)은 민주화 세대를 1953년부터 1969년까지 놓고 이 중에서도 1953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를 유신세대라고 구분하였다.

나. 주요 분석 변수

세대별로 이념적 가치관, 탈물질주의 가치관, 연령관점의 가치관, 분배 가치관의 분기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한 가치관 갈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가장 가까운 입장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하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0점부터 10점으로 구분한 11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 앞서 각 세대별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선호,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질문의 응답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연령집단별 응답 특성을 세계가치관조사의 1990년 응답값과 비교하면서 연령집단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표 5-1〉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	임금체계는 보다 평등해져야 한다	↔	개인의 노력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2)	정부 주도의 경제산업이 확장되어야 한다	↔	민간 주도의 경제산업이 확장되어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다	↔	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4)	실업자도 원하지 않는 직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실업자는 가능한 한 직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실업수당을 잃을 수 있다							
(5)	경쟁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는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	경쟁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는 근로의욕을 촉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							
(6)	부는 오직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해 창출된다	↔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다							
(7)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	소득이 지금보다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다음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하위 문항으로 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응답 문항은 긍정적, 보통, 부정적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5-2〉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긍정적	보통	부정적
(1) 돈이나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 감소	①	②	③
(2) 삶에서 일의 중요성 감소	①	②	③
(3)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4) 개인의 성장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5)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6) 단순하고 자연주의적인 생활방식의 확산	①	②	③
(7)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	①	②	③
(8) 남한과 북한의 통일	①	②	③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셋째, 연령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는 연령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고 있다.

〈표 5-3〉 연령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젊은 층과 노인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언론매체는 세대 간 갈등을 과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마지막으로, 분배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질문은 하나는 소득격차 축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다.

〈표 5-4〉 분배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부 개입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모르겠다
(1)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제3절 분석 결과

1. 사회 인식에서 세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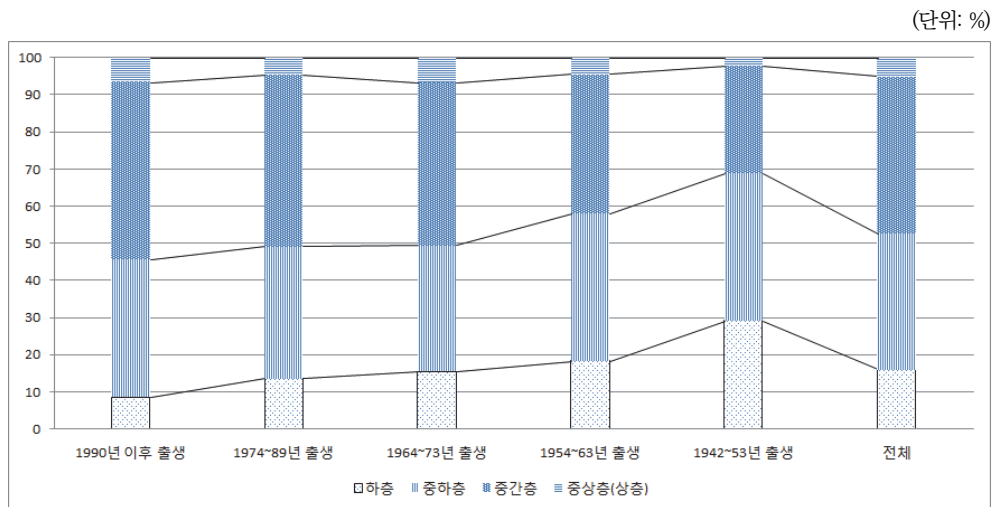
가. 계층인식 및 이념적 성향

본격적으로 세대별 가치관 특성을 구분하기 전에 사회 인식에서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먼저 세대별로 계층인식과 이념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5-7]은 세대별로 주관적 소득계층을 적시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계층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1990년 이후 출생자에서 본인의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54.4%이며, 1964년~1989년생 출생자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약 50% 수준이었고, 1954년~1963년생 출생자 집단에서는 42.0%, 1942~1953년생 집단은 31.0%로 고령 집단일수록 본인의 소득계층을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4〉는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소득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와 1974년~1989년생 출생자 집단에서는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 반대로 1954년~1973년생으로 구성된 두 집단은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계층적 이해관계에 얽힌 많은 문제들에서

객관적 소득 집단에 비해 훨씬 강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림 5-7] 세대별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5-5〉 세대별 평균 가구소득(균등화)과 개인소득

(단위: 만 원)

출생연도	전체 소득계층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상으로 응답한 집단	
	균등화 가구소득	개인소득	균등화 가구소득	개인소득
1990년 이후 출생	270.5	191.0	296.0	197.2
1974~89년	270.6	292.7	304.1	320.0
1964~73년	262.5	305.6	310.4	360.6
1954~63년	252.8	286.0	322.3	391.8
1942~53년	146.0	147.1	176.5	163.4
전체	250.0	267.8	296.6	3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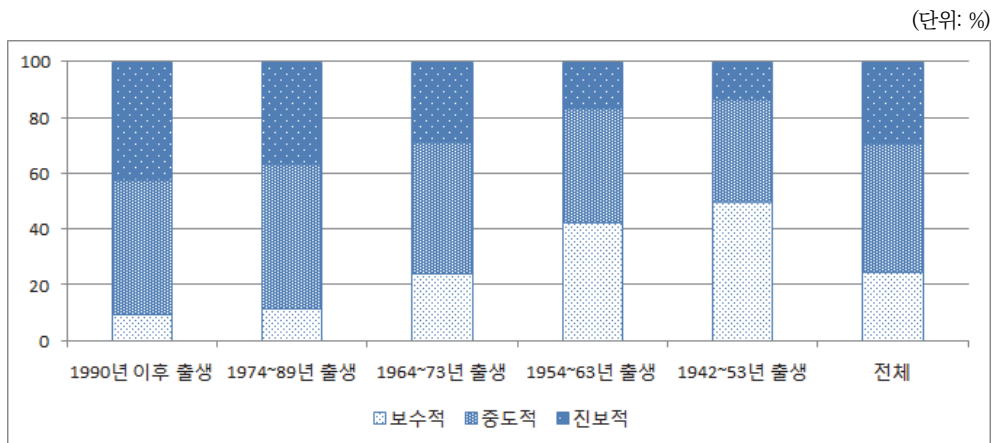
주: 개인소득은 소득이 0원 초과인 경우에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세대별로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이념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은 본인의 이념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2.1%였고, 1974년~1989년 출생자 집단에서는 이 비율은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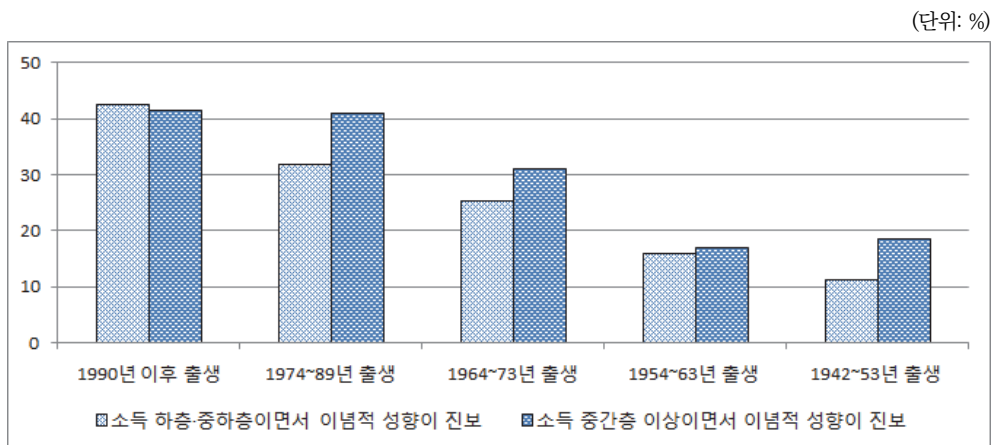
로 낮아지고, 점차 낮아져서 1942년~1953년 출생자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13.5%까지 낮아진다. 주관적 계층과 결합해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중간층, 중간층 이상인 집단에서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는데, 199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소폭 낮았다.

[그림 5-8] 세대별 이념적 성향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5-9] 세대별 이념적 성향-주관적 계층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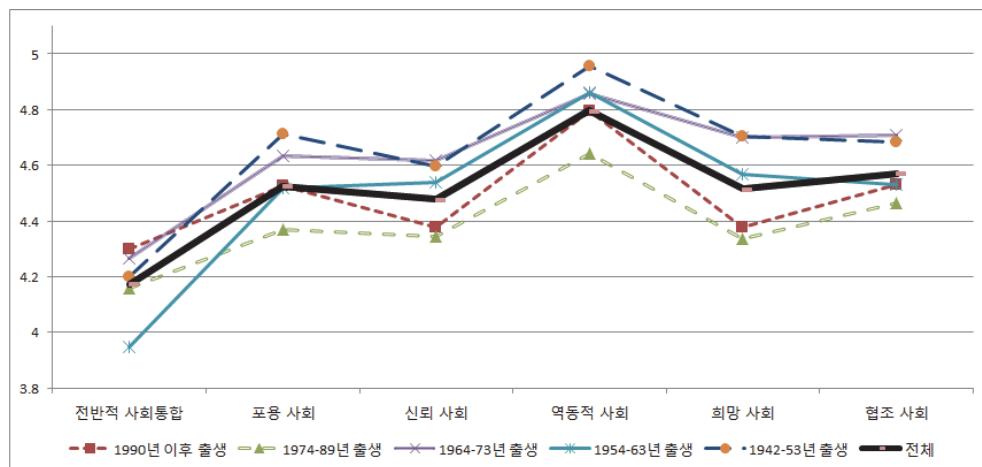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렇지만 실제로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1990년대 이후 출생자는 이념적 성향으로서 진보이면서도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그보다 앞선 1974년~1989년생 집단, 1964년~1973년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뒤의 표 5-6 참조).

나. 사회통합 수준 및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

[그림 5-10] 세대별 사회통합 평가 점수

(단위: 점)



주: 포용사회는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 ~ 배려와 포용의 사회(10)', 신뢰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0)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10)', 역동적 사회는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0)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10)', 희망 사회는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0)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10)', 협조 사회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0)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의 점수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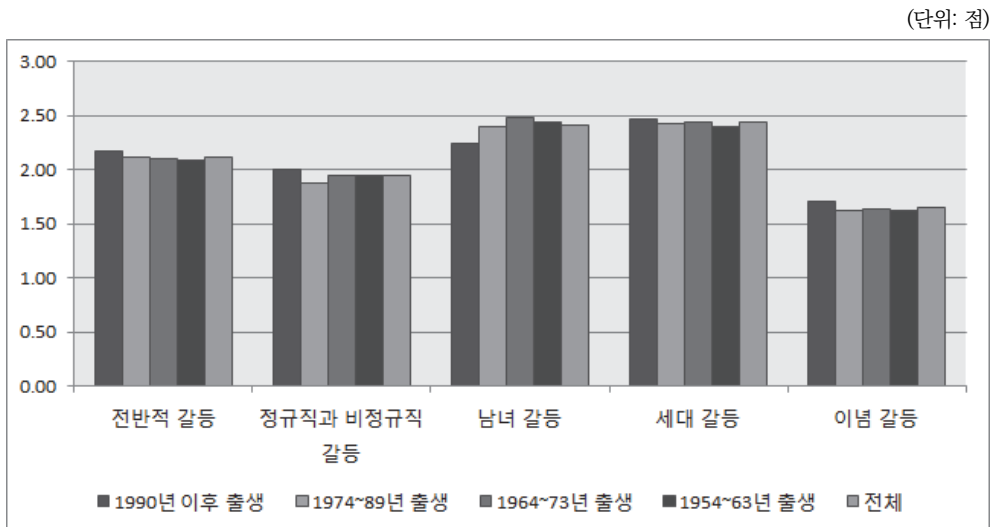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1954년~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3.95점(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개별 항목별로 보면 그 평가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산업화 세대라 할 수 있는 1942년~1953년 출생자, 민주화 세대라 할 수 있는 1964년~1973년 출생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통합 수준에 대해서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각 모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각 모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년~1989년 출생자 집단은 우리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포용사회라는 지점과 역동적 사회라는 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도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이 높았는데, 이들은 특히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지점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림 5-11] 세대별 갈등 인식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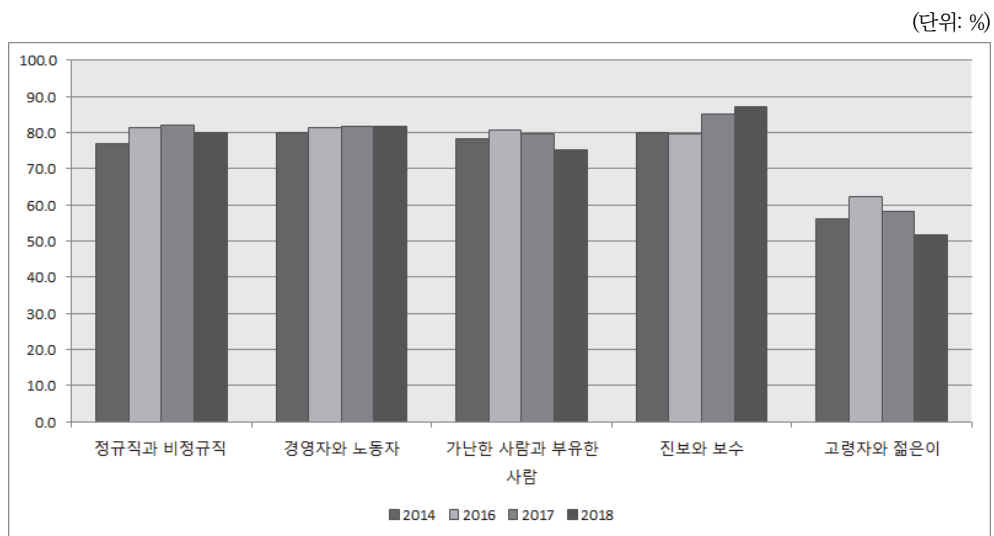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며, 3점이 보통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해서 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평균 2.12점)이 확인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갈등이 심하다는 평가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미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갈등 유형 중에서는 2018년에 크게 문제로 불거졌던 남녀 갈등과 세대갈등은 다른 갈등에 비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렇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특히 남녀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최근 미투운동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젠더갈등의 양상이 긍정적으로 승화되지 못할 경우, 젠더갈등이 한국 사회의 새

로운 갈등 지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는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 수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경제적 원인 갈등-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경영자와 노동자 갈등,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갈등은 2018년에는 줄어들거나, 증가세가 멈췄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다른 어떤 조사보다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2018)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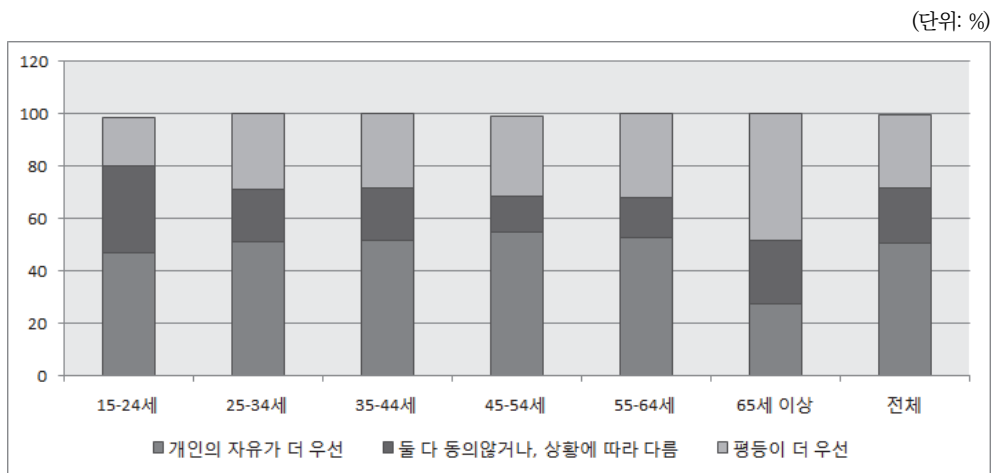
2. 세대별 가치관 갈등의 지점들

가. 가치관 지향에서의 차이

세대별 가치관은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 한국은 1990년 세계가치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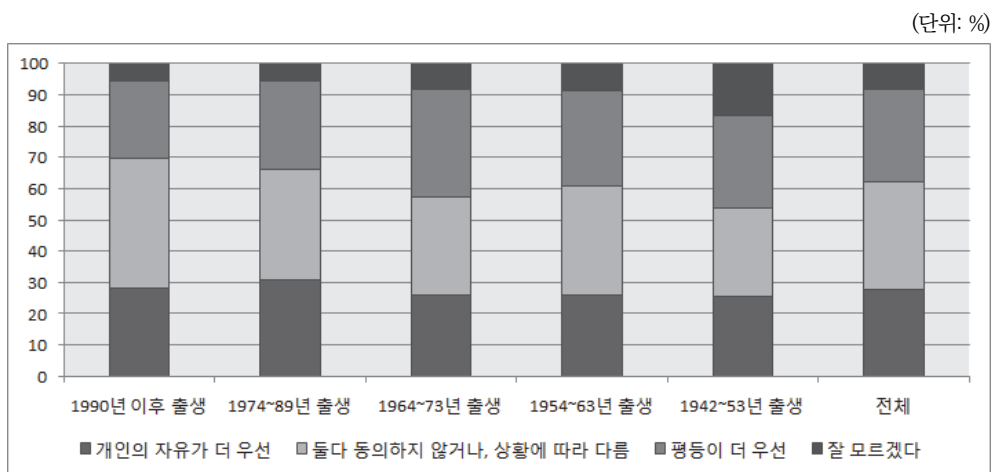
사 2차 웨이브에 참여하였는데, 이때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가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15세~24세 집단에서 46.6%, 25세~34세 집단에서 51.1%, 35세~44세 집단에서 51.6%, 45세~54세 집단에서 54.9%, 55세~64세 집단에서 52.8%였었다.

[그림 5-13]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자유와 평등 우선에 대한 응답 분포



주: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일부 집단에서는 100%가 나타나지 않음.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원자료(WVS Longitudinal 1981_2014, 2015.04.18.)

[그림 5-14] 세대별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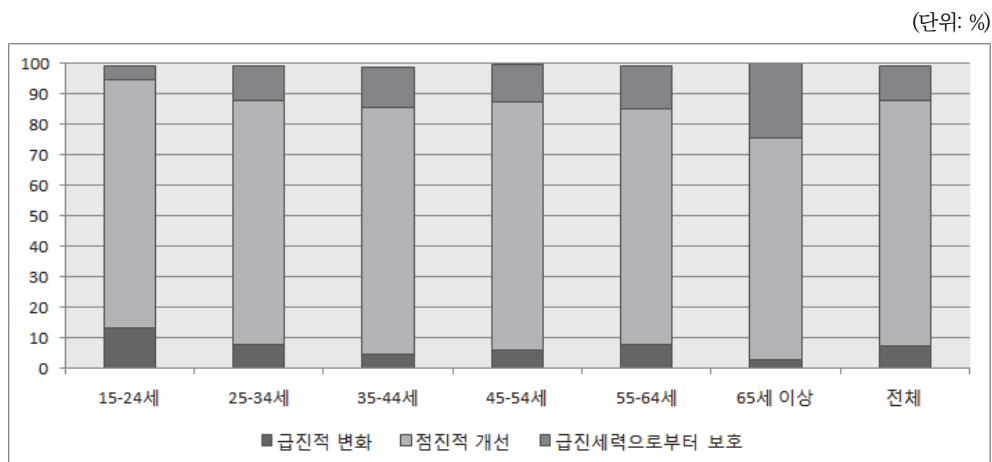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8년 조사에서는 1990년 조사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입장은 27.65%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을 고려하더라도 1990년의 50.6%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이다.

세대별로 보면 민주화 이후 세대(1974년~1989년생, 1990년생 이후)가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집단 간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은 평등이 우선한다는 가치관도 크지 않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평등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는 24.6%에 그쳤다. 1964년~1973년 출생자 집단이 가장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와 심지어는 산업화 세대도 민주화 이후 세대에 비해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이념적 성향으로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방식일 수 있다. 1990년 조사에서 사회변화에 있어서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 사회가 급진세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1.3%였다. 특히 사회가 급진세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24.3%로 크게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10% 초반대의 지지를 받았다. 반대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5세~24세 집단에서 13.0%로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연령대 집단에서는 모두 10% 이하로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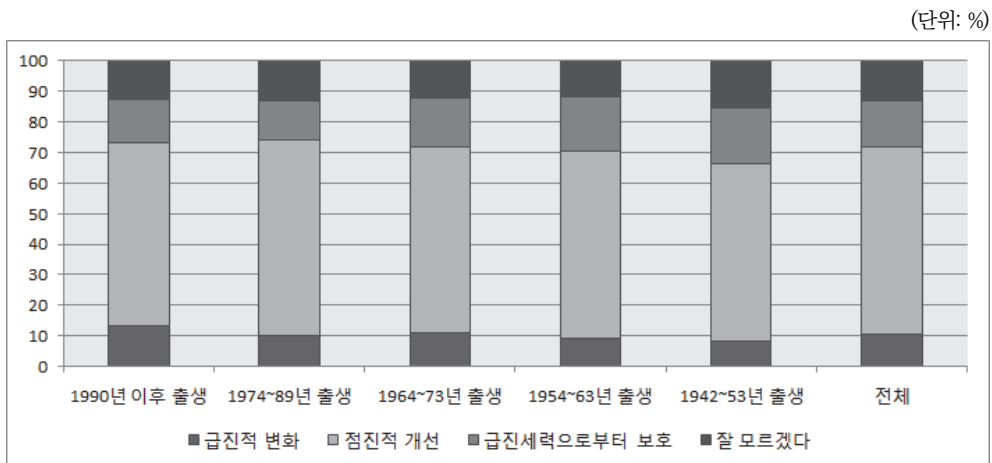
[그림 5-15]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응답 분포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원자료(WVS Longitudinal 1981_2014, v2015.04.18.)

1990년 조사에서 사회변화에 있어서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사회가 급진세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0%를 넘어섰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대는 점진적 개선보다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그림 5-16] 세대별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 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별로 세대 간의 명확한 인식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다 평등한 임금체계’와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대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1990년대 이후 출생자에서 6.0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평균 점수는 점차 낮아져서 1942년~1953년 출생자는 5.70점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능력주의적 임금 체계에 대한 동의가 적고, 비교적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에 대한 동의가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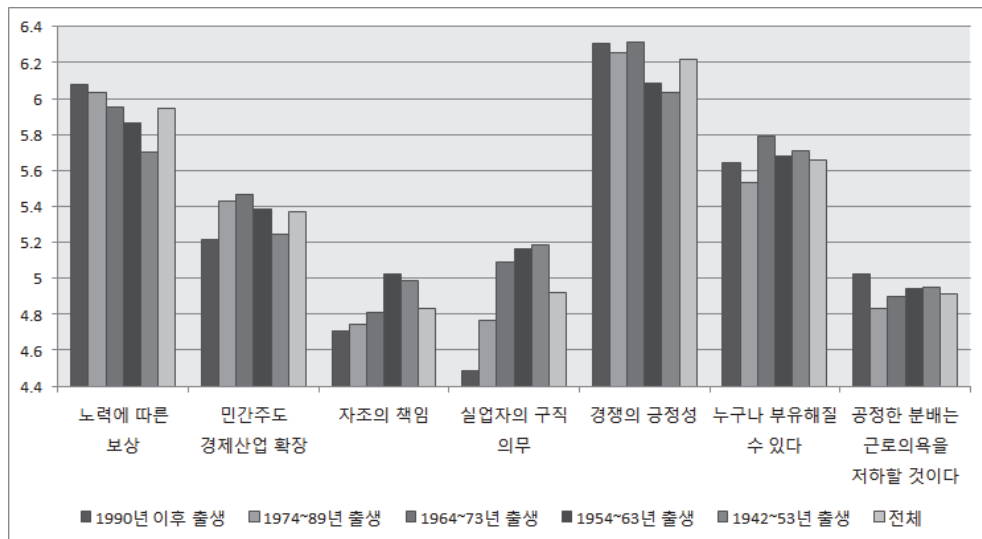
경제산업의 발전에서 민간 주도인가와 정부 주도인가에 대해서는 평균에서 근소하게 민간 주도에 대한 지지가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산업 확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그리고 1974~1989년생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고(자조의 책임에 대한 낮은 점수), 실업자도 원하지 않는 직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실

업자의 구직 의무에 대한 낮은 점수)고 보면서도,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세대의 이러한 가치 지향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한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7] 사회 이슈에 대한 세대별 지향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탈물질주의 가치관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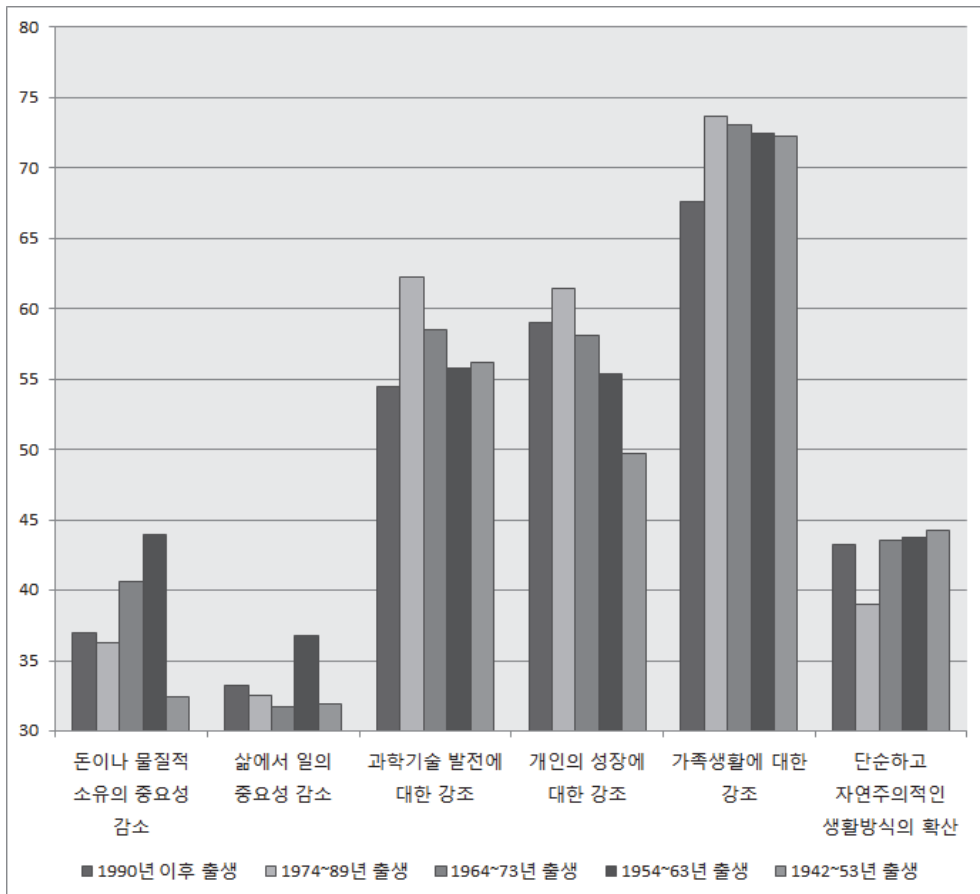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모든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이 질문에 대해서 1990년대 이후 출생자는 67.6%가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다른 세대는 모두 7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던 변화 방향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강조'였는데, 여기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1990년대 이후 출생자와 1974년~1989년 출생자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59.0%와 61.4%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집단이 아닌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은 특히 1974~1989년생 집단에서 확인된다. 1990년대생은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반대로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 많았던 질문은 ‘돈이나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 감소’, ‘삶에서 일의 중요성 감소’, ‘단순하고 자연주의적인 생활방식의 확산’이었다. 특히 삶에서 일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 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8] 세대별 사회변화 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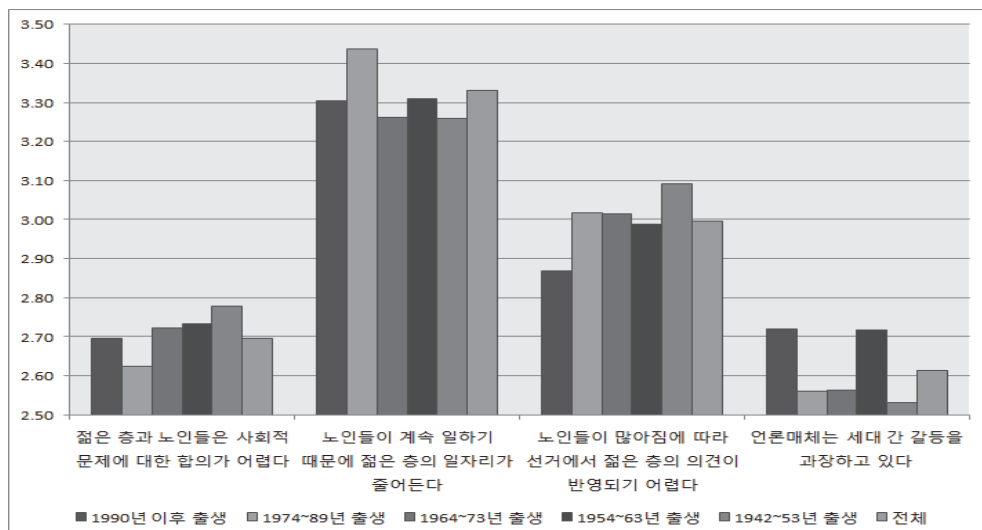
다. 연령에 대한 관점

연령집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4개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세대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서 젊은 층과 노인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는 ‘그렇다’와 ‘보통’의 사이인 2.70점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974년~1989년생 집단이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 사이의 동의 정도가 나타났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 중 1974~1989년생 집단에서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보통에 가까웠다. 이 경우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약간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언론매체는 세대 간 갈등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대 집단에서 동의에 가까운 보통 수준을 보였지만, 1990년대 이후 출생자 연령집단과 베이비붐 세대에서 반대하는(즉, 언론이 어느 정도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견해에 가까운 경향이 있었다.

[그림 5-19]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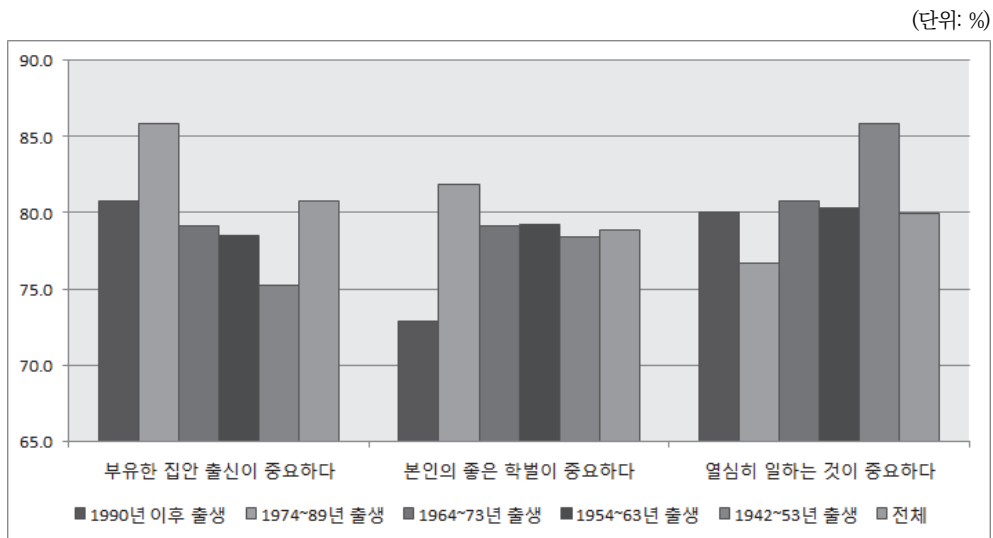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분배에 대한 관점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감소에 따라서 어떤 집안에서 나고 자랐느냐가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부유한 집안 출신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1974~1989년생에서 두드러진다. 인생의 성공 요소로 세 가지(부유한 집안 출신, 본인의 좋은 학벌, 열심히 일하는 것)를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 1974~1989년생의 대척점에 있는 집단으로 산업화 세대(1942~1953년생)를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 세대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유한 집안 출신일 필요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한편 1974~1989년생의 또 다른 대척점에 1990년생이 있다. 1974~1989년생은 본인의 학벌을 강조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학벌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많이 낮아진다. 오히려 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0] 세대별 성공을 위한 요소-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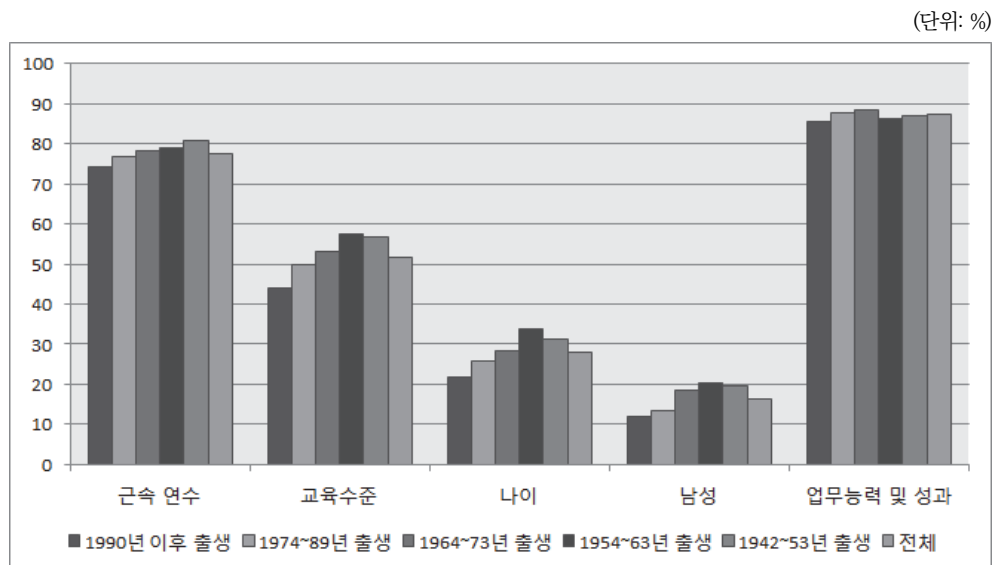


주: 모름, 무응답은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그림 5-21]은 바람직한 분배기준으로서 근속연수, 교육수준, 나이, 남성(성별), 업무능력 및 성과를 묻고 있다. 분배 기준에 있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교육수준’에 따른 분배, ‘나이’에 따른 분배에 대한 동의 정도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출생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43.9%만이 동의하였는데, 다른 세대는 특히 고령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차등 보수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교육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작동에 대한 거부감이 이들 연령집단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때문인지, 아니면 차등대우에 대한 거부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이 본인의 노력이 아닌 집안의 재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노력 외의 요소들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반발을 통해서 대략 유추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보수를 더 많이 받는 방식에 대한 동의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낮아졌는데, 1990년대 생은 5명 중 1명 정도만 이에 동의하였다. 대부분 세대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였는데,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응답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인식이었다. 즉, 이들은 전체적으로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른 배분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림 5-21] 세대별 분배 기준에 대한 인식-동의 비율



주: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를 합한 비율을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정부의 책임, 그리고 이러한 정책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이들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며,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1954년~1963년생 집단이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계층적 판단도 작용하였으리라 추측한다.

평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부정책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1974년~1989년생 집단과 1964년~1973년생 집단이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평등을 더 강조하는 특성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5-6〉 세대별 정부 개입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정부의 책임		전체	세대 구분					F	Prob>F
			1990년 이후	1974~89년	1964~73년	1954~63년	1942~53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55	3.44	3.57	3.61	3.58	3.50	3.86	0.00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49	3.50	3.48	3.51	3.51	3.43	0.73	0.572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3.24	3.27	3.31	3.20	3.14	3.22	3.35	0.010
정부 개입의 정당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2.84	2.71	2.86	2.88	2.91	2.78	5.37	0.000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2.88	2.76	2.90	2.94	2.91	2.84	3.88	0.004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2.77	2.75	2.81	2.83	2.69	2.67	6.57	0.000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	2.90	2.90	2.92	2.93	2.86	2.88	1.41	0.227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 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3.03	2.99	3.05	3.08	2.99	3.00	2.42	0.046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2.51	2.49	2.50	2.58	2.45	2.49	2.38	0.049

주: 1) 정부의 책임 부분은 1~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정부 개입의 정당성 부분은 1~4점 척도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코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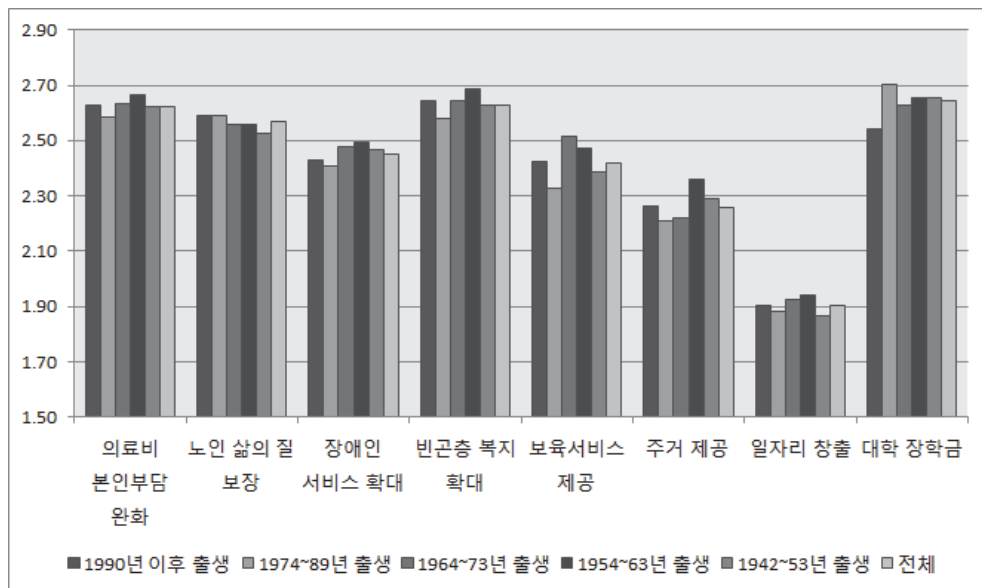
2)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역코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와 함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세대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본인의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를 원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향하는 바의 국가 역할은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연령집단이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1974년~1989년생 집단과 1942년~1953년생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그런데 이 중 1974년~1989년생 집단은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5-22]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



주: 점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1)’, ‘조금 더 지출(2)’, ‘현재수준으로 지출(3)’, ‘조금 덜 지출(4)’, ‘훨씬 덜 지출(5)’로 측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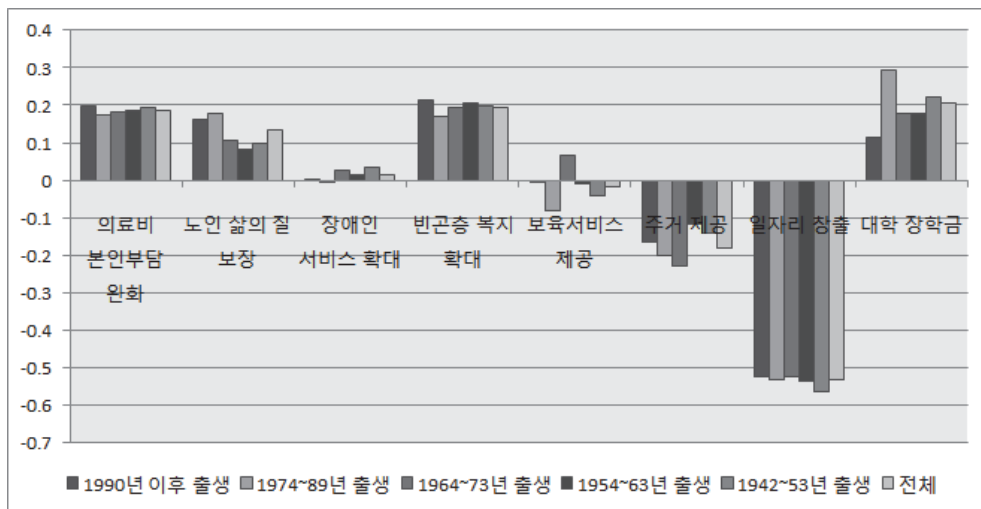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따라서 보다 선호하는 복지지출의 영역을 활용하여 세대 간 자원의 분배에 대한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3]은 전반적인 복지 확대 경향에 비춰서 특히 두드러지는 복지 확대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각 개인의 성향이 지출을 늘

리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균을 제한 값을 찾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에 대한 지출은 다른 지출에 비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노인 삶의 질 보장, 빈곤층 복지확대, 대학 장학금의 경우도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 뒤를 이어 주거제공,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인 서비스 확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각 세대별로 더 강조하는 지점을 찾아보면,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는 1974~1989년생이 가장 두드러지고, 주거 제공에 있어서는 1964년부터 199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높은데, 특히 1964년~1973년생 집단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그림 5-23]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평균과의 차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 결과 요약

5장에서는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과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특히 어떠한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각 세대가 처한 구조적 상황에 따라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원인의 하나로 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세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컸다.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비교적 젊은 세대는 주관적 계층과 무관하게 진보적 이념적 성향을 가지면서도 실제의 정책 지향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셋째,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심해지며,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는 우리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포용사회, 역동적 사회라는 판단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았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갈등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젠더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였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 상황에서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1974년~1989년생, 1990년 이후 출생자)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 세대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다. 둘째, 1990년대 이후, 그리고 1974~1989년생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집단이 아닌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성공의 요소와 분배 기준에 있어서 특징은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복지 욕구에 있어서는 1974~1989년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거 제공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다.

2. 정책적 함의

5장에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지향이 세대별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고, 그 가치관을 기성세대가 수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로 성장한다. 그런데 최근 세대가 가지는 가치관 지향에서의 차이가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이들이 경험하였던 경제적 배경 차이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완상(1991, p. 262)이 1986년 조사에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의미 있다. 첫째, 현실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둘째, 미래 전망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더 비판적이다. 셋째, 세대격차가 두드러진 영역이 일차집단 관계 또는 공동체 관계이다. 한완상(1991)은 이를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를 공동체적 삶으로 사회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은영, 차유리(2010)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약 31년간의 변화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은 초반에는 20대가 빨리 변화하여 세대차가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50대가 빨리 수용하여 세대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세대 간의 갈등 지점이 크지만 점차 수용하여 갈등의 지점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함인희(2000)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간의 조정이 이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지금 한국의 청년이 요구하고 강조하는 가치관은 새로운 세대만의 지향인가? 지향이어야 하는가? 개인에 대한 강조,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젊은 세대는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를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개인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청년들의 주거 방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의 답습에 대한 의견 표시이며, 적정한 임금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일자리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요구가 새롭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이해와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행동이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기존에 세대갈등을 해소해 왔던 신세대의 주류화, 또는 세대 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제 6 장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

제1절 서론

사회통합에 가장 직접적인 부정적 요소는 갈등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갈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뜻한다(Schmidt & Kochan, 1972). 갈등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갈등이란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사용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던 개념이었다(예: Marx의 자본주의 사회분석).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갈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차원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갈등이란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자원을 공유한 집단들이 상호의존성이 큰 방식으로 스스로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재복, 고경훈, 심준섭, 홍성만, 조영희, 2005).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이해관계의 양립 불가능성,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점 등이 존재해야 한다. 즉, 갈등이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서 실제로 갈등을 정의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될 이유는 별로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란 ‘해소’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갈등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에 해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등은 어떤 사안에서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점점 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갈등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갈등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확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어떤 외부적 힘이나 강제에 의해서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이다.

갈등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개입은 오히려 갈등을 사회통합을 공고하게 하는 요소로 만들 수 있다. 많은 갈등 사례들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하고 대화를 지속할 경우 설사 그 갈등을 만든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진 경우가 많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공유되고 이해될 경우,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갈등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또는 이해당사자와 기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만 그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다시금 갈등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실태와 갈등 해결의 주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공공갈등이란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 관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공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관의 충돌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실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갈등이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갈등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해관계가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다르다는 점이다.

공공갈등의 경우 긍정적 효과든 부정적 효과든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체적인 갈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갈등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갈등은 오히려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치관과 깊이 관련된 이슈를 둘러싸고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외국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대중의 의견이 크게 갈라지는 경향이 나타나 사회통합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양식에 있어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경우 공공갈등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공공갈등이란 언제나 사회통합에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생긴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갈등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평, 김서용, 소영진, 이병량, 이승중, 2005).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능률 지상주의적 행정문화 아래에서 정부의 정책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곧 국가발전에 해를 입히는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은 보통 제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2007년을 기점을 공공갈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도 갈등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였다. 2007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이 생긴 이후로 공공갈등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크고 작은 정책갈등 사안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더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지적되었지만 갈등이란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사회 전반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공공갈등을 점점 더 어떤 정책으로 인한 충돌을 해결하는 장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민 각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는데, 대개 공공갈등에 있어 시민들은 개별적으로보다는 어떤 집단을 이루어 관계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설문은 크게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정부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공공갈등 해결 주체, 공공갈등 해결 주체의 역할, 정부 단위

간 협력의 정도, 인식된 공공갈등의 종류,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임동진(2010)의 설문을 사용하였는데, 이 질문은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시민 간 혹은 정부 간 소통의 부족이 갈등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 질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공갈등의 원인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 소통문화의 부족
- 사회신뢰의 부족
- 공개된 정보의 부족
- 참여 기회의 부족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과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 윤종철(2013)과 임동진 (2010)의 설문을 참조하였다. ‘민주적 갈등관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후 현재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후, 정부가 어떤 방안으로 갈등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갈등관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소통문화의 개선, 신뢰의 제고, 적극적 홍보, 시민참여 절차 실효성 강화 등 앞에서 언급된 공공갈등의 원인과 연결된 선택지들을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채택하였는데,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 그 주체의 적절한 역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집단 간 협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이동기(2006)가 사용했던 질문을 채택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를 묻는 질문은 당연히 ‘정부’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로서 시민들이 해결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선택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역할을 묻는 질문을 선택하였다(전영평 외, 2005). 이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앞에서 나온 갈등의 발생 원인이나 갈등관리 방안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이란 갈등의 궁극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질문은 일반 시민들이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집단 간 협력을 묻는 질문은 공공갈등의 해결이 기본적으로 협상과 조정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데, 공공갈등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집단들 간에 협력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공공갈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한국행정연구원, 2017a). 여기에 포함되는 집단은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여당, 야당,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기업 등이 된다. 이들 집단은 모두 공공갈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거나 관련된 자로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되는 공공갈등의 종류는 현재까지 가장 자주 발생된다고 연구된 공공갈등 유형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포함하였다. 각 공공갈등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각 유형의 설명과 함께 간단한 예들을 덧붙였다.

〈표 6-1〉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 유형	내 용
시설반대갈등	어떤 시설의 입지 혹은 기타 관련 사항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고압송전선 경로 갈등, 쓰레기 처리장 위치 갈등 등
시설찬성갈등	어떤 시설의 입지 혹은 기타 관련 사항들을 여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KTX 역사 위치 관련 갈등, KTX역사 명칭 관련 갈등, 고속도로 진입로 위치 관련 갈등 등
도시정비 관련 갈등	노점상 관련 거리 정비, 노후 도시 재생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갈등 등
군 관련 갈등	군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 군공항 입지 관련 갈등, 제주 군 항구 관련 갈등 등
보편적 이익갈등	전 국민 혹은 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생기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대학등록금 반값 추진 관련 갈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갈등, 국민(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갈등, 노인무임승차 관련 갈등 등
보편적 가치갈등	전 국민 혹은 큰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 4대강 사업 입안과정에서 환경-개발 사이의 갈등,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

사회통합과 공공갈등의 관계에 대한 질문(전영평 외, 2005)은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택한 질문이다. 갈등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여러 논의에 근거하여 공공갈등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라고 인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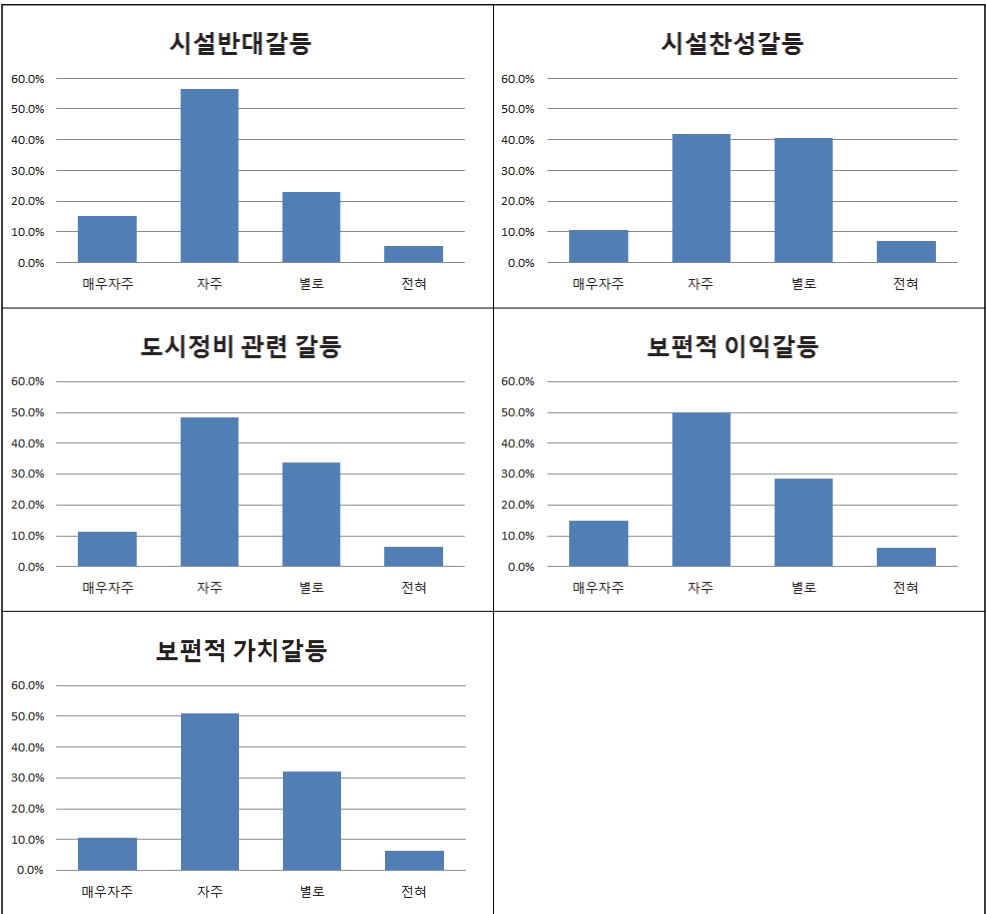
제3절 분석 결과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는 직관적으로 보아도 밀접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통합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히 연결 짓기는 어렵다.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문길, 2017; 유희정, 이숙중, 2016).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것인가?’ 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보다 중요한 질문들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 경험적인 방법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사회갈등 중 하나인 공공갈등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맥락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공공갈등이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 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때로 전체 국민의 공공선 증진을 위해 일부 집단에 손해가 되는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건설하고자 하면 일단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란 공중에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여전히 갈등의 발생 자체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보다도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의 분석에서는 어떤 모형의 구성보다는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에 관하여 본 연구조사의 응답자들이 한 대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보다 집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함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지만, 아직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한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 방법은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최대한 묘사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

1.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실질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조사에서 공공갈등에 대해 질문할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응답자들이 어떠한 갈등이 얼마만큼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본 질문은 우선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갈등이라는 개념에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구분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6-1]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 발생 원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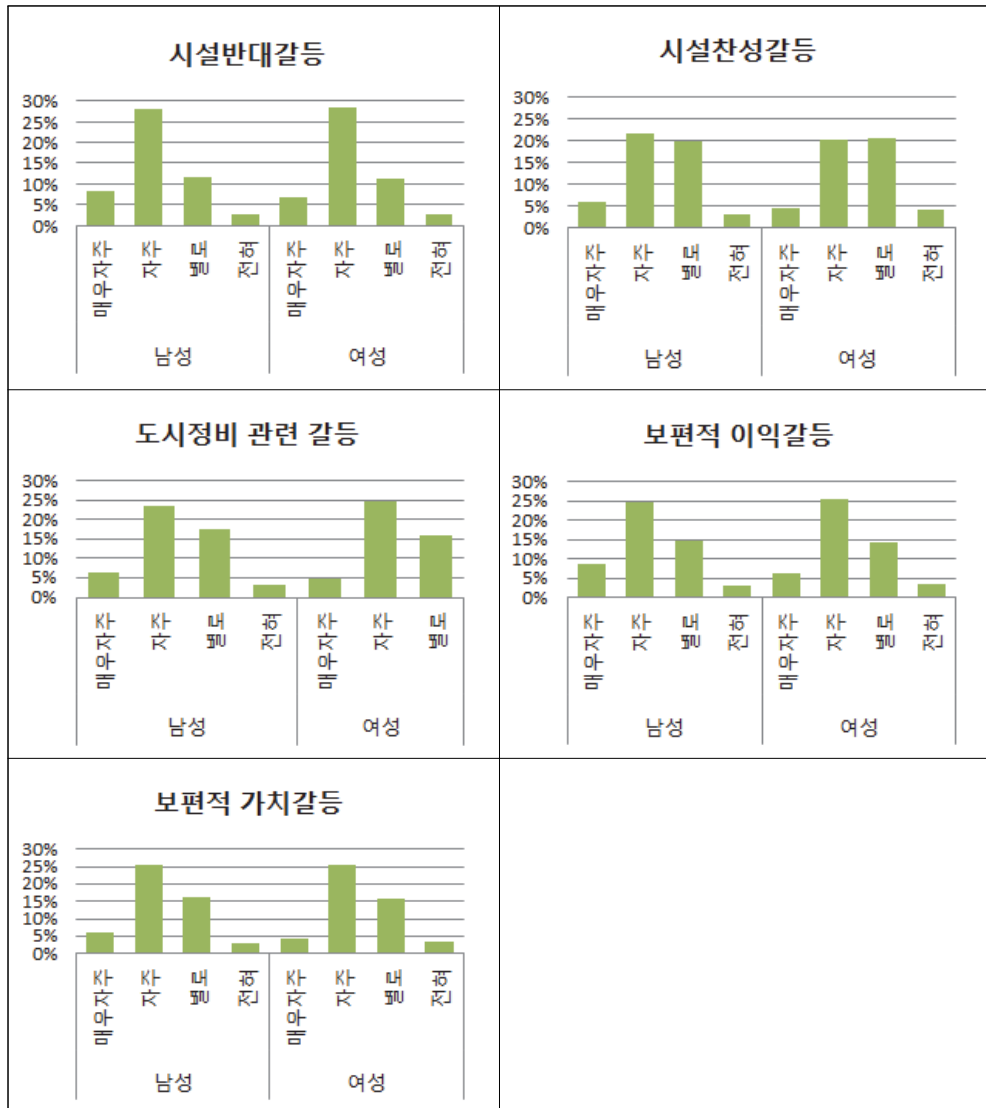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갈등이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원인 또한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려해보면 윤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공공갈등은 항상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는 곧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 [그림 6-1]은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별로 발생 빈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의견의 분포는 비슷하게 ‘자주 발생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찬성갈등의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는 의견과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갈등 원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응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이 시설찬성갈등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된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설찬성갈등의 대부분은 매우 특정한 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른 갈등 원인 구분에 있어서는 도시정비 관련 갈등 분야에서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른 갈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앞의 시설찬성갈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갈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보이는 응답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 6-2]는 위의 그림에서 나온 응답을 성별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다. 다른 질문들의 경우에는 남자의 응답분포와 여자의 응답분포에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시설찬성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우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갈등 원인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정책 분야가 특별히 성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는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공공갈등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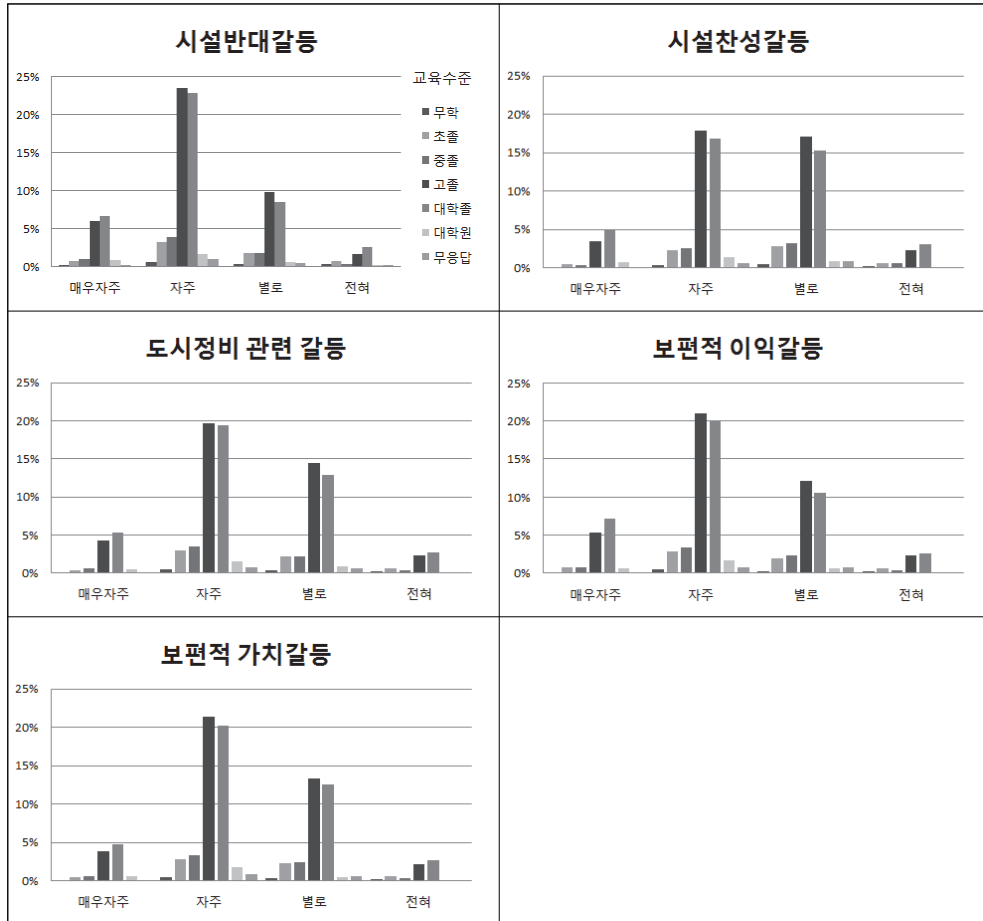
[그림 6-2] 성별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공공갈등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 6-3]에서는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을 교육수준에 맞추어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분포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은 앞에서의 짐작과는 다르게 공공갈등의 인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 교육수준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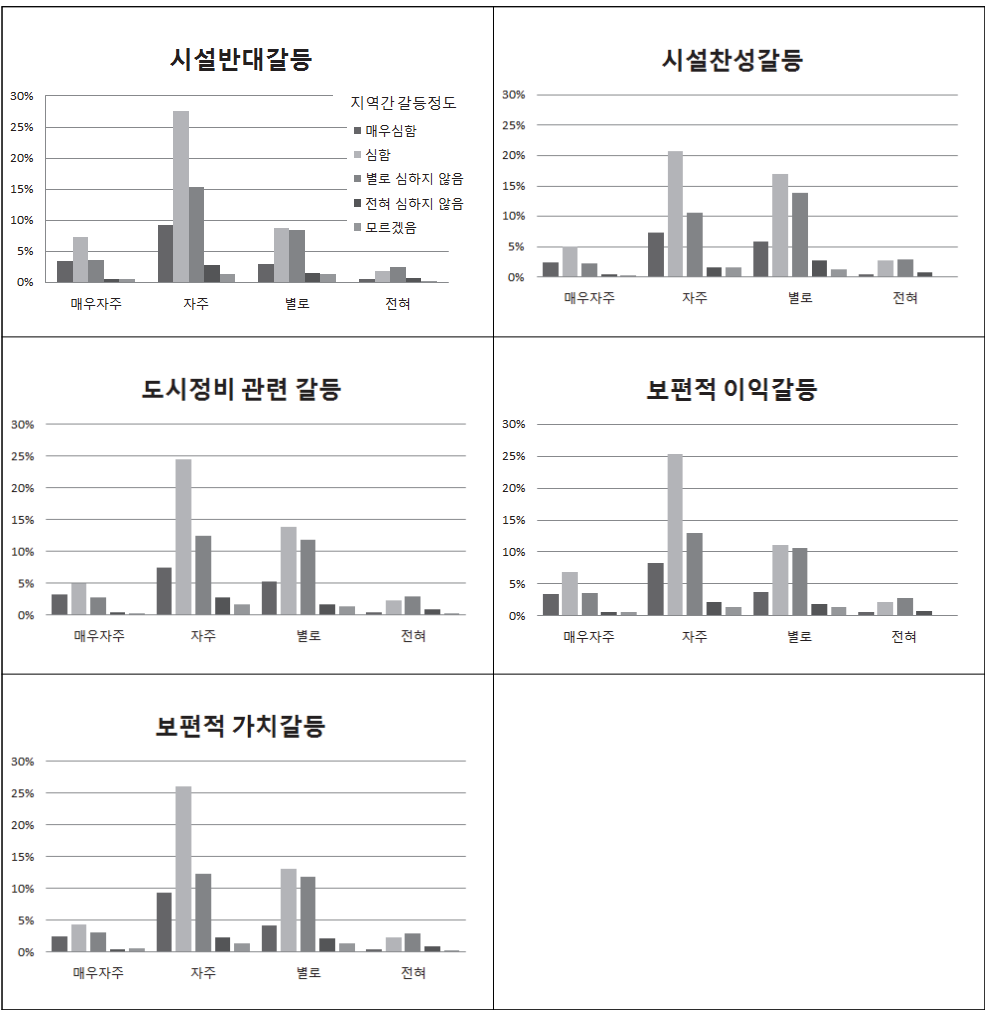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학적 변수와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위의 분석은 전반적으로 사소한 차이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구학적 변수들이 여러 가지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대개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보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구분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더 의미 있는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설문조

사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갈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조사에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 공공갈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역 간의 갈등”과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4]는 우선 “지역 간의 갈등”과 위에서 분석한 각종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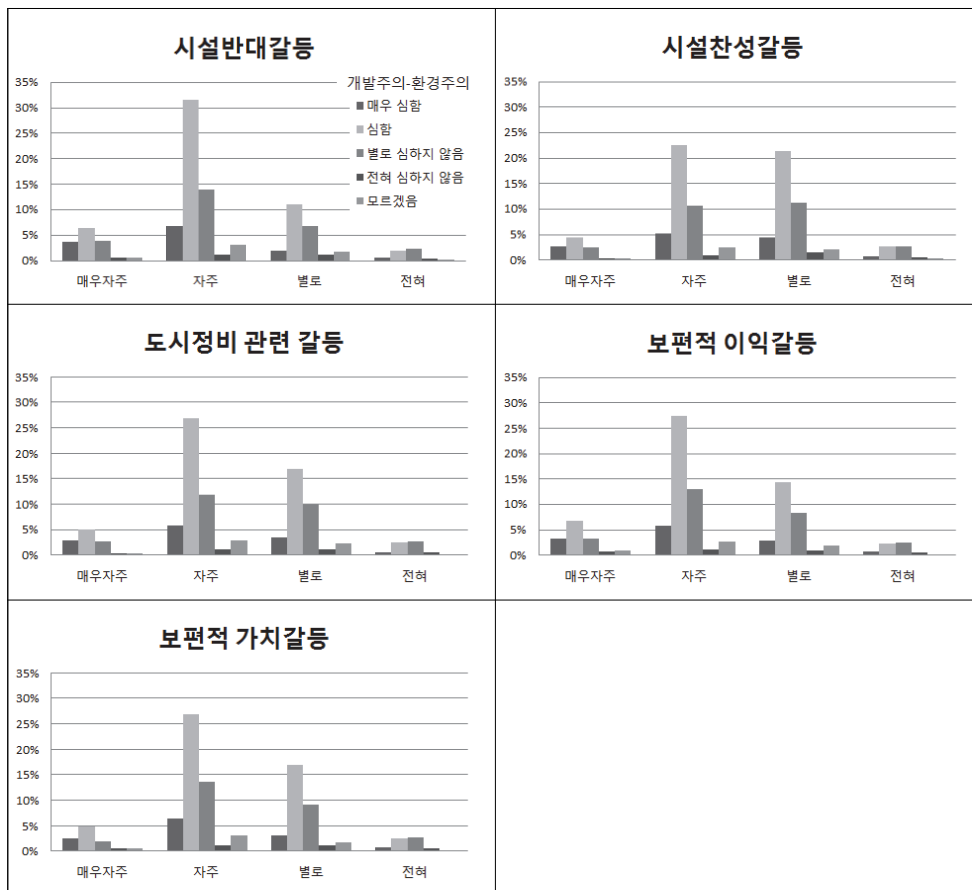
[그림 6-4] 지역 간 갈등 인식과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 차이 관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갈등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매우 자주”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지역 간 갈등의 정도도 ‘매우 심함’거나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설찬성갈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이 비교적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이러한 종류의 공공갈등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그림 6-5]는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관한 인식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5] 환경-개발 갈등에 대한 인식과 공공갈등 발생 빈도 인식 관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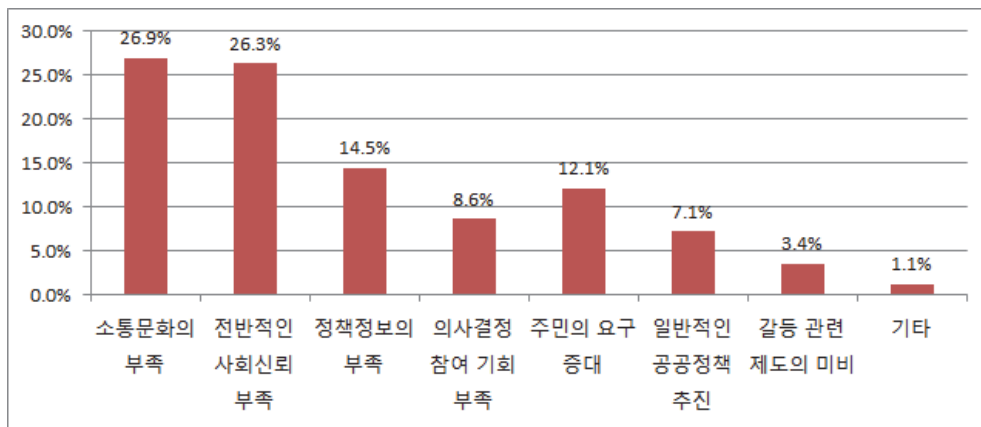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대체로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발주의-환경주의 사이의 갈등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인구학적 변수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갈등이란 그 특성상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지고 회자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하나의 갈등현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하나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공공갈등의 개념이 일반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갈등’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갖는 부정적인 함의 외에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개념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보이는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을 생각해 보면 공공갈등의 개념이 이렇게 별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의외의 발견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보다 구체적인 양상들, 예컨대 공공갈등의 원인이나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우리 사회나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2.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앞에서 분석해 본 공공갈등 발생 원인별 빈도 인식 분석을 생각해 보면 공공갈등 발생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공공갈등 발생 원인별로 인구학적 변수에 의한 의견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전반적인 공공갈등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은 아래 [그림 6-6]과 같이 나타났다. 공공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소통문화의 부족’이었다. 공공갈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화와 협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소통이란 갈등 해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전반적으로 소통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지적한다는 사실은 앞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갈등이 많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족’이었는데, 이 원인은 사실상 공공갈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원인도 신뢰부족으로부터 온다는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두 가지 의견은 보다 공공갈등에 특정된 의견이었는데, ‘정책정보의 부족’과 ‘주민의 요구 증대’였다. 이 두 가지가 정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흥미로웠던 것은 공공갈등을 이야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부족이라든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실제 공공갈등 사례에서 이 두 가지 원인은 거의 언제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한국행정연구원, 2017b), 일반 시민들은 공공갈등의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6-6]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위 [그림 6-6]에서 나온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표 6-2>는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각종 인구학적 변수와 관련된 인식변수들에 대한 응답으로 분해해 본 것이다.

〈표 6-2〉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의 인구학적 변수 분포 분석

구분		소통 문화의 부족	전반적인 사회 신뢰 부족	정책 정보의 부족	의사결정 참여기회 부족	주민의 요구 증대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갈등관련 제도의 미비	기타
성 별	남성	27.8%	25.3%	15.1%	8.3%	11.6%	6.4%	3.5%	2.0%
	여성	26.0%	27.3%	13.8%	8.9%	12.5%	7.8%	3.3%	0.3%
교 육 경 험	무학	43.3%	24.5%	9.8%	5.5%	4.8%	7.4%	4.8%	0.0%
	초등학교 졸	28.2%	27.4%	17.0%	7.4%	8.1%	6.9%	4.3%	0.7%
	중학교 졸	29.3%	32.2%	11.6%	8.4%	7.8%	7.6%	2.9%	0.1%
	고등학교 졸	27.2%	25.0%	14.4%	9.0%	12.1%	7.0%	4.2%	1.1%
	대학 졸	25.8%	25.8%	15.2%	8.7%	13.4%	7.1%	2.8%	1.1%
	대학원 이상	27.3%	31.0%	4.3%	8.4%	12.5%	10.2%	0.5%	5.9%
	학력 무응답	19.6%	35.1%	21.5%	0.8%	16.5%	3.5%	3.0%	0.0%
경 제 활 동 상 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	27.7%	15.1%	8.0%	13.3%	6.1%	2.4%	0.7%
	임시직 임금근로자	26.4%	25.7%	17.2%	8.8%	7.6%	8.5%	2.2%	3.7%
	일용직 임금근로자	31.4%	28.6%	13.1%	5.5%	9.9%	8.0%	3.4%	0.0%
	고용주	25.3%	3.4%	26.3%	8.2%	22.4%	4.6%	9.1%	0.6%
	자영업자	28.2%	26.8%	15.0%	9.3%	9.2%	7.1%	3.7%	0.7%
	무급가족종사자	28.2%	26.9%	9.6%	4.8%	16.4%	9.5%	4.5%	0.0%
	실업자	27.3%	27.2%	11.0%	10.8%	9.9%	7.1%	5.9%	0.7%
	비경제활동인구	25.7%	24.9%	12.8%	9.2%	13.9%	7.8%	4.2%	1.5%
이 념 적 성 향	매우 보수적	26.1%	31.0%	18.5%	4.6%	6.8%	9.2%	3.8%	0.0%
	대체로 보수적	23.0%	26.0%	14.6%	9.3%	13.7%	9.2%	4.0%	0.3%
	중도적	28.8%	25.7%	14.8%	8.6%	11.7%	6.5%	3.0%	0.9%
	대체로 진보적	27.5%	27.4%	13.8%	8.0%	11.1%	5.7%	4.0%	2.5%
	매우 진보적	23.5%	25.1%	10.2%	10.0%	17.7%	11.6%	1.6%	0.3%
사 회 통 합 정 도 평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8.5%	20.4%	7.9%	4.7%	10.8%	22.5%	2.4%	2.9%
		33.6%	31.6%	12.5%	4.5%	2.5%	6.8%	7.2%	1.3%
		25.0%	26.1%	14.8%	8.3%	12.3%	7.2%	4.2%	2.1%
		27.4%	26.1%	14.3%	6.7%	12.6%	7.3%	3.9%	1.8%
		28.0%	23.5%	13.2%	10.2%	15.0%	7.1%	3.0%	0.0%
	보통	26.7%	27.0%	15.3%	8.7%	12.0%	6.3%	2.9%	1.2%
		23.7%	31.1%	13.2%	7.8%	12.9%	7.7%	3.2%	0.4%
		27.6%	23.2%	19.7%	13.1%	7.8%	4.9%	3.6%	0.0%
		25.6%	23.9%	13.3%	19.3%	7.9%	5.4%	4.0%	0.5%
		34.3%	10.0%	0.0%	0.0%	55.7%	0.0%	0.0%	0.0%
	매우 잘 이뤄지고 있음	46.9%	14.2%	11.6%	0.0%	0.0%	0.0%	0.0%	27.3%
		25.4%	18.4%	14.6%	7.0%	12.5%	13.7%	5.1%	3.4%
		26.5%	27.0%	14.0%	8.5%	13.3%	6.4%	3.3%	1.0%
		28.6%	27.5%	16.4%	8.8%	7.8%	6.9%	3.4%	0.6%
		19.3%	30.9%	28.1%	2.6%	4.4%	9.8%	3.3%	1.5%
갈 등 의 정 도	모르겠다	36.2%	15.9%	7.7%	18.7%	6.6%	8.5%	3.1%	3.3%
	갈등이 매우 심하다	25.4%	18.4%	14.6%	7.0%	12.5%	13.7%	5.1%	3.4%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26.5%	27.0%	14.0%	8.5%	13.3%	6.4%	3.3%	1.0%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28.6%	27.5%	16.4%	8.8%	7.8%	6.9%	3.4%	0.6%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9.3%	30.9%	28.1%	2.6%	4.4%	9.8%	3.3%	1.5%
	모르겠다	36.2%	15.9%	7.7%	18.7%	6.6%	8.5%	3.1%	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일단 성별로 분해해 본 결과 전반적인 응답의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소통문화의 부족’과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이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수 원인도 앞에서의 분석과 대동소이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교육경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교육경험이 적을수록 ‘소통문화의 부족’이 보다 중요한 공공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에 있어서는 고학력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민의 전반적인 요구가 증대’하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나타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향은 마찬가지로였고,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라든가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과 같은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업상태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를 분해하여 보았는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된 논의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의 통합 정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배제 정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공공갈등과 관련된 의견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응답의 경향은 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경향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고용주’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공갈등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정책정보의 부족’, 두 번째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증대’라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집단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족’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갈등 관련 제도의 미비’라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체로 이 집단이 경험하는 공공갈등이 각종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면 이러한 응답은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독특한 위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해 본 차원은 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응답의 차이이다.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각각 기본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해 가진 태도가 다를 것이므로 자연히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견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된 두 가지 원인인 ‘소통문화의 부족’과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했지만, 진보적인 경향을 가질수록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응답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라든가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이념적 성향의 영향력이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견을 10개 단위로 측정한 지표들과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56% 정도의 사람이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이 ‘주민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사회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소통문화의 부족’, 두 번째로는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중간에 있는 각 단계들로부터 나타나는 전반적인 대답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 일반적인 원인(‘소통문화의 부재’, ‘사회전반적인 신뢰부족’)을 제외하면 ‘일방적인 정책집행’이라든가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과 같은 제도적 원인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 일반적인 원인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요구증대’를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한가에 대해 묻는 질문과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 보았는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 ‘주민의 요구 증대’,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과 같은 제도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 일반적인 원인이나 정보의 부족을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하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 일반적인 원인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이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대단히 지역적인 단위에서 매우 독특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응답 경향은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가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공공갈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부족’이나 ‘일반적인 공공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에는 무엇보다도 공공갈등이란 하나의 이름 아래

에서 어떤 통일성을 가진 현상으로 보기에 너무나 다양한 현상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준에 나와 있는 갈등 해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결정과 집행이라는 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요한 원인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그 특정한 사례들의 전후사정을 알기 전에는 얻기 어려운 결론이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공공갈등을 접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대해 보다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보기가 더 쉬운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해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것이 아래 [그림 6-7]이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갈등 원인에 대한 견해와 발생 빈도에 대한 견해에 있어 각 갈등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있다.

[그림 6-7] 갈등 발생 빈도와 발생 원인 - 갈등 유형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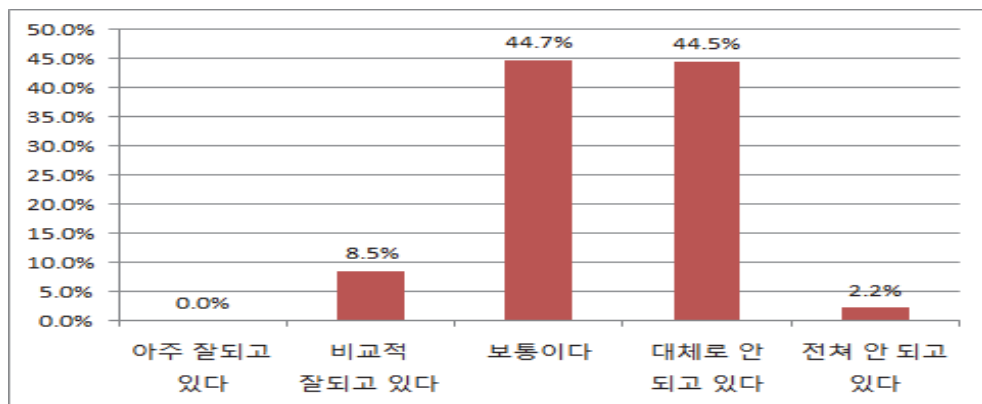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본 조사에서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은 우선적으로 민주적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였다. 2007년 ‘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갈등관리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본격적인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해 느끼는 평가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아래 [그림 6-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8] 정부의 민주적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의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아주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048%로 아주 적게 나타난 가운데 ‘대체로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44.5%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의 [그림 6-6]에서 나타난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갈등관리 관련 법/제도의 부족’이라는 원인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은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상당부분 갈등의 정도를 약하게 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낮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인지도가 낮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질문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정

부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다. 각 질문은 앞의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응답과 상응하도록 하여서 그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 6-3>는 앞 절의 질문에서 언급된 8가지 공공갈등 발생 원인과 상응하는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6-3> 다양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중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통문화 정착	28%	56.2%	14.9%	0.9%	0.1%
정부신뢰 회복	44.1%	42.2%	12.7%	1%	0%
정책 적극 홍보	30.5%	50.2%	17.2%	2%	0.2%
시민참여 보장	26.6%	54.2%	17%	2.2%	0%
공무원 역량 강화	27.4%	50.1%	19%	2.9%	0.7%
제도실효성 확보	28.8%	52.8%	16.2%	2.1%	0.1%
합리적 보상체계	26.8%	53.3%	18.4%	1.5%	0.1%
별도의 합의기구 설치	21.1%	55%	21.3%	2.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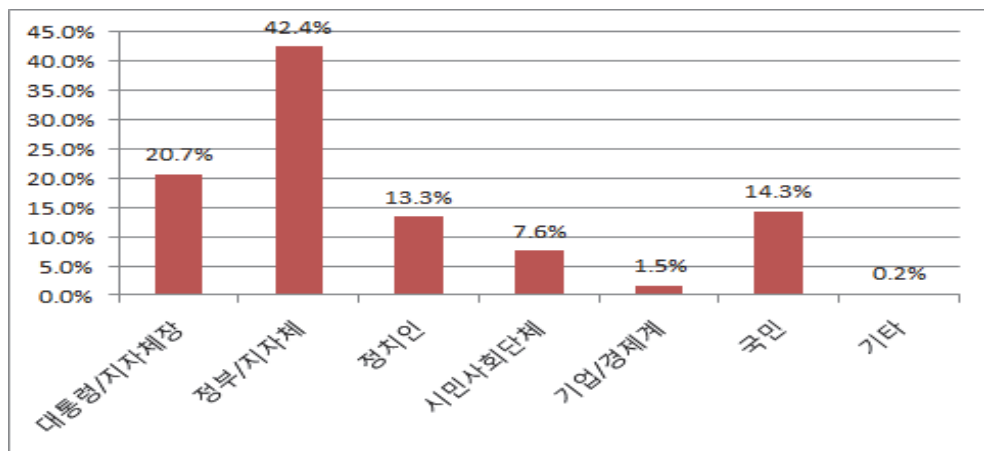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매우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으로 파악하자면 무엇보다 ‘정부신뢰 회복’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 앞에서의 응답들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공공갈등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신뢰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친 긍정적 의견으로 보아도 여전히 정부 신뢰 회복은 가장 중요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가장 강한 긍정적 의견으로 보자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이고 세 번째는 ‘제도실효성 확보’였지만, ‘필요하다’를 합친 의견을 보면 ‘소통문화 정착’이 두 번째로 필요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제도실효성 확보’와 ‘합리적 보상체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소수임을 생각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보면 ‘별도의 합의기구 설치’와 ‘공무원 역량 강화’는 공공갈등 관리 방안으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4. 공공갈등 해결과 관련한 의견의 분석

공공갈등 해결과 관련한 의견은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하위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주체의 적절한 역할, 세 번째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 내 공공정책 관련 집단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의견이었다.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관한 질문은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장 역할이 큰 행위자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분포는 다음 [그림 6-9]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6-9]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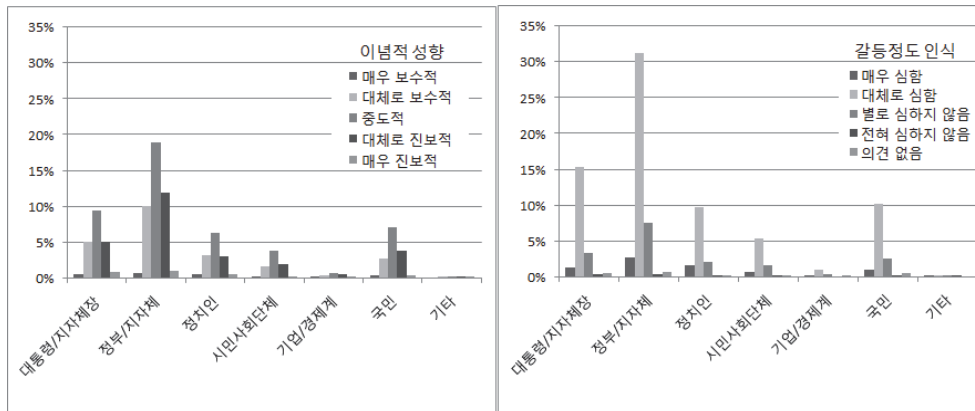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공공갈등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때문에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집행에서 대통령이나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20% 정도인 것은 독특한 발견이었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 기대는 '국민 개개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실제 공공갈등 사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그렇게 많은 기대는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다른 변수들로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대한 의견을 분해해 보았다. 우선 정부에 대한 의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념적 성향과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분해해본 결과가 아래 [그림 6-10]이다.

[그림 6-10] 공공갈등 주체에 관한 의견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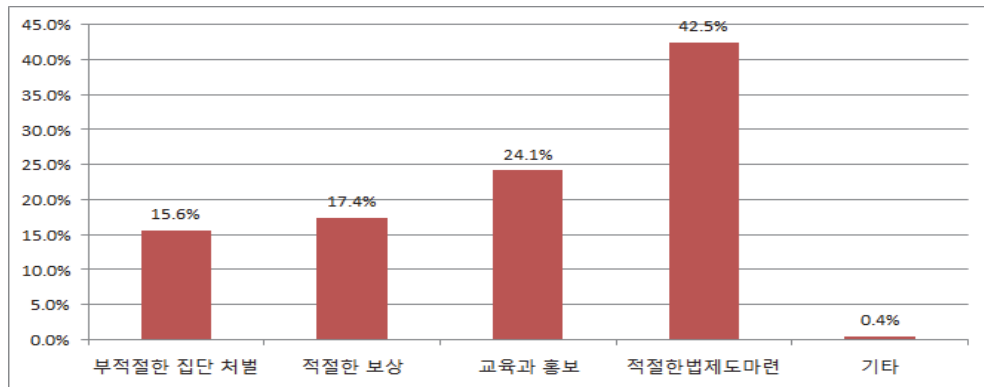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념적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밝힌 사람들과 진보적이라고 밝힌 사람들 사이에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지자체장'이나 '정부/지자체'가 공공갈등 해결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민, 사회단체'나 '국민'이라는 의견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 [그림 6-9]에서 보였던 패턴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정치인(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갈등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독특한 발견이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시사하는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아래 [그림 6-11]은 이 질문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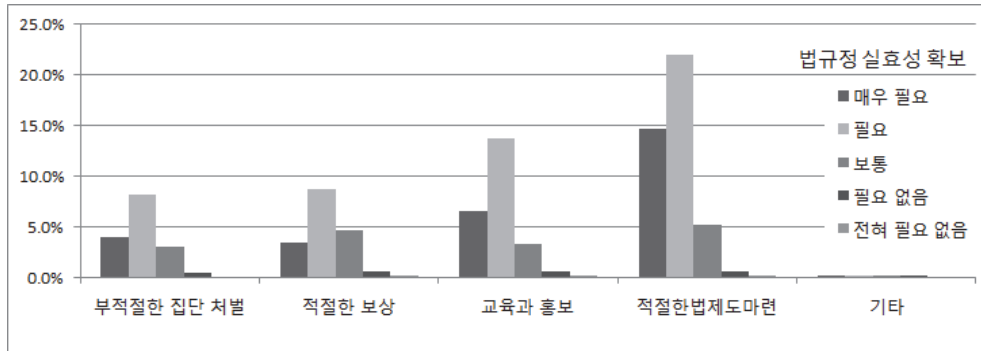
[그림 6-11]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나온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분석들을 고려해 볼 때 공공갈등 발생 원인 중에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바로 앞의 분석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이었다. 게다가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던 것이 '소통문화의 부족'과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나 '적절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법이나 제도의 확립과 맞닿아 있는 점이 많고 일반시민들의 시각에서도 이러한 점이 가장 주요한 역할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기본적인 역할들에 중점을 두는 의견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응답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6-12]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응답을 '공공갈등 해결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공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분해해 본 결과이다.

[그림 6-12]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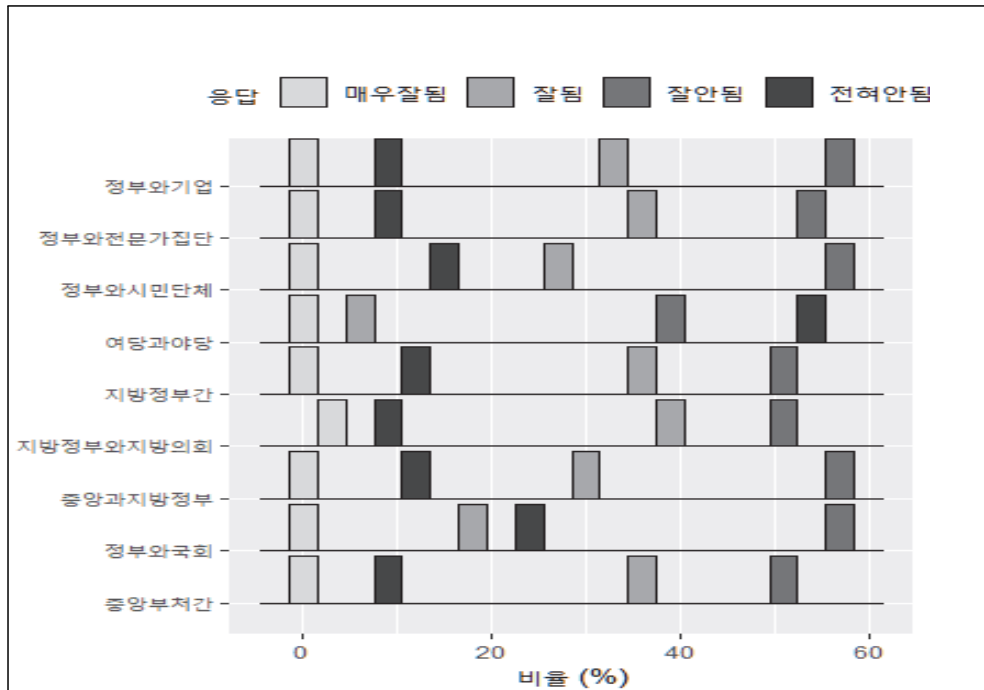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적절한 법제도 마련’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갈등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들에서도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람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법 규정 실효성 확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대안들 중 하나에 대한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공공갈등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정책 관련 다양한 행위 집단 간의 협력정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응답들은 앞에서 분석한 바 있는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대한 의견과 연결시켜 분석해 보면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6-13]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질문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3] 여러 집단 간 협력에 관한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조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잘되고 있다'는 의견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반대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은 1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은 5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의견은 37% 정도였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여당과 야당'의 협력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은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고 그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정부와 국회' 사이의 협력에 관련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체로 잘되고 있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국회 사이의 협력에 관해서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안 되고 있다'는 의견과 '대체로 잘되고 있다'는 의견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는 '매우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난 것이 독특했고, 잘 안되

고 있다는 의견과 잘되고 있다는 의견 사이의 차이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은 앞에서 논의한 중앙부처 간 협력에 관한 의견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다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협력에 대한 인식은 다른 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일단 부정적인 의견, 즉 ‘대체로 안 되고 있다’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도 독특한 패턴이었다.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과 잘되고 있다는 의견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협력이나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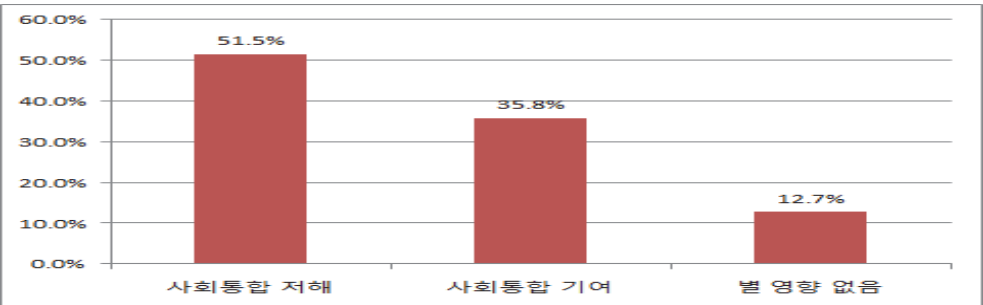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로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데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견해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 밝힌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것이 아닌 ‘공정한 법제도의 마련’이라는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 공공갈등의 다면적인 양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잘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공공갈등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요소인 정책 관련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별히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갈등 해결이나 예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5.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관한 의견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었다. 본 분석의 앞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공공갈등을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에 대한 의견을 얻는 일은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찾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래 [그

림 6-14]는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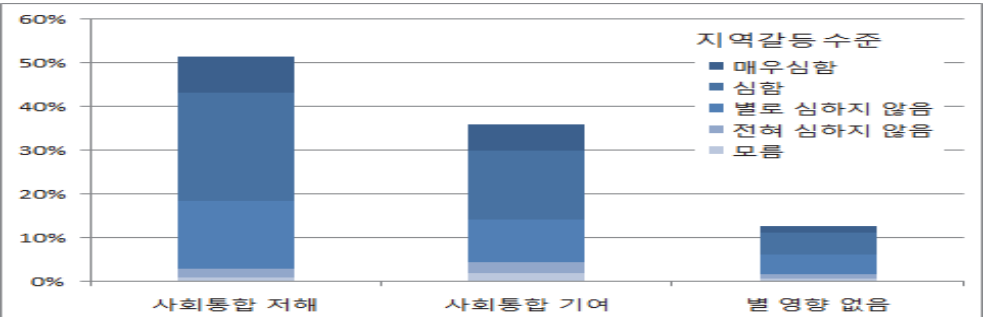
[그림 6-14]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의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직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과 같이 51.5%의 응답자들이 공공갈등이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35.8%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거나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12.7%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다른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위의 응답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공갈등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더 큰 단위에서의 집단 간 갈등이다. 애초에 지역적인 정책 때문에 전국적인 집단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사회통합의 굉장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6-15]는 지역갈등의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위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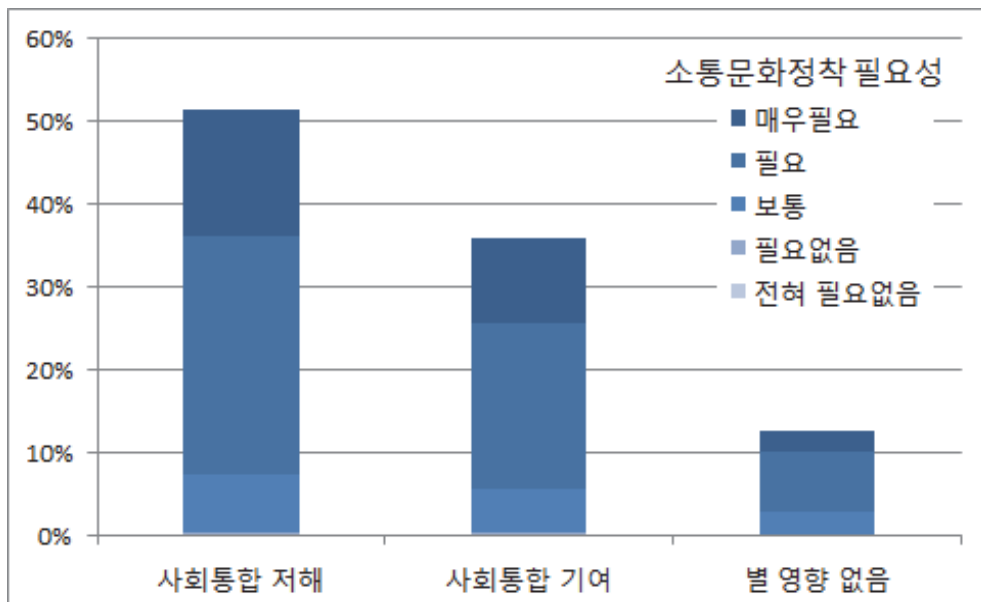
[그림 6-15]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지역갈등 수준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들의 경우 공공갈등이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소통을 자극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갈등관리 방안 중 소통문화 정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가 아래 [그림 6-16]이다.

[그림 6-16]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소통문화 정착의 필요성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여전히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 중 소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을 볼 때 본 분석에서도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갖가지 의견으로부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의 기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와 역할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아직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기제를 정교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론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몇 가지 공공갈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식은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하여 다시 분석을 해보아도 그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험적인 사실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주체 중 하나가 되는 정부나 지자체, 혹은 다른 정책집행 주체들이 정책 집행 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혹은 갈등이 아닌 단순한 의견 차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도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통문화의 부재'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요인들이기에 정책적으로는 공공갈등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분석에서 '정책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주민의 요구 증대', 혹은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 또한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책 과정에 보다 충실하게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이 소통문화의 부재나 사회신뢰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도 기존 정책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왔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갈등관

리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신뢰 회복’과 ‘소통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지적된 점도 이러한 시사점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통령령이 존재할 뿐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면, 우선적으로 정부는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관련된 제도들을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공공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정책 관련 집단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위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점점 더 공공갈등 발생의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에 있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실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공공갈등 해결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은 분명 협력이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공갈등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때로 정부는 공공갈등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조사에서도 사람들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공권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한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18년 현재 집단 간의 갈등 지점, 분배 공정성, 복지 정책의 지향, 사회 가치관, 성평등과 성역할 인식, 공공갈등 등 우리 사회의 제반 사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사회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을 특히 계층, 젠더, 세대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살펴 보면서, 갈등 해결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도는 갈등은 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갈등의 표출과 해결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 바탕을 둔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젠더갈등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비록 전체 기사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갈등의 사안이 등장하는가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계층갈등에 관한 기사는 최근에 와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세대갈등에 관한 기사는 2010년대 들어 가장 뜨거운 쟁점이며, 젠더갈등에 관한 기사는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갈등의 사안들도 1990년대는 정치영역 갈등 기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는 사회영역에서 갈등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2010년 들어 그 증가폭도 컸다. 2000년대 계층 및 세대갈등의 기사는 사회영역으로 다수 분류되고, 연관어 분석 결과도 계층 및 세대갈등 모두 ‘사람들’로 추출된다. 이는 1990년대 정치·경제영역에서 다루어지던 갈등의 문제가 사회영역으로 넘어 왔고, 단순히 선언적·정치적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 사안으로 갈등이 다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증가하는 불평등과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한 측면인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근로 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격차도 소득격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고용 및 임금의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도 큰 편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지점으로는 교육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 부문에서의 격차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배경 전반에는 우리 사회의 점차 심해지는 격차, 그리고 격차의 고착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로부터 서서히 배제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미끄럼틀 사회(유아사 마코토, 2009)’와 같이 지위 경쟁의 장에서 중간 이하 계층의 소리 없는 무너짐이 갈등과 불안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자원 분배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이는 사회통합의 현실과 과정을 다루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이론적 관점이다.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를 통합된 사회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분배 체계, 가치관 체계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함을 구성원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3장에서부터는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계층으로 드러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갈등의 중심축임을 의미한다. 소득, 경제활동상태, 직종과 같은 각 요소보다는 계층이라는 종합적 요소가 갈등 사안을 보다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뿐 아니라 다차원적 격차와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특히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런 인식을 강하게 보였다는 점은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와 더불어 불공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저소득층 혹은 하위계층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조차 닫혀 있는 사회에서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이동의 통

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층의 경우 복지 확대 시에 세금은 더 내고, 복지를 받는 수혜자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4장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언론 담론 분석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뜨거운 문제인 젠더 이슈를 다뤘다. 젠더갈등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는 인식,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집단별 젠더갈등 인식 수준 차이에서는 성별보다는 미혼, 청년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근로 형태보다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점은 미투운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젠더갈등이 첨예화된 현시점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가정 내 역할, 직장 내 역할, 취업 및 승진 기회, 임금, 전반적 사회참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갈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성폭력·성차별 위협 수준이 사회적 젠더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성역할태도는 남성일수록, 별거 상태인 경우, 노년 세대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일수록,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성폭력이나 성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보다 전통적 성역할 역할태도를 보였다.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젠더갈등이나 젠더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집단 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높지만, 성별 갈등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미투운동이 성폭력 및 성차별의 완화에 기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의 확산을 통해서 첨예한 갈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다. 갈등 사안의 합리적 해결 경험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단으로 해석된다. 미취학 아동 수, 초등학교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젠더갈등 인식이 커지는데, 이는 이들 여성의 돌봄 역할을 둘러싼 젠더갈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최근의 ‘노키즈존’, ‘맘충’과 같은 사안들이 또 다른 젠더갈등의 지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성별, 돌봄 부담, 세대, 노동시장 취약성, 성폭력·성차별의 균열 지점들에 주목해야 갈등 사안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5장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상황이 확인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세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고, 그 주류적 가치관을 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세대가 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바뀌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와중에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에는 규모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에 대한 강조,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현 시기의 젊은 세대는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요구가 새롭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행동이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기존에 세대갈등을 해소해왔던 신세대의 주류화, 또는 세대 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갖가지 의견으로부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의 기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와 역할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경험적인 사실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주체 중 하나가 되는 정부나 지자체, 혹은 다른 정책집행 주체들이 정책 집행 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혹은 갈등이 아닌 단순한 의견 차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책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주민의 요구 증대’, 혹은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 또한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책 과정에 보다 충실하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공갈등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때로 정부는 공공갈등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조사에서도 사람들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공권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한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이 증가하는 격차-계층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격차-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갈등과 경쟁을 구분하는 것이다. 경쟁이 갈등을 낳지만, 모든 형태의 갈등이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주어진 자원을 놓고 서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이지만, 갈등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목표가 양립 불가능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두고도 발생할 수 있다(Deutsch, 1973, p. 10). 즉, 갈등은 서로 협력적인 과정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므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등의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갈등의 요소를 차차 줄여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이나 대립보다는 통합과 협력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갈등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의 빈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출 수는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갈등 철학과,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서 해소하고 있느냐의 갈등 기술과 직결된다(송복, 1990, p. 24). 일반적으로 갈등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센 사회에서는 반대의 수용력이 아주 낮다. 갈등의 빈도를 줄이고 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대의 인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반대의 긍정적 인식이다(송복, 1990, p. 25). 반대는 사회의 재조직을 위한 기초이며, 그리고 사회구조에 새로운 힘을 넣어주는 재생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일부 갈등 사안은 기존의 가치관, 역할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치관과 역할태도를 이들 집단에게 강조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집단의 등장을 받아들이고 그들 집단의 주장의 배경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배경을 찾는 작업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갈등의 빈도를 줄이고 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대자와 반대의견에 대해 ‘합일’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좁혀가기 위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송복, 1990, p. 26).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갈등수준의 첨예화는 앞서의 사회이동의 급격성·과격성에서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이 갈등관리의 미숙, 즉 반대인식의 미확립과 반대조정기술의 미발달이라는 철학적·기술적 요인이 중복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는(송복, 1990, p. 27), 이미 30여 년 전의 지적이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갈등 사안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젠더 이슈, 환경 이슈, 세대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갈등의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갈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갈등이

사회 구성원을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단절시키고 전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결속하여 신뢰와 화해, 통합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Burton & Dukes, 1990; 서문기 2004, p. 197, 재인용)이다. 우리 국민들도 한국 사회의 갈등,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해당사자를 분류하고, 각각이 인식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갈등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갈등의 심화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본 연구가 설정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갈등주의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의 시작이 단순하지는 않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체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협상 조정자의 행위로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서문기, 2004, p. 209). 갈등의 지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것인지, 가치관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정부가 당사자인지, 조정자인지에 따라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운영 체계가 달라야 한다. 본 연구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밝히는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복합적 지점에 있다. 이를 위한 해결의 프로세스에서는 ‘정부 역할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앞서 계층갈등의 지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실재적(veridical) 갈등의 해결 방안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그것이 동전 던지기 수준일지라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갈등 당사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었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한편으로는 갈등이 가지는 함축성을 이해해야 한다. 갈등 사안의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갈등의 배경에 놓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갈등이 치환적(displaced), 비속성적(misattributed) 특성을 가질 때 중요하다. 최근의 젠더갈등, 세대갈등의 수면 아래 놓여 있는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당사자의 대화 의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김영옥, 2015, p. 28). 공정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더해서 대화할 의지와 대화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체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갈등은 이해관계에 기초하는지, 이해관계의 기저에 놓여있는 가치체계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관 충돌에서는 합의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서문기, 2004, p. 209). 그림은 갈등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며, 또한 정부가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짐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다뤘던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체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 각 집단의 격차가 놓여있고,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순간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 상황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사회 가치의 변화를 홍보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렇지만 갈등의 근저에 있는 자원배분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실시, 열린 토론과 공론 조성이 필요해진다.

[그림 7-1] 사회갈등 유형별 관리 및 조정 방향

	이해관계 ←	쟁점 ←	가치관
조정자 ↓	정부역할의 공정성 갈등조정제도 개선	문화 변동의 인지 사회 경제구조 개선	
정부 ↓	사회적 권위체계 구축 공무원 의식 및 관행 개선 정책 프로그램 활용	열린 토론 및 공론 조성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	
당사자			

자료: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p. 209.

정부가 조정자로서 각종 이해관계의 배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자 할 때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젠더관점 여성기본계획> 등을 통해 갈등 현안 속에서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가치관 갈등에 조정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 갈등 당사자와 한국 사회의 분배 방식, 정부 개입,

가치관의 변화, 성평등, 공공갈등의 원인 이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사안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특히 중산층에 비해서 하층에서 높았다는 점이며, 이는 불공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분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중간계층의 자기이해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납세자와 복지의 수급자 지위가 일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젠더갈등은 미혼, 청년세대에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젠더 불평등에서도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문제인식이 확인된다. 이는 젠더갈등이 경제구조에서 남성 주소득자 모델이 쇠퇴하는 상황임에도 가치관 개선의 지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세대갈등에서도 확인되는데, 비교적 젊은 세대의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청년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해와 행동이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기존에 세대갈등을 해소해 왔던 신세대의 주류화, 또는 세대 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 젠더, 세대의 이해관계에 적절히 반응하고, 이것이 갈등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갈등의 지점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책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경향신문. (1994. 4. 20). 직장에서의 남녀모럴(사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국무조정실. (2016).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015, 2016).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 (2015).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영임. (2017). 미디어와 세대갈등: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통합
인문학 연구, 9(2), 227-255. 한구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 김우창, 송복, 송호근, 장덕진. (2017). 한국사회, 어디로?. 아시아.
-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호기, 고동현, 김영범, 최성수. (2015). 한국사회 계층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
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 . . 한금영.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박길성. (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대민. (2016). 장기 시계열 내용 분석을 위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가능성: 100만 건
기사의 정보원과 주제로 본 신문 26년. 한국언론학보, 60(5), 353-420.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 이념 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종훈. (2014).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북스.
- 박준. (2013). 한국 사회갈등 현주소.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전국경제인연합회.
- 변화순, 장혜경, 김혜영, 전영주, 정재동, 구선영. (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한

국여성개발원.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1, 2012). 사회통합의식에 관한연구.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한국사회학, 38(6), 195-218.

석재은. (2014). 고령사회의 세대공생 설문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송복.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유아사 마코토. (2009). 빈곤에 맞서다-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검동소.

유종일. (2018).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전환 지체론. 경제발전연구, 24(1), 1-31.

유희정, 이숙중.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윤종설. (2013).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동기. (2006).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 (2006).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11).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여성학. 미래인.

이재경. (2013). 한국사회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저스티스, 134(2), 94-109.

이재경. (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경제와사회, 118, 18-48.

이향수, 이성훈. (2017). 정보화 수준과 소득 수준과의 관계: PC기반 환경을 중심으로. 디지털 융복합연구, 15(11), 1-8.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인사혁신처. (2018). 2018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임동진. (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전병유, 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페이퍼로드.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전영평, 김서용, 소영진, 이병량, 이승중. (2005).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수요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영호, 고숙자. (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현상. (2018). 우리나라 미취업자 변화와 취업애로계층. 월간노동리뷰, 2018(7), 55-70.
- 조대엽. (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나남.
- 조순경 편. (2000).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현연, 김정석. (2016).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경제와사회, 110, 270-299.
- 주재복, 고경훈, 심준섭, 홍성만, 조영희. (2005). 지역갈등의 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유석. (2016).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한울아카데미.
- 최일섭, 최성재(편). (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하트만, 하이디. (1985).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창비.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 한국행정연구원. (2017a).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7b). 공정사회와 갈등관리(V):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
-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1991년 봄호, 248-309.
-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 사상, 188-209.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150-191.
- 홍두승, 구혜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홍백의, 은석, 함선유, 안승재. (2017).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통계청. 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통계청.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The global exploitation of women*. NYU Press.
- Burton, John W. & F Dukes. (1990). *Conflict: Practices in Management, Settlement and Resolution*. New York: Stmartins Press.
- Corporate Women Directors International. (2017). *2017 CWDI Report: Women Board Directions in Asia-Pacific Region*.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utsch, M.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 Dugan, M. A. (1996). The nested theory of conflict. *A Leadership Journal: Women in Leadership*, 1, 10-19.
- Giddens, A. (2012). *Sociology*.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 Hochschild, A.R. (1989). *The Second Shift*. Penguin.
- Kish, L. (1987). Weighting in Deft2. *The Survey Statistician*, June.
- Krechel, R.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85-95.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G. K. Zollschan and W. Hirsch (Eds.), *Social Change: Explorations, Diagnoses and Conjectures*, 244-257. London: Routledge.
- Lockwood, D.(1999). Civic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 I. Gough., G. Olofsson(Eds.),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Hampshire: Macmillan Press Ltd, 63-84.
- Menkel-Meadow, C. (2003). Conflict theory. In K. Christensen & D. Levinson(Eds.), *Encyclopedia of community: From the village to the virtual world*(Vol.1). Thousand Oaks, Ca: Sage.
- Moore, C. (2003).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SanFrancisco: Jossey Bass.
-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Schmidt, Stuart M. & Thomas, A. Kochan. (1972). Conflict: Toward Conceptual Clar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3), 359-370.

European Value Study. (2008). <http://europeanvaluesstudy.eu>.

Inter-Parliamentary Union. (2018). Women in Parliaments Data. <http://archive.ipu.org>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http://www.issp.org>.

World Value Survey wave 6. (2010-2014). <http://www.worldvaluessurvey.org>.

[부록 1]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가. 모집단 분석

- 2016년 기준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2016년 기준 전체 집계수는 10만 2024개이며, 동부는 81%, 읍면부는 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7%, 경기도가 24.2%를 차지하고 있음 (〈부표 1-1〉 참조).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7,385	11,768	-	-	19,153
부산	1,625	4,868	58	251	6,802
대구	1,456	3,060	107	305	4,928
인천	1,759	3,833	186	29	5,807
광주	778	2,258	-	-	3,036
대전	987	2,083	-	-	3,070
울산	376	1,505	135	299	2,315
세종	12	262	96	98	468
경기	6,417	14,218	1,995	2,056	24,686
강원	534	1,325	736	485	3,080
충북	573	1,320	703	567	3,163
충남	472	1,390	1,431	942	4,235
전북	755	1,858	842	266	3,721
전남	403	1,174	1,851	664	4,092
경북	711	2,169	1,538	971	5,389
경남	1,078	3,284	1,275	1,130	6,767
제주	338	594	326	54	1,312
계	25,659	56,969	11,279	8,117	102,024

- 가구와 인구규모를 파악해보면, 전체가구는 1900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는 4900만으로 파악되었음(〈부표 1-2〉 참조).

□ 동부의 가구는 전체는 81%를 차지하며, 읍면부는 19%로 나타났고, 인구규모로서는 동부가 82%, 읍면부가 18%로 나타났음.

□ 전체 인구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9%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49%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563,178	2,221,527	-	-	3,784,705
부산	327,048	960,345	9,970	46,807	1,344,170
대구	294,040	566,010	20,474	55,230	935,754
인천	339,689	688,603	27,786	6,750	1,062,828
광주	154,846	414,526	-	-	569,372
대전	210,014	380,684	-	-	590,698
울산	71,949	275,411	25,719	52,948	426,027
세종	568	46,300	23,364	20,181	90,413
경기	1,267,654	2,448,090	396,202	372,478	4,484,424
강원	112,735	255,076	145,980	102,555	616,346
충북	115,084	245,406	147,298	110,125	617,913
충남	102,907	255,485	268,761	186,577	813,730
전북	151,115	347,749	172,312	53,502	724,678
전남	79,885	223,235	294,707	129,370	727,197
경북	149,775	410,960	325,576	190,270	1,076,581
경남	209,263	606,068	243,285	214,907	1,273,523
제주	56,338	110,502	50,615	11,882	229,337
계	5,206,088	10,455,977	2152049	1553582	19,367,696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397,429	5,876,411	-	-	9,273,840
부산	726,635	2,447,550	22,750	126,250	3,323,185
대구	655,133	1,519,787	50,044	152,291	2,377,255
인천	789,030	1,910,246	62,473	16,330	2,778,079
광주	332,311	1,111,105	-	-	1,443,416
대전	455,503	1,026,304	-	-	1,481,807
울산	161,067	741,251	57,407	149,228	1,108,953
세종	1,524	130,683	50,322	50,339	232,868
경기	2,887,455	7,046,091	973,013	1,029,039	11,935,598
강원	239,906	652,852	332,587	243,503	1,468,848
충북	263,912	651,996	328,607	280,116	1,524,631
충남	219,775	688,351	623,775	479,707	2,011,608
전북	334,352	917,550	378,406	133,213	1,763,521
전남	178,619	579,910	631,617	329,617	1,719,763
경북	320,174	1,067,935	700,769	474,640	2,563,518
경남	465,402	1,620,590	519,588	568,567	3,174,147
제주	146,381	290,823	125,741	30,090	593,035
계	11,574,608	28,279,435	4857099	4062930	48,774,072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구 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630,847	1,693,589	2,775,180	2,989,684	-	-	-	-
부산	352,637	355,940	1,158,957	1,242,851	11,017	10,949	59,836	63,755
대구	318,472	321,135	721,760	766,656	25,218	23,434	74,581	74,957
인천	393,652	379,008	917,012	956,671	31,049	29,442	8,373	7,751
광주	164,796	158,830	528,791	559,802	-	-	-	-
대전	230,334	214,290	491,413	514,281	-	-	-	-
울산	84,369	72,732	369,339	358,572	28,934	26,732	74,548	72,167
세종	560	830	61,762	65,787	26,291	22,751	25,166	24,202
경기	1,437,994	1,385,026	3,365,946	3,535,899	496,332	455,065	504,353	505,269
강원	119,617	113,762	310,626	328,926	164,789	157,344	122,134	116,212
충북	130,884	127,040	311,952	326,594	162,626	154,603	138,661	135,931
충남	111,089	103,425	332,946	341,178	307,699	296,296	238,008	232,072
전북	167,929	157,483	436,859	462,247	180,311	184,853	64,643	65,940
전남	90,499	83,508	281,513	287,251	297,105	311,573	160,098	163,599
경북	160,423	150,846	518,422	528,309	333,777	341,047	232,039	232,953
경남	237,476	216,799	789,858	799,685	246,017	255,578	276,794	281,244
제주	71,974	71,538	140,578	145,052	62,116	61,471	14,829	14,877
계	5,703,552	5,605,781	13,512,914	14,209,445	2,373,281	2,331,138	1,994,063	1,990,929

24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0대이하	475,940	1,140,757	-	-	1,616,697
	20대	577,748	741,234	-	-	1,318,982
	30대	572,834	965,061	-	-	1,537,895
	40대	527,073	1,037,350	-	-	1,564,423
	50대	546,142	942,034	-	-	1,488,176
	60대	396,404	632,432	-	-	1,028,836
	70대이상	301,288	417,543	-	-	718,831
부산	10대이하	94,087	450,386	3,142	32,366	579,981
	20대	104,055	296,749	2,514	10,197	413,515
	30대	83,015	351,865	3,012	24,406	462,298
	40대	100,663	403,503	2,974	22,664	529,804
	50대	134,750	433,568	3,925	15,884	588,127
	60대	115,855	307,338	3,588	12,100	438,881
	70대이상	94,210	204,141	3,595	8,633	310,579
대구	10대이하	95,241	329,249	6,587	38,797	469,874
	20대	98,377	173,807	6,127	15,953	294,264
	30대	81,513	208,369	5,465	28,999	324,346
	40대	101,398	282,016	6,837	28,037	418,288
	50대	119,595	260,058	9,939	22,841	412,433
	60대	88,372	156,902	7,155	11,863	264,292
	70대이상	70,637	109,386	7,934	5,801	193,758
인천	10대이하	132,777	420,937	7,308	3,198	564,220
	20대	110,906	236,735	4,637	1,988	354,266
	30대	119,025	307,392	5,038	1,979	433,434
	40대	130,212	349,949	7,303	2,707	490,171
	50대	140,461	328,756	12,478	2,754	484,449
	60대	87,123	164,530	11,611	1,857	265,121
	70대이상	68,526	101,947	14,098	1,847	186,418
광주	10대이하	51,125	272,309	-	-	323,434
	20대	58,712	130,580	-	-	189,292
	30대	44,888	168,963	-	-	213,851
	40대	48,507	207,395	-	-	255,902
	50대	55,104	170,150	-	-	225,254
	60대	38,576	94,474	-	-	133,050
	70대이상	35,399	67,234	-	-	102,633
대전	10대이하	74,363	244,357	-	-	318,720
	20대	94,498	118,814	-	-	213,312
	30대	61,047	157,393	-	-	218,440
	40대	64,171	192,511	-	-	256,682
	50대	71,509	162,613	-	-	234,122
	60대	49,277	91,255	-	-	140,532
	70대이상	40,638	59,361	-	-	99,999
울산	10대이하	24,763	169,945	6,882	38,166	239,756
	20대	25,386	86,924	5,913	17,574	135,797
	30대	23,162	121,958	6,593	22,039	173,752
	40대	25,759	136,142	8,062	30,763	200,726
	50대	30,262	133,950	11,707	23,461	199,380
	60대	19,821	64,672	9,223	11,197	104,913
	70대이상	11,914	27,660	9,027	6,028	54,629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세종	10대이하	862	42,869	6,847	10,863	61,441
	20대	225	9,894	11,802	7,118	29,039
	30대	220	30,828	4,648	7,596	43,292
	40대	129	27,187	5,526	8,358	41,200
	50대	69	12,271	7,617	7,388	27,345
	60대	19	5,734	6,481	4,667	16,901
	70대이상	0	1,900	7,401	4,349	13,650
경기	10대이하	483,253	1,703,040	147,982	261,855	2,596,130
	20대	435,805	804,569	118,328	103,435	1,462,137
	30대	464,544	1,121,768	117,840	169,154	1,873,306
	40대	488,026	1,378,139	135,329	197,339	2,198,833
	50대	500,272	1,103,412	183,121	147,190	1,933,995
	60대	290,322	553,413	134,097	84,721	1,062,553
	70대이상	225,233	381,750	136,316	65,345	808,644
강원	10대이하	35,597	150,604	40,283	51,364	277,848
	20대	43,034	64,139	37,679	27,256	172,108
	30대	25,369	90,527	25,702	33,722	175,320
	40대	32,338	122,670	39,496	38,967	233,471
	50대	40,854	111,071	67,015	40,009	258,949
	60대	30,323	62,509	55,171	26,010	174,013
	70대이상	32,391	51,332	67,241	26,175	177,139
충북	10대이하	46,340	155,957	38,511	69,783	310,591
	20대	48,171	76,771	35,337	27,745	188,024
	30대	34,376	96,380	26,757	47,678	205,191
	40대	37,848	123,923	37,063	49,256	248,090
	50대	42,806	106,648	63,685	40,751	253,890
	60대	28,869	54,409	55,649	24,101	163,028
	70대이상	25,502	37,908	71,605	20,802	155,817
충남	10대이하	38,080	183,904	74,650	121,970	418,604
	20대	43,245	77,913	70,306	45,721	237,185
	30대	32,781	120,054	49,251	82,887	284,973
	40대	30,196	132,725	69,403	87,275	319,599
	50대	32,995	97,625	111,867	67,173	309,660
	60대	22,396	46,084	107,474	39,462	215,416
	70대이상	20,082	30,046	140,824	35,219	226,171
전북	10대이하	59,470	221,163	41,912	31,681	354,226
	20대	55,013	101,210	30,443	11,770	198,436
	30대	40,325	129,319	26,014	19,492	215,150
	40대	46,568	170,091	41,530	21,978	280,167
	50대	51,710	146,509	67,170	19,555	284,944
	60대	41,262	86,752	67,864	14,294	210,172
	70대이상	40,004	62,506	103,473	14,443	220,426
전남	10대이하	28,347	144,676	74,048	85,908	332,979
	20대	25,035	58,236	43,481	28,963	155,715
	30대	19,793	87,266	45,413	50,087	202,559
	40대	25,160	109,749	69,395	60,097	264,401
	50대	31,144	96,848	113,062	48,601	289,655
	60대	25,653	50,773	110,444	28,971	215,841
	70대이상	23,487	32,362	175,774	26,990	258,613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북	10대이하	52,153	251,618	69,068	105,292	478,131
	20대	57,643	112,177	63,303	44,775	277,898
	30대	40,989	165,035	50,988	69,733	326,745
	40대	43,372	198,399	74,536	85,247	401,554
	50대	50,400	179,683	130,603	79,525	440,211
	60대	40,283	100,679	132,003	48,896	321,861
	70대이상	35,334	60,344	180,268	41,172	317,118
경남	10대이하	75,841	387,100	54,634	140,939	658,514
	20대	74,045	171,628	39,639	50,070	335,382
	30대	66,889	251,899	40,448	93,208	452,444
	40대	73,243	313,530	59,646	103,605	550,024
	50대	81,935	269,991	99,408	87,542	538,876
	60대	54,786	143,243	95,353	52,844	346,226
	70대이상	38,663	83,199	130,460	40,359	292,681
제주	10대이하	32,710	72,948	22,247	6,410	134,315
	20대	17,281	31,300	10,679	2,827	62,087
	30대	21,849	42,582	14,174	3,690	82,295
	40대	25,391	54,578	20,293	5,166	105,428
	50대	22,381	45,297	21,684	5,098	94,460
	60대	13,809	25,824	15,913	3,326	58,872
	70대이상	12,960	18,294	20,751	3,573	55,578
계		11,574,608	28,279,435	4,857,099	4,062,930	48,774,072

나. 2017년 자료 분석

□ 2017년 사회통합조사의 주요 변수별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행복감의 평균점수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가구원 수별, 거주 유형별로 상대표준오차를 각각 추정하였음.

1) 행복감에 대한 분석

□ 2017년 조사 결과로부터 지역별 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2.5~1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40대 이상의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29세에서도 높게 나타남(〈부표 1-6〉 참조).

□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상대표준오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 표본 규모는 감소시킬 여지가 있음(〈부표 1-6〉 참조).

〈부표 1-6〉 지역별 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응답자 연령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서울	3.2	3.8	3.0	4.6	4.8
부산	3.9	3.5	4.5	4.1	4.7
대구	3.9	4.3	3.5	3.6	5.0
인천	4.8	4.7	4.6	3.9	5.4
광주	4.0	5.3	4.1	5.3	5.2
대전	2.5	5.7	3.2	3.7	6.3
세종	4.7	5.0	5.0	4.5	6.4
울산	8.9	5.2	14.0	12.8	8.3
경기	2.8	2.5	2.7	3.0	3.3
강원	5.5	5.8	4.2	4.4	3.8
충북	3.3	4.3	3.3	4.0	4.2
충남	3.3	4.7	2.6	4.4	3.5
전북	3.8	4.4	3.5	6.7	5.0
전남	5.3	2.9	3.3	3.0	3.8
경북	4.8	3.9	3.4	3.8	3.8
경남	3.5	2.8	3.0	3.0	3.5
제주	3.4	6.3	4.1	3.3	5.1

□ 2017년 조사 결과로부터 지역별 소득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한 결과 울산에서 소득수준별로 상대표준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7〉 참조).

□ 전체적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상대표준오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부표 1-7〉 참조).

〈부표 1-7〉 지역별 소득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서울	6.5	5.3	3.9	3.0	3.8	3.3
부산	6.8	4.1	3.9	5.0	4.6	4.4
대구	5.0	4.2	4.4	4.1	3.3	4.3
인천	9.4	6.6	4.1	4.9	3.8	4.8
광주	6.2	7.1	4.8	5.9	4.8	3.6
대전	7.5	3.7	5.6	3.9	6.4	2.9
세종	9.4	6.5	5.1	3.9	4.0	5.6
울산	11.3	13.4	10.0	4.9	11.4	1.8
경기	6.1	3.9	2.5	2.6	2.6	2.7
강원	3.8	4.0	4.4	5.5	5.9	7.6
충북	5.4	3.8	5.0	4.4	3.9	2.4
충남	5.9	3.9	3.8	3.6	3.5	2.9
전북	5.1	5.2	4.0	5.1	5.0	5.0
전남	3.4	3.9	2.1	4.5	3.9	4.2
경북	4.5	3.8	3.2	3.5	4.4	4.9
경남	4.1	3.1	3.0	3.1	3.3	4.6
제주	12.8	4.6	3.8	5.2	3.3	4.0

□ 지역별 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6인 이상의 가구에서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의 경우 또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8〉 참조).

□ 지역별로는 울산지역의 변동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 지역별 표본에서 울산지역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부표 1-8〉 참조).

□ 가구원 수별로는 4인가구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지역별, 거처 유형별로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울산의 단독주택이 13.8%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울산이 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부표 1-9〉 참조).

□ 거처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 표본추출 과정에서 아파트지역의 표본 규모를 축소할 여지가 있음(〈부표 1-9〉 참조).

〈부표 1-8〉 지역별 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서울	7.8	3.9	3.2	2.4	8.5	7.6
부산	6.8	3.5	3.9	3.6	6.6	10.2
대구	6.4	3.7	3.9	2.7	8.0	3.0
인천	8.8	4.4	4.2	3.0	7.6	11.4
광주	7.0	4.3	4.5	4.2	5.1	0.0
대전	8.6	4.9	3.1	3.6	4.5	9.8
세종	12.4	5.3	4.6	3.0	6.6	16.6
울산	9.0	12.1	7.7	3.7	3.5	23.3
경기	6.2	3.1	2.4	1.9	4.0	6.2
강원	4.6	3.4	4.1	3.8	15.9	13.9
충북	4.6	3.0	5.0	2.8	4.4	0.0
충남	5.7	3.3	3.7	2.3	4.8	13.5
전북	8.5	4.5	4.1	3.9	3.8	9.3
전남	7.3	2.7	3.2	3.5	4.3	7.7
경북	6.7	3.0	3.6	3.0	5.2	21.1
경남	6.1	2.6	2.8	2.5	4.9	7.8
제주	5.6	5.6	4.0	2.9	4.1	14.9

〈부표 1-9〉 지역별 주거 유형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거처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서울	4.4	2.3	3.2	9.3
부산	3.5	2.6	6.8	6.5
대구	4.7	2.1	4.7	15.9
인천	4.7	2.8	4.4	10.3
광주	4.4	2.4	21.8	14.4
대전	4.3	2.3	4.1	22.3
세종	7.1	2.6	5.6	14.2
울산	13.8	5.1	9.6	0.0
경기	3.4	1.6	2.7	7.9
강원	3.1	3.1	6.5	10.9
충북	3.0	2.3	5.7	7.6
충남	3.2	2.0	4.6	11.9
전북	3.4	3.3	7.9	5.4
전남	2.2	2.5	14.3	10.4
경북	3.7	2.1	6.6	7.8
경남	3.1	1.7	6.0	7.1
제주	3.6	3.0	3.8	5.5

2)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분석

□ 2017년 조사 결과로부터 지역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
한 결과 전체적으로 2.4~1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40대 이
상의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29세에서도 높게 나타남
(〈부표 1-10〉 참조).

〈부표 1-10〉 지역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응답자 연령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서울	4.3	3.7	4.0	5.3	4.6
부산	4.5	4.5	3.3	3.8	4.2
대구	3.4	4.2	3.6	4.1	5.0
인천	5.9	4.6	4.7	4.3	5.7
광주	4.6	5.6	3.9	5.8	6.4
대전	2.9	4.2	3.9	5.0	4.1
세종	4.9	4.6	4.5	3.8	4.6
울산	12.7	5.1	7.3	13.5	11.0
경기	3.3	2.4	3.0	3.4	3.4
강원	5.6	5.1	5.0	4.5	3.9
충북	3.8	4.7	3.7	4.3	3.8
충남	4.8	4.8	2.6	4.7	3.4
전북	4.2	4.5	3.9	6.3	4.9
전남	4.6	2.4	3.2	3.4	3.0
경북	4.7	4.5	3.8	4.1	3.4
경남	3.4	3.1	3.4	2.9	3.0
제주	4.8	6.9	5.1	3.5	6.5

□ 2017년 조사 결과로부터 지역별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를 추정한 결과 울산에서 소득수준별로 상대표준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상대표준오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
어, 향후 저소득층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부표 1-11〉 참조).

□ 가구원 수별로는 6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의 상대표준오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특히 세종이 높게 나

타나고 있음 (〈부표 1-12〉 참조).

□ 지역별로는 울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표본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4인가구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지역별, 거처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울산의 단독주택이 13.8%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울산이 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부표 1-13〉 참조).

□ 거처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표본 추출 과정에서 아파트지역의 표본 규모를 축소할 여지가 있음(〈부표 1-13〉 참조).

〈부표 1-11〉 지역별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서울	7.4	5.4	4.2	4.5	4.1	3.4
부산	6.0	3.9	3.8	4.0	5.0	4.2
대구	5.5	5.0	4.2	3.8	3.2	5.2
인천	9.9	7.5	4.4	4.5	4.0	5.9
광주	8.4	6.9	5.5	5.4	4.3	3.6
대전	5.3	3.8	4.9	5.2	5.6	3.5
세종	7.8	4.9	4.8	3.0	3.8	5.2
울산	13.4	6.7	11.3	4.7	13.7	6.3
경기	5.9	4.7	2.6	2.7	2.5	3.3
강원	3.7	4.2	5.1	6.0	6.2	7.3
충북	4.9	3.8	5.1	4.7	5.1	3.2
충남	5.7	3.7	4.8	3.2	3.8	3.3
전북	4.9	5.0	4.2	5.3	5.5	5.9
전남	2.9	3.6	2.7	3.8	3.0	3.7
경북	4.4	4.5	3.0	3.2	5.8	4.6
경남	3.0	3.0	3.3	3.4	3.5	5.0
제주	12.3	5.1	5.4	5.0	4.1	4.1

〈부표 1-12〉 지역별 가구원 수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서울	7.6	5.1	3.8	2.6	8.8	11.7
부산	6.0	2.9	3.8	3.7	6.1	18.4
대구	6.0	4.1	3.9	2.8	7.5	3.4
인천	8.6	5.0	4.9	3.0	10.3	7.3
광주	8.4	5.5	4.5	3.8	5.1	4.6
대전	6.9	3.4	3.5	3.7	5.7	23.9
세종	11.1	4.2	3.7	3.0	4.8	10.4
울산	8.9	11.1	9.2	6.1	3.6	19.7
경기	6.2	3.2	2.7	2.0	4.0	9.6
강원	5.2	3.7	4.6	4.4	9.8	7.8
충북	4.4	3.3	4.8	3.2	4.4	0.0
충남	5.3	2.9	4.8	2.5	5.3	16.3
전북	7.8	4.6	4.1	3.7	4.5	12.7
전남	5.1	2.7	2.7	3.2	5.8	5.9
경북	6.5	3.1	3.8	3.0	4.7	28.8
경남	3.9	2.9	2.9	2.7	5.3	10.4
제주	6.0	6.5	4.2	4.5	5.0	13.1

〈부표 1-13〉 지역별 거처 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거처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서울	5.1	2.7	2.9	11.0
부산	3.3	2.5	6.8	4.6
대구	4.1	2.2	5.5	23.4
인천	6.7	2.8	4.8	12.4
광주	4.9	2.5	21.8	22.5
대전	4.0	2.5	3.6	14.6
세종	6.1	2.5	3.8	19.2
울산	13.8	5.2	10.5	8.8
경기	3.4	1.7	3.5	11.4
강원	3.2	3.3	7.3	11.0
충북	2.8	2.5	7.1	5.6
충남	3.7	2.1	5.3	10.0
전북	3.2	3.4	6.3	6.9
전남	2.2	2.1	11.0	11.5
경북	3.7	2.1	6.9	9.9
경남	2.7	1.8	6.5	7.1
제주	4.5	3.5	4.5	5.5

□ 지역별 거처 유형별(일반, 아파트)에 대한 총소득 및 삶의 만족도의 상대표준오차를 비교하면 총소득 기준 인천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가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에서는 지역별 변동이 작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14〉 참조).

〈부표 1-14〉 지역별 거처 유형별 총소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총소득		삶의 만족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7	3.8	2.8	2.7
부산	4.8	4.3	2.5	2.5
대구	5.8	3.8	3.4	2.2
인천	5.4	61.9	3.9	2.8
광주	8.0	5.1	4.9	2.5
대전	7.0	5.5	3.0	2.5
울산	7.8	4.4	3.6	2.5
세종	12.5	7.5	7.7	5.2
경기	55.2	40.8	2.4	1.7
강원	7.8	6.2	2.9	3.3
충북	6.3	4.1	2.7	2.5
충남	5.8	4.5	2.9	2.1
전북	5.9	5.0	2.9	3.4
전남	6.8	6.4	2.2	2.1
경북	6.0	4.0	3.2	2.1
경남	4.9	3.6	2.4	1.8
제주	71.0	5.2	3.2	3.5

다. 표본 설계

1) 표본 규모의 결정

○ 층화표본추출의 경우 전체 표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임.

2) 표본배분 방법

□ 방안 1: 지역별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

- 지역별로 2017년 조사와 동일한 규모로 표본 집계구를 추출하여 자료의 시계열성 유지가 장점임.
- 기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모집단 자료만을 이용하는 단점이 있음.

〈부표 1-15〉 표본 집계구배분: 방안 1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1	26	0	0	47
부산	10	17	2	4	33
대구	9	13	3	4	29
인천	10	15	3	0	28
광주	7	11	0	0	18
대전	8	11	0	0	19
울산	5	9	3	4	21
세종	1	3	2	2	8
경기	19	28	11	11	69
강원	5	9	6	5	25
충북	6	9	6	6	27
충남	5	9	9	7	30
전북	7	10	7	4	28
전남	5	8	10	6	29
경북	7	11	9	7	34
경남	8	14	9	8	39
제주	4	6	4	2	16
계	137	209	84	70	500

□ 방안 2: 층별 주택수의 변동에 따른 네이만 배분

- 시도별 표본 규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 않은 방법임.
- 방안 1과 마찬가지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모집단 자료만을 활용하는 단점이 있음.

〈부표 1-16〉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2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3	66	0	0	99
부산	9	28	0	2	39
대구	6	15	0	1	22
인천	10	17	1	0	28
광주	4	10	0	0	14
대전	4	9	0	0	13
울산	1	7	1	1	10
세종	0	1	0	1	2
경기	40	56	9	9	114
강원	2	6	3	3	14
충북	2	7	3	3	15
충남	2	6	7	5	20
전북	3	9	4	2	18
전남	2	6	13	4	25
경북	3	11	7	5	26
경남	5	16	7	6	34
제주	1	3	2	1	7
계	127	273	57	43	500

□ 방안 3: 201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기준으로 배분

○ 2017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치의 오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방안 1보다 효율적인 방법임.

○ 방안 1과 방안 2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기성 조사에서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2018년 표본을 산출함.

$$n_h^{(2018)} = n_h^{(2017)} \times \left(\frac{CV_h^{(2017)}}{CV_h^{(2018)}} \right)^2$$

○ 삶의 만족도 기준으로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목표오차를 각각 2.4~5%, 2.1~5%로 관리하도록 지역별 표본을 배분하고, 다음으로 동부와 읍면부의 가구 수에 따라 비례배분함.

〈부표 1-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3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1	26	-	-	47
부산	12	20	-	1	33
대구	14	16	1	1	32
인천	30	15	2	-	47
광주	14	11	-	-	25
대전	8	11	-	-	19
울산	6	11	2	2	21
세종	-	5	7	2	14
경기	21	16	9	2	48
강원	4	11	7	3	25
충북	4	11	8	4	27
충남	3	10	11	6	30
전북	6	13	8	1	28
전남	3	10	12	4	29
경북	5	13	11	5	34
경남	7	6	10	2	25
제주	5	8	3	-	16
계	163	213	91	33	500

3) 표본 집계구 대체

□ 조사 과정에서 응답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함.

4) 가구 내 응답자 선정 방법

□ 본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87)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생일법(last birthday)’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2018년 5월 현재 만 18~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 2명 중 조사시점 기준으로 가장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최근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라. 추정방법

1)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1)$$

②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3)$$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quad (4)$$

2)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bar{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dots} \quad (5)$$

여기서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hat{\bar{Y}}$ 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dots}$,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quad (7)$$

2. 가중치 조정 과정

가. 가중치 조정과정의 개요

- 우선 집계구에 대한 추출가중치의 조정을 위해 2016년 집계구 리스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계구 추출과 최종 조사 과정에서 조사 불능의 사유로 누락된 집계구에 대해 추출가중치의 조정을 실시함.
- 집계구 추출가중치에 대한 최종 조정 후,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에 대한 조사 접촉, 성공, 거부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이를 가구가중치에 적용하고, 2018년 추계 가구 수에 따른 사후 조정 후, 최종 가구 가중치를 바탕으로 가구 내 성인 1인을 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가구 내 성인 수에 따른 개인 가중치에 대한 응답 가중치 조정 후 최종적으로 2018년 추계인구의 분포에 따라 개인 가중치를 조정함.

나. 집계구 추출가중치의 조정

- 표본 설계 과정에서 500개 집계구를 추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70개 집계구만 조사가 완료되어 1차적으로 이에 대한 무응답 조정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표본 집계구 수에 대한 사후조정을 통해 표본 집계구의 추출가중치를 최종 조정함.

- 집계구 추출가중치 : $w_{hi}^{BED} = 1/\hat{p}_{hi}$

- 표본집계구에 대한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RED} = w_{hi}^{BED} \times \frac{N_h}{r_h}$

- 표본집계구에 대한 사후조정 가중치 : $w_{hi}^{RAKED} = w_{hi}^{RED} \times F_h$

이때 F_{hi}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조정 인자임.

〈부표 1-18〉 표본 집계구의 추출가중치 기초통계

(단위: 개)

지역	표본 집계구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470	90,592.5	192.7	175.3	93.4	139.6	224.2	1.83
서울	45	18,072.5	401.6	214.6	293.6	368.3	465.2	1.29
부산	33	6,287.2	190.5	66.1	144.2	175.2	230.9	1.12
대구	30	4,884.5	162.8	101	84.3	166.3	205.7	1.38
인천	41	4,862.3	118.6	107.9	49.6	57.8	185.1	1.83
광주	23	2,543.4	110.6	81.1	49.6	55.9	176.9	1.54
대전	15	2,601.2	173.4	64.3	128.2	151.7	206	1.14
울산	21	2,175	103.6	49.6	67.7	99.8	136.1	1.23
세종	14	442.1	31.6	20.7	12.5	29.9	52	1.43
경기	43	19,071.5	443.5	267.6	240.5	308	665.1	1.36
강원	24	3,171.9	132.2	53.1	93.5	122.9	143.6	1.16
충북	26	3,008	115.7	38.2	86.8	105.1	145.3	1.11
충남	29	3,840.9	132.4	39.4	106.5	125.3	152.5	1.09
전북	27	3,354.5	124.2	35	96.5	123.8	143.8	1.08
전남	29	3,609.4	124.5	37.5	107.2	115.8	139.5	1.09
경북	31	4,860.6	156.8	41.3	120.8	150.5	186.5	1.07
경남	24	6,604.5	275.2	239.9	113.9	147.3	515.3	1.76
제주	15	1,202.8	80.2	25.3	60.8	70.1	92.7	1.10

〈부표 1-19〉 표본 집계구의 가중치 조정

(단위: 개)

구분	집계구 수	표본집계구 수	조정계수
서울	19,153	18,072.51	1.059786
부산	6,802	6,287.21	1.081879
대구	4,928	4,884.54	1.008897
인천	5,807	4,862.31	1.194288
광주	3,036	2,543.4	1.193678
대전	3,070	2,601.21	1.18022
울산	2,315	2,175.05	1.064343
세종	468	442.11	1.05856
경기	24,686	18,617.5	1.325957
강원	3,080	3,171.92	0.971021
충북	3,163	3,008.05	1.051512
충남	4,235	3,840.93	1.102598
전북	3,721	3,354.47	1.109266
전남	4,092	3,609.44	1.133694
경북	5,389	4,860.56	1.10872
경남	6,767	6,604.49	1.024606
제주	1,312	1,202.76	1.090824
동부	82,628	73,814	1.119408
읍면부	19,396	16,324.46	1.188156

〈부표 1-20〉 표본 집계구의 래킹 가중치의 기초통계

지역	표본 집계구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470	102,024	217.1	220.6	106.5	156	244.2	2.03
서울	45	19,153	425.6	221.4	304.4	402.4	486.6	1.27
부산	33	6,802	206.1	70.8	156.5	191.1	251.7	1.12
대구	30	4,928	164.3	59.4	108.3	165.3	204.5	1.13
인천	41	5,807	141.6	128.6	60.4	69.8	220.7	1.82
광주	23	3,036	132	103.4	54.1	60.9	218.4	1.61
대전	15	3,070	204.7	56.2	143.1	204.4	229.3	1.08
울산	21	2,315	110.2	47.6	74.6	100.1	136.6	1.19
세종	14	468	33.4	20.7	14.1	35.9	53.1	1.38
경기	43	24,686	574.1	439.4	257.4	328.4	960	1.59
강원	24	3,080	128.3	30.9	109.4	126.9	148	1.06
충북	26	3,163	121.7	33	96.6	117.8	131.5	1.07
충남	29	4,235	146	37.8	123.9	139.4	169.5	1.07
전북	27	3,721	137.8	39.3	111.8	133.9	155.5	1.08
전남	29	4,092	141.1	33.1	123.5	142.7	161.3	1.06
경북	31	5,389	173.8	45	140.7	172.6	205.1	1.07
경남	24	6,767	282	219.3	134.4	172.6	493.5	1.60
제주	15	1,312	87.5	24.4	70.7	85.3	106.2	1.08

다. 가구 가중치 조정

□ 가구 가중치는 표본집계구에서 집계구당 조사된 가구의 수와 이때 접촉한 가구 및 응답 거절 또는 부재 등에 따른 무응답 가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집계구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구 가중치를 작성함.

$$w_{hi}^{B_H} = w_{hi}^{RAK_{ED}} \times \frac{M_{hi}}{m_{hi}} \times \frac{O_{hi}}{R_{hi}}$$

여기서 M_{hi}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 수, m_{hi}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표본 가구 수, O_{hi}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접촉가구 수, R_{hi}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가구 수임.

□ 가구의 최종가중치는 2018년 시도별 추계가구 수와 가구원 수별 가구 수를 기저로 래킹비 조정을 통해 최종 가구가중치로 산정함.

$$w_{hij}^{RAK_H} = w_{hi}^{B_H} \times AF_{hi}$$

〈부표 1-21〉 가구 기본 가중치 기초통계

(단위: 가구)

지역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3,873	20,339,937	5,251.7	4,813.7	2,792.4	3,797.4	6,436	1.84
서울	365	3,845,672	10,536.1	2,636.2	9,132.6	10,437.3	11,922.3	1.06
부산	253	1,445,422	5,713.1	1,525.5	3,697.2	6,544.1	6,544.1	1.07
대구	246	929,076.7	3,776.7	1,829.4	2,930.6	3,197.1	4,396	1.23
인천	367	1,061,922	2,893.5	2,245.6	1,631.7	1,631.7	3,753.8	1.60
광주	192	587,505.9	3,059.9	2,048.6	1,508.1	1,723.6	5,167.9	1.45
대전	146	577,771.9	3,957.3	1,276.1	2,384.7	4,471.3	4,890.3	1.10
울산	162	460,180.5	2,840.6	788.6	1,995.1	3,141.4	3,141.4	1.08
세종	108	96,786.2	896.2	581.4	469.9	626.5	1,298.2	1.42
경기	371	4,999,140	13,474.8	9,089.5	6,600.9	9,194.3	22,506.5	1.46
강원	196	596,676.1	3,044.3	748.6	2,800.8	3,124	3,200.9	1.06
충북	209	636,723.3	3,046.5	549.6	2,583.3	3,102.7	3,419.5	1.03
충남	230	872,005.8	3,791.3	537.9	3,580	3,825.4	4,091.4	1.02
전북	217	786,501.4	3,624.4	1,006.5	2,893.1	3,383	3,866.3	1.08
전남	226	831,198.3	3,677.9	1,071.1	3,103.2	3,566.4	4,012.2	1.08
경북	267	1,095,616	4,103.4	1,404.1	2,873.1	3,797.4	4,925.3	1.12
경남	194	1,290,499	6,652.1	3,969.1	3,868.9	4,421.6	10,749	1.36
제주	124	227,240.1	1,832.6	767.1	1,182.2	1,773.4	2,153.1	1.18

〈부표 1-22〉 래킹비 조정 인자

(단위: 가구)

특성	구분	관측치 수	2018년 추계가구 수	가중치합계	조정승수
지역	서울	365	3,792,104	3,845,672	0.986
	부산	253	1,359,925	1,445,422	0.941
	대구	246	946,251	929,076.7	1.018
	인천	367	1,085,486	1,061,922	1.022
	광주	192	579,427	587,505.9	0.986
	대전	146	601,290	577,771.9	1.041
	울산	162	433,179	460,180.5	0.941
	세종	108	120,971	96,786.22	1.250
	경기	371	4,623,831	4,999,140	0.925
	강원	196	628,872	596,676.1	1.054
	충북	209	631,875	636,723.3	0.992
	충남	230	838,249	872,005.8	0.961
	전북	217	736,683	786,501.4	0.937
	전남	226	738,019	831,198.3	0.888
	경북	267	1,096,300	1,095,616	1.001
	경남	194	1,298,070	1,290,499	1.006
	제주	124	241,275	227,240.1	1.062
가구원 수	1인	583	5,738,931	2,748,257	2.088
	2인	986	5,411,397	4,823,868	1.122
	3인	853	4,212,197	4,863,676	0.866
	4인	1,115	3,321,938	6,037,916	0.550
	5인	259	822,795	1,493,946	0.551
	6인이상	77	244,549	372,274.1	0.657

〈부표 1-23〉 가구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단위: 가구)

지역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3,873	19751808	5099.9	5310.2	1955.7	3528.4	6272.8	2.08
서울	365	3792104	10389.3	5700.6	6287.6	9441.5	12982.1	1.30
부산	253	1359925	5375.2	3077.6	3528.4	4115.8	7285	1.33
대구	246	946251	3846.5	2989.5	2280.6	3063.8	4278.1	1.60
인천	367	1085487	2957.7	2537.1	977.9	1955.7	3972.2	1.74
광주	192	579427	3017.8	2417.4	1157.5	2347.4	3738.5	1.64
대전	146	601290	4118.4	2685.7	2515.7	3251.9	5194.1	1.43
울산	162	433179	2673.9	1431.1	1822	2300.7	2877.3	1.29
세종	108	120971	1120.1	768.3	575.2	935.3	1471.9	1.47
경기	371	4623831	12463.2	9924.9	5113.2	9387.4	16580.6	1.63
강원	196	628872	3208.5	2088.3	1687.7	2665.1	3501.1	1.42
충북	209	631875	3023.3	1581	1691.6	2639.1	3744.8	1.27
충남	230	838249	3644.6	1839.5	2042.6	3402.4	4217.3	1.25
전북	217	736683	3394.9	2031.8	1878.1	2816.7	4145.8	1.36
전남	226	738019	3265.6	1779.7	1837	2844.7	3678	1.30
경북	267	1096300	4106	2948.4	2188.7	3048.6	5128.5	1.52
경남	194	1298070	6691.1	4338.1	2997.3	5920.1	9155.2	1.42
제주	124	241275	1945.8	1290.4	1076.1	1683.1	2316.2	1.44

라. 개인 가중치 조정

□ 개인 가중치는 가구 최종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중 최근 생일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함.

□ 개인 가중치는 가구 내 1인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응답 조정은 불필요하며, 최종적으로 2018년 추계인구수를 기반으로 사후조정을 통해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

1) 개인 추출 가중치 조정

□ 개인 가중치는 가구 내 18세 이상 성인 수를 기반으로 가구 최종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w_{hijk}^{(P)} = w_{hij}^{RAK_H} \times AD_{hij}$$

여기서 $w_{hij}^{RAK_H}$ 는 가구 최종가중치이며, AD_{hij}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 수입.

〈부표 1-24〉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응답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3,873	41,598,458	10,740.6	10,532.1	4,734.8	7,493.3	12,545.5	1.96
서울	365	7,907,054	21,663.2	7,600.9	15,211.8	21,557.5	25,964.2	1.12
부산	253	2,892,740	11,433.8	3,986.1	8,064.8	10,892.2	14,570.1	1.12
대구	246	2,016,437	8,196.9	4,790.8	5,388.7	7,121.4	9,191.4	1.34
인천	367	2,357,924	6,424.9	5,361.6	3,247.6	3,911.4	8,201.4	1.70
광주	192	1,303,546	6,789.3	5,106.3	2,947.7	4,347.2	9,872.7	1.57
대전	146	1,200,196	8,220.5	3,584.2	5,366.8	7,883.2	11,500.2	1.19
울산	162	969,553.4	5,984.9	2,405	4,465.2	5,466.1	7,524	1.16
세종	108	250,837.8	2,322.6	1,665	1,217.7	1,857.5	2,943.9	1.51
경기	371	10,319,377	27,815	20,132.9	13,448.1	20,183.4	39,453.5	1.52
강원	196	1,198,786	6,116.3	2,207	4,454.9	6,248.1	7,140.7	1.13
충북	209	1,239,142	5,928.9	1,809.4	4,742.7	5,745.7	7,367.3	1.09
충남	230	1,711,662	7,442	2,089.7	6,004.6	7,784.9	8,897	1.08
전북	217	1,536,098	7,078.8	2,723	5,610.3	6,779.7	8,291.6	1.15
전남	226	1,404,133	6,213	2,428.7	4,898.7	6,327.1	7,356	1.15
경북	267	2,022,583	7,575.2	3,478	5,106.9	7,029.5	9,242	1.21
경남	194	2,773,924	14,298.6	8,997.8	8,892.5	10,875.5	16,463.7	1.40
제주	124	494,464.1	3,987.6	2,054.4	2,580.7	3,542.5	5,242.7	1.27

2) 개인 래킹 조정 가중치

□ 개인 래킹비 조정 가중치는 성인 가구원 승수를 고려한 조정 가중치에 대해 표본의 포괄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주변합과 일치시키도록 함.

□ 가구 가중치에 대한 래킹비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대를 조정 변수로 고려함.

$$w_{hijk}^{RAK_P} = w_{hijk}^{(P)} \times A_{hij}$$

〈부표 1-25〉 개인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단위: 명)

특성	구분	관측치 수	2018년 추계인구	가중치합계	조정승수
지역	서울	365	7,812,142	7,907,054	0.988
	부산	253	2,709,730	2,892,740	0.937
	대구	246	1,911,437	2,016,437	0.948
	인천	367	2,295,905	2,357,924	0.974
	광주	192	1,143,392	1,303,545	0.877
	대전	146	1,181,858	1,200,196	0.985
	울산	162	908,976	969,553.4	0.938
	세종	108	230,664	250,837.8	0.920
	경기	371	9,965,183	10,319,377	0.966
	강원	196	1,159,129	1,198,786	0.967
	충북	209	1,226,428	1,239,142	0.990
	충남	230	1,620,221	1,711,662	0.947
	전북	217	1,361,010	1,536,098	0.886
	전남	226	1,314,559	1,404,133	0.936
	경북	267	2,030,682	2,022,583	1.004
	경남	194	2,553,315	2,773,924	0.920
	제주	124	481,025	494,464.1	0.973
성별	남	1928	20,268,766	20,876,373	0.971
	여	1945	19,636,890	20,722,085	0.948
연령	-29세	642	7,566,434	7,838,673	0.965
	-39세	784	7,444,291	8,054,041	0.924
	-49세	747	8,506,559	6,349,055	1.340
	59세	869	8,472,377	10,265,190	0.825
	-69세	553	5,751,447	6,284,734	0.915
	70세이상	278	2,164,548	2,806,766	0.771

〈부표 1-26〉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응답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1 + cv_w^2$
전국	3,873	39,905,656	10,303.6	10,219.1	4,667.2	6,997.1	11,928.7	1.98
서울	365	7,812,172	21,403.2	7,596.8	16,402	20,841.3	25,848.5	1.13
부산	253	2,709,736	10,710.4	3,604.8	7,646.6	10,533.8	13,256.4	1.11
대구	246	1,911,436	7,770.1	4,501.2	5,450.1	6,831.4	8,706.6	1.34
인천	367	2,295,906	6,255.9	5,210	3,013.8	4,110.7	7,879.3	1.69
광주	192	1,143,392	5,955.2	4,420.4	2,570.6	3,813	9,027.8	1.55
대전	146	1,181,858	8,094.9	3,654.1	4,962.3	7,780	10,952.1	1.20
울산	162	908,974.7	5,611	2,036.5	4,052.1	5,260.8	6,827.9	1.13
세종	108	230,663.7	2,135.8	1,479.4	1,040.2	1,641.3	2,565.7	1.48
경기	371	9,965,169	26,860.3	19,384	13,474. 8	19,547.5	37,399.5	1.52
강원	196	1,159,128	5,913.9	2,227.2	4,445.2	5,892.2	6,900.9	1.14
충북	209	1,226,423	5,868.1	1,976.1	4,517.9	5,688.9	7,113.3	1.11
충남	230	1,620,221	7,044.4	2,009.8	5,951.2	7,104.6	8,165.8	1.08
전북	217	1,361,008	6,271.9	2,442.5	4,815.9	5,838.9	7,091	1.15
전남	226	1,314,558	5,816.6	2,654.9	4,482.8	5,457	6,596.1	1.21
경북	267	2,030,682	7,605.6	3,490.7	5,342	6,839.7	9,304.7	1.21
경남	194	2,553,306	13,161.4	8,462	7,350.4	9,351.6	17,869.1	1.41
제주	124	481,023.2	3,879.2	1,945.3	2,575.2	3,409.6	4,741.9	1.25

[부록 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응답자
ID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관기관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문의처 한국리서치 김지혜 팀장 02-3014-0122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응답자 선정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일일기준). ★ 만19세 이상(1999년 5월 31일 이전 출생)에서 만75세 이하(1942년 5월 31일 이후 출생)가 응답합니다.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빠른생일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빠른생일자)	만 _____ 세 → 만18세 이하, 만76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응답자 (빠른생일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_____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I.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18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귀택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수	
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3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자에 포함, 질병 범위 면접원 지침서 참조)			명
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0년 5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총 (1+2+3)		명
	(1) 미취학		명
	(2) 초등		명
	(3) 중고등		명
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18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1-7. 가구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 ※ 2018년 5월 31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 자			명

문2. 귀택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단독가구(1인 가구)
-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④ 조손가구(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⑤ 기타(일반가구)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3. 귀택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18.3.1.~2018.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tr> <td>천</td> <td>백</td> <td>십</td> <td>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 총 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로 구성됩니다.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제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17년 12월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금(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금,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문4. 귀택의 생활비 중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4-1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8.3.1.~2018.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등학교),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사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결정교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4-2	의료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8.3.1.~2018.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청기,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 이용료 등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4-3	월세액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8.3.1.~2018.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 자가주택이나 전세인 경우에는 '0'을 기입 ※ 3개월 이내 이사 혹은 재계약한 경우, 이사 혹은 재계약한 주택의 월평균 월세액을 기입

문5. 지난 3개월(2018.3.1.~2018.5.31.) 동안 귀택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5-1	생계급여	①	②	③
5-2	주거급여	①	②	③
5-3	교육급여	①	②	③
5-4	의료급여	①	②	③

문9. 귀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산과 부채는 명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9-1	거주 주택가격 2018.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9-2	금융재산 2018.5.31. 기준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9-3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18.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입니까?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관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작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9-4	부채 총액 2018.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갯돈(미리 탄 갯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빌린 월세, 체납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문10. 귀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11.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II. 응답자 일반사항 (※이하 문항은 '빠른 생일자'에서 응답)

문12.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해당사항에 체크)
12-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2-2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	_____ 년생
12-3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12-4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제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12-5	혼인상태	① 유배우 → 문12-5-1로 ② 별거 → 문12-6으로 ③ 사별 → 문12-6으로 ④ 이혼 → 문12-6으로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 문12-6으로
12-5-1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문12-5에서 ①유배우 응답자만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2018.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12-6으로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12-6으로
12-5-2	배우자의 평균 일하는 시간	【문12-5-1에서 ①-⑥응답자만 응답】 1주 평균 시간 ※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12-6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2-7	만성질환 유무	① 만성질환 없음 ②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12-8	장애 여부	① 장애인 아님 ②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비등록 장애인(7급 이상,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문13.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2013.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15로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16으로

문13-1. [문13에서 ①~⑥ 응답자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문13-2. [문13에서 ①~⑥ 응답자만] 귀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시간 → 응답 후 문13에서 비임금근로자(④~⑥)는 문16으로 이동

문13-3. [문13에서 ①~③ 응답자만]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일제(풀타임) ② 시간제(파트타임)

* 전일제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근로시간동안 근로(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
 * 시간제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문13에서 '①상용직 근로자'는 문13-4로 이동, '임시·일용근로자(②~③)'는 문14로 이동

문13-4. [문13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문14. [문13에서 ①~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직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함 ② 가입안함 ③ 가입대상이 아님 ④ 노동조합이 없음

→ 문16으로 이동

문15. [문13에서 ⑦ 응답자·실업자만] 귀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구직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표시)

문16. 귀하는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2) 건강보험(피부양자 포함)	①	②		④
(3) 고용보험	①	②		④
(4) 산재보험	①	②		④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III.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 다음 문17~20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보통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24.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십니까?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①	②	③	④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①	②	③	-

문25.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문26.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27.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28. 지난 10년 동안 귀택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32.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V. 계층 갈등

문33.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부유한 사람과 일반국민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가난한 사람과 일반국민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11)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12)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14)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문35.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1)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승진·승급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6) 장애인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8) 소득 분배	①	②	③	④	⑤
(9) 부(재산)의 분배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간 발전수준	①	②	③	④	⑤

문36.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부유한 집안 출신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좋은 학벌	①	②	③	④	⑤
(3) 열심히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하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근무년수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⑤
(3) 나이	①	②	③	④	⑤
(4) 남성	①	②	③	④	⑤
(5) 업무능력 및 성과	①	②	③	④	⑤

문38.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35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실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버는 액수와 상관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사	(1) 의사	(2) 대학교수	(3) 국회의원	(4) 청소부
35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대기업 CEO	(6) 대기업 신입사원	(7) 제조업 숙련기술자	(8) 공장 비숙련 근로자	(9) 가게(매장)점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39.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세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1) 부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성공한 CE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정치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0.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부 개입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모르겠다
(1)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6)에서 ③, ④ 응답자는 문40-1로 이동, 그 외 응답자는 문41로 이동

문40-1. (문40 (6)의 ③, ④ 응답자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
- ②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 ③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 ④ 본인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 ⑤ 기타 ()

문41.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42. 복지를 늘리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귀하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세금을 더 거두어서 ②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
③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④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
⑤ 기타 ()

문43.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은 어느 소득계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답해주시시오)

(※ 옆 그림 참조)

응답	
----	--

10	최상
9	
8	
7	
6	
5	
4	
3	
2	
1	

문44. (본인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나이는 부모님이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노부노미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본인과 형제자매들이 조금씩 거두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45. (본인을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노부모님이 주택연금 등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46. (아동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자녀장려세제, 아동수당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맞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주택보조금,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47. **보기카드** 귀하는 지난 3년간 직장 생활(업무상 관계 포함)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을 골라주십시오.)

- ① 무시 등 왕따 경험 → 문 47-1코
- ② 욕설 비아냥 등 언어 폭력 → 문 47-1코
- ③ 성희롱이나 성추행 → 문 47-1코
- ④ 폭력적 행동(위협적 행동이나 폭행 등) → 문 47-1코
- ⑤ 경험 없음 → 문 48코
- ⑥ 해당없음 (지난 3년간 직장생활안함) → 문 48코

문47-1. **보기카드** (위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경험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회사 동료
- ② 회사 상사
- ③ 거래처 사람(원청업체, 거래업체, 관리감독기관 등)
- ④ 손님(고객)
- ⑤ 기타()

문47-2. **보기카드** 귀하는 위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① 그 자리에서는 참고 넘어갔다
- ②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

문47-3. **보기카드** 상황 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예	아니오
(1) 추후 사과 등을 요구했다	①	②
(2)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알리고 상담을 받았다	①	②
(3) 외부 기관(상담소, 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①	②
(4)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 전출 등을 했다	①	②
(5) 기타 (위 1~4 외에 대응을 했으면 적을 것 : _____)	①	②

문47-4. **보기카드** 귀하는 해당 상황 때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소 등을 내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V. 세대 갈등

문48. 귀하는 A와 B의 입장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A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하며, 아무런 방해 없이 발전 할 수 있다.
B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평등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아무도 소외받지 않으며,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① A에 동의한다 ② 둘 다 동의하지 않거나/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B에 동의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49. 우리 사회에 대한 다음의 3가지 태도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전체적인 사회 혁명적인 운동에 의해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② 우리사회는 개혁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③ 현재의 우리사회는 급진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50. 우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보통	부정적
(1) 돈이나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 감소	①	②	③
(2) 삶에서 일의 중요성 감소	①	②	③
(3)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4) 개인의 성장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5)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	①	②	③
(6) 단순하고 자연주의적인 생활방식의 확산	①	②	③
(7)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	①	②	③
(8) 남한과 북한의 통일	①	②	③

문51. 다음과 같은 세대 간 인식에 대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젊은 층과 노인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언론매체는 세대 간 갈등을 과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52. 다음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까운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임금체계는 보다 평등해져야 한다					개인의 노력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정부주도의 경제산업이 확장되어야 한다					민간주도의 경제산업이 확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국가는 국민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다					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실업자도 원하지 않는 직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실업자는 가능한 직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실업수당을 잃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경쟁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는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경쟁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는 근로의욕을 촉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부는 오직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해 창출된다					누구나 부유해 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소득이 지금보다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3.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아래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1)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살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VI. 젠더 갈등

문54. 귀하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1) 가정 내 역할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에서의 역할	①	②	③	④	⑤
(3) 회사에서의 취업 및 승진	①	②	③	④	⑤
(4)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인 사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55. **보기카드** 귀하는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 ②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적 성추행
- ③ 직장,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대우(인사상의 불이익, 임금차별, 업무배제, 취업/입학시 성차별 등)
- ④ 은행대출, 카드발급, 보험·부동산·자동차 (임대/매매)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 ⑤ 가족내 성차별(아들/딸 차별, 사위/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 ⑥ 가정폭력
- ⑦데이트 폭력
- ⑧ 스토킹
- ⑨ 사이버 성폭력
- ⑩ 기타()
- ⑪ 경험 없음

문56. **보기카드**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당하십니까?

	매일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경험한적 없다
(1) 외모(용모, 복장,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①	②	③	④	⑤
(2) 대중매체(TV 드라마·예능, 라디오 프로그램, 게임 등)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성역할 고정관념, 외모 비하 발언 등)	①	②	③	④	⑤
(3)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①	②	③	④	⑤
(4) 야간 통행·귀가 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밝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①	②	③	④	⑤
(6) 가사/돌봄 노동 강요	①	②	③	④	⑤

문57. 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편 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취업모도 비취업모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 관계를 맺는다	①	②	③	④
(2) 취학 전 아동은 아동의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면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대부분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6)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7) 여성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8) 남편이나 아내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남성도 여성과 같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부부 중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58. 귀하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 중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어머니가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한다
- ③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절반씩 사용한다
- ④ 아버지가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한다
- 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어머니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문59.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일가족양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①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 ② 어머니가 파트타임 직장을 다니고 아버지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 ③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 ④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파트타임 직장을 다닌다
- ⑤ 아버지가 파트타임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 ⑥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어머니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문60. 귀하는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1. 귀하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성폭력 감소	①	②	③	④
(2) 성차별 완화	①	②	③	④
(3) 성별 갈등 완화	①	②	③	④

문62. 귀하께서는 다음 분야의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 여성 국회의원 증가	①	②	③	④
(2) 여성 기업 CEO 증가	①	②	③	④
(3) 여성 법조인 증가	①	②	③	④
(4) 여성 과학자 증가	①	②	③	④
(5) 여성 장관 증가	①	②	③	④
(6) 여성 대학 교수 증가	①	②	③	④
(7) 여성 군 장성 증가	①	②	③	④

문63. 귀하는 다음 중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 ②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 ③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 ④ 가부장적 사회문화
- ⑤ 기타()

문64. 그렇다면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별에 따른 차별요소 배제
- ②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
- ③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문화 개선
- ④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개선
- ⑤ 기타()



VII. 공공 갈등

문65. 다음의 각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설 반대갈등	어떤 시설의 입지 혹은 기타 관련 사항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 고압송전선 경로 갈등, 쓰레기 처리장 위치 갈등, 군 공항 입지관련 갈등, 제주 군 항공 관련 갈등 등)
② 시설 찬성갈등	어떤 시설의 입지 혹은 기타 관련 사항들을 여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예, KTX 역사 위치 관련 갈등, KTX 역사 명칭 관련 갈등, 고속도로 진입로 위치 관련 갈등 등)
③ 도시 정비 관련 갈등	노점상관련 거리 정비, 노후 도시 재생/재개발 등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갈등
④ 보편적 이익갈등	전 국민 혹은 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생기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예, 대학등록금 반값 추진관련 갈등, 최저임금 인상관련 갈등, 국민(공무원)연금 개혁관련 갈등, 노인무임승차 관련 갈등 등)
⑤ 보편적 가치갈등	전 국민 혹은 큰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 (예, 4대강 사업 입안과정에서 환경-개발 사이의 갈등,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

	매우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 시설 반대 갈등	①	②	③	④
(2) 시설 찬성 갈등	①	②	③	④
(3) 도시정비 관련 갈등	①	②	③	④
(4) 보편적 이익 갈등	①	②	③	④
(5) 보편적 가치갈등	①	②	③	④

문66. 귀하께서는 공공갈등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 의견교류, 토론, 협상 등 소통문화의 부족
- ②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
- ③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 ④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구조) 부족
- ⑤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
- ⑥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사업) 추진
- ⑦ 갈등관련 법/제도/절차의 미비
- ⑧ 기타 ()

문67. 우리사회에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시민들의 참여,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68. 정부가 현재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각 갈등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아래 제시된 설명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정책 집행에 있어 대화/협상/조정 등 소통문화 정착	①	②	③	④	⑤
(2)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정책의 적극적 홍보	①	②	③	④	⑤
(4)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 절차 보장	①	②	③	④	⑤
(5) 공공갈등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공공갈등해결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7)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갈등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①	②	③	④	⑤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

(1) 정책 집행에 있어 대화/협상/조정 등 소통문화 정착 ⇒ 공공갈등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 그리고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대화를 먼저 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규정상'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 공공갈등이 생겼을 시 주민과 정부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3) 정부정책의 적극적 홍보 ⇒ 많은 공공갈등은 정책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낮다는 현상이 덧붙여져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갈등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4)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 절차 보장 ⇒ 최근 시민참여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내가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일로부터 나타날 손해를 내가 감당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5) 공공갈등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규정상'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2차적인 분노만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갈등대처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먼저 그런 민원이 생긴 원인을 알리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갈등대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공공갈등해결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 ⇒ 현재 갈등해결 및 예방과 관련한 공공기관 활동의 법적 근거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이 유일합니다. 즉, 사실상 근거법이 없는 상황이라 정책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7)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공갈등의 대부분은 개인의 재산권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침해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합니다.(예: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경우).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8) 갈등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 최근 '공론화 위원회'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을 결정할 때 정부 측과 시민 측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진행에 관한 공론화의 과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문69.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해결에 있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통령 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 ②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 ③ 정치인(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 ④ 시민, 사회단체
- ⑤ 기업 및 경제계
- ⑥ 국민(주민) 개개인
- ⑦ 기타 ()

문70.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담당해야하는 적절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집단을 단호하게 처벌한다
- ②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③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
- ④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
- ⑤ 기타 ()

문71.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다	대체로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1)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①	②	③	④
(2) 중앙정부와 국회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①	②	③	④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①	②	③	④
(5) 지방정부 상호 간	①	②	③	④
(6) 여당과 야당	①	②	③	④
(7) 정부와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8) 정부와 전문가집단	①	②	③	④
(9) 정부와 기업	①	②	③	④

문72.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갈등으로 인해 집단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 ② 집단 간 갈등은 집단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본인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보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부록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부표 3-1〉 가구소득과 현재 생활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현재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현재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감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다소 어려움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χ^2
전체		12.25	67.65	15.51	4.59	
성별	남성	14.39	64.64	15.62	5.34	8.240*
	여성	10.03	70.77	15.39	3.82	
연령	20대 이하	15.28	70.22	11.40	3.10	118.836***
	30대	13.76	72.19	11.35	2.70	
	40대	11.45	66.33	17.21	5.02	
	50대	13.56	68.91	13.60	3.92	
	60대 이상	7.38	61.02	23.54	8.06	
지역	수도권	11.46	70.50	13.79	4.25	7.021
	비수도권	13.04	64.77	17.24	4.94	
	대도시	13.37	67.23	14.93	4.47	24.195***
	중소도시	11.99	69.18	13.93	4.91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8.79	63.02	24.41	3.77	507.113***
	하층	3.24	57.48	25.58	13.69	
	중하층	7.19	69.26	18.77	4.78	
	중간층	17.13	71.16	10.21	1.50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36.70	58.84	4.19	0.28	934.338***
	200만 원 미만	0.63	42.84	36.85	19.69	
	200만 원대	4.28	69.65	19.68	6.38	
	300만 원대	5.40	73.57	18.98	2.04	
	400만 원대	11.53	73.81	13.42	1.24	
학력	500만 원 이상	23.70	70.61	4.84	0.86	223.902***
	중졸 이하	3.96	56.75	28.52	10.78	
	고졸	10.78	67.92	15.76	5.55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6.48	70.66	11.08	1.78	218.621***
	상용직 임금근로자	17.30	69.34	11.31	2.05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9.60	60.35	23.71	6.34	
	고용주·자영자	11.99	71.08	12.98	3.95	
	무급가족 종사자	1.31	65.11	29.33	4.24	
	실업자	3.82	49.92	30.24	16.02	
	비경제활동인구	9.32	68.86	15.73	6.09	
직업	관리자·전문가	25.44	59.86	12.91	1.78	145.93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64	71.84	12.08	2.44	
	숙련 및 기술직	9.36	66.89	20.52	3.23	
	단순노무 종사자	6.73	55.55	23.48	14.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68	69.28	11.44	1.60	85.260***
	비정규직	9.93	61.88	21.48	6.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14	67.56	17.14	5.16	18.451**
	중도적	11.43	68.42	16.10	4.06	
	진보적	15.34	66.53	13.17	4.96	

주: 1) “요즈음 귀댁의 소득에 대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단위: %)

구분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름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함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음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병원을 가지 못한 적이 있음	집세가 밀려 이사를 한 적이 있음	가구원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음
전체		1.18	1.59	0.55	1.09	0.71	0.54	0.20
성별	남성	1.03	1.64	0.40	1.14	0.76	0.73	0.20
	여성	1.33	1.53	0.71	1.03	0.65	0.35	0.19
연령	20대 이하	1.06	0.79	0.29	0.21	0.32	0.38	0.12
	30대	1.20	1.82	0.35	0.38	0.10	0.36	0.17
	40대	1.52	2.57	0.91	0.93	0.89	0.91	0.22
	50대	1.15	1.70	0.87	1.68	1.03	0.64	0.47
	60대 이상	0.92	0.95	0.28	2.13	1.09	0.36	0.00
지역	수도권	1.09	1.83	0.62	0.72	0.89	0.71	0.18
	비수도권	1.26	1.35	0.49	1.46	0.52	0.37	0.22
	대도시	1.13	1.43	0.42	0.81	0.86	0.23	0.22
	중소도시	1.39	2.06	0.81	1.54	0.71	0.98	0.21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49	0.28	0.00	0.30	0.07	0.00	0.07
	하층	4.01	4.76	2.59	4.82	3.18	2.30	0.69
	중하층	0.67	1.63	0.28	0.73	0.44	0.35	0.15
	중간층	0.62	0.54	0.09	0.11	0.08	0.10	0.08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0.56	0.00	0.00	0.00	0.00	0.00	0.00
	200만 원 미만	4.60	3.95	2.25	5.70	3.47	2.33	0.71
	200만 원대	0.70	2.13	0.34	0.66	0.66	0.45	0.19
	300만 원대	0.65	1.47	0.23	0.21	0.07	0.33	0.19
	400만 원대	0.64	0.92	0.67	0.34	0.00	0.00	0.05
학력	500만 원 이상	0.56	0.80	0.12	0.28	0.29	0.23	0.08
	중졸 이하	1.18	1.62	0.54	3.55	1.72	0.96	0.00
	고졸	1.40	2.11	0.90	1.16	1.02	0.82	0.36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00	1.04	0.19	0.23	0.04	0.16	0.12
	상용직 임금근로자	1.02	1.50	0.10	0.16	0.02	0.38	0.19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63	2.05	0.96	2.30	2.66	1.45	0.46
	고용주·자영자	0.98	1.10	0.70	0.77	0.52	0.31	0.13
	무급가족 종사자	0.76	3.54	3.23	0.00	0.20	0.00	0.00
	실업자	3.47	4.64	1.18	3.89	2.38	0.98	0.7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04	1.22	0.47	1.74	0.68	0.52	0.09
	관리자·전문가	2.33	0.47	0.11	0.00	0.00	0.00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95	1.52	0.49	0.62	0.40	0.35	0.15
	숙련 및 기술직	0.53	1.76	0.46	0.30	0.32	0.69	0.24
	단순노무 종사자	1.73	3.02	1.87	3.32	4.06	2.35	0.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	1.44	0.10	0.17	0.02	0.40	0.19
	비정규직	1.39	2.10	0.81	1.94	2.25	1.23	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4	1.44	0.46	1.07	0.75	0.40	0.15
	중도적	1.16	1.70	0.37	1.04	0.75	0.63	0.24
	진보적	1.49	1.54	0.93	1.18	0.60	0.52	0.17

주: 1) “지난 1년 동안 귀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3〉 어제 행복했던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음 ←-----▶ 매우 행복했음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58	0.91	1.44	2.95	3.30	24.59	10.15	19.25	21.47	8.36	7.00	6.61
성별	남성	0.40	1.27	1.61	2.74	3.69	25.73	10.54	18.57	19.82	8.50	7.11	6.56
	여성	0.77	0.53	1.27	3.16	2.90	23.40	9.73	19.96	23.18	8.22	6.88	6.67
연령	20대 이하	0.68	0.41	0.08	1.11	2.93	22.19	9.41	19.96	24.07	9.71	9.44	6.97
	30대	0.20	1.61	1.10	2.22	4.71	19.69	10.50	19.52	21.63	8.75	10.08	6.80
	40대	0.58	0.93	2.38	2.89	3.27	26.03	8.21	21.25	20.04	7.76	6.65	6.52
	50대	0.74	1.25	2.14	3.64	2.12	27.23	9.61	18.44	20.64	8.45	5.75	6.46
	60대 이상	0.70	0.33	1.31	4.72	3.64	27.10	13.17	17.04	21.28	7.25	3.47	6.36
지역	수도권	0.73	1.35	1.61	3.20	3.46	25.86	9.37	20.08	19.46	6.62	8.26	6.52
	비수도권	0.44	0.46	1.28	2.70	3.14	23.29	10.93	18.41	23.51	10.12	5.72	6.71
	대도시	0.86	0.78	1.65	3.07	2.10	25.28	10.91	19.67	22.52	7.51	5.65	6.55
	중소도시	0.38	1.21	1.21	2.98	4.05	23.34	9.82	19.13	20.47	9.74	7.65	6.66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29	0.13	1.57	2.31	5.05	26.98	8.43	18.05	21.39	6.08	9.72	6.65
	하층	2.07	3.81	3.20	4.89	8.59	25.38	10.50	13.85	17.76	5.40	4.54	5.82
	중하층	0.46	0.44	1.21	3.06	3.32	29.87	9.88	18.02	19.77	7.39	6.58	6.51
	중간층	0.12	0.23	1.15	2.18	1.57	21.31	10.69	21.93	24.30	9.12	7.39	6.90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0.68	0.74	0.00	2.43	0.98	11.12	6.38	22.78	21.89	18.48	14.52	7.52
	200만 원 미만	1.26	1.17	1.63	4.79	4.36	29.90	14.35	15.99	15.74	5.26	5.55	6.13
	200만 원대	0.56	1.59	1.94	2.75	3.88	27.02	12.82	17.83	20.87	6.98	3.75	6.33
	300만 원대	0.51	1.28	1.70	2.23	4.84	25.30	9.67	18.82	21.09	7.56	7.00	6.54
	400만 원대	0.55	0.44	2.77	1.64	1.10	26.54	9.13	18.67	21.05	11.88	6.24	6.71
학력	500만 원 이상	0.39	0.53	0.51	3.23	2.76	20.42	8.15	21.54	24.17	9.12	9.17	6.91
	중졸 이하	1.13	0.51	2.10	5.14	4.40	30.60	11.19	16.44	18.45	7.14	2.89	6.14
	고졸	0.67	0.85	1.18	2.94	3.47	25.86	9.53	19.58	21.39	8.60	5.92	6.57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0.34	1.05	1.49	2.28	2.82	21.41	10.29	19.74	22.42	8.73	9.43	6.81
	상용직 임금근로자	0.26	0.79	1.01	1.34	2.81	22.31	10.61	19.43	23.80	9.06	8.57	6.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5	0.52	1.72	3.18	4.71	25.79	14.52	19.14	18.93	5.54	4.88	6.33
	고용주·자영자	0.49	1.25	1.19	4.38	2.78	28.79	9.16	18.71	19.52	7.17	6.56	6.44
	무급가족 종사자	2.46	0.00	5.24	2.95	3.00	31.16	10.90	8.37	19.39	11.75	4.77	6.20
	실업자	0.00	2.22	3.18	9.19	4.16	39.75	9.42	10.41	13.93	2.15	5.59	5.68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76	0.87	1.43	2.90	3.66	20.60	8.30	22.01	22.50	10.29	6.68	6.73
	관리자·전문가	0.17	0.00	3.06	1.49	0.59	22.17	10.25	20.60	23.09	8.67	9.92	6.9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44	1.15	1.08	2.65	2.94	23.60	9.41	19.97	22.49	8.66	7.62	6.71
	숙련 및 기술직	0.67	0.42	1.32	2.75	3.31	29.86	14.22	16.25	18.39	7.12	5.69	6.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1.72	0.83	0.89	4.01	8.15	31.61	15.15	11.94	18.70	3.91	3.10	5.96
	정규직	0.28	0.85	1.06	1.38	2.91	21.95	10.45	19.69	23.56	9.16	8.73	6.87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0.90	0.44	1.50	2.81	4.17	26.08	14.29	18.59	20.25	5.88	5.09	6.41
	보수적	1.13	1.06	2.00	4.54	3.33	24.25	10.92	16.69	21.13	7.91	7.05	6.46
	중도적	0.51	1.20	1.17	2.56	3.87	27.62	9.03	18.49	20.97	8.47	6.10	6.53
	진보적	0.23	0.32	1.39	2.21	2.38	20.07	11.25	22.64	22.55	8.58	8.38	6.87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부표 3-4〉 어제 우울했던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음←-----▶매우 우울했음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2.89	17.48	18.51	15.90	7.39	17.23	3.92	3.55	2.11	0.75	0.26	2.93
성별	남성	13.91	19.04	18.01	14.90	6.80	17.41	4.20	3.22	1.91	0.36	0.24	2.83
	여성	11.83	15.87	19.03	16.94	8.01	17.05	3.63	3.88	2.32	1.15	0.29	3.03
연령	20대 이하	17.70	17.09	14.69	15.12	7.89	17.57	5.44	2.96	0.72	0.33	0.48	2.78
	30대	14.53	17.01	18.87	17.15	5.57	15.94	2.72	5.17	1.91	0.88	0.25	2.86
	40대	12.03	16.86	19.43	16.73	7.37	17.16	2.85	2.70	3.88	0.84	0.17	2.97
	50대	10.56	17.73	20.80	16.50	8.15	17.43	4.11	2.76	1.54	0.24	0.19	2.89
	60대 이상	10.15	18.71	18.41	13.94	7.85	18.00	4.55	4.33	2.34	1.46	0.25	3.11
지역	수도권	10.81	14.97	16.63	17.40	8.55	19.69	4.18	4.30	2.18	1.05	0.23	3.17
	비수도권	14.98	20.03	20.42	14.38	6.23	14.75	3.66	2.78	2.04	0.44	0.30	2.67
	대도시	13.40	16.14	20.30	15.26	7.84	16.58	3.87	4.11	1.77	0.25	0.47	2.90
	중소도시	12.07	18.58	17.48	17.41	7.76	17.03	3.91	2.84	1.93	0.87	0.13	2.90
	농어촌	14.21	18.34	15.62	12.22	4.09	20.74	4.15	4.19	4.21	2.24	0.00	3.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7	17.38	13.35	16.98	8.62	17.58	4.80	6.27	2.18	3.73	0.54	3.47
	중하층	12.05	17.86	19.00	14.09	7.06	18.16	4.86	3.36	3.13	0.21	0.23	2.99
	중간층	14.53	16.50	18.81	18.17	7.61	16.48	3.19	2.89	1.44	0.17	0.22	2.76
	중상층(상층)	18.85	23.34	28.95	6.64	4.10	15.78	0.43	1.78	0.14	0.00	0.00	2.1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12	16.28	14.32	13.99	8.21	20.78	7.10	5.15	3.90	0.73	0.43	3.44
	200만 원대	12.06	20.14	17.82	17.14	5.72	15.66	3.58	3.74	1.64	2.04	0.45	2.92
	300만 원대	12.27	17.08	20.27	15.14	8.49	17.30	3.21	3.73	1.38	1.00	0.12	2.90
	400만 원대	14.74	18.79	18.34	16.66	5.37	16.26	3.70	3.42	2.28	0.08	0.35	2.77
	500만 원 이상	14.12	16.58	19.57	16.25	8.02	16.84	3.33	2.82	1.94	0.37	0.16	2.81
학력	중졸 이하	7.80	22.26	15.35	14.26	7.84	17.65	4.63	5.39	3.96	0.49	0.37	3.21
	고졸	14.65	16.53	17.92	16.26	7.50	17.78	4.05	2.86	1.06	1.00	0.39	2.86
	대졸 이상	13.08	17.13	20.36	16.08	6.93	16.49	3.50	3.41	2.27	0.62	0.12	2.8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22	18.88	20.29	17.92	6.16	12.52	4.28	3.01	2.03	0.47	0.23	2.7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93	15.40	14.22	19.82	8.60	19.45	5.26	3.78	2.77	0.47	0.29	3.22
	고용주·자영자	13.63	15.14	20.05	13.61	7.57	22.36	2.08	3.31	1.66	0.30	0.29	2.93
	무급가족 종사자	10.35	24.16	12.87	11.97	5.90	16.63	9.60	6.56	1.47	0.48	0.00	3.12
	실업자	11.55	11.97	11.87	10.76	4.29	27.02	10.94	7.40	2.27	1.45	0.49	3.74
	비경제활동인구	12.32	18.62	18.46	14.43	8.98	16.90	2.68	3.46	2.32	1.56	0.28	2.95
직업	관리자·전문가	15.96	16.54	19.01	15.39	9.45	16.54	3.32	2.76	0.65	0.00	0.38	2.6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25	17.06	20.02	17.05	7.01	16.22	3.49	4.08	2.02	0.60	0.21	2.90
	숙련 및 기술직	17.29	18.47	17.50	15.67	5.58	16.83	3.96	1.12	3.32	0.13	0.12	2.68
	단순노무 종사자	6.33	18.50	13.15	18.53	6.30	21.98	9.02	4.00	1.20	0.37	0.62	3.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31	18.71	20.41	18.10	6.37	12.37	3.80	3.22	2.12	0.50	0.09	2.69
	비정규직	10.38	16.31	14.90	19.13	7.75	18.71	6.21	3.19	2.45	0.40	0.58	3.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32	14.93	21.27	14.24	6.99	19.78	4.04	3.26	1.91	1.04	0.23	3.01
	중도적	12.75	17.48	16.95	16.28	8.27	17.01	3.96	4.00	2.23	0.89	0.19	2.98
	진보적	13.58	19.68	18.65	16.72	6.35	15.41	3.77	3.07	2.09	0.28	0.41	2.77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가?”에 대한 응답.

〈부표 3-5〉 삶에 만족하는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46	0.33	2.39	3.60	4.30	27.73	12.58	20.95	18.57	5.35	3.74	6.28
성별	남성	0.38	0.48	2.66	3.97	4.36	27.34	13.08	21.16	17.50	5.23	3.83	6.24
	여성	0.54	0.19	2.12	3.21	4.24	28.12	12.05	20.73	19.68	5.47	3.64	6.32
연령	20대 이하	0.58	0.35	1.24	2.69	5.41	20.21	13.25	22.55	20.08	7.46	6.18	6.61
	30대	0.38	0.03	2.64	3.12	2.71	27.55	12.05	19.53	18.95	7.36	5.68	6.47
	40대	0.05	0.48	2.87	3.50	4.62	28.87	11.18	21.56	19.24	5.43	2.20	6.22
	50대	0.57	0.36	2.45	3.90	4.47	30.78	12.84	19.45	18.93	3.32	2.93	6.13
	60대 이상	0.75	0.42	2.70	4.71	4.22	30.58	13.65	21.69	15.68	3.53	2.09	6.01
지역	수도권	0.48	0.26	3.40	3.23	4.77	30.35	12.98	18.66	15.81	5.26	4.81	6.18
	비수도권	0.44	0.41	1.38	3.97	3.84	25.07	12.17	23.26	21.36	5.45	2.65	6.38
	대도시	0.77	0.37	2.11	4.01	4.44	26.85	13.64	21.18	18.48	5.29	2.85	6.23
	중소도시	0.23	0.29	2.67	3.13	4.83	27.70	12.14	19.90	19.33	5.67	4.10	6.32
	농어촌	0.16	0.36	2.40	3.89	1.58	31.36	10.10	24.34	15.75	4.25	5.81	6.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	1.75	5.86	8.57	7.62	33.66	12.63	13.33	10.21	3.96	1.09	5.35
	중하층	0.52	0.09	2.13	4.12	5.05	29.97	12.42	20.89	17.31	4.22	3.27	6.17
	중간층	0.13	0.05	1.50	1.56	2.77	24.97	13.20	24.21	21.39	5.81	4.42	6.60
	중상층(상층)	0.00	0.00	0.82	1.20	1.22	15.70	8.29	18.15	30.64	14.18	9.81	7.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7	0.73	3.49	8.57	4.27	34.16	14.57	18.25	10.92	2.40	1.87	5.64
	200만 원대	0.43	0.94	3.39	3.80	3.55	31.09	13.75	19.72	18.40	3.45	1.48	6.02
	300만 원대	0.44	0.39	2.74	2.53	5.13	31.09	11.07	20.09	17.40	6.44	2.68	6.20
	400만 원대	0.00	0.00	3.26	3.74	3.42	30.00	10.01	22.14	19.36	4.36	3.71	6.28
	500만 원 이상	0.55	0.04	1.06	2.16	4.55	21.32	13.14	22.34	21.85	7.07	5.92	6.66
학력	중졸 이하	0.61	0.20	4.22	6.70	5.35	32.41	12.83	19.71	14.47	2.46	1.04	5.75
	고졸	0.43	0.55	2.01	3.43	4.04	28.48	11.92	21.05	19.05	5.69	3.35	6.29
	대졸 이상	0.46	0.17	2.22	2.69	4.33	25.31	13.17	21.09	19.44	6.13	4.99	6.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2	0.24	1.27	3.05	4.07	24.44	12.77	23.74	19.95	5.52	4.82	6.5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4	0.18	5.00	3.99	4.25	34.30	11.22	17.79	14.70	4.37	3.26	5.92
	고용주·자영자	0.47	0.29	1.64	3.78	4.37	30.60	15.39	20.12	16.80	4.05	2.50	6.14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7.97	3.32	4.50	27.42	7.71	20.96	19.31	6.30	2.52	6.10
	실업자	0.31	2.54	2.28	9.63	5.89	43.50	8.55	12.35	11.23	1.37	2.36	5.4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76	0.27	2.72	3.14	4.33	24.38	11.74	20.61	21.02	7.17	3.86	6.40
	관리자·전문가	0.52	0.18	2.89	1.92	3.13	22.52	12.27	19.11	26.31	3.84	7.31	6.6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17	0.29	1.74	3.16	4.34	27.87	12.54	22.48	18.61	5.16	3.64	6.34
	숙련 및 기술직	0.31	0.11	2.29	4.45	3.80	28.23	17.08	22.81	13.97	4.84	2.12	6.13
	단순노무 종사자	1.72	0.22	5.55	5.65	5.78	38.08	9.49	14.93	10.79	4.76	3.03	5.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3	0.20	1.18	2.63	4.17	24.67	12.48	24.54	19.70	5.39	4.91	6.52
	비정규직	0.80	0.28	4.65	4.81	3.99	32.24	12.12	16.90	16.07	4.83	3.30	5.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0	0.30	2.75	5.07	4.46	30.21	11.72	19.05	17.22	4.98	3.66	6.13
	중도적	0.40	0.43	2.43	3.56	4.48	30.02	11.37	20.04	18.70	5.54	3.03	6.22
	진보적	0.45	0.21	2.03	2.42	3.89	21.98	15.22	23.99	19.51	5.37	4.92	6.50

주: 1) “__님께서도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6〉 사회 신뢰도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음 ← ----- ▶ 매우 믿을 수 있음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88	2.15	6.68	13.44	11.04	33.32	11.67	11.13	6.96	1.10	0.63	4.86
성별	남성	1.97	2.55	6.81	12.48	11.29	31.79	12.51	12.11	6.49	1.10	0.90	4.88
	여성	1.78	1.74	6.55	14.44	10.78	34.90	10.80	10.12	7.45	1.10	0.34	4.84
연령	20대 이하	2.34	2.12	5.99	10.87	11.09	35.48	10.94	12.46	7.24	0.70	0.76	4.93
	30대	1.88	2.13	7.12	13.90	10.66	32.25	10.85	11.08	6.79	1.50	1.84	4.91
	40대	1.85	2.43	4.83	10.78	10.85	39.82	9.63	10.15	8.17	1.17	0.30	4.95
	50대	2.42	1.95	8.81	13.76	12.38	29.93	13.40	10.08	6.23	0.90	0.14	4.70
	60대 이상	0.89	2.11	6.65	18.00	10.13	28.90	13.46	12.07	6.33	1.24	0.22	4.84
지역	수도권	2.49	2.12	7.96	13.83	10.80	34.43	10.89	8.96	6.89	0.88	0.76	4.73
	비수도권	1.26	2.18	5.39	13.05	11.29	32.20	12.46	13.32	7.03	1.32	0.49	4.99
	대도시	1.90	2.52	5.36	14.13	12.40	30.71	10.97	12.23	8.08	1.35	0.36	4.91
	중소도시	2.22	2.16	8.84	12.48	10.31	34.88	12.15	10.41	4.95	0.98	0.64	4.73
	농어촌	0.41	0.59	3.04	14.70	8.63	37.38	12.49	9.65	10.82	0.61	1.69	5.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6	4.31	8.67	15.03	10.74	31.58	9.85	9.68	4.31	1.05	0.62	4.45
	중하층	1.45	2.52	7.31	14.04	12.12	31.47	12.40	11.01	6.73	0.70	0.24	4.79
	중간층	1.51	1.24	5.75	12.92	10.14	35.32	12.23	11.54	7.29	1.50	0.58	5.00
	중상층(상층)	0.92	0.23	3.65	8.44	11.73	35.48	7.43	13.17	14.26	0.83	3.85	5.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6	1.75	6.76	15.51	10.27	32.36	12.49	11.58	6.45	1.64	0.33	4.90
	200만 원대	1.53	3.08	8.71	14.60	9.84	33.17	13.04	10.72	4.36	0.56	0.37	4.66
	300만 원대	1.43	1.91	4.47	14.60	14.08	33.08	10.59	11.42	7.26	0.63	0.50	4.89
	400만 원대	2.38	1.97	5.33	13.99	9.53	37.12	13.36	8.83	5.59	1.59	0.31	4.82
	500만 원 이상	2.44	2.12	7.54	11.40	10.86	32.38	10.56	11.91	8.60	1.16	1.03	4.93
학력	중졸 이하	0.66	1.55	7.73	15.47	9.24	32.58	12.66	12.25	6.57	1.03	0.26	4.89
	고졸	2.31	1.97	6.60	14.27	9.84	35.24	11.49	10.68	6.47	0.78	0.36	4.80
	대졸 이상	1.95	2.44	6.51	11.66	12.71	32.44	11.54	11.10	7.54	1.10	1.00	4.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3	2.35	5.91	12.04	10.88	32.40	12.01	12.42	8.09	1.45	1.12	5.04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44	2.99	6.06	16.51	10.23	34.01	12.39	9.49	5.59	0.80	0.50	4.73
	고용주·자영자	2.56	2.73	7.28	13.05	8.44	35.85	13.92	9.80	5.06	0.81	0.50	4.74
	무급가족 종사자	4.76	2.23	12.56	13.21	12.75	32.68	8.66	7.68	4.26	1.21	0.00	4.32
	실업자	3.68	1.02	7.56	14.60	17.99	33.64	5.67	11.12	4.41	0.00	0.30	4.50
	비경제활동인구	1.68	1.15	6.75	14.08	12.60	32.15	10.21	11.63	8.34	1.16	0.24	4.90
직업	관리자·전문가	2.25	3.26	7.40	11.48	10.95	34.04	10.13	9.27	9.06	0.17	1.98	4.8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08	2.55	6.01	12.46	10.49	34.32	12.76	10.88	6.51	1.30	0.64	4.88
	숙련 및 기술직	1.06	1.68	5.17	14.62	9.29	31.82	16.04	13.45	5.30	1.23	0.34	4.99
	단순노무 종사자	1.34	3.73	13.37	17.72	7.68	33.01	6.21	8.25	6.47	1.14	1.07	4.4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	2.47	5.41	11.84	11.20	32.09	12.05	13.10	8.27	1.39	1.06	5.07
	비정규직	1.89	2.64	7.17	16.27	9.59	34.47	12.23	8.41	5.56	1.03	0.74	4.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3	3.24	8.99	15.73	10.73	31.22	10.29	9.06	6.32	1.19	0.89	4.63
	중도적	2.01	1.80	5.81	13.23	10.75	34.49	12.43	10.44	7.71	1.04	0.30	4.90
	진보적	1.29	1.78	6.09	11.84	11.77	33.25	11.64	13.98	6.31	1.12	0.92	5.00

주: 1) “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7〉 타인신뢰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5.91	47.24	23.59	12.20	1.05	
성별	남성	16.95	44.25	26.21	11.27	1.33	8.961
	여성	14.84	50.33	20.90	13.17	0.77	
연령	20대 이하	10.73	41.66	29.24	15.77	2.60	56.914***
	30대	21.34	48.34	19.82	9.57	0.92	
	40대	20.24	44.84	22.58	11.46	0.89	
	50대	15.25	49.58	22.74	12.26	0.17	
	60대 이상	11.80	51.62	23.75	12.01	0.82	
지역	수도권	18.93	46.26	21.95	11.96	0.90	22.597***
	비수도권	12.85	48.24	25.26	12.45	1.21	
	대도시	16.42	46.40	25.73	10.78	0.67	28.519***
	중소도시	16.18	47.46	22.15	12.92	1.30	
	농어촌	12.74	49.72	21.00	14.99	1.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09	45.60	21.29	8.57	0.44	35.389***
	중하층	15.48	48.70	23.39	11.19	1.24	
	중간층	13.58	46.51	24.62	14.12	1.17	
	중상층(상층)	12.60	47.93	23.86	15.03	0.5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63	48.11	22.80	11.89	1.58	21.812
	200만 원대	16.38	50.52	21.34	11.30	0.45	
	300만 원대	15.85	48.32	25.23	9.41	1.19	
	400만 원대	16.53	43.84	26.71	11.83	1.10	
	500만 원 이상	15.64	46.48	22.57	14.31	1.00	
학력	중졸 이하	10.38	50.86	23.70	14.12	0.93	19.916*
	고졸	16.07	47.04	24.18	11.36	1.34	
	대졸 이상	17.85	45.87	22.86	12.59	0.8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1	45.26	24.43	12.62	0.58	23.900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5.13	44.53	24.60	13.99	1.76	
	고용주·자영자	15.91	50.81	21.35	11.39	0.55	
	무급가족 종사자	17.89	54.03	20.05	8.03	0.00	
	실업자	21.69	36.05	29.56	11.97	0.73	
	비경제활동인구	13.58	49.14	23.36	11.97	1.95	
직업	관리자·전문가	20.21	41.39	22.31	15.38	0.71	26.56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64	48.07	23.43	11.21	0.65	
	숙련 및 기술직	12.44	47.57	25.46	13.61	0.93	
	단순노무 종사자	18.31	48.05	19.57	12.96	1.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97	44.81	24.71	12.90	0.61	4.403
	비정규직	15.76	45.67	23.94	13.15	1.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12	51.67	22.16	10.31	0.74	11.160
	중도적	16.65	45.57	24.36	12.46	0.96	
	진보적	15.40	46.11	23.61	13.42	1.46	

주: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8〉 타인이 나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3.12	41.12	29.54	14.66	1.56	4.679
성별	남성	13.34	39.99	28.97	15.96	1.73	
	여성	12.89	42.29	30.12	13.33	1.38	
연령	20대 이하	10.59	35.12	29.81	21.37	3.11	34.617**
	30대	14.88	41.18	29.12	13.43	1.39	
	40대	15.54	41.56	29.06	12.24	1.61	
	50대	14.18	42.83	30.02	12.14	0.83	
	60대 이상	10.16	44.51	29.67	14.71	0.96	
지역	수도권	15.97	41.26	27.25	13.94	1.57	25.222***
	비수도권	10.23	40.98	31.85	15.40	1.55	
	대도시	12.36	40.60	31.18	14.57	1.29	25.072**
	중소도시	15.78	39.61	27.50	15.14	1.97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5.10	49.51	31.37	13.07	0.95	45.415***
	하층	23.50	41.09	25.17	9.80	0.44	
	중하층	11.74	43.80	28.70	13.80	1.96	
	중간층	10.64	39.07	31.60	17.13	1.57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0.99	39.03	32.23	15.67	2.08	13.112
	200만 원 미만	13.54	40.56	29.93	14.37	1.61	
	200만 원대	12.25	47.13	25.17	13.90	1.55	
	300만 원대	13.64	40.35	28.60	16.27	1.14	
	400만 원대	13.66	39.10	33.54	11.66	2.04	
학력	500만 원 이상	12.86	40.19	29.91	15.47	1.57	14.046
	중졸 이하	11.39	41.10	30.18	16.20	1.14	
	고졸	12.61	42.51	29.01	13.94	1.94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4.11	39.94	29.49	15.07	1.40	21.450
	상용직 임금근로자	12.04	40.64	29.14	16.53	1.6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58	38.86	30.86	14.90	1.80	
	고용주·자영자	15.63	43.97	28.59	11.34	0.47	
	무급가족 종사자	12.86	44.73	30.92	9.53	1.96	
	실업자	14.24	42.43	28.47	14.10	0.7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2.13	39.87	30.25	15.43	2.31	17.221
	관리자·전문가	19.27	38.32	26.74	14.09	1.5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18	42.26	29.71	13.54	1.31	
	숙련 및 기술직	11.05	41.49	30.61	15.60	1.25	
	단순노무 종사자	11.64	40.62	27.53	18.90	1.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30	40.44	28.88	16.85	1.54	4.046
	비정규직	12.75	39.61	31.20	14.43	2.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59	44.87	25.31	14.52	0.71	25.291**
	중도적	12.22	40.58	31.94	13.89	1.36	
	진보적	13.28	38.79	29.33	16.00	2.59	

주: 1)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9〉 타인의 이기심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5.61	52.92	23.95	6.95	0.57	
성별	남성	15.63	51.96	25.04	6.70	0.67	3.221
	여성	15.59	53.92	22.82	7.20	0.47	
연령	20대 이하	13.39	51.98	26.79	7.46	0.38	26.585*
	30대	19.45	46.10	25.04	7.72	1.71	
	40대	16.53	53.67	23.57	5.80	0.42	
	50대	17.75	54.57	21.43	6.05	0.19	
	60대 이상	10.83	57.67	23.31	7.93	0.27	
지역	수도권	17.68	54.11	21.30	6.20	0.71	21.961****
	비수도권	13.52	51.72	26.63	7.71	0.43	
	대도시	14.10	53.75	25.40	6.35	0.40	14.329
	중소도시 농어촌	18.12 11.23	51.92 53.73	22.16 25.56	7.27 8.05	0.53 1.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71	47.61	21.89	5.42	0.36	33.503****
	중하층	15.12	56.12	21.72	6.40	0.63	
	중간층	12.04	52.51	26.71	8.16	0.58	
	중상층(상층)	20.21	49.96	23.56	5.60	0.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54	52.69	25.57	7.50	0.71	16.548
	200만 원대	17.27	52.03	22.58	6.93	1.18	
	300만 원대	16.18	51.13	24.98	7.37	0.34	
	400만 원대	16.16	50.65	26.02	7.02	0.15	
	500만 원 이상	15.23	55.31	22.51	6.40	0.56	
학력	중졸 이하	10.91	51.28	27.78	9.71	0.32	26.029**
	고졸	16.49	54.74	21.56	6.71	0.50	
	대졸 이상	16.33	51.60	24.93	6.40	0.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04	51.62	23.64	7.57	1.13	21.806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3.99	54.94	22.86	7.64	0.57	
	고용주·자영자	16.86	53.63	23.55	5.85	0.11	
	무급가족 종사자	13.99	51.44	27.50	7.08	0.00	
	실업자	21.52	47.34	24.64	6.51	0.00	
	비경제활동인구	14.04	54.13	24.72	6.75	0.35	
직업	관리자·전문가	22.28	51.34	20.66	5.20	0.53	22.67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21	53.66	24.07	6.22	0.84	
	숙련 및 기술직	14.86	49.29	23.94	11.35	0.56	
	단순노무 종사자	13.24	56.36	24.12	6.2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17	51.24	23.80	7.58	1.21	5.875
	비정규직	14.02	55.28	22.62	7.59	0.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5	56.89	21.42	5.85	0.19	24.983**
	중도적	14.46	51.79	26.88	6.40	0.47	
	진보적	17.39	51.33	21.47	8.75	1.06	

주: 1)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4.30	47.88	23.10	11.99	2.73	6.361
성별	남성	15.53	47.20	23.35	11.45	2.47	
	여성	13.03	48.59	22.84	12.54	3.01	
연령	20대 이하	10.70	44.69	28.71	13.06	2.83	25.860
	30대	16.64	47.40	21.23	11.03	3.71	
	40대	15.52	48.09	23.49	10.61	2.29	
	50대	15.90	49.48	20.34	11.23	3.06	
	60대 이상	12.50	49.46	22.04	14.15	1.84	
지역	수도권	16.94	47.49	21.35	11.39	2.84	18.661***
	비수도권	11.63	48.28	24.88	12.59	2.63	
	대도시	13.02	43.46	26.37	13.72	3.43	57.571***
	중소도시 농어촌	15.85 13.01	50.76 53.78	20.15 22.19	10.77 10.02	2.47 1.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31	46.61	20.23	10.44	1.41	32.340**
	중하층	12.63	48.69	24.86	11.00	2.82	
	중간층	13.34	47.97	23.17	12.88	2.65	
	중상층(상층)	12.22	45.37	18.79	16.56	7.0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97	45.39	22.01	15.40	3.23	37.375**
	200만 원대	15.86	50.10	23.33	8.66	2.05	
	300만 원대	14.67	48.50	25.66	8.63	2.53	
	400만 원대	11.90	51.10	23.13	12.16	1.70	
	500만 원 이상	14.58	46.41	21.97	13.70	3.34	
학력	중졸 이하	11.45	49.05	23.46	13.83	2.20	19.215*
	고졸	15.54	46.52	24.02	11.69	2.23	
	대졸 이상	14.24	48.61	21.93	11.76	3.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86	47.40	23.29	12.11	3.34	38.41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15	43.01	19.23	16.77	2.84	
	고용주·자영자	15.53	50.73	22.78	9.89	1.06	
	무급가족 종사자	14.46	42.84	35.21	6.64	0.85	
	실업자	19.86	40.97	23.71	13.22	2.24	
	비경제활동인구	11.19	50.04	23.52	11.71	3.54	
직업	관리자·전문가	14.34	49.23	20.38	12.26	3.79	14.13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53	48.84	24.08	11.34	2.21	
	숙련 및 기술직	16.44	45.05	24.75	11.75	2.02	
	단순노무 종사자	25.63	39.85	13.58	17.49	3.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92	48.00	23.42	12.15	3.51	4.991
	비정규직	19.63	42.33	19.57	15.94	2.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0	50.83	21.85	11.63	1.49	14.161
	중도적	13.76	46.87	24.84	11.65	2.87	
	진보적	15.23	46.98	21.41	12.82	3.57	

주: 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39.74	45.65	11.91	2.47	0.23	3.126
성별	남성	41.70	43.85	11.91	2.43	0.11	
	여성	37.71	47.50	11.92	2.52	0.35	
연령	20대 이하	33.81	45.64	16.37	3.53	0.65	32.756***
	30대	45.43	41.09	11.84	1.46	0.18	
	40대	45.27	42.74	9.33	2.33	0.33	
	50대	36.35	51.93	9.86	1.87	0.00	
	60대 이상	37.73	46.33	12.71	3.23	0.00	
지역	수도권	45.10	43.22	9.32	2.12	0.25	41.148****
	비수도권	34.31	48.10	14.54	2.84	0.21	
	대도시	38.24	46.38	12.80	2.13	0.44	13.350
	중소도시 농어촌	41.36 39.00	43.47 51.75	12.08 7.62	3.01 1.64	0.07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25	37.49	9.08	2.03	0.15	85.163***
	중하층	43.92	43.71	10.06	2.31	0.00	
	중간층	32.90	48.86	14.91	2.93	0.39	
	중상층(상층)	30.16	58.62	9.20	1.26	0.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27	38.74	13.77	3.21	0.00	16.601
	200만 원대	38.74	50.19	7.55	3.20	0.32	
	300만 원대	38.84	47.09	11.87	2.02	0.17	
	400만 원대	41.32	42.37	13.60	2.13	0.58	
	500만 원 이상	38.34	46.94	12.31	2.24	0.17	
학력	중졸 이하	37.63	46.00	12.85	3.51	0.00	20.141**
	고졸	38.60	46.65	12.67	2.05	0.02	
	대졸 이상	41.59	44.67	10.64	2.60	0.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73	44.87	11.79	2.61	0.00	26.880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41.92	45.29	10.25	2.14	0.40	
	고용주·자영자	38.55	47.79	10.70	2.97	0.00	
	무급가족 종사자	34.24	55.28	8.60	1.88	0.00	
	실업자	46.67	32.76	14.11	4.22	2.24	
	비경제활동인구	37.93	45.94	13.91	1.84	0.37	
직업	관리자·전문가	43.17	47.34	6.82	2.68	0.00	21.15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9.27	45.26	12.44	3.03	0.00	
	숙련 및 기술직	38.70	48.70	11.15	1.37	0.08	
	단순노무 종사자	43.94	46.36	6.90	2.11	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73	44.74	11.93	2.60	0.00	7.259
	비정규직	41.72	45.52	10.18	2.24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84	45.58	12.80	2.54	0.25	8.629
	중도적	39.27	46.37	11.89	2.13	0.34	
	진보적	41.23	44.57	11.20	2.96	0.03	

주: 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4.57	41.00	30.81	12.29	1.33	8.179
성별	남성	14.40	39.57	32.28	12.35	1.39	
	여성	14.74	42.48	29.29	12.23	1.26	
연령	20대 이하	12.52	39.57	32.10	14.05	1.76	24.045
	30대	15.95	38.83	30.55	12.81	1.85	
	40대	16.75	42.68	29.53	10.04	0.99	
	50대	14.97	42.85	28.45	12.85	0.88	
	60대 이상	12.46	40.63	33.73	11.94	1.24	
지역	수도권	16.79	40.99	30.17	11.03	1.03	22.240***
	비수도권	12.33	41.02	31.46	13.56	1.63	
	대도시	11.58	44.67	30.71	11.65	1.39	24.587**
	중소도시	17.22	37.99	30.50	13.26	1.0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5.62	38.73	32.55	10.84	2.26	60.847***
	하층	21.58	40.80	27.55	8.40	1.67	
	중하층	14.14	43.88	29.95	10.73	1.30	
	중간층	12.33	39.13	33.22	14.17	1.15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4.22	36.39	27.22	20.21	1.96	24.922
	200만 원 미만	15.17	44.56	27.51	12.05	0.72	
	200만 원대	16.01	42.17	30.20	10.10	1.52	
	300만 원대	13.59	40.03	34.55	10.71	1.12	
	400만 원대	17.08	37.85	34.67	9.61	0.79	
학력	500만 원 이상	13.30	41.03	28.85	15.02	1.80	12.159
	중졸 이하	13.21	45.00	30.12	10.67	1.00	
	고졸	13.62	40.89	31.00	13.48	1.02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5.96	39.59	30.81	11.90	1.74	18.165
	상용직 임금근로자	14.31	41.67	31.58	11.53	0.9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78	41.23	33.66	9.49	0.83	
	고용주·자영자	14.90	39.43	31.28	13.11	1.28	
	무급가족 종사자	14.08	31.69	36.54	15.94	1.75	
	실업자	19.33	44.09	25.17	8.44	2.97	
	비경제활동인구	13.90	41.87	28.24	14.13	1.87	
직업	관리자·전문가	12.56	44.67	30.82	10.84	1.11	15.1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56	39.32	31.87	12.37	0.88	
	숙련 및 기술직	12.00	41.97	32.78	12.04	1.21	
	단순노무 종사자	15.78	40.11	33.54	8.74	1.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98	41.66	31.66	11.75	0.95	2.990
	비정규직	15.46	41.30	33.15	9.33	0.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40	44.04	28.31	11.42	0.83	17.403*
	중도적	13.76	38.57	33.80	12.09	1.78	
	진보적	15.15	42.27	28.21	13.35	1.02	

주: 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0.42	43.37	32.32	12.26	1.62	6.366
성별	남성	11.84	42.18	31.89	12.40	1.68	
	여성	8.95	44.60	32.76	12.12	1.57	
연령	20대 이하	10.84	39.94	38.59	9.50	1.13	30.343*
	30대	11.40	38.12	36.51	11.82	2.16	
	40대	12.23	45.45	27.35	13.98	0.99	
	50대	10.12	47.45	28.67	11.78	1.98	
	60대 이상	7.47	45.00	31.64	13.98	1.90	
지역	수도권	11.40	43.89	30.26	12.65	1.80	4.800
	비수도권	9.43	42.86	34.40	11.87	1.45	
	대도시	7.34	42.69	34.89	13.15	1.93	43.124***
	중소도시 농어촌	12.51 14.12	42.28 50.69	30.77 28.38	12.81 6.42	1.63 0.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4	50.48	28.69	7.28	1.10	37.517***
	중하층	11.11	41.67	33.06	12.75	1.40	
	중간층	8.78	43.63	32.40	13.13	2.05	
	중상층(상층)	12.71	30.98	37.81	17.19	1.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61	47.77	27.45	12.13	1.04	33.794**
	200만 원대	10.24	42.40	33.83	13.12	0.41	
	300만 원대	10.68	45.83	30.89	11.48	1.13	
	400만 원대	9.04	40.60	36.09	12.92	1.36	
	500만 원 이상	10.47	42.03	32.81	11.98	2.70	
학력	중졸 이하	9.21	47.28	30.63	12.03	0.86	14.044
	고졸	10.34	42.63	32.58	13.10	1.34	
	대졸 이상	10.91	42.63	32.58	11.68	2.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2	41.55	33.07	13.31	1.15	49.41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1.74	45.59	31.86	9.85	0.96	
	고용주·자영자	9.14	43.87	32.70	12.47	1.81	
	무급가족 종사자	11.05	32.82	39.95	14.81	1.38	
	실업자	19.77	48.07	23.41	8.75	0.00	
	비경제활동인구	8.73	44.84	31.69	12.06	2.68	
직업	관리자·전문가	6.54	48.90	31.23	12.84	0.49	23.89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09	39.65	34.83	12.74	1.69	
	숙련 및 기술직	9.96	46.28	30.81	11.71	1.25	
	단순노무 종사자	13.64	47.11	26.99	12.26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41	41.96	33.09	13.31	1.23	10.258*
	비정규직	12.77	44.04	32.01	10.37	0.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0	44.01	33.40	13.30	1.99	24.923**
	중도적	9.66	45.60	31.99	10.93	1.82	
	진보적	14.28	39.31	31.93	13.48	1.01	

주: 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3.55	22.09	31.98	31.93	10.45	8.519
성별	남성	3.56	21.27	30.85	33.63	10.70	
	여성	3.54	22.93	33.15	30.19	10.19	
연령	20대 이하	3.00	16.80	38.06	32.27	9.86	38.571**
	30대	2.11	19.91	33.99	33.46	10.53	
	40대	4.70	21.72	29.27	32.04	12.28	
	50대	4.52	26.27	29.58	30.34	9.28	
	60대 이상	3.15	25.09	29.76	31.77	10.23	
지역	수도권	3.95	19.62	31.10	33.52	11.81	19.241***
	비수도권	3.15	24.58	32.88	30.32	9.07	
	대도시	3.04	21.46	35.09	30.72	9.69	30.909***
	중소도시 농어촌	3.70 4.99	20.52 31.12	30.63 25.06	34.37 26.68	10.78 12.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9	19.37	22.00	38.15	17.89	72.462***
	중하층	3.63	21.56	34.35	30.56	9.90	
	중간층	3.45	24.02	33.69	30.61	8.22	
	중상층(상층)	6.81	18.27	32.08	33.32	9.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7	22.06	26.19	35.21	14.46	39.027**
	200만 원대	3.36	21.65	30.62	32.38	12.00	
	300만 원대	3.32	22.91	30.91	32.47	10.39	
	400만 원대	3.08	22.56	32.59	31.92	9.84	
	500만 원 이상	4.49	21.70	35.05	30.15	8.60	
학력	중졸 이하	3.02	24.86	25.60	33.28	13.24	18.521*
	고졸	3.53	21.43	35.24	29.87	9.92	
	대졸 이상	3.61	21.57	30.46	34.00	10.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2	20.94	32.19	33.03	11.12	39.34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37	22.96	33.51	27.87	11.29	
	고용주·자영자	3.18	24.34	33.55	31.11	7.82	
	무급가족 종사자	9.62	21.49	22.93	41.81	4.16	
	실업자	1.95	21.71	26.93	32.34	17.06	
	비경제활동인구	4.16	21.47	31.41	31.90	11.06	
직업	관리자·전문가	4.68	18.62	23.60	42.66	10.45	52.30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0	22.63	36.09	29.30	8.78	
	숙련 및 기술직	2.98	23.30	26.92	36.26	10.53	
	단순노무 종사자	4.05	23.50	30.85	25.62	15.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6	21.45	32.01	33.74	10.23	9.792*
	비정규직	4.48	21.48	33.71	27.06	13.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4	26.72	31.65	27.64	9.14	40.817***
	중도적	2.89	21.79	33.12	31.77	10.44	
	진보적	3.49	18.61	30.47	35.85	11.59	

주: 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 자원봉사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1.90	3.28	2.81	12.08	79.94	9.419
성별	남성	1.53	3.62	2.88	12.22	79.75	
	여성	2.28	2.92	2.73	11.93	80.14	
연령	20대 이하	0.67	1.43	3.58	21.61	72.71	86.960***
	30대	1.55	3.33	3.69	13.22	78.22	
	40대	1.73	4.30	1.83	11.05	81.09	
	50대	3.15	3.47	2.63	8.47	82.29	
	60대 이상	2.26	3.69	2.48	6.86	84.72	
지역	수도권	2.39	2.46	2.57	12.36	80.23	11.863*
	비수도권	1.41	4.10	3.05	11.80	79.65	
	대도시	1.53	3.43	1.96	10.61	82.47	19.030*
	중소도시 농어촌	1.64 4.49	2.65 5.25	3.42 3.71	12.66 15.57	79.63 70.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4	2.73	0.88	5.89	87.86	82.776***
	중하층	0.73	2.90	1.91	11.59	82.88	
	중간층	2.02	3.48	3.86	13.90	76.73	
	중상층(상층)	7.10	6.05	6.62	19.94	60.2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5	3.56	1.34	4.15	89.90	74.302***
	200만 원대	2.79	4.13	2.47	8.11	82.50	
	300만 원대	1.05	2.31	3.07	11.78	81.80	
	400만 원대	1.63	3.19	1.42	11.29	82.48	
	500만 원 이상	2.42	3.36	3.92	17.16	73.14	
학력	중졸 이하	1.70	2.58	2.34	5.25	88.13	62.924***
	고졸	1.33	2.47	2.81	11.63	81.76	
	대졸 이상	2.58	4.18	3.06	15.03	75.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	4.17	3.80	15.07	75.44	59.21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2.03	2.82	0.62	10.68	83.85	
	고용주·자영자	1.51	3.81	2.06	6.76	85.86	
	무급가족 종사자	4.54	0.51	0.84	8.72	85.40	
	실업자	0.12	2.28	0.31	6.39	90.89	
	비경제활동인구	2.67	2.27	3.71	14.33	77.02	
직업	관리자·전문가	3.78	4.94	6.52	14.02	70.74	47.72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2	3.61	2.15	12.67	79.96	
	숙련 및 기술직	0.33	3.59	2.65	7.05	86.40	
	단순노무 종사자	2.56	2.63	0.15	9.69	84.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0	4.20	3.89	15.47	75.15	19.573***
	비정규직	2.45	2.96	0.92	10.47	83.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0	4.06	3.32	9.37	81.25	15.545*
	중도적	1.86	2.94	2.15	11.57	81.47	
	진보적	1.88	3.13	3.42	15.18	76.38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16〉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구분		일주일 한 번 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0.70	9.53	2.53	13.53	73.70	1.575
성별	남성	0.88	8.62	2.78	13.02	74.70	
	여성	0.52	10.48	2.28	14.06	72.67	
연령	20대 이하	0.35	6.34	3.40	18.36	71.56	58.753***
	30대	0.39	13.32	3.96	14.11	68.23	
	40대	0.86	9.91	1.55	14.01	73.66	
	50대	1.10	9.80	2.68	12.27	74.16	
	60대 이상	0.73	8.35	1.28	9.22	80.42	
지역	수도권	0.63	10.91	3.06	11.93	73.47	8.025
	비수도권	0.78	8.14	2.00	15.15	73.93	
	대도시	0.84	8.71	2.45	14.93	73.06	9.565
	중소도시 농어촌	0.62 0.47	9.67 12.29	2.66 2.36	12.01 14.23	75.04 70.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	4.68	1.25	8.06	84.82	186.088***
	중하층	0.42	7.20	1.21	11.26	79.92	
	중간층	0.33	12.02	4.02	16.32	67.32	
	중상층(상층)	4.32	21.14	3.76	24.14	46.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1	4.24	0.52	6.36	87.86	158.577***
	200만 원대	0.87	10.65	1.97	10.04	76.48	
	300만 원대	0.37	6.14	1.54	12.30	79.64	
	400만 원대	0.11	8.17	3.51	14.71	73.50	
	500만 원 이상	0.92	13.40	3.65	17.72	64.30	
학력	중졸 이하	0.85	4.12	1.03	7.37	86.63	137.814***
	고졸	0.52	6.86	1.76	12.48	78.37	
	대졸 이상	0.85	13.96	3.80	16.69	64.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0	12.26	3.89	15.95	66.79	62.7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9	7.99	1.31	11.15	78.67	
	고용주·자영자	0.68	7.62	1.60	13.88	76.21	
	무급가족 종사자	0.71	4.80	0.48	13.82	80.18	
	실업자	0.63	5.58	1.22	9.44	83.12	
	비경제활동인구	0.10	9.27	2.47	11.66	76.50	
직업	관리자·전문가	1.11	18.34	7.45	16.03	57.07	92.35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2	8.82	2.21	15.15	72.80	
	숙련 및 기술직	0.36	7.22	0.58	13.55	78.28	
	단순노무 종사자	1.16	10.70	3.12	8.42	76.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7	12.75	4.01	16.15	66.12	29.282***
	비정규직	1.22	7.54	1.45	11.45	78.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9.10	2.42	9.95	78.08	39.676***
	중도적	0.65	7.40	2.01	14.13	75.80	
	진보적	0.99	13.28	3.46	15.64	66.63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17〉 투표여부

(단위: %)

구분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체		82.71	89.17	84.03
성별	남성	82.41	88.97	84.63
	여성	83.03	89.37	83.41
연령	20대 이하	53.61	71.68	68.99
	30대	82.41	89.44	78.09
	40대	86.92	92.62	87.01
	50대	92.46	94.35	91.48
	60대 이상	95.86	96.39	92.81
지역	수도권	81.17	87.58	81.40
	비수도권	84.28	90.78	86.70
	대도시	82.29	90.87	82.35
	중소도시	82.51	88.37	85.40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85.28	85.63	85.11
	하층	80.91	83.81	80.11
	중하층	81.04	88.86	83.40
	중간층	84.57	91.36	85.69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85.09	90.08	87.09
	200만 원 미만	84.82	90.44	85.88
	200만 원대	85.39	89.89	84.20
	300만 원대	79.97	86.97	83.25
	400만 원대	82.97	91.37	85.50
학력	500만 원 이상	82.16	88.68	83.09
	중졸 이하	93.42	94.56	93.77
	고졸	75.96	83.82	80.90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85.45	92.44	83.75
	상용직 임금근로자	86.00	92.98	85.3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8.04	84.91	79.30
	고용주·자영자	90.03	92.84	86.39
	무급가족 종사자	93.11	96.70	94.09
	실업자	65.37	74.70	65.99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75.79	84.27	84.13
	관리자·전문가	92.26	96.85	90.6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4.79	91.31	83.14
	숙련 및 기술직	88.39	92.05	86.19
	단순노무 종사자	81.98	86.10	87.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55	93.57	85.70
	비정규직	78.04	84.83	79.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89.65	93.19	87.34
	중도적	80.69	87.21	81.37
	진보적	80.00	88.84	85.42

주: 1)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의 질문에 ‘투표했다’에 대한 응답.

〈부표 3-18〉 이념적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χ^2
전체		2.08	22.74	46.08	26.20	2.91	
성별	남성	2.26	21.39	44.48	28.78	3.08	17.593**
	여성	1.89	24.13	47.72	23.54	2.72	
연령	20대 이하	1.01	8.71	49.20	37.02	4.06	436.929***
	30대	0.86	11.24	48.81	37.05	2.03	
	40대	0.74	15.78	51.55	27.69	4.24	
	50대	2.69	32.96	43.99	18.03	2.34	
	60대 이상	5.04	43.50	36.87	12.79	1.80	
지역	수도권	1.97	21.97	45.89	27.10	3.08	4.360
	비수도권	2.19	23.52	46.27	25.29	2.73	
	대도시	2.53	24.06	44.54	26.63	2.24	43.495***
	중소도시 농어촌	1.36 3.24	20.45 26.94	47.02 48.37	28.00 16.96	3.17 4.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4	28.03	52.43	13.74	2.76	61.739***
	중하층	1.91	23.63	45.01	27.23	2.23	
	중간층	1.76	19.84	45.85	29.40	3.15	
	중상층(상층)	2.90	23.81	35.58	31.43	6.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1	32.46	43.02	16.93	3.18	123.906***
	200만 원대	1.93	28.08	48.22	19.42	2.36	
	300만 원대	1.56	20.20	53.77	22.76	1.71	
	400만 원대	1.17	17.78	44.50	33.15	3.41	
	500만 원 이상	1.89	20.26	43.02	31.38	3.45	
학력	중졸 이하	5.84	38.11	43.11	11.86	1.08	202.377***
	고졸	1.87	23.86	46.69	24.14	3.44	
	대졸 이상	1.05	16.57	46.44	32.96	2.9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5	15.58	47.08	32.55	3.85	110.938***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3.08	22.13	50.38	21.36	3.05	
	고용주·자영자	3.00	27.28	45.86	21.87	1.99	
	무급가족 종사자	2.01	33.41	50.94	11.24	2.40	
	실업자	4.83	23.61	36.48	31.21	3.87	
	비경제활동인구	1.96	27.64	43.77	24.39	2.24	
직업	관리자·전문가	1.87	21.06	39.48	33.07	4.52	51.07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2	17.90	49.86	27.94	2.69	
	숙련 및 기술직	2.34	26.34	43.84	23.68	3.80	
	단순노무 종사자	4.03	31.67	49.12	12.77	2.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2	15.08	47.61	32.53	3.87	25.287***
	비정규직	2.83	22.24	48.66	23.15	3.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7	91.63	0.00	0.00	0.00	7,746.000***
	중도적	0.00	0.00	100.00	0.00	0.00	
	진보적	0.00	0.00	0.00	90.01	9.99	

주: 1)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19〉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전체		8.51	67.51	22.84	1.14	
성별	남성	9.56	66.24	23.00	1.21	6.003
	여성	7.43	68.82	22.68	1.07	
연령	20대 이하	6.47	64.39	26.30	2.83	74.102***
	30대	6.95	66.06	26.44	0.55	
	40대	8.05	66.55	24.71	0.69	
	50대	7.90	69.60	21.52	0.98	
	60대 이상	13.08	70.62	15.56	0.75	
지역	수도권	8.35	64.82	25.22	1.61	13.865**
	비수도권	8.67	70.22	20.44	0.67	
	대도시	7.91	67.09	24.13	0.87	68.063***
	중소도시 농어촌	7.30 16.00	68.08 66.80	23.47 15.05	1.16 2.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8	59.36	27.43	3.14	60.544***
	중하층	7.99	65.68	25.02	1.32	
	중간층	8.38	71.29	19.95	0.37	
	중상층(상층)	8.37	74.94	16.6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80	68.03	16.51	0.66	60.521***
	200만 원대	9.17	65.90	23.64	1.29	
	300만 원대	7.32	65.26	25.83	1.59	
	400만 원대	5.61	74.31	19.58	0.51	
	500만 원 이상	7.66	66.39	24.66	1.29	
학력	중졸 이하	15.27	67.80	16.38	0.56	68.757***
	고졸	7.96	66.51	24.51	1.01	
	대졸 이상	6.84	68.61	23.05	1.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06	66.53	23.19	1.22	14.5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69	65.05	27.02	0.24	
	고용주·자영자	7.85	68.51	21.95	1.68	
	무급가족 종사자	8.47	69.59	21.33	0.61	
	실업자	12.24	69.46	17.51	0.78	
	비경제활동인구	8.16	68.62	22.09	1.12	
직업	관리자·전문가	7.25	67.12	25.10	0.52	23.71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13	67.56	23.67	1.64	
	숙련 및 기술직	11.81	67.05	20.74	0.40	
	단순노무 종사자	12.56	62.34	24.76	0.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7	66.57	23.21	1.25	3.068
	비정규직	8.08	65.19	26.40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3	67.60	21.09	1.97	22.483***
	중도적	7.00	68.25	23.87	0.88	
	진보적	10.20	66.24	22.70	0.85	

주: 1)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20〉 자신이 속하는 사회의 소득계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16.00	36.65	42.32	4.69	0.34	
성별	남성	15.82	36.27	42.01	5.30	0.59	6.332
	여성	16.19	37.03	42.64	4.06	0.08	
연령	20대 이하	9.88	36.29	47.55	5.85	0.44	132.057***
	30대	12.74	32.82	49.12	5.00	0.31	
	40대	14.69	39.82	41.47	4.02	0.00	
	50대	16.72	34.37	43.00	5.28	0.63	
	60대 이상	25.58	39.62	31.10	3.37	0.33	
지역	수도권	15.75	34.43	44.89	4.66	0.27	2.977
	비수도권	16.26	38.89	39.72	4.71	0.41	
	대도시	14.71	35.48	43.13	6.11	0.57	23.044**
	중소도시	16.16	36.11	43.77	3.76	0.20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20.58	43.60	33.00	2.81	0.00	
	하층	100.00	0.00	0.00	0.00	0.00	11,619.000***
	중하층	0.00	100.00	0.00	0.00	0.00	
	중간층	0.00	0.00	100.00	0.00	0.0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93.25	6.7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08	38.31	18.60	1.00	0.00	790.384***
	200만 원대	25.90	46.56	24.84	2.52	0.19	
	300만 원대	16.63	43.95	37.18	2.24	0.00	
	400만 원대	9.66	36.99	51.60	1.60	0.14	
	500만 원 이상	4.38	28.16	57.21	9.46	0.78	
학력	중졸 이하	37.71	38.47	22.26	1.56	0.00	343.872***
	고졸	15.85	43.47	36.73	3.73	0.23	
	대졸 이상	9.17	29.50	53.98	6.78	0.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5	32.70	51.90	5.41	0.25	181.10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27.06	39.78	29.93	3.22	0.00	
	고용주·자영자	16.23	36.19	41.02	5.75	0.80	
	무급가족 종사자	22.04	44.18	27.17	6.61	0.00	
	실업자	31.51	46.82	18.73	2.94	0.00	
	비경제활동인구	16.12	38.57	41.42	3.57	0.32	
직업	관리자·전문가	3.29	18.44	60.67	15.87	1.72	241.91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40	35.38	46.65	4.37	0.20	
	숙련 및 기술직	20.39	44.73	32.46	2.25	0.16	
	단순노무 종사자	34.69	40.28	23.23	1.8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9	32.00	53.34	5.01	0.27	121.541***
	비정규직	25.18	40.27	30.10	4.45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04	37.72	36.83	5.24	0.17	45.761***
	중도적	18.21	35.80	42.11	3.37	0.51	
	진보적	9.07	37.08	47.33	6.30	0.21	

주: 1)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21〉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전체		1.10	25.14	53.09	17.80	2.87	
성별	남성	1.17	23.67	54.49	16.89	3.79	10.892*
	여성	1.03	26.65	51.66	18.75	1.91	
연령	20대 이하	2.16	29.48	56.02	11.64	0.71	171.649***
	30대	0.85	28.05	59.66	10.31	1.14	
	40대	1.56	28.42	49.27	17.05	3.70	
	50대	0.66	24.76	49.72	20.14	4.70	
	60대 이상	0.29	15.11	51.85	29.05	3.70	
지역	수도권	1.13	25.36	53.68	17.62	2.21	1.519
	비수도권	1.07	24.91	52.50	17.99	3.53	
	대도시	1.22	27.75	50.96	17.00	3.08	43.317***
	중소도시 농어촌	1.08 0.70	22.32 26.31	57.39 43.86	16.52 26.40	2.70 2.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0	10.61	45.71	30.07	13.21	603.205***
	중하층	0.29	24.72	50.74	22.54	1.71	
	중간층	1.41	28.55	59.42	10.53	0.08	
	중상층(상층)	6.62	45.65	40.48	5.43	1.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3	12.12	48.54	30.73	8.17	328.802***
	200만 원대	0.56	17.55	53.20	25.06	3.63	
	300만 원대	0.58	21.44	57.22	17.94	2.81	
	400만 원대	1.80	26.16	56.36	14.86	0.82	
	500만 원 이상	1.56	34.66	51.27	11.10	1.41	
학력	중졸 이하	0.30	17.24	47.47	30.12	4.88	160.999***
	고졸	0.56	23.79	51.89	19.88	3.88	
	대졸 이상	1.91	28.98	55.85	12.05	1.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3	30.29	57.06	10.25	1.17	161.20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2	22.26	46.78	26.26	3.68	
	고용주·자영자	1.06	21.44	49.26	23.78	4.46	
	무급가족 종사자	0.00	15.93	54.69	26.12	3.26	
	실업자	2.24	17.01	48.67	24.89	7.19	
	비경제활동인구	0.94	24.81	54.39	17.09	2.77	
직업	관리자·전문가	0.79	29.18	62.71	6.95	0.38	70.67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4	26.99	52.03	17.63	2.31	
	숙련 및 기술직	1.45	23.80	51.66	18.93	4.17	
	단순노무 종사자	1.22	14.60	46.88	31.74	5.5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5	30.40	57.92	9.21	1.21	83.494***
	비정규직	1.02	23.25	46.41	26.14	3.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9	23.10	49.15	21.82	4.24	44.609***
	중도적	0.80	24.03	56.05	16.89	2.22	
	진보적	1.08	28.61	51.77	15.82	2.72	

주: 1)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22〉 일생동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1.59	36.58	41.21	16.34	4.28	16.407**
성별	남성	2.05	35.52	41.58	16.80	4.04	
	여성	1.11	37.67	40.82	15.87	4.52	
연령	20대 이하	1.98	35.09	44.27	13.21	5.44	29.444*
	30대	1.63	37.26	40.65	16.95	3.51	
	40대	2.03	39.88	36.44	15.42	6.23	
	50대	1.37	34.45	42.97	18.59	2.63	
	60대 이상	0.93	36.09	42.04	17.36	3.57	
지역	수도권	1.92	32.53	42.85	17.45	5.25	42.681***
	비수도권	1.26	40.68	39.54	15.23	3.30	
	대도시	1.64	38.60	38.99	16.75	4.01	15.674*
	중소도시 농어촌	1.58 1.41	33.81 39.96	43.30 41.44	16.92 12.30	4.39 4.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1	23.25	41.78	27.04	6.42	226.711***
	중하층	0.78	33.90	42.66	18.01	4.65	
	중간층	2.02	41.01	41.81	11.64	3.52	
	중상층(상층)	4.10	61.26	23.69	9.81	1.1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7	32.35	40.79	20.19	5.50	32.485**
	200만 원대	1.59	33.51	41.30	20.46	3.14	
	300만 원대	1.92	34.00	43.71	16.45	3.91	
	400만 원대	1.42	36.78	41.58	15.66	4.56	
	500만 원 이상	1.64	40.74	39.96	13.32	4.33	
학력	중졸 이하	0.64	32.95	43.23	18.37	4.81	11.784
	고졸	1.77	35.10	41.56	16.81	4.77	
	대졸 이상	1.73	38.82	40.70	14.97	3.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	41.57	39.65	14.83	2.79	42.25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9	32.22	40.70	18.19	7.20	
	고용주·자영자	2.64	32.05	43.25	19.72	2.34	
	무급가족 종사자	5.25	29.59	42.87	20.97	1.32	
	실업자	0.76	29.72	38.53	27.01	3.98	
	비경제활동인구	0.97	37.44	42.06	12.61	6.92	
직업	관리자·전문가	3.99	41.97	40.86	10.10	3.07	20.63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9	37.72	39.34	17.90	3.25	
	숙련 및 기술직	0.96	35.09	45.03	16.50	2.42	
	단순노무 종사자	1.14	23.58	45.31	23.35	6.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7	41.92	39.16	15.08	2.67	10.751*
	비정규직	1.58	32.88	41.66	17.11	6.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2	38.81	39.63	15.75	4.89	8.702
	중도적	1.73	35.90	41.08	16.58	4.71	
	진보적	1.93	35.75	42.75	16.49	3.08	

주: 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23〉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56	44.05	35.94	8.87	9.58	
성별	남성	1.90	43.12	36.36	8.11	10.51	6.182
	여성	1.21	45.00	35.51	9.65	8.63	
연령	20대 이하	0.77	40.26	35.62	7.61	15.74	70.894***
	30대	1.53	43.18	36.28	6.83	12.17	
	40대	1.51	47.19	34.02	8.23	9.05	
	50대	2.06	44.47	38.12	9.97	5.39	
	60대 이상	1.88	44.65	35.64	11.48	6.34	
지역	수도권	2.02	39.84	40.18	6.14	11.83	68.309***
	비수도권	1.10	48.31	31.65	11.63	7.31	
	대도시	1.51	45.49	34.19	7.86	10.96	60.709***
	중소도시	1.80	41.19	39.39	8.57	9.05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82	50.12	28.64	14.17	6.26	85.737***
	하층	2.35	32.81	37.06	15.31	12.48	
	중하층	0.85	46.25	34.39	9.98	8.53	
	중간층	1.84	44.36	38.16	5.81	9.83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98	61.08	24.93	5.99	6.01	40.386***
	200만 원 미만	1.02	42.82	32.94	11.30	11.91	
	200만 원대	1.20	36.75	39.35	11.79	10.92	
	300만 원대	1.86	43.54	39.31	9.09	6.20	
	400만 원대	1.48	45.29	33.56	8.95	10.72	
학력	500만 원 이상	1.80	47.31	34.96	6.48	9.45	32.093***
	중졸 이하	0.32	48.26	31.77	11.72	7.93	
	고졸	2.61	39.10	38.93	9.56	9.79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03	46.85	34.79	7.33	10.01	40.862**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	45.05	36.72	7.45	9.15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3.17	43.53	33.94	9.33	10.04	
	고용주·자영자	1.69	42.33	37.93	10.10	7.94	
	무급가족 종사자	0.00	43.36	41.53	10.19	4.91	
	실업자	0.00	38.39	30.53	12.43	18.6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01	45.28	34.36	8.86	10.49	25.430*
	관리자·전문가	2.11	41.29	38.20	6.54	11.8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6	44.78	37.62	7.69	8.26	
	숙련 및 기술직	2.02	44.17	35.30	11.86	6.65	
	단순노무 종사자	2.52	40.54	31.77	12.27	12.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6	45.29	37.27	7.19	8.99	9.545*
	비정규직	3.79	43.21	33.11	9.63	10.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	43.90	37.38	9.81	7.56	17.766*
	중도적	1.70	43.94	36.17	9.07	9.12	
	진보적	1.53	44.34	34.35	7.75	12.04	

주: 1)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24〉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⑩	평균
전체	2.33	10.66	18.49	14.60	33.27	9.39	5.81	1.56	0.26	0.05	4.17
성별											
남성	2.52	11.11	18.96	13.32	32.85	9.47	5.90	1.38	0.41	0.07	4.14
여성	2.13	10.20	18.01	15.92	33.70	9.30	5.73	1.74	0.09	0.03	4.21
연령											
20대 이하	3.48	11.03	17.85	12.56	34.51	10.54	6.74	1.66	0.00	0.07	4.24
30대	2.78	8.73	17.86	15.88	34.79	9.51	5.73	0.99	0.18	0.00	4.19
40대	1.69	9.09	16.48	14.49	35.13	11.02	5.01	1.70	0.67	0.13	4.28
50대	2.78	10.63	20.55	15.37	29.19	8.09	6.29	2.04	0.14	0.03	4.06
60대 이상	1.01	13.84	19.66	14.66	33.02	7.80	5.37	1.34	0.26	0.00	4.11
지역											
수도권	2.89	13.24	19.39	13.64	31.99	7.85	5.01	1.21	0.41	0.00	3.99
비수도권	1.76	8.05	17.58	15.57	34.56	10.95	6.63	1.92	0.10	0.10	4.36
대도시	2.66	9.34	19.02	15.15	32.32	9.95	6.90	1.73	0.24	0.03	4.25
중소도시	2.39	12.72	18.34	13.80	31.73	9.05	5.16	1.60	0.33	0.05	4.06
농어촌	0.72	7.42	17.01	15.72	43.48	8.50	4.17	0.70	0.00	0.12	4.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6	18.17	16.85	12.43	30.01	6.33	3.90	1.34	0.08	0.00	3.72
중하층	2.27	10.94	18.44	14.29	32.65	10.96	5.35	1.32	0.46	0.06	4.19
중간층	2.26	8.07	18.94	16.16	35.24	9.45	5.67	1.79	0.18	0.06	4.29
중상층(상층)	2.59	6.47	20.27	10.75	31.53	7.14	16.52	2.06	0.00	0.00	4.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5	11.67	16.40	17.85	33.75	9.58	5.68	1.17	0.36	0.00	4.25
200만 원대	2.40	15.66	19.86	13.16	30.97	8.22	5.36	1.52	0.00	0.00	4.00
300만 원대	1.78	10.25	17.80	14.92	36.06	7.78	6.08	1.43	0.00	0.12	4.19
400만 원대	3.03	10.70	14.99	17.08	31.32	11.48	4.38	1.16	0.05	0.04	4.07
500만 원 이상	2.83	8.48	20.52	12.84	33.22	9.80	6.50	1.95	0.53	0.05	4.24
학력											
중졸 이하	1.95	13.49	16.33	12.79	36.03	9.72	5.51	2.47	0.36	0.00	4.28
고졸	1.93	10.67	20.57	14.18	32.58	8.74	5.83	1.40	0.08	0.10	4.13
대졸 이상	2.91	9.52	17.48	15.42	33.25	9.85	5.84	1.44	0.40	0.01	4.18

구분	전혀 이루이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루이고 있다 ⑩	평균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9	10.26	18.77	15.29	32.52	10.59	6.34	1.58	0.16	4.25
	임시·일용직 임 금근로자	4.44	11.13	17.01	12.42	35.96	8.50	6.74	2.01	0.00	4.21
	고용주·자영자	5.32	9.76	22.27	12.16	32.69	8.22	4.77	1.41	0.16	4.06
	무급가족 종사자	5.13	10.08	17.27	22.88	30.22	4.13	4.51	0.59	0.00	3.81
	실업자	7.27	12.70	15.77	12.83	33.90	7.71	5.80	1.65	0.00	3.9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2.81	11.49	16.19	16.10	33.74	9.97	5.68	1.53	0.20	4.22
	관리자·전문가	2.95	11.43	20.80	15.14	29.42	6.86	5.39	2.64	1.64	4.11
	사무·서비스·판 매 종사자	4.19	9.81	19.36	14.04	32.83	9.97	5.96	1.32	0.14	4.16
	숙련 및 기술직	4.46	8.04	17.51	13.42	36.54	11.06	6.43	1.49	0.00	4.34
	단순노무 종사자	2.18	16.89	22.72	15.27	32.50	3.36	4.52	2.03	0.00	3.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1	10.23	18.34	15.53	32.84	11.03	6.43	1.40	0.09	4.28
	비정규직	2.02	11.05	18.26	12.30	34.69	7.83	6.47	2.36	0.18	4.17
	보수적	5.35	15.41	20.80	13.54	28.87	7.26	5.24	0.92	0.05	3.86
이념적 성향	중도적	3.30	9.25	16.88	15.67	36.60	9.06	5.14	1.70	0.45	4.27
	진보적	2.53	8.84	19.07	13.82	31.74	11.72	7.37	1.89	0.12	4.30

주: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25〉 현재 우리 사회 평가: 배려/포용도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려/ 포용도	전체	0.70	1.84	5.91	17.53	22.85	26.53	13.03	9.29	1.92	0.39	0.02	4.53	
	성별	남성	0.48	1.94	6.41	16.71	22.75	26.69	13.93	8.64	2.03	0.42	0.00	4.53
		여성	0.92	1.73	5.40	18.37	22.96	26.35	12.10	9.97	1.81	0.36	0.04	4.52
	20대 이하	1.40	2.05	7.85	14.32	21.68	28.73	12.72	9.62	1.34	0.29	0.00	4.48	
	30대	0.99	1.64	7.61	22.51	19.82	24.62	12.48	8.18	1.42	0.73	0.00	4.37	
	40대	0.80	2.74	4.17	16.34	22.49	28.38	14.40	8.18	1.98	0.50	0.00	4.56	
연령	50대	0.32	1.85	6.90	18.17	24.33	23.15	13.13	9.64	2.29	0.10	0.10	4.50	
	60대 이상	0.03	0.84	3.27	16.49	25.63	27.83	12.26	10.83	2.47	0.34	0.00	4.71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26〉 현재 우리 사회 평가: 신뢰도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성별	전체	0.72	2.35	5.84	16.67	24.85	25.70	13.47	8.30	1.89	0.19	0.02	4.48
	남성	0.64	2.01	6.43	16.38	25.39	26.02	12.74	8.38	1.91	0.09	0.00	4.47
	여성	0.81	2.70	5.24	16.97	24.30	25.36	14.21	8.21	1.86	0.29	0.04	4.49
연령	20대 이하	1.48	2.03	7.46	19.91	23.72	22.74	12.24	8.69	1.61	0.11	0.00	4.33
	30대	1.31	2.74	6.65	18.54	22.06	26.77	12.36	8.03	1.42	0.12	0.00	4.37
	40대	0.60	2.39	5.09	14.11	25.83	29.45	11.87	8.19	2.24	0.24	0.00	4.54
	50대	0.31	2.07	5.38	15.60	26.28	25.65	14.21	8.52	1.63	0.23	0.10	4.54
	60대 이상	0.01	2.55	4.85	15.71	25.98	23.53	16.60	8.06	2.49	0.23	0.00	4.5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27〉 현재 우리 사회 평가: 활력도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63	1.56	4.63	12.91	18.76	28.95	19.74	11.04	1.56	0.21	0.02	4.80
성별	남성	0.34	1.99	4.63	13.36	19.28	29.29	19.35	10.03	0.14	0.00	4.75
	여성	0.93	1.11	4.62	12.44	18.22	28.61	20.14	12.08	0.28	0.04	4.84
연령	20대 이하	1.38	1.55	5.78	12.90	16.20	28.97	20.99	10.77	1.41	0.05	4.75
	30대	0.83	1.65	7.10	14.14	18.16	28.28	17.81	9.89	2.13	0.00	4.66
	40대	0.72	2.27	3.01	11.86	18.00	32.04	19.14	10.83	1.57	0.00	4.84
	50대	0.25	1.72	4.62	12.95	21.68	26.31	19.38	11.51	1.18	0.30	4.78
	60대 이상	0.05	0.54	2.95	12.83	19.47	29.07	21.38	12.10	1.55	0.00	4.94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28〉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제/미래에 대한 희망도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38	2.69	7.10	14.53	22.71	24.54	15.08	9.07	2.61	0.25	0.03	4.51
성별	남성	1.56	2.54	7.71	13.89	22.65	26.33	13.52	8.97	0.22	0.00	4.49
	여성	1.21	2.85	6.48	15.18	22.77	22.69	16.70	9.18	0.27	0.06	4.54
연령	20대 이하	2.40	3.59	8.15	17.63	19.95	22.63	12.78	10.49	0.00	0.00	4.35
	30대	2.40	4.12	7.60	15.67	22.18	25.00	13.16	6.90	0.00	0.00	4.31
	40대	1.57	2.94	5.60	11.72	20.44	27.51	17.84	9.25	0.74	0.00	4.66
	50대	0.55	1.68	8.67	15.44	24.52	23.26	14.10	8.83	0.39	0.14	4.50
	60대 이상	0.17	1.32	5.58	12.52	26.33	24.10	17.17	9.84	0.05	0.00	4.72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29〉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청/이해도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01	2.10	14.69	23.28	28.37	14.71	8.86	1.70	0.21	0.02	4.57
성별	남성	0.96	1.77	14.29	24.37	29.50	13.35	8.23	2.54	0.17	0.00	4.59
	여성	1.06	2.44	15.10	22.15	27.20	16.10	9.50	0.83	0.25	0.04	4.55
연령	20대 이하	1.33	3.07	15.66	21.90	28.83	13.73	8.79	1.71	0.11	0.00	4.50
	30대	1.57	1.92	15.76	23.61	24.89	12.62	10.75	2.13	0.10	0.00	4.50
	40대	1.61	2.23	11.98	22.08	29.93	17.13	8.86	1.92	0.08	0.00	4.65
	50대	0.56	1.87	15.90	23.86	28.26	14.01	7.47	1.25	0.66	0.10	4.52
60대 이상		0.00	1.44	14.37	24.94	29.64	15.74	8.62	1.53	0.06	0.00	4.67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30〉 집단 간 갈등 정도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우리나라 갈등 정도	전체		7.18	72.82	17.33	0.85	1.82	
	성별	남성	7.39	72.56	17.25	0.84	1.96	1.856
		여성	6.96	73.10	17.41	0.87	1.66	
	연령	20대 이하	6.68	69.26	20.70	0.75	2.61	31.531*
		30대	4.35	77.03	15.85	0.35	2.42	
		40대	10.99	68.34	17.95	0.74	1.98	
		50대	7.47	75.11	15.54	1.16	0.72	
		60대 이상	5.91	74.64	16.74	1.21	1.49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간의 갈등	전체		15.17	59.95	20.41	1.83	2.63	
	성별	남성	15.18	60.90	19.38	2.24	2.30	6.368
		여성	15.16	58.97	21.48	1.42	2.98	
	연령	20대 이하	14.17	54.67	23.44	2.45	5.28	39.284***
		30대	18.17	60.16	17.37	1.52	2.78	
		40대	15.97	60.44	20.60	1.68	1.31	
		50대	16.09	60.86	19.80	1.67	1.58	
		60대 이상	11.45	63.30	20.83	1.89	2.52	
부유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갈등	전체		10.65	53.67	30.52	2.46	2.71	
	성별	남성	11.84	52.87	30.11	2.22	2.96	5.699
		여성	9.43	54.48	30.94	2.70	2.44	
	연령	20대 이하	9.76	50.26	31.71	3.02	5.25	40.498***
		30대	13.04	53.81	28.70	1.47	2.97	
		40대	10.37	55.15	29.53	3.14	1.81	
		50대	10.25	54.12	31.42	2.53	1.67	
		60대 이상	10.00	54.71	31.17	2.03	2.10	
가난한 사람과 일반 국민 간 갈등	전체		8.80	39.07	44.26	5.33	2.54	
	성별	남성	9.83	38.83	43.60	5.22	2.53	1.774
		여성	7.74	39.32	44.95	5.45	2.54	
	연령	20대 이하	8.59	34.54	46.73	5.60	4.53	50.560***
		30대	9.15	40.73	42.99	4.51	2.61	
		40대	9.84	37.35	43.06	7.53	2.22	
		50대	9.06	41.60	42.77	4.80	1.77	
		60대 이상	7.26	40.99	45.98	4.05	1.7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전체		26.99	54.62	15.61	1.38	1.40	
	성별	남성	27.78	54.82	14.73	1.09	1.58	1.122
		여성	26.17	54.41	16.51	1.69	1.22	
	연령	20대 이하	28.71	50.96	16.63	1.03	2.68	23.911
		30대	29.76	57.22	11.05	0.98	1.00	
		40대	27.01	54.50	16.65	1.68	0.16	
		50대	24.61	56.35	16.96	1.47	0.62	
		60대 이상	25.27	53.94	16.36	1.68	2.74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전체		10.90	38.67	41.04	6.42	2.97	2.683
	성별	남성	11.75	37.52	41.38	6.14	3.22	
		여성	10.02	39.86	40.68	6.72	2.72	68.341***
	연령	20대 이하	10.16	36.49	42.94	3.20	7.21	
		30대	15.71	38.86	40.33	3.39	1.70	
		40대	8.99	39.11	43.94	6.79	1.16	
		50대	12.22	40.35	37.70	8.47	1.27	
		60대 이상	7.70	38.32	40.33	9.78	3.8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전체		26.18	52.81	16.42	2.36	2.24	2.231
	성별	남성	27.10	51.94	16.06	2.41	2.50	
		여성	25.24	53.70	16.79	2.30	1.97	49.527***
	연령	20대 이하	24.75	50.99	17.32	3.58	3.36	
		30대	33.49	47.22	17.58	0.53	1.18	
		40대	28.15	53.65	14.53	1.94	1.73	
		50대	24.42	56.10	15.75	2.74	0.99	
		60대 이상	20.45	55.37	17.20	2.94	4.0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전체		11.85	40.43	39.07	6.61	2.04	15.756**
	성별	남성	12.52	37.63	41.26	6.37	2.22	
		여성	11.15	43.33	36.81	6.86	1.85	99.114***
	연령	20대 이하	21.72	36.39	35.30	5.34	1.25	
		30대	12.29	40.64	37.60	6.91	2.56	
		40대	9.12	42.91	39.62	5.70	2.64	
		50대	9.47	43.03	39.33	6.34	1.83	
		60대 이상	7.47	38.65	43.18	8.82	1.87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전체		11.32	40.42	38.40	7.97	1.89	4.406
	성별	남성	11.78	37.95	40.43	7.84	2.00	
		여성	10.84	42.97	36.31	8.11	1.78	37.396**
	연령	20대 이하	8.06	42.09	40.61	7.56	1.69	
		30대	14.18	36.21	39.37	7.45	2.79	
		40대	13.37	39.31	38.36	7.66	1.29	
		50대	11.72	41.63	37.62	8.57	0.47	
		60대 이상	9.10	42.66	36.27	8.57	3.4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전체		46.35	40.66	9.90	1.19	1.89	3.815
	성별	남성	46.71	40.54	9.64	1.35	1.77	
		여성	45.97	40.79	10.18	1.03	2.02	25.327
	연령	20대 이하	42.38	42.17	11.11	1.69	2.65	
		30대	53.29	31.90	11.63	0.83	2.36	
		40대	44.70	44.43	7.88	1.23	1.77	
		50대	48.66	40.82	8.80	1.22	0.49	
		60대 이상	42.90	43.25	10.49	0.99	2.37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전체		16.00	45.41	29.78	5.48	3.32	
	성별	남성	16.91	44.30	29.62	5.49	3.69	0.636
		여성	15.07	46.57	29.95	5.48	2.94	
	연령	20대 이하	13.88	43.53	28.09	7.58	6.92	50.482***
		30대	19.19	43.04	26.81	6.51	4.44	
		40대	17.38	45.03	31.09	5.15	1.35	
		50대	17.56	46.53	30.58	3.91	1.42	
		60대 이상	11.90	48.65	31.93	4.55	2.97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전체		9.43	40.96	37.97	6.41	5.23	
	성별	남성	9.97	40.67	37.10	7.08	5.19	4.819
		여성	8.88	41.27	38.86	5.71	5.28	
	연령	20대 이하	9.80	36.76	39.67	7.27	6.51	38.776**
		30대	11.38	42.38	33.75	5.10	7.40	
		40대	12.06	39.90	38.11	6.06	3.86	
		50대	7.48	43.97	38.80	6.61	3.14	
		60대 이상	6.53	41.57	39.26	6.96	5.6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전체		12.86	51.11	27.16	3.38	5.49	
	성별	남성	13.88	51.75	25.71	3.68	4.97	2.697
		여성	11.80	50.44	28.66	3.07	6.02	
	연령	20대 이하	9.56	46.18	31.32	4.59	8.34	51.875***
		30대	15.28	50.59	23.27	3.50	7.36	
		40대	15.13	50.78	28.13	2.36	3.60	
		50대	13.73	56.81	23.22	3.32	2.92	
		60대 이상	10.36	50.56	30.02	3.28	5.7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전체		16.56	53.09	24.31	1.83	4.21	
	성별	남성	18.17	52.38	23.91	1.60	3.94	10.470*
		여성	14.89	53.82	24.72	2.08	4.49	
	연령	20대 이하	12.74	45.99	31.05	3.78	6.43	76.180***
		30대	20.56	49.96	23.49	1.30	4.68	
		40대	17.90	55.97	22.11	0.80	3.22	
		50대	17.32	54.99	23.92	1.73	2.03	
		60대 이상	14.17	57.69	21.40	1.69	5.04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	전체		7.68	48.47	37.20	2.63	4.02	
	성별	남성	8.76	46.77	38.10	2.45	3.92	8.184
		여성	6.57	50.22	36.27	2.81	4.13	
	연령	20대 이하	8.67	43.21	40.87	2.62	4.63	44.857***
		30대	11.97	47.47	31.66	4.25	4.65	
		40대	7.91	49.33	37.00	2.58	3.18	
		50대	5.47	51.91	38.56	2.33	1.73	
		60대 이상	4.84	49.82	37.66	1.47	6.21	

주: 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교육 기회	전체	3.95	43.41	31.19	19.91	1.54	
	성별	남성	3.82	44.46	30.07	19.68	2.356
		여성	4.08	42.32	32.35	20.15	
	연령	20대 이하	5.56	42.86	27.63	21.27	44.854***
		30대	2.42	39.07	37.08	19.57	
		40대	3.54	44.26	32.20	17.22	
		50대	3.98	43.36	32.10	20.32	
		60대 이상	4.24	47.14	27.01	21.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3	40.05	34.41	20.32	30.337**
		중하층	4.07	44.89	28.82	21.03	
		중간층	3.89	42.62	32.54	19.35	
		중상층(상층)	7.03	49.91	26.92	15.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9	44.21	28.74	22.86	11.328
		중도적	4.23	41.53	33.09	19.84	
		진보적	3.81	45.69	30.28	17.53	
취업 기회	전체	1.00	17.78	32.94	42.95	5.33	
	성별	남성	0.95	19.23	33.32	40.70	2.724
		여성	1.05	16.28	32.54	45.28	
	연령	20대 이하	0.99	16.54	34.00	42.08	32.215**
		30대	0.76	18.10	32.92	43.07	
		40대	1.09	15.11	32.73	44.68	
		50대	1.32	18.38	32.82	42.10	
		60대 이상	0.79	20.90	32.28	42.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9	12.33	26.37	53.02	64.287***
		중하층	1.22	15.51	34.66	43.98	
		중간층	0.60	20.10	33.98	39.51	
		중상층(상층)	0.57	32.19	32.43	32.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3	16.54	32.41	45.58	16.540*
		중도적	0.99	16.73	32.47	44.04	
		진보적	1.33	20.50	34.11	38.99	
승진·승급 기회	전체	0.86	11.50	36.35	44.07	7.22	
	성별	남성	0.75	11.70	36.29	43.67	0.993
		여성	0.96	11.29	36.41	44.49	
	연령	20대 이하	0.62	8.52	35.42	45.13	48.254***
		30대	0.83	9.20	36.05	45.68	
		40대	0.59	11.87	35.67	44.32	
		50대	1.20	11.92	38.13	42.54	
		60대 이상	1.02	15.66	36.33	42.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4	10.66	29.87	46.39	43.115***
		중하층	1.06	10.37	36.34	46.16	
		중간층	0.72	11.54	38.06	42.86	
		중상층(상층)	0.57	22.03	42.61	31.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6	12.41	37.85	43.98	19.979*
		중도적	1.07	11.29	37.43	43.46	
		진보적	0.94	11.06	33.34	45.14	

구분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법의 집행	전체	1.55	10.93	28.22	46.07	13.23	
	성별	남성	1.80	10.85	27.14	46.66	2.354
		여성	1.29	11.00	29.34	45.46	
	연령	20대 이하	1.73	10.00	26.73	45.51	31.509*
		30대	0.97	11.30	26.42	44.08	
		40대	1.65	11.26	29.89	45.18	
		50대	1.67	11.12	27.94	46.84	
		60대 이상	1.70	10.89	29.87	48.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2	10.51	25.45	44.76	53.660***
		중하층	2.57	10.67	24.27	48.21	
		중간층	0.65	10.76	32.77	45.08	
		중상층(상층)	2.46	15.46	27.60	42.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2	11.94	27.23	48.42	9.054
		중도적	2.23	10.81	28.66	45.77	
		진보적	1.28	10.25	28.38	44.53	
여성에 대한 대우	전체	1.95	18.25	44.27	32.13	3.41	
	성별	남성	2.41	20.52	45.71	28.83	47.797***
		여성	1.47	15.91	42.78	35.53	
	연령	20대 이하	2.33	14.99	46.94	30.44	51.746***
		30대	2.03	17.28	44.97	30.71	
		40대	1.45	17.07	43.53	34.02	
		50대	0.80	18.01	43.13	36.47	
		60대 이상	3.25	23.80	43.07	28.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7	16.69	44.53	32.33	9.225
		중하층	2.40	18.94	42.26	32.39	
		중간층	0.96	17.91	45.84	32.18	
		중상층(상층)	3.63	21.06	44.85	29.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4	20.06	42.60	32.64	12.623
		중도적	1.49	18.36	47.31	29.87	
		진보적	2.42	16.53	40.87	35.25	
장애인에 대한 대우	전체	0.94	13.93	37.29	40.05	7.78	
	성별	남성	0.93	14.27	38.33	38.84	6.089
		여성	0.96	13.59	36.21	41.30	
	연령	20대 이하	1.47	11.26	37.50	40.65	51.891***
		30대	0.58	13.09	36.73	39.54	
		40대	0.74	13.86	35.44	40.61	
		50대	0.74	12.69	42.05	37.74	
		60대 이상	1.22	18.69	34.51	41.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5	14.67	31.93	41.37	16.663
		중하층	1.11	14.03	36.96	41.17	
		중간층	0.95	13.23	39.50	38.91	
		중상층(상층)	1.24	16.85	38.19	37.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2	16.51	37.43	40.60	10.549
		중도적	1.17	12.80	37.97	39.87	
		진보적	0.87	13.53	36.10	39.88	

구분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대우	전체		0.86	10.49	39.53	40.49	8.62	
	성별	남성	0.65	11.46	39.79	39.15	8.96	4.414
		여성	1.09	9.49	39.26	41.89	8.28	
	연령	20대 이하	1.20	8.66	43.50	38.20	8.43	44.646***
		30대	1.82	9.94	35.98	42.25	10.01	
		40대	0.48	11.25	33.75	44.08	10.44	
		50대	0.43	9.97	44.47	37.52	7.62	
		60대 이상	0.52	12.49	40.01	40.38	6.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9	10.29	34.66	41.69	12.57	15.571
		중하층	1.02	11.07	40.12	40.31	7.48	
		중간층	0.69	10.30	39.74	40.70	8.58	
		중상층(상층)	1.49	8.44	49.00	36.35	4.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9	11.48	41.04	39.83	6.57	14.7
		중도적	0.88	10.51	39.35	41.99	7.27	
		진보적	0.66	9.62	38.53	38.69	12.51	
소득 분배	전체		0.81	7.87	35.69	46.72	8.90	
	성별	남성	1.09	8.02	35.78	44.38	10.73	6.622
		여성	0.52	7.72	35.60	49.14	7.02	
	연령	20대 이하	0.64	6.09	38.66	45.22	9.39	18.102
		30대	0.51	7.33	34.87	46.06	11.23	
		40대	1.60	7.57	31.27	50.46	9.11	
		50대	0.69	8.22	37.25	44.46	9.37	
		60대 이상	0.53	10.04	36.70	47.20	5.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7	4.43	28.36	54.24	12.30	47.126***
		중하층	1.43	7.99	33.05	48.85	8.69	
		중간층	0.32	8.37	39.79	43.36	8.15	
		중상층(상층)	0.87	13.81	43.70	35.68	5.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7	10.68	37.91	45.30	5.55	14.807
		중도적	1.05	7.01	36.07	46.67	9.21	
		진보적	0.64	6.85	33.19	48.03	11.28	
부의 분배	전체		0.39	7.42	33.79	47.81	10.59	
	성별	남성	0.40	8.02	34.10	44.56	12.92	12.088*
		여성	0.38	6.81	33.47	51.16	8.18	
	연령	20대 이하	0.63	4.75	35.99	46.35	12.28	26.948*
		30대	0.48	7.21	29.18	50.82	12.30	
		40대	0.41	7.41	33.38	47.89	10.92	
		50대	0.22	7.53	38.44	43.49	10.32	
		60대 이상	0.25	10.08	31.47	50.92	7.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5	4.61	28.73	50.76	15.64	39.303***
		중하층	0.56	8.23	33.07	47.64	10.50	
		중간층	0.20	7.09	36.01	47.59	9.11	
		중상층(상층)	1.29	13.31	36.41	41.46	7.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7	10.88	35.34	46.39	7.22	18.698*
		중도적	0.38	7.12	34.59	47.26	10.65	
		진보적	0.61	4.96	31.19	49.89	13.36	

32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구분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지역 간 발전수준	전체	0.36	8.64	40.09	43.22	7.70	5.758
	성별						
	남성	0.31	9.10	38.11	43.21	9.27	28.518*
	여성	0.41	8.16	42.14	43.22	6.08	
	연령						
	20대 이하	0.82	6.83	45.53	39.49	7.33	
	30대	0.17	9.18	37.93	43.77	8.95	
	40대	0.18	9.01	35.56	45.37	9.89	
	50대	0.24	7.43	40.96	45.54	5.82	32.384**
	60대 이상	0.40	10.75	40.87	41.46	6.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5	9.26	40.20	39.39	10.90	
	중하층	0.42	8.93	40.19	44.04	6.42	16.414*
	중간층	0.31	7.96	40.15	43.45	8.14	
	중상층(상층)	0.57	10.24	38.58	47.46	3.14	
	이념적 성향						16.414*
	보수적	0.16	9.91	43.50	42.00	4.43	
	중도적	0.38	8.71	39.82	43.56	7.53	
	진보적	0.48	7.44	37.62	43.71	10.75	

주: 1)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3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단위: %)

구분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부유한 집안 출신	전체	31.65	49.15	11.87	6.50	0.83	
	성별	남성	31.28	48.04	12.25	7.52	0.91
		여성	32.02	50.31	11.48	5.44	0.75
	연령	20대 이하	34.58	47.24	10.67	5.38	2.14
		30대	38.61	46.63	9.45	4.87	0.44
		40대	31.30	50.85	10.99	5.91	0.95
		50대	29.56	48.90	14.08	7.24	0.22
		60대 이상	24.90	51.80	13.90	8.94	0.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18	41.08	11.13	7.19	1.42
		중하층	32.87	49.97	10.30	6.25	0.60
		중간층	27.92	51.43	13.77	6.17	0.72
		중상층(상층)	30.12	49.78	9.71	8.85	1.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42	48.22	12.09	7.90	0.37
		중도적	28.51	50.85	13.97	5.35	1.32
		진보적	36.81	47.26	8.36	7.12	0.44
본인의 좋은 학벌	전체	27.55	51.28	13.87	6.30	1.00	
	성별	남성	26.76	49.86	14.43	7.47	1.48
		여성	28.38	52.74	13.29	5.08	0.51
	연령	20대 이하	28.12	46.45	16.50	6.86	2.06
		30대	30.02	51.03	12.32	5.39	1.24
		40대	27.42	51.75	14.58	5.31	0.93
		50대	27.82	52.15	12.86	6.80	0.37
		60대 이상	24.55	54.67	13.14	7.13	0.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05	45.55	13.56	7.37	1.48
		중하층	29.17	50.38	14.03	5.43	0.98
		중간층	24.72	53.43	14.16	6.81	0.88
		중상층(상층)	25.33	57.90	11.30	4.84	0.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50	50.70	16.13	6.31	0.36
		중도적	24.86	53.56	14.00	5.88	1.70
		진보적	32.71	48.16	11.75	6.94	0.44
열심히 일하는 것	전체	37.20	42.79	15.45	3.93	0.63	
	성별	남성	37.20	41.11	16.26	4.57	0.87
		여성	37.20	44.52	14.62	3.27	0.39
	연령	20대 이하	34.36	45.18	15.38	4.61	0.46
		30대	36.05	41.20	16.40	5.18	1.17
		40대	36.81	40.47	18.35	3.74	0.62
		50대	37.63	44.19	14.17	3.39	0.62
		60대 이상	40.95	42.97	12.88	2.89	0.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70	32.97	17.32	3.98	1.03
		중하층	36.84	41.70	16.48	4.45	0.53
		중간층	35.13	45.91	14.85	3.57	0.53
		중상층(상층)	33.31	55.69	7.00	2.97	1.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02	41.82	15.39	3.25	0.52
		중도적	37.19	43.25	14.55	4.33	0.67
		진보적	35.65	42.88	16.92	3.87	0.67

주: 1)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33〉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근속 연수	전체		20.34	57.24	15.74	5.64	1.05	
	성별	남성	20.87	56.24	15.53	6.03	1.32	2.006
		여성	19.78	58.28	15.94	5.23	0.77	
	연령	20대 이하	16.77	57.62	19.04	5.02	1.55	51.465***
		30대	23.53	52.55	17.97	5.59	0.36	
		40대	24.23	54.44	12.48	6.75	2.11	
		50대	20.64	58.43	14.46	5.50	0.96	
		60대 이상	16.23	63.05	15.33	5.23	0.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42	51.61	22.94	6.69	3.34	35.204***
		중하층	22.17	58.87	12.03	6.39	0.54	
중간층		20.07	58.58	16.20	4.71	0.45		
중상층(상층)		24.79	52.15	15.89	4.70	2.47		
교육수준	전체		8.66	43.16	30.69	14.34	3.15	
	성별	남성	8.37	42.53	30.87	15.04	3.20	2.275
		여성	8.96	43.82	30.50	13.62	3.09	
	연령	20대 이하	7.66	35.91	37.83	14.92	3.68	44.829***
		30대	10.90	39.65	29.50	16.66	3.29	
		40대	9.14	41.42	30.51	14.97	3.97	
		50대	7.34	49.55	26.97	12.68	3.46	
		60대 이상	8.41	48.45	29.15	12.71	1.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5	37.16	28.59	20.19	5.70	25.578*
		중하층	9.06	44.24	30.08	13.33	3.28	
중간층		8.05	43.89	32.67	13.17	2.23		
중상층(상층)		11.86	48.31	25.17	12.91	1.75		
나이	전체		4.33	23.45	41.19	24.05	6.97	
	성별	남성	4.48	24.76	40.16	22.82	7.78	10.300*
		여성	4.18	22.11	42.26	25.31	6.14	
	연령	20대 이하	3.75	17.09	42.97	26.98	9.20	53.296***
		30대	5.31	19.07	42.52	23.68	9.42	
		40대	3.97	24.58	40.04	24.20	7.22	
		50대	5.21	28.38	41.23	20.72	4.46	
		60대 이상	3.43	27.18	39.45	24.98	4.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7	22.29	35.66	28.15	9.33	10.251
		중하층	4.10	23.18	42.13	23.63	6.95	
중간층		4.58	24.48	42.38	22.34	6.21		
중상층(상층)		3.19	20.52	41.99	28.32	5.97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남성	전체	2.08	14.21	38.43	32.21	13.06	
	성별	남성	2.33	15.07	43.44	28.01	68.928***
		여성	1.83	13.33	33.26	36.55	
	연령	20대 이하	1.64	10.39	37.17	29.84	83.941***
		30대	2.59	9.24	37.79	31.81	
		40대	2.37	14.10	37.58	35.21	
		50대	2.12	18.80	37.19	33.39	
		60대 이상	1.67	17.75	42.50	30.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7	13.75	36.63	34.20	17.767
		중하층	2.22	13.14	40.31	32.93	
		중간층	1.58	15.25	38.24	30.77	
		중상층(상층)	1.23	14.84	32.11	32.76	
업무능력 및 성과	전체	44.99	42.19	10.85	1.72	0.25	
	성별	남성	47.91	40.26	9.76	1.84	5.197
		여성	41.98	44.19	11.98	1.59	
	연령	20대 이하	48.16	37.30	12.31	2.23	36.751**
		30대	47.42	40.23	11.42	0.76	
		40대	47.30	41.81	8.93	1.38	
		50대	41.46	45.50	11.22	1.64	
		60대 이상	40.96	45.60	10.59	2.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95	39.26	9.63	3.75	25.467*
		중하층	47.71	41.31	9.27	1.52	
		중간층	40.73	44.36	13.31	1.32	
		중상층(상층)	54.76	39.70	5.54	0.00	

주: 1) “귀하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34〉 직업별 적정 월평균 수입(실수령액 기준)

구분		0원	1~99만 원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599만 원	600만~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평균	t/F
의사	전체	0.00	0.00	0.05	0.15	3.62	8.01	23.89	60.31	3.97	739.70	
	성별											
	남성	0.00	0.00	0.09	0.09	3.61	7.48	24.16	60.94	3.62	744.08	0.3
	여성	0.00	0.00	0.00	0.21	3.63	8.55	23.62	59.67	4.33	735.19	
	연령											
	20대 이하	0.00	0.00	0.24	0.23	4.22	8.44	19.63	62.37	4.88	748.44	
	30대	0.00	0.00	0.00	0.06	3.09	10.96	25.16	56.79	3.93	757.87	
	40대	0.00	0.00	0.00	0.15	5.47	7.95	24.28	59.06	3.10	701.02	4.1**
	50대	0.00	0.00	0.00	0.31	2.18	6.28	20.87	65.11	5.26	787.19	
	60대 이상	0.00	0.01	0.00	0.00	3.10	6.73	29.58	57.88	2.69	705.01	
대학교수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02	0.00	0.30	4.85	6.47	25.75	59.50	3.12	722.00	
	중하층	0.00	0.00	0.00	0.09	4.45	6.86	24.34	59.96	4.30	746.81	1.0
	중간층	0.00	0.00	0.11	0.18	2.48	9.55	23.30	60.39	3.99	732.07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3.24	8.24	19.67	64.80	4.05	808.43	
	전체	0.07	0.00	0.09	0.22	5.35	17.21	32.34	43.76	0.96	596.76	
	성별											
	남성	0.01	0.00	0.13	0.26	5.48	15.86	32.85	44.42	0.97	602.44	1.4
	여성	0.12	0.00	0.05	0.17	5.21	18.60	31.82	43.08	0.94	590.89	
	연령											
	20대 이하	0.00	0.00	0.38	0.53	7.16	21.37	28.70	40.88	0.97	584.04	
대학교수	30대	0.00	0.00	0.00	0.43	5.01	18.66	32.31	42.87	0.73	604.42	
	40대	0.00	0.00	0.10	0.11	7.75	17.12	31.06	42.75	1.13	585.28	2.6*
	50대	0.02	0.00	0.00	0.00	3.42	13.96	34.27	46.81	1.51	617.75	
	60대 이상	0.31	0.01	0.00	0.07	3.43	15.45	35.17	45.17	0.38	591.58	
	하층	0.42	0.02	0.11	0.16	5.93	13.19	41.34	38.67	0.17	571.02	
	중하층	0.00	0.00	0.02	0.27	5.48	17.06	34.87	40.64	1.66	597.62	1.1
	중간층	0.00	0.00	0.16	0.22	4.89	18.26	28.72	47.02	0.75	602.88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6.53	22.25	15.81	55.31	0.09	620.80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	0원	1~99 만 원	100만~ 199만 원	200만~ 299만 원	300만~ 399만 원	400만~ 499만 원	500만~ 599만 원	600만~ 1500만 원 미만	1500 만 원 이상	평균	t/F
국회의원	전체			3.64	0.88	5.70	10.25	21.80	12.97	24.80	17.56	2.41	466.48	
	남성			5.03	1.01	5.54	11.18	20.67	12.96	24.13	17.16	2.32	455.28	-1.2
	여성			2.21	0.75	5.86	9.29	22.96	12.98	25.48	17.97	2.50	478.04	
		20대 이하		1.53	1.31	4.49	8.42	23.84	16.03	26.18	16.48	1.71	482.44	
		30대		4.00	0.49	5.89	13.28	19.17	12.65	26.58	15.13	2.80	453.48	
		40대		4.23	0.85	4.68	10.35	24.91	12.13	21.99	18.34	2.50	462.93	2.2
		50대		5.23	1.01	6.66	10.05	22.06	11.48	23.97	16.13	3.40	452.14	
		60대 이상		2.97	0.73	6.72	9.24	18.68	12.85	25.69	21.58	1.54	482.62	
	하층			5.34	0.67	5.67	12.45	23.22	14.83	22.40	14.06	1.35	417.39	
	중하층			2.90	1.08	5.88	8.82	22.05	13.70	25.47	17.33	2.74	470.91	2.6*
청소부	중간층			3.63	0.81	5.37	10.75	21.93	11.60	25.61	17.83	2.46	469.36	
	중상층(상층)			3.69	0.63	7.18	9.38	14.27	13.25	20.66	28.09	2.86	566.19	
	전체			0.00	0.41	13.77	46.98	31.20	5.13	1.86	0.65	0.00	256.78	
	남성			0.00	0.17	12.27	46.43	31.92	5.96	2.48	0.77	0.00	264.37	5.9***
	여성			0.00	0.66	15.32	47.55	30.45	4.28	1.21	0.53	0.00	248.94	
		20대 이하		0.00	0.39	12.27	47.05	31.96	6.32	1.39	0.62	0.00	261.69	
		30대		0.00	0.00	13.56	46.26	32.35	5.88	1.32	0.63	0.00	261.71	
		40대		0.00	0.00	11.56	45.92	34.35	5.58	1.50	1.08	0.00	265.06	10.9***
		50대		0.00	0.75	13.43	47.37	29.61	4.33	4.07	0.45	0.00	257.07	
		60대 이상		0.00	0.90	18.15	48.32	27.70	3.65	0.83	0.46	0.00	238.24	
청소부	하층			0.00	0.85	11.54	50.32	30.38	3.95	1.75	1.22	0.00	257.15	
	중하층			0.00	0.56	16.20	45.92	30.56	4.88	1.32	0.57	0.00	250.35	3.1*
	중간층			0.00	0.17	13.44	46.51	31.48	5.94	1.98	0.48	0.00	259.94	
	중상층(상층)			0.00	0.00	5.96	48.04	36.10	3.84	5.14	0.92	0.00	275.81	

구분		0원	1~99만 원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599만 원	600만~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평균	t/F
대기업 CEO	전체	0.10	0.06	0.15	0.47	1.41	3.08	10.37	54.52	29.85	2387.45	
	성별											
	남성	0.12	0.03	0.13	0.36	1.70	2.89	9.44	52.85	32.44	2743.44	4.3***
	여성	0.08	0.08	0.17	0.58	1.10	3.28	11.32	56.25	27.14	2020.00	
	연령											
	20대 이하	0.21	0.00	0.29	0.49	1.29	3.11	11.87	48.28	34.47	3036.28	
	30대	0.05	0.06	0.05	0.72	0.87	4.36	9.33	54.62	29.93	2412.86	
	40대	0.00	0.02	0.16	0.70	1.63	4.91	10.02	52.77	29.78	2213.55	3.0*
	50대	0.25	0.19	0.25	0.16	1.26	1.09	10.82	55.01	30.96	2431.58	
	60대 이상	0.00	0.00	0.00	0.28	1.93	2.00	9.80	61.75	24.25	1883.02	
대기업 신입사원	하층	0.24	0.10	0.23	0.35	1.86	0.90	8.00	58.02	30.29	2279.42	
	중하층	0.18	0.00	0.24	0.33	1.54	2.33	10.95	55.74	28.70	2469.74	1.3
	중간층	0.00	0.10	0.07	0.68	1.08	4.36	10.84	52.40	30.48	2315.79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69	4.71	9.68	52.31	31.61	2734.59	
	전체	0.00	0.04	0.95	25.04	57.59	13.16	2.30	0.63	0.29	323.01	
	성별											
	남성	0.00	0.00	0.74	24.18	57.33	14.45	2.33	0.75	0.22	321.65	0.6
	여성	0.00	0.08	1.16	25.93	57.86	11.82	2.27	0.51	0.36	324.40	
	연령											
	20대 이하	0.00	0.21	0.75	21.68	54.96	18.15	2.40	1.44	0.40	338.27	
대기업 신입사원	30대	0.00	0.00	0.81	22.16	62.22	12.85	1.24	0.44	0.28	319.53	1.8
	40대	0.00	0.00	0.93	25.63	61.15	9.50	2.54	0.25	0.00	307.89	
	50대	0.00	0.00	1.00	29.38	53.22	13.67	1.72	0.48	0.53	332.73	
	60대 이상	0.00	0.00	1.23	25.68	56.63	12.05	3.58	0.62	0.22	317.53	
	하층	0.00	0.00	0.47	24.15	61.99	10.62	2.21	0.34	0.23	318.36	
	중하층	0.00	0.00	0.58	27.48	56.17	12.51	2.25	0.77	0.24	321.05	4.2***
	중간층	0.00	0.10	1.44	23.28	57.20	14.91	2.26	0.59	0.22	318.52	
	중상층(상층)	0.00	0.00	1.02	24.91	57.26	11.24	3.33	0.97	1.26	389.83	

구분		0원	1~99만 원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599만 원	600만~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평균	t/F
제조업 숙련기술 자	전체	0.00	0.00	0.62	8.22	39.25	31.08	15.38	5.38	0.07	391.07	
	성별											4.1***
	남성	0.00	0.00	0.45	7.01	37.26	32.30	16.12	6.72	0.14	402.97	
	여성	0.00	0.00	0.79	9.46	41.31	29.83	14.62	3.99	0.00	378.78	
	연령											2.9*
	20대 이하	0.00	0.00	0.57	8.82	37.50	28.03	17.16	7.92	0.00	397.43	
	30대	0.00	0.00	0.00	8.05	40.86	30.50	15.64	4.84	0.11	391.10	
	40대	0.00	0.00	0.68	6.94	39.96	34.33	13.89	4.15	0.04	385.37	
	50대	0.00	0.00	0.43	8.17	37.36	30.88	15.91	7.03	0.21	405.92	
	60대 이상	0.00	0.00	1.36	9.22	40.69	31.26	14.48	2.99	0.00	375.16	
공장 비숙련 근로자	하층	0.00	0.00	1.23	9.61	38.19	31.30	15.71	3.95	0.00	381.38	
	중하층	0.00	0.00	0.29	8.69	39.28	30.88	15.74	5.13	0.00	387.52	
	중간층	0.00	0.00	0.67	7.50	40.04	31.54	14.56	5.57	0.12	390.71	7.8***
	중상층(상층)	0.00	0.00	0.55	6.43	35.80	27.97	18.67	10.12	0.44	450.78	
	전체	0.00	0.05	10.91	58.71	27.45	2.14	0.61	0.05	0.08	247.76	
	성별											3.3***
	남성	0.00	0.03	10.02	55.85	31.52	1.97	0.44	0.07	0.11	252.49	
	여성	0.00	0.08	11.83	61.66	23.25	2.32	0.78	0.04	0.04	242.87	
	연령											0.5
	20대 이하	0.00	0.06	10.73	52.60	33.93	1.84	0.72	0.12	0.00	250.91	
공장 비숙련 근로자	30대	0.00	0.00	9.51	60.77	27.61	1.67	0.30	0.00	0.13	249.68	
	40대	0.00	0.00	10.61	61.63	24.98	2.32	0.43	0.00	0.04	244.82	
	50대	0.00	0.07	12.16	60.23	23.91	2.32	1.06	0.14	0.11	247.27	
	60대 이상	0.00	0.13	11.38	57.85	27.56	2.49	0.49	0.00	0.10	246.61	
	하층	0.00	0.08	11.50	58.12	27.70	2.44	0.16	0.00	0.00	243.59	
	중하층	0.00	0.08	10.01	60.12	28.10	1.12	0.43	0.09	0.06	245.31	
	중간층	0.00	0.03	11.93	56.99	26.92	3.12	0.89	0.04	0.08	250.62	2.1
	중상층(상층)	0.00	0.00	6.99	64.73	26.42	0.44	0.98	0.00	0.44	254.72	

구분		0원	1~99만 원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599만 원	600만~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평균	t/F
가계 (매장) 점원	전체	0.00	0.44	21.67	62.92	13.93	0.56	0.33	0.12	0.04	220.17	
	성별											
	남성	0.00	0.53	19.55	62.67	15.63	0.89	0.51	0.13	0.08	226.23	4.8***
	여성	0.00	0.34	23.85	63.17	12.16	0.23	0.14	0.11	0.00	213.92	
	연령											
	20대 이하	0.00	0.66	19.45	62.50	15.60	0.69	0.85	0.24	0.00	225.81	
	30대	0.00	0.00	22.00	59.59	16.43	1.12	0.36	0.38	0.11	228.41	
	40대	0.00	0.62	18.66	66.78	13.69	0.07	0.17	0.00	0.00	217.99	3.4***
	50대	0.00	0.27	23.86	62.71	12.66	0.26	0.13	0.00	0.11	217.11	
	60대 이상	0.00	0.62	24.35	62.50	11.58	0.76	0.19	0.00	0.00	212.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08	20.32	65.52	13.34	0.47	0.28	0.00	0.00	216.12	
	중하층	0.00	0.51	24.67	61.08	13.21	0.07	0.42	0.04	0.00	216.06	7.3***
	중간층	0.00	0.57	20.07	63.87	14.18	1.00	0.14	0.13	0.05	221.96	
	중상층(상층)	0.00	0.00	17.48	60.02	18.88	0.74	1.46	0.98	0.44	247.96	

주: 1)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35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실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버는 액수와 상관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35〉 존경할 만한 정도

(단위: %)

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자	전체	3.68	6.56	9.75	10.96	9.05	28.36	10.51	11.10	7.10	2.21	0.72
	성별											
	남성	3.93	7.62	9.54	11.83	8.89	26.32	10.96	10.62	7.33	2.17	0.81
	여성	3.42	5.47	9.98	10.07	9.22	30.47	10.04	11.59	6.86	2.25	0.63
	연령											
	20대 이하	2.84	4.52	9.32	10.11	9.46	28.74	11.31	12.72	7.57	2.49	0.92
	30대	2.68	8.98	11.60	13.16	8.45	26.87	9.58	10.44	5.40	1.84	0.99
성공한 CEO	40대	4.82	6.37	8.91	10.17	8.89	30.03	9.16	10.98	7.66	1.98	1.04
	50대	4.83	6.60	9.83	10.47	8.89	25.80	10.13	11.81	8.33	2.50	0.43
	60대 이상	2.96	6.39	9.86	11.78	7.89	30.34	12.47	9.52	6.34	2.21	0.24
	하층	4.27	8.18	15.48	11.97	8.64	25.41	7.65	9.02	6.81	1.57	0.99
	중하층	4.65	6.34	8.51	12.65	9.52	28.32	9.88	11.20	6.44	2.00	0.50
	중간층	2.73	6.55	8.08	9.08	9.12	30.38	11.99	11.14	7.47	2.77	0.69
	중상층(상층)	2.71	3.09	14.69	11.30	6.40	21.06	11.64	16.56	9.79	1.06	1.69
성공한 CEO	전체	1.41	2.43	3.02	4.50	4.52	14.63	10.96	19.24	23.80	10.71	4.79
	성별											
	남성	1.53	2.45	3.12	4.42	4.64	14.08	12.20	19.02	23.67	10.21	4.65
	여성	1.29	2.40	2.91	4.58	4.39	15.21	9.68	19.46	23.92	11.22	4.94
	연령											
	20대 이하	1.62	1.65	2.60	3.20	3.29	15.43	11.94	19.85	23.72	10.24	6.46
	30대	1.18	1.93	3.56	4.41	6.01	13.13	10.58	20.37	23.84	9.18	5.80
주관적 소득계층	40대	1.66	2.19	2.66	6.17	5.81	14.52	6.30	18.52	24.73	11.63	5.81
	50대	1.20	3.81	3.62	4.68	3.62	15.26	12.76	17.60	22.81	10.64	4.01
	60대 이상	1.40	2.41	2.65	3.85	3.85	14.73	13.46	20.11	23.88	11.67	1.98
	하층	1.66	2.11	1.66	6.09	6.90	17.31	15.39	17.13	19.25	8.66	3.85
	중하층	1.50	3.19	3.31	4.34	3.85	14.45	10.15	19.88	23.16	12.23	3.94
	중간층	1.37	1.96	3.23	4.29	4.44	14.31	10.40	19.59	25.41	9.74	5.27
	중상층(상층)	0.41	1.81	3.42	2.44	2.38	10.21	7.51	18.31	29.30	14.29	9.92

71.227**

36.272

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치인	전체	12.02	16.77	14.34	14.02	8.66	17.37	6.45	4.96	3.47	1.36	0.59
	성별											
	남성	14.00	17.48	13.56	14.35	7.22	17.79	5.12	5.24	3.46	1.00	0.77
	여성	9.98	16.03	15.14	13.67	10.15	16.93	7.81	4.67	3.48	1.74	0.40
	연령											
	20대 이하	8.85	15.87	11.53	13.76	9.61	20.85	6.59	7.32	4.86	0.69	0.07
	30대	12.72	16.50	14.38	16.07	7.43	17.55	5.74	4.51	2.36	1.77	0.96
	40대	12.68	16.52	14.28	12.88	7.98	17.31	7.00	5.13	3.95	1.72	0.55
	50대	14.06	16.41	15.48	13.60	9.52	14.48	6.56	4.08	2.96	1.70	1.16
	60대 이상	11.52	18.52	15.82	13.99	8.72	17.04	6.26	3.88	3.21	0.87	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1	22.48	14.84	12.55	8.96	15.57	3.43	4.15	3.03	0.77	0.51
	중하층	12.91	17.65	13.72	11.63	8.51	17.33	6.54	5.63	3.89	1.41	0.78
	중간층	11.19	14.33	14.34	16.20	8.65	17.65	7.18	4.85	3.36	1.71	0.52
	중상층(상층)	7.22	12.58	17.24	17.67	8.87	20.99	9.20	3.49	2.74	0.00	0.00

주: 1) "귀하는 다음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36〉 정부 개입의 정당성

(단위: %)

구분			당연히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	전체		22.95	46.03	17.58	10.31	3.13	6.468
	성별	남성	23.98	45.36	17.71	9.87	3.09	
		여성	21.88	46.72	17.45	10.77	3.18	
	연령	20대 이하	20.33	41.09	22.65	10.95	4.98	50.447***
		30대	21.96	44.92	20.10	10.63	2.39	
		40대	27.96	45.38	15.27	10.16	1.23	
		50대	23.65	48.59	15.20	9.26	3.29	
		60대 이상	20.23	49.73	15.41	10.69	3.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04	41.38	16.77	13.58	4.23	53.751***
		중하층	21.84	50.73	18.40	7.00	2.03	
		중간층	22.07	47.17	18.02	10.01	2.73	
		중상층(상층)	22.86	46.00	18.75	9.41	2.98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	전체		26.87	41.50	10.96	15.27	5.40	3.234
	성별	남성	32.19	38.66	14.83	11.07	3.25	
		여성	24.14	44.38	16.58	11.36	3.55	
	연령	20대 이하	18.18	50.30	19.29	9.24	2.99	52.014***
		30대	24.92	45.55	19.23	9.30	0.99	
		40대	27.40	42.48	16.67	11.26	2.19	
		50대	28.01	42.31	16.75	10.85	2.07	
		60대 이상	26.77	42.66	16.59	11.68	2.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98	40.83	17.49	13.21	4.49	24.138*
		중하층	25.44	41.93	19.97	10.40	2.26	
		중간층	32.00	42.53	15.52	9.05	0.90	
		중상층(상층)	29.09	43.76	14.29	10.95	1.91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전체		25.77	43.15	16.57	12.90	1.60	7.144
	성별	남성	26.20	40.28	16.82	13.96	2.74	
		여성	28.62	44.71	16.52	8.52	1.62	
	연령	20대 이하	26.83	43.92	16.61	10.85	1.78	59.230***
		30대	27.25	42.97	17.16	9.90	2.71	
		40대	30.35	34.62	14.87	18.53	1.63	
		50대	37.51	34.68	13.81	11.85	2.14	
		60대 이상	28.28	40.59	17.17	11.74	2.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55	46.51	17.92	10.75	2.27	12.989
		중하층	29.65	47.20	11.62	10.07	1.47	
		중간층	12.96	54.43	22.93	6.22	3.46	
		중상층(상층)	13.23	54.31	23.85	6.03	2.59	

구분		당연히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	전체	12.69	54.55	21.99	6.41	4.35		
	성별	남성	7.85	58.56	21.61	5.28	6.70	1.856
		여성	13.57	54.40	23.33	4.64	4.05	
	연령	20대 이하	16.60	57.52	18.89	4.98	2.01	32.755**
		30대	15.33	50.02	24.28	7.82	2.55	
		40대	10.84	51.90	26.72	8.22	2.33	
		50대	11.54	54.33	24.47	4.85	4.81	
		60대 이상	14.41	54.53	21.37	7.61	2.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82	52.19	26.88	6.24	2.85	16.323
		중하층	14.47	57.29	19.25	5.44	3.54	
중간층		11.29	51.52	22.29	9.33	5.57		
중상층(상층)		14.75	50.82	24.71	5.70	4.02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 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	전체	13.33	54.39	22.94	6.46	2.89		
	성별	남성	11.22	55.45	23.09	6.19	4.05	5.866
		여성	19.33	57.60	15.91	6.33	0.84	
	연령	20대 이하	17.06	58.44	17.65	4.42	2.44	30.891*
		30대	18.25	57.84	17.69	4.16	2.05	
		40대	15.82	59.05	17.61	4.68	2.84	
		50대	17.15	53.98	19.45	4.11	5.32	
		60대 이상	17.70	59.46	17.57	3.52	1.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77	58.15	14.81	5.11	2.16	12.94
		중하층	15.95	59.68	16.91	5.51	1.95	
중간층		14.63	60.72	19.86	3.64	1.16		
중상층(상층)		15.89	59.33	17.21	4.33	3.25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	전체	18.24	57.54	18.10	4.50	1.62		
	성별	남성	17.19	56.46	20.27	3.92	2.17	6.727
		여성	17.27	60.55	15.09	4.61	2.49	
	연령	20대 이하	15.64	57.65	17.74	5.65	3.31	30.957*
		30대	19.21	58.37	16.35	4.28	1.80	
		40대	19.01	56.65	17.99	3.86	2.49	
		50대	15.07	59.14	18.23	4.75	2.82	
		60대 이상	12.74	65.82	14.47	6.13	0.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99	59.14	14.96	2.07	1.85	21.816*
		중하층	23.41	58.13	15.23	2.14	1.09	
중간층		20.52	60.17	14.69	1.99	2.63		
중상층(상층)		20.09	58.87	16.45	1.85	2.74		

주: 1)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부 개입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37〉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	복지 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본인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타	χ^2
전체		19.79	21.70	21.89	35.58	1.04	
성별	남성	18.90	24.57	19.53	35.76	1.24	10.496*
	여성	20.74	18.61	24.42	35.40	0.83	
연령	20대 이하	17.98	16.68	23.08	39.51	2.75	34.533***
	30대	21.58	20.64	21.64	33.78	2.36	
	40대	20.74	22.52	19.69	36.95	0.11	
	50대	20.73	20.73	22.84	35.65	0.04	
	60대 이상	18.04	27.60	22.11	32.11	0.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80	17.48	22.77	37.34	0.61	34.367***
	중하층	18.96	22.15	18.91	39.11	0.87	
	중간층	20.91	21.84	24.02	32.02	1.22	
	중상층(상층)	8.70	30.53	21.82	36.81	2.14	

주: 1)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38〉 다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출 정도

(단위: %)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전체		7.09	35.27	46.86	10.05	0.73	
	성별	남성	8.50	35.98	45.64	8.95	0.92	7.325
		여성	5.62	34.54	48.12	11.18	0.54	
	연령	20대 이하	7.74	33.59	49.94	7.68	1.05	21.431
		30대	8.55	37.59	44.71	8.45	0.69	
		40대	7.52	35.19	44.89	11.22	1.17	
		50대	5.94	33.79	49.15	10.85	0.26	
		60대 이상	5.83	36.37	45.61	11.70	0.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6	33.76	47.64	10.44	0.90	14.251
		중하층	6.91	36.80	46.07	9.65	0.57	
		중간층	5.93	32.84	50.14	10.68	0.41	
		중상층(상층)	6.53	37.11	45.02	10.12	1.2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전체		14.09	37.46	41.26	7.19	0.00	
	성별	남성	8.04	37.12	45.94	8.53	0.37	14.008**
		여성	8.02	36.21	46.05	8.35	1.36	
	연령	20대 이하	5.80	34.64	47.58	11.60	0.39	18.304
		30대	8.05	27.91	49.62	14.18	0.23	
		40대	8.29	36.72	45.33	9.15	0.52	
		50대	10.32	37.46	43.70	7.91	0.61	
		60대 이상	6.19	35.95	47.01	10.42	0.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76	37.40	47.04	8.67	0.13	15.839
		중하층	8.10	33.60	49.26	8.26	0.79	
		중간층	9.01	38.10	43.29	9.15	0.45	
		중상층(상층)	6.77	39.87	43.38	9.51	0.47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체		10.80	34.13	44.27	10.04	0.76	
	성별	남성	8.62	39.58	43.73	7.74	0.32	4.545
		여성	7.95	33.82	46.94	10.57	0.71	
	연령	20대 이하	7.61	37.97	44.58	9.04	0.80	16.766
		30대	8.23	38.20	44.48	8.72	0.37	
		40대	11.29	25.46	51.87	11.38	0.00	
		50대	9.35	39.73	42.67	7.20	1.05	
		60대 이상	10.63	37.26	42.26	9.50	0.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5	35.63	48.40	9.69	0.53	28.623**
		중하층	9.20	32.29	50.30	8.22	0.00	
		중간층	10.38	40.88	42.30	6.32	0.12	
		중상층(상층)	11.95	40.31	41.16	6.42	0.16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전체		8.75	41.47	43.47	6.22	0.08	.
	성별	남성	10.66	40.70	43.19	5.16	0.28	7.292
		여성	10.16	43.13	40.14	6.54	0.03	
	연령	20대 이하	12.15	40.28	42.53	4.88	0.16	23.352
		30대	10.14	37.73	44.86	7.18	0.08	
		40대	8.65	42.94	40.48	7.87	0.05	
		50대	12.49	42.69	39.67	5.08	0.06	
		60대 이상	8.23	39.05	44.96	7.58	0.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4	41.76	41.11	7.88	0.00	37.860***
		중하층	9.53	41.94	43.16	5.11	0.27	
		중간층	18.50	32.89	43.51	5.10	0.00	
		중상층(상층)	11.52	36.78	44.83	6.64	0.22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체		12.44	38.73	42.73	6.03	0.07	.
	성별	남성	7.85	43.95	41.43	6.62	0.15	6.658
		여성	12.90	43.69	38.41	5.00	0.00	
	연령	20대 이하	6.97	35.39	46.15	10.66	0.84	41.306***
		30대	8.03	36.43	44.41	10.27	0.86	
		40대	5.88	34.31	47.94	11.05	0.82	
		50대	6.19	33.80	49.97	9.86	0.19	
		60대 이상	7.02	37.46	46.10	8.66	0.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8	33.54	46.09	9.70	1.09	24.474*
		중하층	5.86	34.79	46.48	11.84	1.03	
		중간층	6.08	37.57	42.25	13.06	1.04	
		중상층(상층)	8.39	37.61	43.93	9.17	0.90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전체		5.54	33.14	48.39	12.16	0.77	.
	성별	남성	5.93	35.02	47.08	11.35	0.62	5.392
		여성	6.92	35.53	46.47	9.93	1.16	
	연령	20대 이하	11.43	36.28	41.04	10.90	0.35	38.571**
		30대	11.68	37.84	42.56	7.62	0.30	
		40대	7.58	34.67	46.00	11.15	0.60	
		50대	4.65	34.58	48.11	11.67	0.99	
		60대 이상	7.15	39.57	42.16	8.14	2.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71	41.19	37.91	7.78	0.41	19.98
		중하층	13.68	40.75	37.19	7.97	0.42	
		중간층	11.72	41.64	38.65	7.59	0.39	
		중상층(상층)	12.94	43.04	35.99	7.80	0.23	

34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일자리를 만드는 것	전체		15.89	44.72	32.26	6.65	0.48	4.821
	성별	남성	12.05	39.47	38.68	9.26	0.54	
		여성	11.51	37.03	42.46	8.52	0.49	18.374
	연령	20대 이하	11.51	42.42	39.35	6.44	0.28	
		30대	11.02	40.86	39.30	8.38	0.43	
		40대	14.43	41.53	36.49	7.17	0.38	
		50대	11.59	40.30	39.23	8.31	0.58	
		60대 이상	12.01	41.13	38.18	8.33	0.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20	45.04	31.41	3.35	0.00	15.622
		중하층	10.84	39.10	43.63	6.12	0.31	
		중간층	12.82	42.67	35.89	8.27	0.35	
		중상층(상층)	12.72	40.86	37.71	8.17	0.54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전체		17.83	39.86	36.05	6.26	0.00	7.049
	성별	남성	18.44	44.18	31.27	5.48	0.63	
		여성	19.50	43.91	29.98	5.68	0.94	49.134***
	연령	20대 이하	17.35	44.47	32.59	5.27	0.32	
		30대	19.48	41.20	33.75	5.46	0.11	
		40대	23.25	43.77	26.03	6.36	0.59	
		50대	18.88	46.25	29.51	3.81	1.55	
		60대 이상	16.89	43.04	33.97	5.77	0.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11	46.43	32.82	6.14	0.49	12.785
		중하층	19.24	44.72	30.78	4.47	0.78	
		중간층	17.63	43.64	31.76	6.49	0.48	
		중상층(상층)	18.85	42.93	30.86	7.11	0.25	

주: 1)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39〉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동의하는 의견

(단위: %)

구분		개인의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거나/상황에 따라 다르다	평등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27.65	34.58	29.56	8.21	
성별	남성	28.95	34.38	29.50	7.17	18.505***
	여성	26.32	34.79	29.61	9.27	
연령	20대 이하	27.84	40.78	25.71	5.67	73.734***
	30대	32.23	36.20	27.01	4.56	
	40대	27.66	33.54	30.54	8.26	
	50대	25.63	32.03	33.90	8.44	
	60대 이상	25.34	30.98	29.92	13.76	
지역	수도권	30.01	32.13	30.82	7.05	14.350**
	비수도권	25.27	37.07	28.28	9.38	
	대도시	26.58	35.58	31.73	6.10	57.208***
	중소도시 농어촌	28.74 27.45	34.96 29.01	28.57 24.85	7.73 18.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97	33.29	32.91	7.83	26.871**
	중하층	24.24	35.14	30.07	10.55	
	중간층	30.63	35.09	27.66	6.62	
	중상층(상층)	32.90	30.38	31.03	5.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38	30.35	28.74	14.52	55.747***
	200만 원대	28.54	34.32	27.95	9.18	
	300만 원대	26.97	35.75	31.31	5.96	
	400만 원대	31.40	33.12	28.00	7.47	
	500만 원 이상	26.69	36.32	30.16	6.83	
학력	중졸 이하	24.95	28.21	29.51	17.33	145.555***
	고졸	27.71	32.34	31.65	8.31	
	대졸 이상	28.92	39.17	26.79	5.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04	38.17	29.84	4.96	75.8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44	28.61	25.97	9.97	
	고용주·자영자	28.12	33.02	30.28	8.58	
	무급가족 종사자	24.37	25.42	28.10	22.11	
	실업자	24.03	39.54	31.94	4.48	
	비경제활동인구	25.32	34.11	30.07	10.49	
직업	관리자·전문가	32.46	35.36	29.32	2.86	46.13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7.44	36.38	29.92	6.27	
	숙련 및 기술직	29.37	30.98	28.74	10.90	
	단순노무 종사자	30.97	26.59	25.05	17.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76	38.00	29.81	4.43	26.456***
	비정규직	32.49	30.48	26.64	10.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09	34.35	26.26	9.30	15.088*
	중도적	26.70	35.18	29.41	8.71	
	진보적	27.09	33.83	32.61	6.47	

주: 1) “귀하는 A와 B의 입장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40〉 우리 사회에 대한 다음의 3가지 태도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

(단위: %)

구분		전체적인 사회 혁명적인 운동에 의해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개혁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급진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10.46	61.24	15.41	12.89	
성별	남성	10.43	63.07	15.17	11.33	23.652***
	여성	10.49	59.35	15.66	14.50	
연령	20대 이하	13.13	59.27	14.43	13.17	34.781***
	30대	9.68	65.82	12.82	11.69	
	40대	8.40	64.34	12.84	14.42	
	50대	13.11	56.03	18.71	12.15	
	60대 이상	8.02	61.06	18.03	12.90	
지역	수도권	9.56	59.53	16.56	14.35	24.314***
	비수도권	11.37	62.97	14.25	11.41	
	대도시	10.35	60.91	16.60	12.14	13.369*
	중소도시	10.77	62.66	14.79	11.78	
	농어촌	9.60	56.67	13.19	20.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8	61.70	16.33	11.89	15.231
	중하층	10.38	59.30	15.06	15.27	
	중간층	11.09	61.33	15.97	11.61	
	중상층(상층)	7.00	73.17	10.34	9.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0	55.55	17.67	17.99	36.423***
	200만 원대	10.21	63.82	14.13	11.85	
	300만 원대	10.89	61.11	18.59	9.40	
	400만 원대	13.40	60.93	13.35	12.33	
	500만 원 이상	9.81	62.54	14.28	13.37	
학력	중졸 이하	7.45	57.30	16.83	18.42	44.414***
	고졸	11.09	58.83	16.04	14.04	
	대졸 이상	10.66	65.34	13.80	10.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87	64.37	14.11	9.65	63.65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5	59.29	18.48	14.28	
	고용주·자영자	13.40	59.21	15.77	11.61	
	무급가족 종사자	5.66	76.66	9.03	8.65	
	실업자	11.53	58.26	12.91	17.30	
	비경제활동인구	7.64	58.37	16.50	17.49	
직업	관리자·전문가	8.21	68.69	12.63	10.47	18.8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63	61.34	14.94	11.10	
	숙련 및 기술직	11.95	63.66	14.49	9.89	
	단순노무 종사자	5.82	58.45	22.24	13.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41	64.05	13.93	9.61	16.771***
	비정규직	7.33	60.81	18.19	13.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8.53	57.50	20.62	13.36	35.959***
	중도적	10.14	62.40	13.70	13.76	
	진보적	10.20	66.24	22.70	0.85	

주: 1) “우리 사회에 대한 다음의 3가지 태도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41〉 다음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χ^2
돈이나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 감소	전체		38.30	46.25	15.44	
	성별	남성	36.94	46.44	16.62	1.857
		여성	39.71	46.06	14.23	
	연령	20대 이하	36.28	45.26	18.46	6.742
		30대	36.61	48.67	14.72	
		40대	38.38	49.59	12.03	
		50대	42.62	41.63	15.75	
		60대 이상	37.12	46.30	16.58	
삶에서 일의 중요성 감소	전체		33.13	36.55	30.32	
	성별	남성	33.99	35.15	30.86	0.69
		여성	32.24	37.99	29.77	
	연령	20대 이하	33.72	35.06	31.22	11.934
		30대	34.13	38.57	27.30	
		40대	27.35	40.84	31.81	
		50대	36.85	32.90	30.25	
		60대 이상	33.85	35.37	30.78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	전체		58.16	36.53	5.32	
	성별	남성	59.39	35.44	5.17	1.853
		여성	56.88	37.65	5.47	
	연령	20대 이하	55.14	39.46	5.40	9.527
		30대	60.88	34.45	4.66	
		40대	60.70	35.85	3.45	
		50대	57.66	36.75	5.59	
		60대 이상	56.27	36.16	7.57	
개인의 성장에 대한 강조	전체		57.70	37.54	4.76	
	성별	남성	57.75	37.15	5.10	2.045
		여성	57.65	37.94	4.41	
	연령	20대 이하	60.51	36.05	3.44	11.788
		30대	59.71	36.53	3.76	
		40대	59.12	35.42	5.45	
		50대	56.98	37.61	5.41	
		60대 이상	52.37	42.11	5.52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	전체		72.12	25.95	1.93	
	성별	남성	71.07	26.96	1.97	2.128
		여성	73.21	24.91	1.88	
	연령	20대 이하	68.95	29.37	1.68	20.553**
		30대	73.87	24.67	1.47	
		40대	72.46	26.86	0.67	
		50대	74.88	23.19	1.94	
		60대 이상	70.20	25.87	3.93	

34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χ^2
단순하고 자연주의적 인 생활방식의 확산	전체		42.23	50.14	7.63	6.513*
	성별	남성	41.65	50.03	8.32	
		여성	42.84	50.24	6.92	
	연령	20대 이하	42.06	47.87	10.07	16.196*
		30대	40.75	49.66	9.59	
		40대	38.91	55.35	5.74	
		50대	46.17	48.82	5.01	
		60대 이상	43.15	48.56	8.29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	전체		42.37	49.96	7.67	9.118*
	성별	남성	45.18	47.10	7.72	
		여성	39.48	52.91	7.61	
	연령	20대 이하	39.06	53.03	7.91	28.338***
		30대	35.22	54.17	10.61	
		40대	44.81	49.14	6.05	
		50대	49.97	44.80	5.23	
		60대 이상	41.52	49.45	9.02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체		33.21	54.08	12.71	7.743*
	성별	남성	36.02	51.09	12.89	
		여성	30.32	57.17	12.52	
	연령	20대 이하	31.14	52.71	16.16	31.162***
		30대	27.52	55.76	16.72	
		40대	37.59	52.94	9.48	
		50대	36.46	54.77	8.77	
		60대 이상	32.37	54.30	13.32	

주: 1)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42〉 세대 간 인식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젊은 층과 노인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전체		6.56	39.06	33.68	19.55	1.15	9.662*
	성별	남성	8.16	37.25	33.82	19.57	1.20	
		여성	4.90	40.93	33.53	19.52	1.11	39.851***
	연령	20대 이하	5.03	42.17	31.83	19.72	1.25	
		30대	10.65	38.24	33.24	16.91	0.96	
		40대	8.82	35.73	35.65	19.06	0.74	
		50대	4.42	39.36	35.92	18.27	2.04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전체		2.73	18.83	29.68	40.29	8.48	2.201
	성별	남성	3.07	18.70	29.33	40.29	8.61	
		여성	2.38	18.96	30.03	40.29	8.34	21.583
	연령	20대 이하	3.09	16.48	31.81	42.30	6.32	
		30대	2.08	16.29	30.56	40.12	10.95	
		40대	2.56	18.09	30.40	40.21	8.75	
		50대	3.54	20.60	27.63	40.39	7.84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전체		3.89	28.97	34.97	27.99	4.18	0.862
	성별	남성	4.40	28.08	34.66	29.23	3.63	
		여성	3.38	29.88	35.28	26.71	4.75	34.985**
	연령	20대 이하	6.21	29.87	35.35	25.80	2.76	
		30대	4.14	29.14	38.07	24.10	4.55	
		40대	2.75	26.85	34.45	29.78	6.17	
		50대	3.38	31.30	34.82	27.67	2.83	
언론매체는 세대 간 갈등을 과장하고 있다	전체		7.48	37.34	42.25	12.34	0.60	6.533
	성별	남성	8.30	36.64	41.32	13.20	0.54	
		여성	6.63	38.05	43.21	11.46	0.65	57.805***
	연령	20대 이하	6.32	31.80	44.19	16.57	1.13	
		30대	11.42	35.82	43.39	8.74	0.63	
		40대	7.55	38.05	40.30	13.59	0.51	
		50대	7.44	38.87	40.82	12.55	0.33	
		60대 이상	4.85	41.64	42.95	10.13	0.43	

주: 1) “다음과 같은 세대 간 인식에 대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구분		국가는 국민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다<----->▶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양의 책임	전체	1.73	3.50	8.43	13.41	12.77	24.17	13.57	13.10	6.69	1.92	0.70	5.949		
	성별	남성	1.79	2.86	9.15	13.30	12.50	24.29	12.88	13.37	6.68	2.23		0.96	
	여성	1.68	4.17	7.69	13.51	13.05	24.04	14.28	12.82	6.71	1.60	0.44			
	연령	20대 이하	1.66	3.01	8.93	16.41	12.62	26.39	10.23	13.44	5.71	1.07		0.54	
	30대	2.91	3.99	11.87	10.77	12.64	21.40	12.41	12.50	8.49	1.64	1.38			
	40대	2.30	3.57	8.76	12.75	12.49	27.43	11.27	13.43	5.82	1.85	0.34			
50대	1.49	4.20	6.40	13.93	12.23	21.39	17.33	13.53	6.43	2.53	0.55	60.126*			
60대 이상	0.37	2.70	6.56	13.16	13.92	24.14	16.31	12.51	7.15	2.42	0.75				
구분	실험자도 원하지 않는 작업을 가절할 권리가 있다<----->▶ 실험자는 가능한 작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실험수용을 할 수 있다											χ^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79	3.94	8.75	13.84	10.75	21.68	14.05	13.75	7.83		1.87	1.75	
		성별	남성	2.20	4.64	8.19	13.62	12.16	20.34	14.12	14.32		6.97	1.88	1.56
		여성	1.36	3.21	9.33	14.06	9.30	23.07	13.98	13.16	8.73		1.85	1.94	
		연령	20대 이하	3.58	4.67	11.68	15.54	12.08	20.77	12.02	10.79		6.41	0.98	1.46
30대	3.04	5.06	10.81	16.69	10.31	16.11	12.70	14.79	6.53	1.25	2.71	9.873			
40대	1.65	4.76	8.30	13.76	10.43	20.04	13.52	12.62	9.08	3.23	2.63				
50대	0.60	3.16	8.24	12.52	8.88	23.75	17.01	13.32	9.20	2.01	1.32				
60대 이상	0.32	2.13	5.05	11.02	12.24	27.35	14.66	17.27	7.62	1.68	0.64	113.636***			
구분	경쟁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는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 준다<----->▶ 경쟁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는 근로욕을 촉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														
구분	전체	0.37	0.66	1.82	3.58	7.43	21.02	17.34	23.47	16.97	5.46	1.88	9.807		
	성별	남성	0.63	0.25	2.35	3.35	6.71	20.87	15.97	23.64	18.80	5.36		2.08	
	여성	0.10	1.07	1.28	3.81	8.18	21.18	18.77	23.29	15.08	5.56	1.67			
	연령	20대 이하	0.00	0.00	2.21	2.04	9.63	22.03	14.28	25.54	17.06	5.34		1.87	
	30대	1.88	0.45	2.21	2.91	5.46	21.40	15.41	22.64	18.54	7.14	1.95			
	40대	0.05	1.27	0.50	4.03	7.35	18.86	19.05	22.07	19.32	5.38	2.12			
50대	0.03	1.21	1.66	3.78	5.81	20.53	18.10	26.53	16.56	4.21	1.58	72.281***			
60대 이상	0.00	0.22	2.67	4.98	9.01	22.56	19.46	20.49	13.31	5.41	1.89				

구분		부는 오직 다른 사람의 회생에 의해 창출된다◀-----▶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다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부의 창출	전체	0.60	1.13	4.84	9.66	8.74	23.14	16.70	15.68	12.18	5.34	1.99
	성별											
	남성	0.95	0.91	5.23	9.57	8.92	22.84	15.32	16.17	12.43	5.83	1.82
	여성	0.23	1.35	4.43	9.75	8.56	23.45	18.13	15.18	11.93	4.84	2.17
	연령											
	20대 이하	0.65	0.83	3.67	10.26	8.59	24.86	18.10	15.99	10.58	4.63	1.85
소득의 분배	30대	2.38	0.57	4.02	11.66	9.40	21.71	15.66	16.33	11.26	5.39	1.62
	40대	0.11	1.15	5.69	8.65	8.02	23.21	14.55	16.13	14.33	5.65	2.50
	50대	0.00	2.29	6.18	9.62	7.68	20.73	18.04	16.82	12.22	4.72	1.70
	60대 이상	0.04	0.67	4.38	8.32	10.18	25.35	17.21	13.08	12.24	6.30	2.23
	연령											
	20대 이하	0.65	0.83	3.67	10.26	8.59	24.86	18.10	15.99	10.58	4.63	1.85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소득이 지금보다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χ^2
소득의 분배	전체	1.75	3.53	8.29	13.25	11.72	25.14	13.74	10.93	6.99	2.59	2.08
	성별											
	남성	2.04	2.90	9.39	13.28	12.05	22.94	14.14	11.38	6.51	2.94	2.43
	여성	1.45	4.18	7.14	13.22	11.38	27.40	13.33	10.47	7.48	2.23	1.73
	연령											
	20대 이하	2.31	2.30	6.59	14.47	11.90	23.83	14.58	13.90	6.17	2.67	1.30
소득의 분배	30대	2.82	3.55	8.77	12.92	11.64	23.59	13.04	10.62	6.34	3.89	2.83
	40대	2.46	5.31	8.35	14.83	12.72	22.53	11.84	9.15	8.75	1.80	2.27
	50대	0.45	3.90	8.88	12.17	9.60	26.32	16.04	11.45	6.92	2.90	1.37
	60대 이상	0.81	2.39	8.75	11.85	12.82	29.38	13.20	9.73	6.55	1.83	2.69
	연령											
	20대 이하	2.31	2.30	6.59	14.47	11.90	23.83	14.58	13.90	6.17	2.67	1.30

주: 1) “다음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까운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44〉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진술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χ^2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전체		31.84	45.26	15.95	5.96	1.00	13.954**
	성별	남성	31.46	43.14	16.82	7.21	1.37	
		여성	32.22	47.44	15.05	4.66	0.62	
	연령	20대 이하	29.11	46.31	16.19	6.93	1.45	35.555**
		30대	34.14	42.96	17.96	4.22	0.71	
		40대	35.51	44.04	13.18	5.84	1.42	
		50대	31.39	46.45	14.75	6.31	1.10	
		60대 이상	28.81	46.44	18.06	6.39	0.29	
남북이 한민족이라 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전체		15.62	40.28	27.72	12.85	3.52	12.639*
	성별	남성	16.54	39.57	26.28	12.66	4.95	
		여성	14.67	41.02	29.21	13.05	2.05	
	연령	20대 이하	14.53	39.75	27.08	14.34	4.30	36.276**
		30대	20.29	41.51	26.72	9.04	2.44	
		40대	14.25	43.16	23.43	13.80	5.36	
		50대	16.17	39.17	26.89	14.47	3.30	
		60대 이상	13.17	37.74	34.79	12.23	2.07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살아도 된다	전체		1.98	15.14	29.65	34.88	18.36	15.542**
	성별	남성	2.48	17.32	29.57	34.00	16.63	
		여성	1.46	12.88	29.73	35.79	20.14	
	연령	20대 이하	2.64	12.93	33.07	32.07	19.30	52.376***
		30대	0.84	10.68	30.61	36.11	21.75	
		40대	1.66	16.18	26.35	36.47	19.33	
		50대	2.08	16.37	31.08	34.91	15.55	
		60대 이상	2.65	18.98	27.49	34.66	16.22	

주: 1)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아래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45〉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이 이루어진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가정 내 역할	전체		5.54	41.49	34.09	17.33	1.56
	성별	남성	6.5	43.3	36.65	12.75	0.8
		여성	4.54	39.63	31.44	22.05	2.34
	연령	20대 이하	8.39	35.17	34.09	18.95	3.4
		30대	5.3	44.4	34.05	14.96	1.29
		40대	6.18	39.31	35.67	17.79	1.04
		50대	2.33	45.38	33.8	17.19	1.3
		60대 이상	5.77	42.98	32.71	17.65	0.89
							28.684*
회사에서의 역할	전체		2.8	26.34	40.41	28.28	2.16
	성별	남성	3.39	29.82	40.29	25.04	1.46
		여성	2.2	22.75	40.54	31.62	2.89
	연령	20대 이하	3.93	21.28	41.49	28.49	4.8
		30대	3.09	28.72	40.65	25.61	1.93
		40대	3.05	27.36	37.79	30.53	1.26
		50대	1.24	30.87	38.68	27.46	1.74
		60대 이상	2.86	22.99	43.83	29.05	1.28
							41.191***
회사에서의 취업 및 승진	전체		2.16	16.52	35.84	40.09	5.39
	성별	남성	2.99	19.35	37.38	35.87	4.41
		여성	1.29	13.61	34.26	44.45	6.39
	연령	20대 이하	3.52	14.03	36.24	36.31	9.9
		30대	2.58	17.77	35.26	38.5	5.9
		40대	2.04	16.89	34.14	44.22	2.7
		50대	0.94	18.14	35.67	40.3	4.94
		60대 이상	1.88	15.61	38.03	40.53	3.96
							43.805***
임금수준	전체		2.22	14.67	33.84	44.77	4.5
	성별	남성	2.7	17.42	35.71	40.78	3.39
		여성	1.72	11.82	31.91	48.9	5.65
	연령	20대 이하	4.09	15.83	32.32	42.08	5.68
		30대	1.97	16.29	36.15	40.56	5.03
		40대	2.24	12.09	32.53	49.7	3.44
		50대	1.18	15.94	36.47	42.08	4.32
		60대 이상	1.74	13.43	31.73	48.89	4.21
							54.733***
전반적인 사회참여	전체		2.36	20.33	45.59	29.57	2.15
	성별	남성	2.97	22.65	46.68	26.15	1.54
		여성	1.73	17.93	44.45	33.11	2.77
	연령	20대 이하	4.73	19.67	44.65	28.43	2.51
		30대	2.42	18.81	48.54	26.99	3.24
		40대	1.65	18.48	44.22	33.76	1.89
		50대	1.5	23.4	45.23	27.82	2.04
		60대 이상	1.73	21.09	45.55	30.48	1.15
							32.547***
							27.399*

주: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46〉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 언어적 성희롱 경험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성추행 경험	직장,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은행대출, 카드발급, 보험·부동산·자동차 (임대/매매)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가족내 성차별 (아들/딸 차별, 사위/며느리에 대한 부담한 대우 등)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기타	경험 없음
	2.90	0.86	2.69	1.36	2.93	0.53	0.45	0.24	0.24	0.06	92.09
성별	전체										
	남성	1.31	0.22	1.01	1.16	0.48	0.27	0.00	0.03	0.03	96.78
연령	여성	4.54	1.52	4.43	1.56	5.47	0.64	0.48	0.45	0.08	87.24
	20대 이하	6.50	2.14	6.00	1.60	4.81	1.61	1.04	0.36	0.22	86.09
	30대	4.79	1.61	2.85	1.09	3.27	0.12	0.20	0.40	0.00	90.11
	40대	2.26	0.67	3.01	2.21	2.91	0.61	0.00	0.44	0.00	92.53
	50대	1.11	0.07	1.30	1.40	3.08	0.28	0.05	0.00	0.08	93.38
	60대 이상	0.28	0.00	0.53	0.40	0.68	0.44	0.00	0.00	0.00	97.81
지역	수도권	4.46	1.24	3.86	1.63	3.78	0.70	0.82	0.42	0.07	89.38
	비수도권	1.32	0.48	1.51	1.07	2.07	0.35	0.09	0.05	0.05	94.83
	대도시	2.95	0.67	2.92	1.34	2.37	0.45	0.59	0.08	0.12	91.60
	중소도시	3.41	1.23	2.26	0.81	3.61	0.66	0.40	0.45	0.01	92.14
	농어촌	0.57	0.14	3.59	3.71	2.37	0.30	0.09	0.00	0.00	93.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7	0.43	2.10	1.54	2.34	1.09	0.48	0.19	0.00	92.81
	중하층	2.28	0.90	3.31	1.70	3.31	0.87	0.12	0.00	0.02	91.55
	중간층	3.36	1.09	2.48	0.99	2.90	0.08	0.78	0.49	0.12	92.32
	중상층(상층)	4.18	0.09	1.92	1.30	2.35	0.00	0.00	0.00	0.00	91.72
	200만 원 미만	2.13	0.64	2.83	1.03	2.07	1.38	0.77	0.21	0.00	93.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2.33	0.36	1.79	2.97	1.46	0.16	0.05	0.10	0.00	92.48
	300만 원대	3.18	0.65	3.48	2.44	3.88	0.30	0.32	0.33	0.03	90.72
	400만 원대	2.94	0.31	2.50	0.76	3.95	0.18	0.58	0.05	0.24	90.87
	500만 원 이상	3.27	1.48	2.67	0.46	2.96	0.61	0.52	0.32	0.05	92.63

구분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적 성추행	직장, 학교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은행대출, 카드발급, 보험·부동산·자동차 (임대/매매)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가족내 성차별 (아들/딸 차별, 사유/매너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기타	경험 없음
학력	중졸 이하	0.27	0.10	0.74	0.15	0.85	0.00	0.00	0.00	0.00	97.28
	고졸	2.33	0.55	2.23	1.95	0.51	0.34	0.03	0.06	0.09	92.78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4.30	1.43	3.87	1.21	0.46	0.73	0.51	0.49	0.05	89.57
	상용직 임금근로자	4.33	1.14	3.43	1.53	0.50	0.55	0.40	0.30	0.12	90.6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9	0.84	4.71	2.85	3.96	1.52	0.10	0.13	0.00	88.32
	고용주·자영자	0.72	0.51	0.95	0.76	1.83	0.12	0.00	0.07	0.08	96.42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3.34	0.00	0.58	0.00	0.00	3.34	0.00	96.07
직업	실업자	3.05	1.27	4.73	0.00	0.45	3.46	2.24	0.00	0.00	87.82
	비경제활동인구	2.66	0.84	1.83	1.26	0.51	0.03	0.00	0.03	0.00	92.32
	관리자·전문가	4.25	2.38	3.41	0.75	0.00	1.40	0.00	0.00	0.07	91.4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16	0.70	3.11	1.12	0.61	0.27	0.35	0.53	0.11	92.00
	숙련 및 기술직	0.77	0.25	1.85	2.63	0.00	0.13	0.00	0.00	0.05	94.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4.72	1.09	2.80	2.57	2.05	1.09	0.00	0.00	0.00	88.95
	정규직	4.08	1.18	3.66	1.50	0.43	0.59	0.31	0.32	0.13	90.96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4.44	0.79	3.98	2.72	1.51	0.43	0.35	0.11	0.00	88.09
	보수적	1.87	0.46	3.02	1.73	0.61	0.25	0.00	0.00	0.00	92.85
	중도적	1.93	0.18	1.85	0.88	0.19	0.20	0.27	0.31	0.04	93.89
	진보적	5.30	2.29	3.75	1.78	0.99	1.03	0.39	0.32	0.14	88.59

주: “귀하는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에 대한 응답.

〈부표 3-47〉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겪는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경험한 적 없다	χ^2
외모(용모, 복장,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전체		0.17	1.23	5.26	13.67	79.67	24.574***
	성별	남성	0.06	0.88	4.38	11.10	83.58	
		여성	0.28	1.60	6.17	16.31	75.63	
	연령	20대 이하	0.40	3.57	8.39	20.20	67.44	107.377***
		30대	0.18	0.61	4.95	15.36	78.90	
		40대	0.07	0.14	5.80	13.02	80.97	
		50대	0.04	1.41	4.34	11.95	82.27	
		60대 이상	0.18	0.57	2.99	8.36	87.90	
대중매체	전체		1.21	4.83	11.66	22.41	59.89	37.279***
	성별	남성	0.92	3.70	10.26	19.32	65.81	
		여성	1.51	6.00	13.11	25.60	53.78	
	연령	20대 이하	2.66	9.72	12.22	23.92	51.48	93.875***
		30대	0.37	4.76	12.75	21.60	60.53	
		40대	1.03	3.95	13.57	24.76	56.68	
		50대	0.53	4.03	11.76	21.73	61.95	
		60대 이상	1.53	2.05	7.96	19.92	68.55	
운전·대중교 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전체		0.38	2.26	7.63	19.93	69.79	5.186
	성별	남성	0.14	2.22	7.90	18.34	71.40	
		여성	0.64	2.30	7.36	21.58	68.13	
	연령	20대 이하	0.60	3.39	8.13	18.29	69.58	91.925***
		30대	0.11	3.00	9.27	22.78	64.84	
		40대	0.02	2.04	9.31	22.21	66.42	
		50대	0.89	2.03	6.54	22.83	67.71	
		60대 이상	0.29	0.97	4.98	13.27	80.48	
야간 통행귀가 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전체		1.61	2.62	7.27	17.56	70.94	417.010***
	성별	남성	0.28	0.95	2.37	8.97	87.43	
		여성	2.98	4.34	12.34	26.42	53.93	
	연령	20대 이하	3.66	5.38	9.43	16.12	65.41	119.678***
		30대	1.75	3.20	10.39	18.29	66.36	
		40대	1.00	2.61	6.65	20.50	69.25	
		50대	1.33	0.85	6.35	18.62	72.85	
		60대 이상	0.47	1.34	3.93	13.93	80.33	
봄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전체		1.10	2.45	5.02	14.66	76.76	273.016***
	성별	남성	0.42	0.73	2.38	6.64	89.83	
		여성	1.81	4.23	7.75	22.95	63.27	
	연령	20대 이하	2.62	4.60	7.31	13.53	71.93	141.646***
		30대	1.76	3.75	8.83	15.29	70.37	
		40대	0.82	1.04	3.65	18.97	75.51	
		50대	0.26	2.12	4.09	14.56	78.97	
		60대 이상	0.24	1.06	1.71	10.64	86.35	

구분		매일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경험한 적 없다	χ^2
가사/돌봄 노동 강요	전체	1.39	1.93	3.29	8.54	84.85	116.721***
	성별						
	남성	0.34	0.66	2.22	5.32	91.46	80.046***
	여성	2.48	3.24	4.39	11.86	78.02	
	연령						
	20대 이하	1.23	2.66	2.83	7.54	85.73	
	30대	1.38	2.53	5.27	9.00	81.82	
	40대	1.19	1.49	2.77	12.36	82.19	
	50대	2.45	1.41	3.51	8.90	83.72	
	60대 이상	0.64	1.68	2.19	4.57	90.92	

주: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48〉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진술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χ^2
취업모도 비취업모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 관계를 맺는다	전체		18.40	65.93	14.86	0.81	3.275
	성별	남성	17.09	66.12	15.83	0.96	
		여성	19.75	65.74	13.86	0.65	
	연령	20대 이하	21.17	60.66	17.81	0.36	15.393
		30대	17.53	64.87	16.49	1.11	
		40대	20.73	64.38	14.14	0.74	
		50대	19.94	67.58	11.76	0.72	
		60대 이상	12.42	71.86	14.61	1.11	
취학 전 아동은 아동의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체		21.30	62.86	15.27	0.57	3.447
	성별	남성	20.31	63.56	15.61	0.52	
		여성	22.31	62.14	14.92	0.63	
	연령	20대 이하	20.27	58.71	20.62	0.39	24.646*
		30대	20.54	64.15	14.60	0.71	
		40대	21.62	64.34	13.17	0.86	
		50대	22.82	64.86	11.98	0.34	
		60대 이상	21.01	61.86	16.56	0.56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면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체		15.93	57.18	25.31	1.58	18.498***
	성별	남성	14.82	55.50	28.36	1.32	
		여성	17.08	58.91	22.17	1.84	
	연령	20대 이하	13.07	51.98	31.57	3.38	47.159***
		30대	16.05	56.60	25.64	1.71	
		40대	17.42	57.25	24.17	1.16	
		50대	14.70	62.63	21.84	0.84	
		60대 이상	18.29	56.78	23.98	0.95	
대부분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다	전체		10.39	45.26	38.69	5.66	1.651
	성별	남성	10.49	45.23	39.10	5.18	
		여성	10.28	45.30	38.26	6.16	
	연령	20대 이하	8.47	35.71	42.92	12.90	100.642***
		30대	9.36	40.59	42.87	7.19	
		40대	11.26	45.85	38.89	4.00	
		50대	12.43	49.59	35.45	2.53	
		60대 이상	10.07	53.53	33.95	2.45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전체		9.95	45.51	39.25	5.29	2.945
	성별	남성	8.75	46.90	39.85	4.50	
		여성	11.19	44.08	38.63	6.11	
	연령	20대 이하	9.37	39.81	42.64	8.18	45.552***
		30대	7.99	42.44	42.68	6.89	
		40대	11.04	44.65	39.84	4.47	
		50대	9.77	50.57	35.92	3.74	
		60대 이상	11.37	49.35	35.71	3.57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편 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χ^2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전체		7.18	36.98	43.73	12.11	14.633**
	성별	남성	7.41	37.63	44.79	10.17	
		여성	6.93	36.31	42.65	14.11	
	연령	20대 이하	4.69	27.80	46.37	21.13	192.012***
		30대	4.58	29.75	49.41	16.26	
		40대	8.11	33.39	47.15	11.36	
		50대	8.76	44.83	39.17	7.24	
		60대 이상	9.29	48.01	37.09	5.61	
여성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전체		7.67	41.31	45.57	5.46	4.535
	성별	남성	6.73	40.19	47.05	6.03	
		여성	8.64	42.46	44.04	4.87	
	연령	20대 이하	8.95	40.68	42.22	8.15	25.725*
		30대	7.36	37.84	50.13	4.67	
		40대	8.64	40.86	43.83	6.67	
		50대	7.03	43.58	45.17	4.23	
		60대 이상	6.38	43.22	46.77	3.64	
남편이나 아내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전체		18.40	62.53	18.29	0.77	6.655
	성별	남성	18.14	61.55	19.35	0.97	
		여성	18.68	63.55	17.20	0.57	
	연령	20대 이하	17.30	64.48	17.52	0.70	14.495
		30대	19.79	60.58	18.74	0.90	
		40대	20.43	57.81	20.87	0.89	
		50대	19.75	64.13	15.72	0.41	
		60대 이상	14.56	65.86	18.59	0.99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전체		19.77	60.05	19.16	1.02	3.17
	성별	남성	18.87	60.51	19.79	0.83	
		여성	20.71	59.59	18.50	1.21	
	연령	20대 이하	24.07	62.55	13.39	0.00	59.549***
		30대	23.80	59.79	14.68	1.73	
		40대	18.19	62.07	18.35	1.39	
		50대	17.01	59.84	22.11	1.04	
		60대 이상	16.54	55.99	26.58	0.88	
남성도 여성과 같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체		36.82	56.07	6.80	0.31	23.336***
	성별	남성	32.62	59.70	7.59	0.10	
		여성	41.16	52.33	5.98	0.54	
	연령	20대 이하	43.79	48.83	6.94	0.44	34.576***
		30대	38.31	55.10	5.96	0.63	
		40대	33.73	60.26	5.86	0.14	
		50대	36.14	56.93	6.66	0.27	
		60대 이상	32.81	58.47	8.60	0.12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편 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χ^2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전체		11.87	56.06	27.47	4.60	5.279
	성별	남성	11.74	56.57	27.22	4.48	
		여성	12.01	55.53	27.73	4.73	139.642***
	연령	20대 이하	9.23	46.46	34.96	9.35	
		30대	11.58	50.44	31.91	6.07	
		40대	12.00	55.91	27.92	4.16	
		50대	11.56	63.17	23.27	2.00	
		60대 이상	14.85	63.07	20.16	1.93	
부부 중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별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4.35	41.62	42.35	11.68	0.921
	성별	남성	4.42	41.98	41.63	11.97	
		여성	4.28	41.25	43.10	11.37	161.905***
	연령	20대 이하	4.38	30.62	44.77	20.22	
		30대	2.90	34.42	45.98	16.70	
		40대	4.64	43.55	42.00	9.81	
		50대	4.31	45.45	41.85	8.39	
		60대 이상	5.41	52.73	37.56	4.30	

주: 1) “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49〉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 중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절반씩 사용한다	아버지가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한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어머니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χ^2
전체		11.27	46.59	41.21	0.78	0.16	
성별	남성	11.97	47.51	39.34	0.94	0.25	13.279**
	여성	10.54	45.63	43.13	0.62	0.06	
연령	20대 이하	7.30	40.23	51.24	0.98	0.25	90.920***
	30대	9.43	42.32	47.34	0.76	0.15	
	40대	10.05	46.06	43.06	0.83	0.00	
	50대	12.22	51.77	34.97	0.75	0.30	
	60대 이상	17.08	51.70	30.53	0.59	0.10	
지역	수도권	10.44	46.72	41.99	0.80	0.05	5.53
	비수도권	12.11	46.46	40.41	0.76	0.26	
	대도시	9.96	45.12	44.33	0.52	0.07	25.498**
	중소도시 농어촌	11.90 13.91	47.86 47.26	38.86 38.32	1.13 0.42	0.26 0.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60	48.29	35.56	0.32	0.23	65.801***
	중하층	11.09	46.93	40.99	0.87	0.12	
	중간층	10.43	46.30	42.46	0.80	0.00	
	중상층(상층)	5.74	41.14	50.18	1.41	1.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24	44.87	37.11	0.52	0.26	33.023**
	200만 원대	11.64	46.81	40.93	0.47	0.14	
	300만 원대	11.33	45.44	42.18	0.98	0.07	
	400만 원대	10.89	48.73	39.79	0.53	0.06	
	500만 원 이상	9.00	46.86	42.92	1.01	0.21	
학력	중졸 이하	19.70	45.72	34.12	0.46	0.00	52.420***
	고졸	10.28	48.38	40.15	0.97	0.21	
	대졸 이상	9.20	45.47	44.43	0.74	0.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5	45.03	45.20	0.68	0.23	41.351**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2.43	47.53	39.54	0.36	0.14	
	고용주·자영자	13.38	48.03	37.23	1.28	0.09	
	무급가족 종사자	22.63	43.17	34.20	0.00	0.00	
	실업자	8.32	34.25	55.10	1.82	0.5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1.42	49.25	38.61	0.63	0.08	27.168**
	관리자·전문가	9.68	43.92	45.88	0.28	0.2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95	45.39	42.64	0.79	0.22	
	숙련 및 기술직	13.88	48.75	35.96	1.41	0.00	
	단순노무 종사자	11.42	51.17	37.41	0.0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32	45.11	45.59	0.73	0.25	3.003
	비정규직	13.09	46.96	39.53	0.30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65	51.02	33.36	0.68	0.29	35.846***
	중도적	10.30	47.61	41.08	0.92	0.08	
	진보적	9.91	41.19	48.09	0.65	0.16	

주: 1) “귀하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 중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0〉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일·가정양립을 위한 선택

(단위: %)

구분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어머니가 파트타임 직장을 다니고 아버지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파트타임 직장을 다닌다	아버지가 파트타임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어머니는 풀타임 직장을 다닌다	χ^2
전체		23.31	51.71	18.42	5.88	0.47	0.23	
성별	남성	23.17	50.30	19.54	6.19	0.56	0.25	3.679
	여성	23.45	53.16	17.26	5.55	0.37	0.21	
연령	20대 이하	14.30	50.82	20.97	13.59	0.11	0.22	137.172***
	30대	22.61	48.50	23.82	4.57	0.47	0.02	
	40대	22.93	53.64	18.16	3.72	1.33	0.21	
	50대	27.69	53.77	15.06	2.93	0.26	0.30	
	60대 이상	28.27	51.29	14.76	5.21	0.10	0.36	
지역	수도권	25.13	53.19	14.22	6.86	0.50	0.10	22.248***
	비수도권	21.46	50.21	22.67	4.89	0.43	0.35	
	대도시	22.47	51.05	20.37	5.69	0.30	0.12	29.621***
	중소도시 농어촌	24.60 21.29	52.33 51.77	16.34 19.17	5.87 6.66	0.67 0.29	0.19 0.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82	50.90	17.32	4.40	0.36	0.21	30.916**
	중하층	22.01	54.04	17.49	5.76	0.40	0.30	
	중상층	23.77	48.96	20.02	6.61	0.49	0.16	
	중상층(상층)	17.69	60.38	15.21	5.29	1.09	0.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95	51.14	17.58	4.44	0.37	0.52	35.213*
	200만 원대	24.87	48.70	18.99	6.40	0.65	0.39	
	300만 원대	26.30	49.19	17.64	6.51	0.26	0.11	
	400만 원대	22.85	51.14	19.67	4.57	1.62	0.15	
	500만 원 이상	20.31	54.66	18.44	6.37	0.08	0.15	
학력	중졸 이하	30.03	50.56	15.66	3.17	0.08	0.51	43.859***
	고졸	20.72	54.21	16.68	7.52	0.60	0.25	
	대졸 이상	23.66	49.37	21.03	5.34	0.48	0.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6	51.46	22.24	5.40	1.04	0.20	55.394***
	일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45	53.43	17.16	5.89	0.07	0.00	
	고용주·자영자	24.00	53.07	18.59	3.89	0.19	0.26	
	무급가족 종사자	29.67	51.47	13.08	3.82	0.00	1.95	
	실업자	17.88	55.03	21.89	5.20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27.70	49.63	13.75	8.51	0.22	0.19	
직업	관리자·전문가	22.66	50.69	19.10	5.50	1.75	0.30	46.32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0.79	52.17	21.84	4.77	0.36	0.06	
	숙련 및 기술직	25.21	53.81	15.76	3.50	0.74	0.98	
	단순노무 종사자	23.00	52.02	15.91	8.98	0.1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56	52.26	21.55	5.73	0.82	0.08	2.668
	비정규직	23.09	51.29	19.53	5.07	0.74	0.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97	50.21	14.36	5.82	0.26	0.38	34.755***
	중도적	23.28	52.16	18.41	5.60	0.29	0.26	
	진보적	18.51	52.28	21.87	6.37	0.93	0.05	

주: 1)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일·가정양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1〉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전체		10.14	43.53	28.26	11.28	4.45	2.34	
성별	남성	7.09	38.10	33.43	13.18	5.73	2.47	101.371***
	여성	13.30	49.12	22.92	9.33	3.13	2.20	
연령	20대 이하	11.55	46.92	25.73	7.76	5.27	2.77	76.010***
	30대	11.56	45.47	27.45	10.20	3.70	1.62	
	40대	12.23	43.38	30.34	10.16	1.63	2.26	
	50대	8.73	45.62	27.94	12.57	3.54	1.60	
	60대 이상	6.74	36.37	29.54	15.50	8.38	3.47	
지역	수도권	10.79	46.04	27.80	9.56	2.96	2.85	12.253*
	비수도권	9.50	40.99	28.72	13.03	5.96	1.82	
	대도시	10.10	46.60	26.57	9.62	4.61	2.51	30.562***
	중소도시	9.89	41.53	30.21	13.02	3.79	1.56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1.39	39.45	26.94	10.80	6.54	4.89	29.434*
	하층	9.28	38.37	27.67	18.26	4.41	2.01	
	중하층	11.12	43.76	28.02	10.03	4.09	3.00	
	중간층	9.28	45.34	29.07	9.96	4.32	2.02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3.08	42.97	25.03	9.40	8.30	1.23	78.534***
	200만 원 미만	9.04	41.60	20.94	16.57	6.08	5.78	
	200만 원대	8.10	37.14	36.18	12.13	5.03	1.41	
	300만 원대	10.77	44.57	27.30	13.31	2.70	1.34	
	400만 원대	10.40	43.68	32.01	10.08	2.87	0.97	
학력	500만 원 이상	10.94	46.20	26.86	8.40	5.14	2.45	77.883***
	중졸 이하	7.14	35.03	26.70	18.58	7.04	5.50	
	고졸	10.08	44.10	28.19	10.52	4.34	2.77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1.06	45.24	29.00	9.92	3.88	0.91	64.630***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4	45.61	29.04	9.82	2.72	1.17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8.25	44.58	29.06	11.58	3.71	2.83	
	고용주·자영자	8.20	39.00	30.75	14.32	6.11	1.61	
	무급가족 종사자	6.70	40.25	28.93	10.64	7.07	6.41	
	실업자	15.88	42.38	25.14	10.55	4.01	2.04	
	비경제활동인구	10.16	44.52	25.12	10.78	5.54	3.89	
직업	관리자·전문가	11.74	47.58	28.38	10.57	1.39	0.33	50.63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02	44.60	29.66	10.22	3.93	1.58	
	숙련 및 기술직	8.41	36.18	31.08	15.82	6.46	2.05	
	단순노무 종사자	8.74	42.21	27.08	12.93	3.89	5.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72	46.63	29.53	9.56	2.45	1.11	7.781
	비정규직	10.87	42.43	27.94	11.89	4.15	2.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8.24	39.62	29.92	13.13	5.94	3.16	51.678***
	중도적	8.57	43.65	30.13	11.82	3.56	2.27	
	진보적	14.25	46.67	23.87	8.87	4.59	1.75	

주: 1) “귀하는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p<0.05, **p<0.01, ***p<0.001

〈부표 3-52〉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1) 성폭력 감소

(단위: %)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χ^2
전체		14.31	57.31	24.03	4.34	
성별	남성	13.32	54.82	26.17	5.70	28.431***
	여성	15.34	59.89	21.83	2.94	
연령	20대 이하	14.23	56.73	23.19	5.85	28.508**
	30대	15.99	54.26	23.13	6.62	
	40대	13.31	63.39	21.47	1.83	
	50대	16.30	58.17	22.14	3.39	
	60대 이상	11.76	53.28	30.48	4.47	
지역	수도권	16.08	59.88	19.54	4.51	28.425***
	비수도권	12.53	54.71	28.59	4.17	
	대도시	15.63	58.10	22.65	3.62	12.095
	중소도시	12.45	57.32	25.08	5.16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6.76	54.08	25.29	3.86	7.835
	하층	11.49	50.63	30.40	7.48	
	중하층	14.26	58.57	23.79	3.39	
	중간층	14.84	58.77	22.43	3.95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9.25	57.14	19.02	4.59	29.875**
	200만 원 미만	11.20	52.39	31.72	4.69	
	200만 원대	9.96	57.19	28.93	3.92	
	300만 원대	13.66	59.77	22.93	3.65	
	400만 원대	15.30	59.51	22.50	2.69	
학력	500만 원 이상	17.18	57.02	20.39	5.41	24.793***
	중졸 이하	11.59	52.52	31.63	4.26	
	고졸	13.08	57.81	25.27	3.85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6.16	58.43	20.51	4.90	25.144*
	상용직 임금근로자	15.69	57.06	22.89	4.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14	55.81	27.53	3.52	
	고용주·자영자	11.63	59.88	23.53	4.96	
	무급가족 종사자	9.90	58.73	29.75	1.62	
	실업자	25.52	47.48	22.59	4.4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4.05	57.52	23.95	4.48	37.388***
	관리자·전문가	20.88	56.93	19.70	2.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05	59.07	21.87	5.01	
	숙련 및 기술직	10.59	54.13	31.42	3.85	
	단순노무 종사자	8.38	57.34	31.80	2.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98	56.94	22.85	4.22	2.878
	비정규직	12.88	56.27	26.89	3.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38	56.36	26.27	5.00	20.216**
	중도적	12.33	59.80	23.44	4.43	
	진보적	19.11	54.19	23.07	3.63	

주: 1) “귀하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3〉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성차별 완화

(단위: %)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χ^2
전체		12.44	52.33	30.52	4.71	
성별	남성	11.19	48.76	33.45	6.61	59.499***
	여성	13.73	56.02	27.50	2.76	
연령	20대 이하	13.11	51.05	28.19	7.65	42.324***
	30대	12.05	51.11	30.42	6.41	
	40대	12.16	57.70	28.89	1.25	
	50대	14.78	50.60	30.84	3.79	
	60대 이상	9.96	50.78	34.24	5.02	
지역	수도권	13.67	54.55	26.68	5.11	10.517*
	비수도권	11.19	50.09	34.41	4.32	
	대도시	11.55	54.47	30.01	3.98	10.597
	중소도시	12.31	51.51	30.55	5.6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6.56	47.10	32.46	3.88	20.480*
	하층	9.06	43.76	38.88	8.31	
	중하층	14.08	52.04	30.49	3.39	
	중간층	12.48	54.96	28.06	4.50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0.88	59.59	24.79	4.74	19.192
	200만 원 미만	10.95	48.47	35.75	4.84	
	200만 원대	9.53	49.67	36.94	3.86	
	300만 원대	11.43	55.59	28.81	4.17	
	400만 원대	15.49	52.83	28.88	2.81	
학력	500만 원 이상	13.47	52.92	27.55	6.06	9.098
	중졸 이하	10.30	48.73	36.37	4.60	
	고졸	12.81	51.65	31.16	4.38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2.80	53.65	28.31	5.24	23.706
	상용직 임금근로자	13.36	51.26	30.62	4.7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96	51.18	33.22	4.64	
	고용주·자영자	9.67	54.47	30.98	4.88	
	무급가족 종사자	4.81	52.69	40.69	1.82	
	실업자	22.86	38.96	34.47	3.7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3.48	54.48	27.03	5.01	27.105**
	관리자·전문가	12.47	59.81	23.98	3.7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07	53.22	29.97	4.74	
	숙련 및 기술직	10.38	45.96	39.22	4.44	
	단순노무 종사자	8.22	47.86	37.94	5.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7	51.47	30.75	4.50	1.78
	비정규직	11.53	50.72	32.49	5.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8	50.05	34.16	5.21	21.133**
	중도적	11.51	54.19	29.58	4.72	
	진보적	15.49	51.33	28.90	4.28	

주: 1) “귀하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4〉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3) 성별 갈등 완화

(단위: %)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χ^2
전체		9.79	47.19	35.62	7.40	
성별	남성	8.55	43.85	37.36	10.24	47.995***
	여성	11.08	50.64	33.83	4.46	
연령	20대 이하	9.82	45.21	30.67	14.31	42.753***
	30대	8.99	43.91	37.98	9.13	
	40대	9.09	53.69	34.28	2.94	
	50대	11.39	48.49	35.11	5.00	
	60대 이상	9.56	43.81	40.12	6.51	
지역	수도권	10.21	47.65	33.74	8.41	10.406*
	비수도권	9.37	46.73	37.53	6.37	
	대도시	8.83	47.70	36.93	6.54	11.205
	중소도시	9.37	48.04	33.77	8.81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5.40	41.59	38.05	4.96	15.336
	하층	8.02	37.62	45.18	9.18	
	중하층	11.04	47.31	34.92	6.73	
	중간층	9.66	49.63	33.59	7.12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7.44	56.34	27.42	8.81	15.127
	200만 원 미만	10.59	42.28	40.87	6.26	
	200만 원대	8.30	42.67	43.27	5.76	
	300만 원대	8.48	49.91	34.91	6.70	
학력	400만 원대	11.02	50.70	33.95	4.33	1.997
	500만 원 이상	10.26	48.12	31.54	10.08	
	중졸 이하	9.27	43.80	41.73	5.20	
	고졸	10.23	47.97	34.60	7.20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9.57	47.12	34.86	8.46	19.979
	상용직 임금근로자	8.95	47.86	35.99	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38	44.73	36.36	6.52	
	고용주·자영자	7.53	48.47	35.76	8.24	
	무급가족 종사자	4.48	42.48	48.73	4.30	
	실업자	21.39	33.43	40.23	4.95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0.46	48.94	32.53	8.07	14.423
	관리자·전문가	8.22	51.31	32.80	7.6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50	49.19	34.72	7.60	
	숙련 및 기술직	9.67	41.78	42.06	6.48	
	단순노무 종사자	11.62	39.25	43.05	6.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5	47.75	36.24	7.07	0.089
	비정규직	11.85	45.48	35.75	6.9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1	44.56	39.34	6.89	9.72
	중도적	8.88	49.48	34.77	6.86	
	진보적	11.73	45.81	33.79	8.67	

주: 1) “귀하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5〉 다음 분야의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χ^2
여성 국회의원 증가	전체		12.43	55.79	28.56	3.22	60.842***
	성별	남성	10.59	52.78	31.77	4.86	
		여성	14.32	58.91	25.25	1.53	43.139***
	연령	20대 이하	10.00	55.30	29.04	5.67	
		30대	14.00	51.34	32.08	2.58	
		40대	13.72	59.27	24.73	2.27	
		50대	12.97	59.46	24.20	3.37	
여성 기업 CEO 증가	전체		15.69	56.83	24.88	2.61	50.437***
	성별	남성	13.53	55.02	27.54	3.91	
		여성	17.91	58.69	22.14	1.26	34.400***
	연령	20대 이하	17.90	55.23	21.78	5.10	
		30대	17.50	56.45	23.26	2.79	
		40대	15.77	60.48	22.50	1.25	
		50대	15.33	54.74	28.50	1.43	
여성 법조인 증가	전체		19.93	55.45	21.89	2.73	55.726***
	성별	남성	16.71	54.37	24.90	4.03	
		여성	23.26	56.56	18.78	1.40	21.801*
	연령	20대 이하	22.00	52.59	20.91	4.50	
		30대	21.64	54.64	20.57	3.14	
		40대	19.23	57.98	20.30	2.50	
		50대	20.21	54.24	23.90	1.65	
여성 과학자 증가	전체		14.29	52.30	30.04	3.37	37.532***
	성별	남성	11.77	50.62	32.54	5.07	
		여성	16.88	54.02	27.47	1.62	30.358**
	연령	20대 이하	18.26	48.76	27.14	5.84	
		30대	15.12	49.81	30.24	4.83	
		40대	14.30	55.48	28.30	1.91	
		50대	14.69	51.71	31.81	1.80	
여성 장관 증가	전체		16.62	52.02	27.85	3.52	60.934***
	성별	남성	13.29	50.56	30.93	5.22	
		여성	20.06	53.52	24.67	1.75	37.677***
	연령	20대 이하	18.39	50.50	24.89	6.22	
		30대	15.65	51.73	28.04	4.58	
		40대	16.40	55.10	26.44	2.07	
		50대	19.82	45.97	31.53	2.68	
		60대 이상	12.68	56.88	28.06	2.38	

구분			매우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χ^2
여성 대학교수 증가	전체		13.42	53.47	29.09	4.03	47.478***
	성별	남성	11.28	52.90	29.77	6.06	
		여성	15.63	54.06	28.38	1.94	29.704**
	연령	20대 이하	14.56	52.96	25.49	6.99	
		30대	13.35	53.24	28.09	5.33	
		40대	13.17	53.36	31.19	2.28	
		50대	13.77	53.81	29.94	2.47	
		60대 이상	12.29	53.90	30.29	3.52	
여성 군 장성 증가	전체		10.41	48.84	35.06	5.68	58.575***
	성별	남성	9.11	46.05	36.39	8.44	
		여성	11.75	51.72	33.69	2.83	25.867*
	연령	20대 이하	11.00	49.62	30.33	9.06	
		30대	10.24	50.13	33.06	6.57	
		40대	10.68	49.28	35.66	4.38	
		50대	12.42	46.90	35.91	4.78	
		60대 이상	7.58	48.51	39.94	3.97	

주: 1) “귀하께서는 다음 분야의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56〉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구분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가부장적 사회문화	기타	χ^2
전체		23.25	37.31	13.72	25.23	0.50	
성별	남성	23.67	36.11	15.52	23.92	0.77	33.869***
	여성	22.82	38.54	11.86	26.57	0.21	
연령	20대 이하	23.51	38.35	14.70	22.31	1.14	53.618***
	30대	21.92	41.02	16.04	20.57	0.45	
	40대	29.03	31.99	11.09	27.19	0.70	
	50대	21.91	39.12	12.70	26.04	0.23	
	60대 이상	19.50	36.59	14.50	29.42	0.00	
지역	수도권	23.55	37.96	13.11	24.78	0.59	14.644**
	비수도권	22.96	36.64	14.33	25.67	0.40	
	대도시	25.32	34.07	11.42	28.63	0.55	55.463***
	중소도시 농어촌	23.40 14.34	41.09 34.60	14.82 18.37	20.13 32.69	0.56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44	35.54	11.28	26.22	0.53	23.611*
	중하층	21.51	36.82	13.58	27.48	0.61	
	중간층	23.90	37.70	15.11	23.05	0.25	
	중상층(상층)	20.42	43.21	10.74	23.95	1.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37	38.85	12.18	30.52	0.08	28.935*
	200만 원대	22.36	34.64	15.81	26.61	0.57	
	300만 원대	24.26	37.82	15.80	21.75	0.38	
	400만 원대	24.69	31.93	14.94	27.71	0.73	
	500만 원 이상	24.25	39.75	11.87	23.53	0.59	
학력	중졸 이하	21.01	37.83	11.06	30.11	0.00	35.668***
	고졸	24.80	32.90	14.91	26.82	0.57	
	대졸 이상	22.52	41.49	13.37	22.00	0.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42	40.76	12.86	21.80	0.15	29.379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24.00	36.17	14.84	24.78	0.21	
	고용주·자영자	21.88	35.48	14.20	27.46	0.99	
	무급가족 종사자	20.90	38.42	7.48	33.20	0.00	
	실업자	20.35	32.72	13.13	31.57	2.23	
	비경제활동인구	23.16	35.25	14.71	26.39	0.50	
직업	관리자·전문가	22.43	36.99	14.38	25.17	1.03	16.71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4.76	37.42	13.05	24.40	0.37	
	숙련 및 기술직	21.74	42.45	14.34	21.32	0.16	
	단순노무 종사자	18.78	37.51	12.24	31.14	0.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88	40.00	13.27	21.71	0.14	6.476
	비정규직	23.04	38.62	13.59	24.54	0.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32	34.79	15.77	26.82	0.30	17.688*
	중도적	23.71	37.69	12.67	25.30	0.63	
	진보적	23.33	38.84	13.61	23.75	0.46	

주: 1) “귀하는 다음 중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7〉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요소 배제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문화 개선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개선	기타	χ^2
전체		26.85	36.14	14.05	22.36	0.61	
성별	남성	27.00	36.60	14.00	21.55	0.85	5.16
	여성	26.69	35.65	14.11	23.20	0.35	
연령	20대 이하	30.27	35.77	12.88	19.64	1.44	40.443***
	30대	27.55	37.72	13.63	19.99	1.11	
	40대	28.97	33.58	14.35	22.88	0.23	
	50대	25.20	38.48	13.67	22.30	0.36	
	60대 이상	22.39	35.23	15.68	26.69	0.01	
지역	수도권	27.48	36.30	14.99	20.29	0.94	27.424***
	비수도권	26.20	35.97	13.11	24.45	0.27	
	대도시	29.95	34.02	12.41	23.01	0.61	53.165***
	중소도시 농어촌	25.81 18.62	38.98 32.83	14.99 16.80	19.47 31.75	0.75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05	35.49	12.68	24.22	0.57	12.053
	중하층	26.53	36.04	13.52	23.19	0.73	
	중간층	27.09	36.04	15.50	20.87	0.49	
	중상층(상층)	26.51	39.67	10.16	22.89	0.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93	33.38	14.92	31.76	0.00	33.630**
	200만 원대	23.78	39.60	13.96	21.89	0.76	
	300만 원대	29.66	32.06	15.07	22.91	0.31	
	400만 원대	27.90	36.02	15.21	20.58	0.29	
	500만 원 이상	28.71	38.00	12.77	19.47	1.05	
학력	중졸 이하	21.25	36.20	13.81	28.74	0.00	31.104***
	고졸	28.81	34.42	13.06	23.21	0.50	
	대졸 이상	26.66	38.32	14.53	19.72	0.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19	37.21	14.01	19.16	0.43	27.28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97	35.15	15.17	25.15	1.56	
	고용주·자영자	24.83	35.81	14.39	24.32	0.65	
	무급가족 종사자	26.31	37.31	7.84	28.54	0.00	
	실업자	20.85	37.73	12.55	28.88	0.00	
	비경제활동인구	28.12	35.06	14.22	22.09	0.51	
직업	관리자·전문가	25.14	37.63	10.36	26.54	0.33	10.32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7.60	36.76	15.06	20.02	0.56	
	숙련 및 기술직	27.42	35.75	13.30	23.02	0.52	
	단순노무 종사자	20.56	33.71	14.01	29.29	2.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30	37.91	14.16	18.16	0.46	9.485
	비정규직	23.70	33.87	14.65	26.47	1.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66	36.12	14.09	24.72	0.41	16.447*
	중도적	28.19	34.55	13.84	22.83	0.59	
	진보적	26.58	38.66	14.36	19.60	0.79	

주: 1) “그렇다면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58〉 각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χ^2	
시설반대갈등	전체	15.18	56.47	22.92	5.43		
	성별	남성	16.64	55.34	22.84	5.18	4.121
		여성	13.67	57.64	23.01	5.69	
	연령	20대 이하	17.11	61.01	17.49	4.39	20.558
		30대	14.72	56.45	24.32	4.50	
		40대	15.77	55.89	22.62	5.72	
		50대	16.53	55.22	22.78	5.47	
	60대 이상	11.67	54.12	27.27	6.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3	42.22	42.34	7.90	8.716
	중도적	11.48	40.75	40.87	6.90		
	진보적	11.18	43.56	38.89	6.37		
시설찬성갈등	전체	10.41	41.93	40.66	6.99		
	성별	남성	11.76	42.90	39.39	5.95	10.550*
		여성	9.02	40.93	41.97	8.07	
	연령	20대 이하	11.51	42.57	39.89	6.03	15.661
		30대	12.58	43.34	38.59	5.49	
		40대	9.91	40.39	41.46	8.24	
		50대	10.05	43.29	39.44	7.23	
	60대 이상	8.26	40.20	43.80	7.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3	42.22	42.34	7.90
	중도적		11.48	40.75	40.87	6.90	
	진보적		11.18	43.56	38.89	6.37	
도시 정비 관련 갈등	전체	11.31	48.43	33.74	6.52		
	성별	남성	12.48	46.70	34.77	6.05	4.336
		여성	10.10	50.21	32.67	7.01	
	연령	20대 이하	8.71	53.14	32.67	5.48	20.407
		30대	11.84	50.73	32.16	5.26	
		40대	14.23	45.83	33.13	6.81	
		50대	11.45	47.37	34.49	6.69	
	60대 이상	10.02	45.66	36.10	8.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8.88	47.78	36.85	6.49
	중도적		12.34	48.85	32.01	6.80	
	진보적		11.76	48.31	33.82	6.12	
보편적 이익갈등	전체	14.90	50.17	28.69	6.24		
	성별	남성	17.00	48.61	28.53	5.86	4.221
		여성	12.73	51.78	28.86	6.63	
	연령	20대 이하	19.47	47.90	27.79	4.85	28.510**
		30대	14.82	49.23	30.80	5.14	
		40대	16.27	49.50	27.55	6.68	
		50대	13.41	54.49	25.38	6.72	
	60대 이상	10.74	49.31	32.34	7.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9	53.17	30.77	5.57
	중도적		15.43	49.67	28.24	6.66	
	진보적		17.83	48.40	27.62	6.15	

구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χ^2
보편적 가치갈등	전체	10.46	50.97	32.19	6.38	4.019
	성별					
	남성	11.98	49.96	32.01	6.04	25.979*
	여성	8.89	52.01	32.38	6.73	
	연령					
	20대 이하	14.97	51.10	28.39	5.53	
	30대	10.63	50.50	33.52	5.35	
	40대	10.50	51.86	31.69	5.95	
	50대	9.16	50.86	33.08	6.90	
	60대 이상	7.34	50.42	34.17	8.07	
	이념적 성향					5.85
	보수적	8.23	50.79	34.39	6.59	
	중도적	9.58	51.37	32.82	6.23	
	진보적	13.75	50.47	29.33	6.45	

주: 1) “다음의 각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59〉 공공감동이 발생하는 이유

구분		상호 의견교류, 토론, 협상 토론회의 부족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구조) 부족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	정부의 일반적인 공공정책 (사업) 추진	같은 관련 법/ 제도/ 절차의 미비	기타	χ^2
성별	전체	26.90	26.31	14.46	8.57	12.08	7.12	3.44	1.12	13.768
	남성	27.77	25.31	15.14	8.26	11.63	6.41	3.54	1.95	
연령	여성	26.00	27.33	13.77	8.89	12.55	7.85	3.34	0.27	36.137
	20대 이하	26.88	23.74	12.61	9.77	12.48	5.82	5.04	3.66	
지역	30대	24.38	28.43	15.67	7.87	12.80	7.34	2.39	1.12	29.407***
	40대	28.16	25.96	13.21	9.32	12.69	7.21	3.16	0.29	
주관적 소득계층	50대	26.41	26.73	14.32	7.71	14.24	7.62	2.78	0.19	52.854***
	60대 이상	28.45	26.67	16.60	8.19	8.06	7.51	3.92	0.60	
주관적 소득계층	수도권	25.25	25.79	14.37	8.85	13.95	7.30	2.92	1.57	29.565
	비수도권	28.57	26.83	14.56	8.28	10.20	6.93	3.97	0.67	
주관적 소득계층	대도시	28.80	25.35	12.32	8.35	13.27	6.56	3.90	1.45	33.893
	중소도시	26.31	28.82	15.45	8.72	11.09	6.19	2.45	0.97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21.66	19.73	19.00	8.80	11.43	13.23	5.70	0.45	24.717*
	하층	32.82	27.14	13.90	4.97	9.27	6.59	4.52	0.79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26.85	26.39	14.13	8.87	13.08	6.60	3.10	0.99	24.717*
	중간층	23.86	26.49	15.42	9.56	12.07	7.96	3.25	1.38	
주관적 소득계층	중상층(상층)	34.00	21.48	10.59	9.45	13.90	5.45	4.04	1.09	24.717*
	200만 원 미만	32.02	28.68	12.55	8.09	7.82	6.94	3.58	0.32	
주관적 소득계층	200만 원대	30.09	27.73	16.26	6.79	9.36	5.99	2.97	0.82	24.717*
	300만 원대	25.72	25.01	16.04	7.39	14.84	5.94	4.59	0.46	
주관적 소득계층	400만 원대	24.76	28.84	12.35	7.45	12.00	8.83	4.82	0.95	24.717*
	500만 원 이상	25.19	24.55	14.47	10.54	13.26	7.58	2.44	1.97	
주관적 소득계층	중층 이하	30.00	29.45	13.83	7.72	7.66	7.27	3.69	0.37	24.717*
	고층	27.17	24.98	14.38	9.03	12.12	6.99	4.25	1.08	
주관적 소득계층	대중 이상	25.91	26.19	14.48	8.70	13.32	7.32	2.62	1.46	

(단위: %)

구분	상호 의견교류, 토론, 협상 등 소통 문화의 부족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	정책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구조) 부족	환경/안전/건강/경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사업) 추진	갈등 관련 법/ 제도/ 절차의 미비	기타	χ^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4	27.68	15.12	8.04	13.28	2.45	0.73	32.57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75	26.52	16.07	7.86	8.21	2.57	2.67	
	고용주·자영자	28.03	25.34	15.70	9.20	10.00	4.07	0.67	
	무급가족 종사자	28.25	26.85	9.60	4.85	16.43	4.49	0.00	
	실업자	27.34	27.21	11.04	10.84	9.91	5.88	0.67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25.69	24.95	12.83	9.15	13.87	4.20	1.50	25.268
	관리자·전문가	22.08	23.77	14.99	6.50	19.41	1.49	1.5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7.41	27.02	15.75	8.67	11.16	3.10	0.74	
	숙련 및 기술직	30.07	26.97	13.38	8.41	10.20	4.03	0.69	
	단순노무 종사자	28.23	28.71	15.92	7.12	5.56	2.66	2.98	
직업인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55	27.28	15.73	7.77	13.45	2.42	0.75	26.736*
	비정규직	27.77	27.63	14.53	8.50	8.61	2.62	2.32	
	보수직	23.22	26.46	14.96	8.87	13.10	3.98	0.24	
	중도직	28.76	25.65	14.84	8.62	11.73	2.97	0.90	
	진보직	27.10	27.21	13.44	8.23	11.78	3.73	2.23	

주: 1) “귀하께서는 공공갈등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60〉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시민들의 참여,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도

단위: %

구분		아주 잘되고 있다	비교적 잘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χ^2
전체		0.05	8.54	44.68	44.50	2.23	
성별	남성	0.06	8.10	44.27	45.29	2.27	3.222
	여성	0.04	8.98	45.11	43.68	2.19	
연령	20대 이하	0.18	7.33	50.08	39.25	3.15	35.532***
	30대	0.00	10.28	40.49	46.50	2.74	
	40대	0.00	6.96	46.26	43.81	2.96	
	50대	0.06	9.61	41.20	47.30	1.83	
	60대 이상	0.00	8.59	45.50	45.39	0.51	
지역	수도권	0.00	7.76	43.41	46.34	2.49	18.105***
	비수도권	0.10	9.32	45.98	42.64	1.96	
	대도시	0.00	8.87	45.49	44.05	1.58	8.893
	중소도시 농어촌	0.07 0.15	8.58 6.97	42.05 52.39	46.18 39.34	3.12 1.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0	7.01	36.32	53.66	2.80	47.249***
	중하층	0.00	7.53	44.96	45.27	2.23	
	중간층	0.04	9.99	47.44	40.52	2.01	
	중상층(상층)	0.00	8.50	46.10	43.19	2.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3	6.52	46.84	45.60	0.80	22.822
	200만 원대	0.00	7.76	43.51	47.15	1.58	
	300만 원대	0.00	8.62	42.94	45.47	2.97	
	400만 원대	0.00	8.02	45.65	43.83	2.49	
	500만 원 이상	0.04	9.79	44.88	42.75	2.55	
학력	중졸 이하	0.00	9.17	48.67	41.76	0.40	24.293***
	고졸	0.12	8.52	42.33	46.48	2.55	
	대졸 이상	0.00	8.29	45.76	43.53	2.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8.97	45.74	44.34	0.95	51.9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6	7.27	39.57	49.19	3.70	
	고용주·자영자	0.00	8.49	40.86	48.27	2.37	
	무급가족 종사자	0.00	8.78	37.00	49.45	4.76	
	실업자	0.00	5.59	45.15	44.24	5.01	
	비경제활동인구	0.06	8.99	49.62	38.85	2.47	
직업	관리자·전문가	0.00	4.92	44.79	47.17	3.12	38.07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00	9.59	42.42	46.01	1.98	
	숙련 및 기술직	0.00	7.92	42.32	47.74	2.02	
	단순노무 종사자	0.57	7.27	44.72	47.09	0.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9.24	45.13	44.71	0.92	18.773***
	비정규직	0.22	6.92	41.93	47.59	3.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7	9.45	40.49	48.56	1.43	14.821
	중도적	0.03	8.14	46.77	43.25	1.81	
	진보적	0.06	8.39	44.95	43.02	3.57	

주: 1) “우리 사회에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시민들의 참여,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61〉 정부가 현재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단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정책 집행에 있어 대화/협상/조 정 등 소통문화 정착	전체	27.96	56.17	14.91	0.88	0.08		
	성별	남성	30.52	53.71	14.76	0.92	0.09	3.309
		여성	25.32	58.70	15.08	0.85	0.06	
	연령	20대 이하	27.12	58.12	14.10	0.65	0.00	24.705
		30대	30.33	55.93	12.40	1.19	0.15	
		40대	30.59	53.15	15.43	0.61	0.22	
		50대	26.43	59.08	13.73	0.76	0.00	
		60대 이상	25.34	54.65	18.77	1.24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26	56.77	15.99	0.98	0.00	14.348
		중도적	27.19	55.35	16.42	0.93	0.10	
진보적		30.62	56.94	11.62	0.73	0.10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전체	44.10	42.18	12.71	0.98	0.03		
	성별	남성	45.86	41.10	12.10	0.94	0.00	4.624
		여성	42.28	43.30	13.34	1.01	0.07	
	연령	20대 이하	46.04	38.64	14.79	0.53	0.00	25.251
		30대	48.16	41.52	9.43	0.74	0.15	
		40대	42.32	43.18	13.76	0.71	0.03	
		50대	45.56	40.98	12.64	0.82	0.00	
		60대 이상	38.75	46.40	12.75	2.09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79	43.90	12.96	1.35	0.00	22.409**
		중도적	41.37	42.84	14.92	0.87	0.00	
진보적		50.39	39.67	9.00	0.82	0.12		
정부정책의 적극적 홍보	전체	30.45	50.18	17.18	2.02	0.17		
	성별	남성	31.68	48.36	17.48	2.31	0.17	0.854
		여성	29.19	52.05	16.87	1.72	0.17	
	연령	20대 이하	31.70	45.82	19.84	2.43	0.22	32.728**
		30대	36.01	48.82	12.73	2.30	0.15	
		40대	28.66	55.60	14.09	1.28	0.37	
		50대	29.68	51.06	17.96	1.30	0.00	
		60대 이상	26.79	48.85	21.31	2.95	0.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25	51.83	18.47	2.22	0.23	12.279
		중도적	29.39	51.24	17.52	1.69	0.17	
진보적		34.87	47.09	15.54	2.38	0.12		
정책결정과정 에서 시민 참여 절차 보장	전체	26.57	54.20	17.04	2.16	0.03		
	성별	남성	28.25	51.47	18.37	1.92	0.00	5.082
		여성	24.85	57.02	15.68	2.40	0.06	
	연령	20대 이하	27.62	52.45	16.99	2.95	0.00	32.171**
		30대	30.49	49.69	18.82	0.85	0.15	
		40대	28.09	54.67	15.21	2.02	0.00	
		50대	24.32	58.39	15.01	2.28	0.00	
		60대 이상	22.67	55.12	19.57	2.64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24	53.36	19.54	1.86	0.00	18.789*
		중도적	25.07	55.49	17.40	2.04	0.00	
진보적		30.09	52.86	14.36	2.60	0.10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공공갈등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전체		27.40	50.07	18.96	2.92	0.66	
	성별	남성	29.45	47.53	19.04	3.10	0.88	6.247
		여성	25.28	52.68	18.87	2.74	0.43	
	연령	20대 이하	21.84	49.64	24.56	3.03	0.93	33.942**
		30대	34.72	43.04	17.64	3.81	0.80	
		40대	27.93	51.15	16.94	3.11	0.87	
		50대	28.90	53.33	15.04	2.37	0.36	
		60대 이상	23.67	52.43	21.18	2.38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94	52.55	17.33	1.73	0.44	25.490**
		중도적	24.93	50.66	20.79	3.42	0.20	
		진보적	30.84	47.01	17.43	3.16	1.56	
공공갈등 해결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	전체		28.82	52.75	16.22	2.09	0.12	
	성별	남성	30.09	51.11	16.86	1.81	0.14	1.895
		여성	27.52	54.45	15.55	2.38	0.09	
	연령	20대 이하	27.94	52.42	17.04	2.61	0.00	19.714
		30대	35.28	46.72	16.39	1.46	0.15	
		40대	28.94	53.53	15.23	2.08	0.22	
		50대	28.76	54.21	14.40	2.51	0.12	
		60대 이상	23.53	56.36	18.27	1.76	0.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65	56.56	16.04	0.75	0.00	17.837*
		중도적	27.31	52.83	16.95	2.77	0.14	
		진보적	33.07	49.39	15.20	2.15	0.18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전체		26.77	53.33	18.37	1.46	0.08	
	성별	남성	29.29	51.44	17.82	1.36	0.09	2.991
		여성	24.17	55.29	18.93	1.56	0.06	
	연령	20대 이하	23.76	53.27	21.51	1.46	0.00	21.377
		30대	32.16	49.74	17.33	0.63	0.15	
		40대	23.41	59.37	15.01	1.99	0.22	
		50대	29.95	50.52	18.24	1.29	0.00	
		60대 이상	24.78	53.31	20.07	1.84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22	54.95	18.76	1.07	0.00	18.174*
		중도적	24.97	54.65	18.98	1.30	0.10	
		진보적	30.93	49.88	17.05	2.03	0.10	

주: 1) “정부가 현재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각 갈등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62〉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단위: %)

구분		대통령 또는 광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 단체	정치인 (국회의 원 및 지방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기업 및 경제계	국민 (주민) 개개인	기타	χ^2
전체		20.66	42.45	13.35	7.55	1.55	14.25	0.19	
성별	남성	19.19	43.06	13.64	7.44	1.62	14.76	0.28	5.822
	여성	22.18	41.81	13.04	7.67	1.47	13.73	0.10	
연령	20대 이하	19.64	37.47	13.85	10.73	2.22	15.60	0.48	29.409
	30대	24.74	41.91	11.59	6.35	1.55	13.73	0.13	
	40대	18.77	43.40	12.30	7.98	1.28	16.11	0.16	
	50대	18.87	44.92	15.95	7.56	1.12	11.56	0.02	
	60대 이상	21.73	44.04	12.87	5.18	1.66	14.34	0.18	
지역	수도권	23.06	39.95	14.50	7.41	1.40	13.55	0.14	19.613**
	비수도권	18.23	44.98	12.18	7.70	1.70	14.96	0.24	
	대도시	22.61	43.42	10.21	7.42	2.22	13.85	0.27	52.090***
	중소도시	18.20	42.88	15.98	8.35	0.87	13.59	0.1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23.03	36.74	15.05	4.75	1.66	18.65	0.12	
	하층	25.48	45.99	9.63	6.47	1.11	10.99	0.33	38.258**
	중하층	21.57	43.96	13.54	5.62	1.57	13.46	0.27	
	중간층	18.30	39.65	14.75	9.24	1.69	16.28	0.09	
	중상층(상층)	18.50	43.70	11.96	10.82	1.63	13.38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86	47.12	12.93	5.97	1.44	10.44	0.24	31.393
	200만 원대	24.30	42.39	10.85	6.98	1.55	13.51	0.42	
	300만 원대	22.55	39.47	17.18	7.21	0.94	12.60	0.06	
	400만 원대	21.80	42.67	11.31	6.51	1.11	16.60	0.00	
	500만 원 이상	17.22	42.22	13.33	8.98	2.09	15.94	0.22	
학력	중졸 이하	19.29	46.41	13.01	5.12	1.61	14.06	0.50	10.478
	고졸	19.99	42.80	13.63	8.13	1.11	14.10	0.24	
	대졸 이상	21.36	40.84	13.18	7.99	1.93	14.66	0.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49	43.37	12.96	7.95	1.25	12.95	0.04	33.76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23.79	40.15	14.05	7.67	1.86	12.16	0.32	
	고용주·자영자	19.36	44.68	13.44	6.50	0.96	15.06	0.00	
	무급가족 종사자	18.48	41.16	19.01	3.98	1.19	16.17	0.00	
	실업자	20.98	44.14	12.53	5.18	0.97	15.90	0.3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9.33	40.31	12.97	8.58	2.43	15.88	0.50	
	관리자·전문가	14.69	43.54	16.31	8.88	0.21	16.37	0.00	35.08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2.83	41.95	12.60	7.43	1.63	13.57	0.00	
	숙련 및 기술직	19.88	42.81	14.00	6.88	0.97	15.06	0.40	
	단순노무 종사자	20.67	52.37	15.37	4.95	0.75	5.8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31	43.34	13.24	7.38	1.33	13.36	0.04	13.014*
	비정규직	23.85	40.72	13.24	9.02	1.57	11.33	0.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76	42.95	14.35	7.11	1.46	12.22	0.15	7.558
	중도적	20.31	41.18	13.61	8.05	1.27	15.38	0.20	
	진보적	20.27	44.02	12.08	7.14	2.06	14.21	0.22	

주: 1)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해결에 있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표 3-63〉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적절한 역할

(단위: %)

구분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집단을 단호하게 처벌한다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	기타	χ^2
전체		15.57	17.41	24.14	42.49	0.39	
성별	남성	17.42	17.17	23.39	41.68	0.34	6.321
	여성	13.66	17.66	24.92	43.33	0.44	
연령	20대 이하	16.49	18.65	22.57	41.49	0.80	45.584***
	30대	14.96	17.94	19.44	46.69	0.96	
	40대	13.90	17.88	24.74	43.49	0.00	
	50대	16.73	14.44	26.80	41.93	0.10	
	60대 이상	15.83	18.39	26.57	39.03	0.18	
지역	수도권	15.74	12.44	22.02	49.31	0.49	90.182***
	비수도권	15.41	22.43	26.28	35.59	0.28	
	대도시	14.84	15.81	23.46	45.31	0.58	32.247***
	중소도시	16.41	20.16	23.91	39.26	0.27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5.06	12.41	27.86	44.55	0.12	21.250*
	하층	17.20	17.73	23.72	41.27	0.08	
	중하층	15.37	16.64	24.37	43.20	0.42	
	중간층	15.46	18.96	24.37	40.69	0.52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2.83	8.90	21.94	56.33	0.00	13.992
	200만 원 미만	14.74	19.50	27.56	37.68	0.52	
	200만 원대	16.11	18.31	24.06	41.14	0.39	
	300만 원대	15.88	16.95	24.37	42.64	0.17	
	400만 원대	17.38	18.58	24.63	38.58	0.83	
학력	500만 원 이상	14.82	15.98	22.62	46.29	0.28	8.067
	중졸 이하	13.46	19.34	24.99	41.96	0.25	
	고졸	16.22	17.06	24.90	41.57	0.25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5.94	17.04	22.97	43.47	0.58	18.07
	상용직 임금근로자	16.53	17.90	23.68	41.31	0.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32	16.56	23.92	41.80	0.40	
	고용주·자영자	17.04	16.53	23.48	42.91	0.04	
	무급가족 종사자	14.49	13.27	24.21	48.03	0.00	
	실업자	12.85	18.49	25.55	43.12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2.75	18.16	25.21	43.37	0.51	29.966**
	관리자·전문가	15.59	9.16	24.08	50.08	1.1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99	18.47	22.66	41.74	0.15	
	숙련 및 기술직	15.94	19.39	23.59	40.66	0.42	
	단순노무 종사자	18.43	13.17	31.21	36.39	0.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69	17.73	23.63	41.33	0.62	3.632
	비정규직	16.84	17.14	24.00	41.68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59	16.59	26.84	38.80	0.18	39.051***
	중도적	16.49	17.95	22.33	42.95	0.27	
	진보적	12.40	17.24	24.70	44.91	0.75	

주: 1)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적절한 역할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2) *p<0.05, **p<0.01, ***p<0.001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5개년 지속 문항 비교

〈부표 4-1〉 응답자 특성별 행복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전체		6.2		6.0		6.5		6.7		6.6	
성별	남	6.1	8.16**	6.0	0.88	6.5	2.51	6.6	4.09*	6.6	6.61*
	여	6.3		6.1		6.5		6.8		6.7	
연령대	20대 이하	6.6	17.26***	6.3	13.27***	6.8	14.85***	7.2	26.01***	7.0	13.60***
	30대	6.4		6.1		6.7		6.9		6.8	
	40대	6.2		5.9		6.5		6.7		6.5	
	50대	5.9		6.0		6.3		6.6		6.5	
	60대	5.8		5.8		6.1		6.2		6.4	
학력	중졸 이하	5.6	57.35***	5.5	58.64***	6.0	41.17***	6.1	59.09***	6.1	29.08***
	고졸	6.2		6.0		6.4		6.7		6.6	
	대졸 이상	6.6		6.3		6.8		7.0		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	55.37***	5.3	66.11***	5.9	30.13***	5.8	55.77***	6.1	23.41***
	200만 원대	6.1		5.8		6.4		6.6		6.3	
	300만 원대	6.2		6.2		6.5		6.7		6.5	
	400만 원대	6.5		6.3		6.6		7.0		6.7	
	500만 원 이상	7.0		6.5		6.9		7.1		6.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5.1	123.94***	4.8	213.34***	5.2	125.06***	5.3	148.09***	5.8	63.55***
	중하층	6.1		5.9		6.2		6.6		6.5	
	중간층	6.8		6.5		6.9		7.1		6.9	
	중상층(상층)	7.4		7.1		7.5		7.8		7.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임용직·공무원	6.6	21.07***	6.3	22.57***	6.7	22.07***	7.1	23.43***	6.9	13.41***
	일용직·근로자	5.7		5.4		5.7		6.0		6.3	
	고용주·자영자	6.2		6.1		6.5		6.7		6.4	
	무급가족 종사자	6.3		6.2		6.8		6.9		6.2	
	실업자	4.9		5.1		5.5		5.7		5.7	
	비경제활동인구	6.2		6.1		6.6		6.8		6.7	
직업	관리자·전문가	7.2	20.76***	6.2	14.95***	6.5	5.78***	7.0	19.51***	6.9	9.3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3		6.2		6.6		6.9		6.7	
	숙련 및 기술직	6.0		6.0		6.4		6.8		6.4	
	단순노무 종사자	5.7		5.5		6.0		5.8		6.0	
직업 안정성	정규직	6.7	60.47***	6.3	61.52***	6.7	56.28***	7.1	65.02***	6.9	21.29***
	비정규직	5.8		5.5		6.0		6.2		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1	4.50*	5.9	10.89**	6.3	6.92**	6.5	16.94***	6.5	11.02***
	중도적	6.2		6.0		6.5		6.8		6.5	
	진보적	6.4		6.3		6.6		6.9		6.9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전체		6.1		5.7		6.2		6.3		6.3	
성별	남	5.9	2.96	5.6	0.40	6.2	1.55	6.2	5.25*	6.2	5.48*
	여	6.2		5.7		6.2		6.4		6.3	
연령대	20대 이하	6.3	16.46***	5.9	9.69***	6.4	10.35***	6.6	16.52***	6.6	9.80***
	30대	6.3		5.7		6.2		6.6		6.5	
	40대	6.1		5.6		6.2		6.3		6.2	
	50대	5.8		5.6		6.0		6.1		6.1	
	60대	5.7		5.5		5.9		6.0		6.0	
학력	중졸 이하	5.4	63.47***	5.2	56.10***	5.7	41.12***	5.7	51.85***	5.8	25.0***
	고졸	6.1		5.6		6.2		6.3		6.3	
	대졸 이상	6.3		5.9		6.4		6.6		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	59.23***	5.0	66.87***	5.5	45.36***	5.4	60.01***	5.6	28.70***
	200만 원대	5.8		5.4		6.0		6.1		6.0	
	300만 원대	6.2		5.9		6.2		6.3		6.2	
	400만 원대	6.3		5.9		6.3		6.6		6.3	
	500만 원 이상	6.8		6.2		6.6		6.8		6.7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5.0	134.44***	4.3	261.46***	4.8	166.20***	4.8	190.37***	5.4	95.55***
	중하층	5.9		5.5		5.9		6.2		6.2	
	중간층	6.6		6.2		6.6		6.8		6.6	
	중상층(상층)	7.4		6.8		7.4		7.5		7.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근근로자	6.4	19.15***	5.9	24.14***	6.3	21.03***	6.6	19.38***	6.5	13.67***
	임시·일용직 근로자	5.5		4.9		5.6		5.9		5.9	
	고용주·자영자	6.0		5.7		6.2		6.3		6.1	
	무급가족 종사자	6.3		6.0		6.4		6.5		6.1	
	실업자	4.8		4.9		4.8		5.1		5.4	
	비경제활동인구	6.1		5.7		6.3		6.3		6.4	
직업	관리자·전문가	6.8	21.91***	5.9	18.52***	6.3	7.27***	6.7	15.87***	6.6	9.3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2		5.8		6.2		6.4		6.3	
	숙련 및 기술직	5.8		5.6		6.1		6.4		6.1	
	단순노무 종사자	5.4		5.1		5.7		5.7		5.6	
직업 안정성	정규직	6.5	67.84***	5.9	77.62***	6.4	49.82***	6.6	42.81***	6.5	23.81***
	비정규직	5.5		5.1		5.7		6.0		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	2.91	5.5	9.26***	6.0	2.63	6.2	14.06***	6.1	9.47***
	중도적	6.0		5.7		6.2		6.3		6.2	
	진보적	6.2		5.9		6.3		6.4		6.5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3〉 응답자 특성별 우울도

구분		2014		2016		2017		2018	
		우울도	F값 (유의도)	우울도	F값 (유의도)	우울도	F값 (유의도)	우울도	F값 (유의도)
	전체	3.2		3.1		2.7		2.9	
성별	남	3.2	1.87	3.0	6.08*	2.7	1.88	2.8	9.64***
	여	3.3		3.2		2.8		3.0	
연령대	20대 이하	3.0	6.57***	2.8	5.18***	2.5	6.58***	2.8	3.29*
	30대	3.1		3.1		2.6		2.9	
	40대	3.3		3.0		2.7		3.0	
	50대	3.2		3.3		2.9		2.9	
	60대	3.4		3.3		3.0		3.1	
학력	중졸 이하	3.6	28.59***	3.6	17.86***	3.3	30.89***	3.2	16.36***
	고졸	3.2		3.0		2.8		2.9	
	대졸 이상	3.0		3.0		2.5		2.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	33.47***	3.6	15.20***	3.6	30.60***	3.4	14.44***
	200만 원대	3.3		3.1		2.7		2.9	
	300만 원대	3.3		3.0		2.8		2.9	
	400만 원대	3.1		3.1		2.5		2.8	
	500만 원 이상	2.4		2.8		2.5		2.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0	58.55***	3.9	47.90***	3.8	82.99***	3.5	30.89***
	중하층	3.4		3.3		2.9		3.0	
	중간층	2.7		2.8		2.4		2.8	
	중상층(상층)	2.2		2.4		2.2		2.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근근로자	2.8	12.40***	3.0	6.24***	2.5	15.35***	2.7	11.50***
	임시·일용직 근로자	3.5		3.4		3.3		3.2	
	고용주·자영자	3.4		3.0		2.6		2.9	
	무급가족 종사자	3.2		2.8		2.5		3.1	
	실업자	4.1		3.7		3.5		3.7	
	비경제활동인구	3.3		3.0		2.9		2.9	
직업	관리자·전문가	2.4	8.51***	3.3	4.23**	2.6	8.53***	2.7	4.20**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3.2		3.1		2.6		2.9	
	숙련 및 기술직	3.1		2.8		2.5		2.7	
	단순노무 종사자	3.4		3.3		3.2		3.4	
직업 안정성	정규직	2.8	24.16***	3.0	10.79**	2.4	41.85***	2.7	22.29***
	비정규직	3.3		3.3		3.2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	1.10	3.1	0.46	3.0	9.66***	3.0	2.24
	중도적	3.2		3.1		2.7		3.0	
	진보적	3.1		3.0		2.6		2.8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4〉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대한 신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성별	전체	4.6		4.7		4.7		5.1		4.9	
	남	4.5	1.11	4.8	0.35	4.7	0.43	5.1	0.01	4.9	0.15
	여	4.7		4.7		5.1		4.8			
연령대	20대 이하	4.3	25.77***	4.8	2.71*	4.8	6.21***	5.1	0.78	4.9	2.73*
	30대	4.3		4.5		4.5		5.0		4.9	
	40대	4.7		4.7		4.7		5.2		4.9	
	50대	4.8		4.8		4.8		5.1		4.7	
	60대	5		4.9		4.9		5.1		4.8	
학력	중졸 이하	4.8	18.79***	4.7	0.61	4.7	0.38	5.1	2.01	4.9	2.97
	고졸	4.6		4.8		4.8		5.1		4.8	
	대졸 이상	4.4		4.7		4.7		5.2		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	3.28*	4.7	3.75**	4.7	3.27*	5.1	2.19	4.9	2.79*
	200만 원대	4.6		4.5		4.5		5.1		4.7	
	300만 원대	4.4		4.8		4.6		5.0		4.9	
	400만 원대	4.5		4.9		4.8		5.2		4.8	
	500만 원 이상	4.8		4.8		4.9		5.2		4.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5	2.87*	4.4	20.00***	4.2	21.34***	4.6	14.98***	4.4	13.33***
	중하층	4.4		4.7		4.5		5.1		4.8	
	중간층	4.8		4.9		5		5.3		5.0	
	중상층(상층)	4.8		4.8		5.1		5.2		5.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4.6	7.63***	4.8	1.08	4.8	5.86***	5.2	0.81	5.0	3.93**
	일용직·근로자	4.7		4.6		4.6		4.9		4.7	
	고용주·자영자	4.7		4.7		4.7		5.1		4.7	
	무급가족종사자	5.3		4.8		4.9		5.0		4.3	
	실업자	3.7		4.7		3.8		5.1		4.5	
	비경제활동인구	4.6		4.8		4.7		5.1		4.9	
직업	관리자·전문가	4.8	3.93**	4.6	1.44	4.6	0.87	5.2	2.58	4.9	2.0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6		4.7		4.8		5.1		4.9	
	숙련 및 기술직	4.6		4.8		4.8		5.1		5.0	
	단순무 종사자	4.8		4.6		4.7		4.8		4.5	
직업 안정성	정규직	4.9	2.25	4.8	6.26*	4.9	7.53**	5.2	7.46**	5.1	8.95**
	비정규직	5.2		4.6		4.6		4.9		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	23.36***	4.8	3.86*	4.9	7.94***	5.1	5.39**	4.6	14.66***
	중도적	4.7		4.7		4.7		5.1		4.9	
	진보적	4.2		4.8		4.5		5.2		5.0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5〉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5		2.3		2.5		2.4		2.4	
성별	남	2.4	6.44*	2.3	0.51	2.5	0.88	2.4	0.05	2.4	0.40
	여	2.5		2.3		2.5		2.4		2.3	
연령대	20대 이하	2.5	3.51**	2.4	5.02***	2.7	8.85*** *	2.5	3.22*	2.6	8.24***
	30대	2.3		2.3		2.4		2.4		2.2	
	40대	2.5		2.2		2.4		2.4		2.3	
	50대	2.4		2.3		2.4		2.4		2.3	
	60대	2.5		2.4		2.4		2.4		2.4	
학력	중졸 이하	2.5	1.53	2.4	4.22*	2.4	2.11	2.5	0.72	2.4	5.90***
	고졸	2.5		2.3		2.5		2.4		2.3	
	대졸 이상	2.4		2.3		2.5		2.4		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	2.14	2.3	0.36	2.4	7.33***	2.4	1.43	2.4	1.22
	200만 원대	2.4		2.3		2.4		2.4		2.3	
	300만 원대	2.4		2.3		2.4		2.4		2.3	
	400만 원대	2.5		2.3		2.5		2.4		2.4	
	500만 원 이상	2.6		2.3		2.6		2.4		2.4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3	12.47***	2.2	9.34***	2.2	30.53***	2.2	12.36***	2.2	7.45***
	중하층	2.4		2.3		2.4		2.4		2.3	
	중간층	2.6		2.4		2.6		2.5		2.4	
	중상층(상층)	2.7		2.3		2.8		2.5		2.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	3.26**	2.3	2.95*	2.5	2.40*	2.5	0.67	2.3	0.62
	일용직 임금근로자	2.4		2.3		2.4		2.4		2.4	
	고용주·자영자	2.5		2.3		2.4		2.4		2.3	
	무급가족 종사자	2.8		2.5		2.6		2.4		2.2	
	실업자	2.2		2.1		2.3		2.4		2.3	
	비경제활동인구	2.5		2.3		2.5		2.4		2.4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0.57	2.2	3.17*	2.4	0.42	2.5	0.25	2.3	4.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		2.3		2.5		2.4		2.3	
	숙련 및 기술직	2.4		2.4		2.5		2.5		2.4	
	단순노무 종사자	2.5		2.4		2.5		2.4		2.3	
직업 안정성	정규직	2.5	2.46	2.3	2.43	2.5	4.33*	2.5	1.35	2.4	0.21
	비정규직	2.3		2.3		2.5		2.4		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	1.18	2.3	0.53	2.4	1.71	2.3	10.65***	2.3	0.60
	중도적	2.5		2.3		2.5		2.4		2.4	
	진보적	2.5		2.3		2.6		2.5		2.4	

주:1) 매우 동의한다 1~ 매우 반대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6〉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4		2.6		2.6		2.5	
성별	남	2.6	1.46	2.4	0.01	2.6	0.00	2.5	2.5	0.69
	여	2.6		2.4		2.6		2.6	2.5	
연령대	20대 이하	2.6	231	2.5	5.18***	2.7	4.35**	2.6	2.7	3.65**
	30대	2.5		2.4		2.6		2.5	2.5	
	40대	2.6		2.3		2.5		2.5	2.4	
	50대	2.6		2.4		2.5		2.5	2.4	
	60대	2.7		2.5		2.6		2.7	2.5	
학력	중졸 이하	2.6	0.25	2.4	1.63	2.5	0.07	2.7	2.5	1.39
	고졸	2.6		2.5		2.6		2.6	2.5	
	대졸 이상	2.6		2.4		2.6		2.5	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1.88	2.4	1.20	2.5	3.97**	2.7	2.5	0.31
	200만 원대	2.6		2.4		2.5		2.6	2.5	
	300만 원대	2.5		2.4		2.5		2.5	2.5	
	400만 원대	2.7		2.4		2.6		2.6	2.5	
	500만 원 이상	2.8		2.4		2.6		2.5	2.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5	7.59***	2.3	12.04***	2.3	17.42***	2.5	2.2	12.69***
	중하층	2.6		2.4		2.5		2.6	2.5	
	중간층	2.7		2.5		2.7		2.6	2.6	
	중상층(상층)	2.6		2.4		2.7		2.7	2.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근로자	2.7	2.03	2.4	6.07***	2.6	2.89*	2.6	2.6	2.74*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2.3		2.5		2.5	2.5	
	고용주·자영자	2.6		2.4		2.5		2.5	2.4	
	무급가족 종사자	2.8		2.8		2.5		2.6	2.4	
	실업자	2.4		2.3		2.5		2.5	2.4	
	비경제활동인구	2.6		2.4		2.6		2.6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0.44	2.3	3.61	2.4	1.27	2.5	2.4	1.85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2.7		2.4		2.6		2.6	2.5	
	숙련 및 기술직	2.6		2.5		2.6		2.6	2.5	
	단순노무 종사자	2.6		2.4		2.6		2.5	2.6	
직업 안정성	정규직	2.7	1.42	2.4	9.55**	2.6	5.58*	2.6	2.5	2.85
	비정규직	2.6		2.3		2.5		2.5	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	17.83***	2.4	1.46	2.6	0.77	2.5	2.4	2.01
	중도적	2.7		2.4		2.6		2.6	2.5	
	진보적	2.7		2.5		2.6		2.6	2.6	

주: 1) 매우 동의한다 1~ 매우 반대한다 5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7〉 자원봉사 횟수

구분	①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②한 달에 한두 번	③일 년에 6-7번	④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⑤전혀 안 했다	합계
2014	2.4	5.2	5.9	14.0	72.6	100.0
2015	2.2	4.3	3.3	12.4	77.7	100.0
2016	1.7	4.5	3.0	10.6	80.1	100.0
2017	2.8	4.7	2.2	10.8	79.5	100.0
2018	1.9	3.3	2.8	12.1	79.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8〉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구분	①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②한 달에 한두 번	③일 년에 6-7번	④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⑤전혀 안 했다	합계
2014	0.9	10.8	5.8	16.4	66.1	100.0
2015	1.0	8.8	2.8	18.7	68.7	100.0
2016	1.1	7.8	2.8	16.1	72.3	100.0
2017	0.9	9.9	2.1	14.2	73.0	100.0
2018	0.7	9.5	2.5	13.5	73.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9〉 국가 자금융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금융심 정도	F값 (유일도)	자금융심 정도	F값 (유일도)	자금융심 정도	F값 (유일도)	자금융심 정도	F값 (유일도)	자금융심 정도	F값 (유일도)
성별	전체									
	남	2.8		2.8	2.8		2.9		2.8	
	여	2.8	3.83	2.8	11.33****		2.8	4.78*	2.8	0.02
연령대	20대 이하	2.8		2.8	2.7		2.8		2.7	
	30대	2.7		2.7	2.7		2.8		2.8	
	40대	2.8	69.92****	2.8	33.25****		2.8	34.38****	2.8	15.16****
	50대	2.9		2.9	2.9		2.9		2.8	
	60대	3.1		3.1	3.0		3.1		3.0	
	중졸 이하	3.0		3.0	3.0		3.0		3.0	
학력	고졸	2.8	69.98****	2.8	45.40****		2.8	33.45****	2.8	25.58****
	대졸 이상	2.8		2.8	2.8		2.8		2.8	
	200만 원 미만	3.0		2.9	2.9		2.9		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2.9		2.8	2.8		2.9		2.8	
	300만 원대	2.8	24.34****	2.8	4.70****		2.8	7.91****	2.8	9.41****
	400만 원대	2.7		2.8	2.8		2.8		2.9	
	500만 원 이상	2.8		2.8	2.8		2.9		2.8	
	하층	2.8		2.8	2.7		2.8		2.8	
	중하층	2.8		2.8	2.8		2.9		2.8	
주관적 소득 계층	중간층	2.9	3.79*	2.9	8.25****		2.9	11.37****	2.9	6.21****
	중상층(상층)	3.1		2.9	3.0		3.0		2.9	
	상용직 임금근로자	2.9		2.8	2.8		2.8		2.8	
경제 활동 상태	임시·일용직 근로자	2.8		2.8	2.8		2.8		2.8	
	고용주·자영자	2.8		2.9	4.89****		2.9	5.88****	2.8	1.59
	무급가족 종사자	3.0	5.48****	3.0			3.0		2.9	
	실업자	2.7		2.8	2.7		2.7		2.9	
	비경제활동인구	2.9		2.9	2.9		2.9		2.8	
	관리자·전문가	2.9	9.26****	2.8	2.93*		2.9	1.97	2.8	3.53*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극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극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극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극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극심 정도	F값 (유의도)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2.8		2.8		2.8		2.8		2.8	
	2.9		2.9		2.8		2.9		2.9	
	2.9		2.9		2.9		2.9		2.9	
직업 인정성	2.9		2.8		2.8		2.8		2.8	
	2.8	1.15	2.8	0.19	2.8	0.01	2.8	0.30	2.9	1.47
	2.9		2.9		3.0		2.9		2.8	
이념적 성향	2.8	16.58***	2.8	21.25***	2.8	38.97***	2.8	12.97***	2.8	3.81*
	2.8		2.8		2.7		2.8		2.9	
	2.8		2.8							

주: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 매우 자랑스럽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6		3.6		3.5		3.6	
성별	남	3.7	7.10**	3.6	6.72**	3.5	0.09	3.6	1.02
	여	3.5		3.6		3.5		3.6	
연령대	20대 이하	3.6	7.83***	3.6	2.59*	3.5	2.09	3.5	2.63*
	30대	3.6		3.7		3.6		3.6	
	40대	3.7		3.6		3.6		3.6	
	50대	3.6		3.6		3.6		3.6	
	60대	3.5		3.5		3.5		3.6	
학력	중졸 이하	3.5	14.24***	3.6	1.17	3.5	2.78	3.5	4.56*
	고졸	3.6		3.6		3.6		3.6	
	대졸 이상	3.7		3.6		3.5		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5	7.32***	3.6	0.34	3.5	1.91	3.5	3.15*
	200만 원대	3.6		3.6		3.6		3.7	
	300만 원대	3.7		3.5		3.6		3.6	
	400만 원대	3.6		3.6		3.6		3.6	
	500만 원 이상	3.7		3.6		3.5		3.6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7	0.31	3.7	3.51*	3.6	5.31**	3.8	6.24***
	중하층	3.6		3.6		3.5		3.6	
	중간층	3.6		3.5		3.5		3.6	
	중상층(상층)	3.5		3.6		3.6		3.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	3.32**	3.6	0.82	3.5	1.66	3.6	2.22*
	임시·일용직 근로자	3.5		3.6		3.6		3.6	
	고용주·자영자	3.8		3.7		3.6		3.7	
	무급가족 종사자	3.6		3.4		3.4		3.6	
	실업자	3.8		3.6		3.5		3.6	
	비경제활동인구	3.5		3.5		3.5		3.5	
직업	관리자·전문가	3.6	3.35*	3.7	0.55	3.5	1.39	3.6	0.23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3.7		3.6		3.6		3.6	
	숙련 및 기술직	3.7		3.6		3.6		3.6	
	단순노무 종사자	3.5		3.6		3.6		3.7	
직업 안정성	정규직	3.6	0.60	3.6	2.90	3.5	6.99**	3.5	0.19
	비정규직	3.6		3.7		3.6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4.68**	3.6	0.87	3.6	2.97	3.6	0.86
	중도적	3.6		3.6		3.6		3.6	
	진보적	3.7		3.6		3.5		3.6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4.2		4.3		4.1		4.2		4.2	
성별	남	4.2	0.03	4.3	3.93*	4.2	2.42	4.2	3.51	4.2	2.69
	여	4.2		4.3		4.1		4.2		4.2	
연령대	20대 이하	4.2	5.23***	4.3	7.26***	4.1	3.30*	4.1	3.23*	4.1	4.45**
	30대	4.2		4.3		4.2		4.3		4.3	
	40대	4.3		4.4		4.2		4.3		4.3	
	50대	4.2		4.3		4.2		4.2		4.2	
	60대	4.2		4.2		4.1		4.2		4.2	
학력	중졸 이하	4.2	7.29***	4.3	6.06**	4.2	0.53	4.2	1.08	4.2	4.26*
	고졸	4.3		4.3		4.2		4.2		4.2	
	대졸 이상	4.2		4.3		4.1		4.2		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	2.69*	4.3	3.15*	4.2	1.44	4.3	1.24	4.2	0.08
	200만 원대	4.2		4.4		4.2		4.3		4.2	
	300만 원대	4.3		4.3		4.2		4.2		4.2	
	400만 원대	4.3		4.3		4.1		4.3		4.2	
	500만 원 이상	4.2		4.3		4.1		4.2		4.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3	0.89	4.5	16.59***	4.3	10.48***	4.5	15.84***	4.4	22.36***
	중하층	4.3		4.3		4.2		4.2		4.3	
	중간층	4.2		4.2		4.1		4.1		4.1	
	중상층(상층)	4.1		4.2		4.1		4.2		4.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	1.91	4.3	3.45**	4.1	0.62	4.2	0.69	4.2	0.94
	일용직 임금근로자	4.3		4.4		4.2		4.3		4.3	
	고용주·자영자	4.3		4.3		4.2		4.2		4.2	
	무급가족 종사자	4.2		4.3		4.1		4.1		4.2	
	실업자	4.3		4.4		4.1		4.3		4.2	
	비경제활동인구	4.2		4.2		4.1		4.2		4.2	
직업	관리자·전문가	4.2	1.95	4.3	0.26	4.2	1.07	4.3	3.57*	4.3	2.2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2		4.3		4.2		4.2		4.2	
	숙련 및 기술직	4.3		4.3		4.1		4.1		4.2	
	단순노무 종사자	4.3		4.3		4.2		4.3		4.3	
직업 안정성	정규직	4.2	4.55*	4.3	0.71	4.1	4.50*	4.2	0.01	4.2	0.05
	비정규직	4.3		4.4		4.2		4.3		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	9.65***	4.3	2.89	4.1	7.39***	4.2	1.50	4.2	1.37
	중도적	4.2		4.3		4.2		4.2		4.2	
	진보적	4.3		4.3		4.2		4.3		4.2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7		3.7		3.7		3.7		3.6	
성별	남	3.6	0.34	3.7	1.87	3.7	0.04	3.7	0.14	3.5	1.93
	여	3.7		3.7		3.7		3.8		3.6	
연령대	20대 이하	3.7	9.30***	3.8	6.75***	3.7	2.06	3.8	0.79	3.5	3.03*
	30대	3.7		3.8		3.7		3.7		3.5	
	40대	3.8		3.8		3.7		3.8		3.6	
	50대	3.6		3.7		3.7		3.7		3.6	
	60대	3.5		3.5		3.6		3.7		3.5	
학력	중졸 이하	3.6	11.47***	3.6	9.07***	3.7	0.80	3.7	1.33	3.6	0.60
	고졸	3.7		3.7		3.7		3.8		3.5	
	대졸 이상	3.7		3.7		3.7		3.7		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	5.63***	3.7	1.22	3.7	0.48	3.9	2.81*	3.6	1.28
	200만 원대	3.7		3.7		3.7		3.8		3.6	
	300만 원대	3.8		3.8		3.7		3.7		3.5	
	400만 원대	3.6		3.7		3.7		3.7		3.6	
	500만 원 이상	3.7		3.7		3.7		3.7		3.5	
주요직 소득 계층	하층	3.7	1.91	3.8	13.58***	3.8	5.65***	4.0	17.22***	3.7	14.37***
	중하층	3.7		3.8		3.8		3.8		3.6	
	중간층	3.7		3.6		3.6		3.7		3.5	
	중상층(상층)	3.3		3.5		3.6		3.5		3.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임용근로자	3.7	1.15**	3.7	4.03	3.7	0.47	3.7	2.04*	3.6	1.55
	임시·일용직·근로자	3.7		3.8		3.7		3.8		3.6	
	고용주·자영자	3.7		3.6		3.7		3.7		3.5	
	무급가족 종사자	3.5		3.9		3.6		3.5		3.4	
	실업자	3.7		3.9		3.8		3.8		3.7	
	비경제활동인구	3.6		3.6		3.7		3.8		3.5	
직업	관리자·전문가	3.8	3.46**	3.8	5.45	3.8	0.96	3.8	1.66	3.6	2.5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		3.8		3.7		3.7		3.6	
	숙련 및 기술직	3.7		3.7		3.7		3.7		3.5	
	단순노무 종사자	3.7		3.6		3.7		3.8		3.6	
직업 안정성	정규직	3.7	1.21	3.8	0.49	3.7	0.12	3.7	0.69	3.6	0.71
	비정규직	3.7		3.7		3.7		3.8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15.97***	3.7	9.77***	3.6	4.96**	3.6	4.91**	3.7	4.64**
	중도적	3.7		3.7		3.7		3.7		3.5	
	진보적	3.8		3.8		3.8		3.8		3.6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6		3.5		3.6		3.6		3.5	
성별	남	3.6	4.61*	3.5	0.86	3.6	1.72	3.5	0.00	3.5	2.18
	여	3.6		3.5		3.5		3.6		3.5	
연령대	20대 이하	3.6	3.60*	3.5	1.81	3.6	3.57*	3.6	1.73	3.5	0.64
	30대	3.6		3.5		3.6		3.5		3.4	
	40대	3.7		3.5		3.6		3.6		3.5	
	50대	3.5		3.5		3.5		3.6		3.5	
	60대	3.6		3.4		3.5		3.5		3.4	
학력	중졸 이하	3.5	4.01*	3.5	2.78	3.5	0.57	3.6	0.86	3.5	3.32*
	고졸	3.6		3.5		3.6		3.6		3.5	
	대졸 이상	3.6		3.5		3.6		3.5		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	0.55	3.5	1.89	3.6	1.34	3.6	0.43	3.6	8.91***
	200만 원대	3.6		3.5		3.5		3.5		3.5	
	300만 원대	3.7		3.5		3.5		3.6		3.5	
	400만 원대	3.6		3.5		3.6		3.5		3.4	
	500만 원 이상	3.5		3.4		3.5		3.5		3.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7	3.10*	3.6	10.20***	3.6	3.94***	3.7	5.87***	3.7	5.56***
	중하층	3.6		3.5		3.6		3.6		3.5	
	중간층	3.6		3.4		3.5		3.5		3.4	
	중상층(상층)	3.5		3.4		3.5		3.5		3.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	5.25***	3.5	8.49**	3.6	3.46***	3.5	6.47***	3.5	4.16**
	임시·일용직 근로자	3.6		3.6		3.6		3.7		3.6	
	고용주·자영자	3.5		3.4		3.5		3.4		3.5	
	무급가족 종사자	3.2		3.6		3.4		3.3		3.4	
	실업자	3.8		3.9		3.6		3.8		3.8	
	비경제활동인구	3.6		3.4		3.5		3.6		3.4	
직업	관리자·전문가	3.7	2.35	3.5	0.82	3.7	1.79	3.7	5.82***	3.5	9.5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		3.5		3.5		3.5		3.5	
	숙련 및 기술직	3.6		3.5		3.5		3.5		3.5	
	단순노무 종사자	3.6		3.6		3.5		3.7		3.6	
직업 안정성	정규직	3.6	1.50	3.5	1.11	3.6	0.00	3.6	1.61	3.5	5.20**
	비정규직	3.6		3.6		3.6		3.6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12.90***	3.4	4.83**	3.5	6.45**	3.5	6.79**	3.4	4.63*
	중도적	3.6		3.5		3.6		3.6		3.5	
	진보적	3.7		3.5		3.6		3.6		3.5	

주: 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7		2.7		2.8		2.7		2.8	
성별	남	2.7	0.19	2.7	1.08	2.8	2.16	2.7	0.49	2.7	1.00
	여	2.6		2.7		2.9		2.7		2.8	
연령대	20대 이하	2.7	0.70	2.6	1.78	2.7	2.97*	2.7	1.57	2.7	2.18
	30대	2.7		2.7		2.8		2.7		2.7	
	40대	2.7		2.6		2.8		2.7		2.7	
	50대	2.7		2.7		3.0		2.7		2.9	
	60대	2.7		2.7		2.9		2.6		2.8	
학력	중졸 이하	2.6	0.58	2.7	1.36	2.8	0.11	2.6	1.13	2.7	0.64
	고졸	2.7		2.7		2.9		2.7		2.8	
	대졸 이상	2.7		2.6		2.8		2.7		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2.51*	2.7	0.42	2.8	1.50	2.5	4.46***	2.6	3.32*
	200만 원대	2.7		2.7		2.8		2.7		2.7	
	300만 원대	2.7		2.6		2.8		2.7		2.8	
	400만 원대	2.6		2.7		2.9		2.7		2.8	
	500만 원 이상	2.8		2.7		2.8		2.7		2.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7	0.84	2.6	3.61* *	2.7	1.75	2.4	6.46***	2.5	8.91***
	중하층	2.6		2.7		2.8		2.7		2.8	
	중간층	2.7		2.7		2.9		2.7		2.8	
	중상층(상층)	2.8		2.7		2.9		2.8		2.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1.33	2.7	3.92* *	2.8	2.48*	2.7	2.36*	2.7	5.56***
	임시·일용직 근로자	2.7		2.6		2.9		2.6		2.8	
	고용주·자영자	2.7		2.8		2.9		2.7		2.8	
	무급가족 종사자	2.8		3.0		3.1		2.9		2.9	
	실업자	2.6		2.4		2.5		2.5		2.6	
	비경제활동인구	2.6		2.6		2.8		2.6		2.8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5.94***	2.5	2.36	2.8	1.32	2.7	3.50*	2.6	4.16**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2.8		2.7		2.9		2.7		2.8	
	숙련 및 기술직	2.7		2.7		2.9		2.8		2.7	
	단순노무 종사자	2.6		2.7		2.9		2.5		2.7	
직업 안정성	정규직	2.7	0.81	2.7	0.35	2.9	0.69	2.7	0.26	2.7	9.53**
	비정규직	2.7		2.6		2.8		2.6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	7.64***	2.8	21.66* **	2.9	17.13***	2.8	4.41*	2.9	5.20**
	중도적	2.7		2.7		2.9		2.7		2.7	
	진보적	2.5		2.5		2.7		2.6		2.7	

주: 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5〉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수준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0		3.1		3.0		2.9	
성별	남	3.0	0.04	3.1	0.32	3.0	4.57*	2.9	1.74
	여	3.0		3.1		3.0		2.9	
연령대	20대 이하	3.0	2.34	3.1	8.61***	2.9	3.66**	2.9	3.92**
	30대	3.0		3.2		3.0		3.0	
	40대	3.1		3.1		3.0		2.9	
	50대	3.0		3.1		3.0		2.9	
	60대	3.0		3.0		3.0		2.9	
학력	중졸 이하	3.0	5.52**	3.0	11.96***	3.0	0.70	2.9	1.29
	고졸	3.0		3.1		3.0		2.9	
	대졸 이상	3.1		3.1		3.0		2.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0.98	3.0	2.96*	3.0	0.11	2.9	0.19
	200만 원대	3.1		3.1		3.0		2.9	
	300만 원대	3.0		3.1		3.0		2.9	
	400만 원대	3.0		3.1		3.0		2.9	
	500만 원 이상	3.1		3.1		3.0		2.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0	0.88	3.2	5.52***	3.2	17.33***	3.0	12.22***
	중하층	3.0		3.1		3.0		2.9	
	중간층	3.0		3.0		2.9		2.9	
	중상층(상층)	3.1		3.0		2.9		2.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근근로자	3.0	1.84	3.1	1.10	3.0	2.68*	2.9	1.78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0		2.9	
	고용주·자영자	3.0		3.1		3.0		2.9	
	무급가족 종사자	3.0		3.0		2.9		2.8	
	실업자	3.1		3.1		3.1		2.8	
	비경제활동인구	3.0		3.1		3.0		2.9	
직업	관리자·전문가	3.0	0.31	3.1	1.88	3.0	2.70*	3.0	1.1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0		3.1		3.0		2.9	
	숙련 및 기술직	3.1		3.0		2.9		2.9	
	단순노무 종사자	3.0		3.0		3.0		2.9	
직업 안정성	정규직	3.0	0.41	3.1	0.01	3.0	0.50	2.9	0.05
	비정규직	3.0		3.1		3.0		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	3.02*	3.0	3.81*	3.0	7.66***	2.9	0.17
	중도적	3.0		3.1		3.0		2.9	
	진보적	3.1		3.1		3.0		2.9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1		3.1		3.1		3.1	
성별	남	3.0	3.1	0.87	3.1	0.01	3.1	0.65
	여	3.1	3.1		3.1		3.1	
연령대	20대 이하	3.1	3.1	9.23***	3.1	3.60**	3.1	1.70
	30대	3.0	3.1		3.2		3.2	
	40대	3.0	3.1		3.1		3.1	
	50대	3.1	3.1		3.0		3.0	
	60대	3.0	3.0		3.0		3.1	
학력	중졸 이하	3.0	3.0	17.39***	3.0	3.64*	3.1	2.02
	고졸	3.0	3.1		3.1		3.1	
	대졸 이상	3.1	3.1		3.1		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3.0	5.63***	3.0	1.96*	3.1	0.29
	200만 원대	3.0	3.1		3.1		3.1	
	300만 원대	3.0	3.1		3.1		3.1	
	400만 원대	3.1	3.1		3.1		3.1	
	500만 원 이상	3.1	3.1		3.1		3.1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0	3.1	0.95	3.3	13.82***	3.2	5.25***
	중하층	3.1	3.1		3.1		3.1	
	중간층	3.0	3.0		3.0		3.0	
	중상층(상층)	3.0	3.0		3.1		3.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	3.1	2.10	3.1	0.46	3.1	1.05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1		3.1	
	고용주·자영자	3.0	3.0		3.0		3.1	
	무급가족 종사자	3.0	2.9		3.1		3.1	
	실업자	3.1	3.1		3.1		3.1	
	비경제활동인구	3.1	3.1		3.1		3.1	
직업	관리자·전문가	3.0	3.1	3.01*	3.1	1.00	3.2	0.9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0	3.1		3.1		3.1	
	숙련 및 기술직	3.0	3.0		3.0		3.1	
	단순노무 종사자	3.1	3.0		3.1		3.1	
직업 안정성	정규직	3.0	3.1	0.16	3.1	0.11	3.1	0.01
	비정규직	3.1	3.1		3.1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	3.0	1.93	3.1	2.03	3.1	0.78
	중도적	3.0	3.1		3.1		3.1	
	진보적	3.1	3.1		3.1		3.1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6		2.6		2.6	
성별	남	2.6	2.12	2.6	0.58	2.6	1.51	2.6	0.38
	여	2.6		2.6		2.6		2.5	
연령대	20대 이하	2.6	4.35**	2.6	5.41***	2.6	4.93***	2.6	6.98***
	30대	2.6		2.7		2.6		2.7	
	40대	2.7		2.7		2.6		2.5	
	50대	2.6		2.6		2.6		2.6	
	60대	2.6		2.6		2.5		2.5	
학력	중졸 이하	2.6	5.48**	2.5	16.69***	2.6	3.73*	2.5	8.31***
	고졸	2.6		2.6		2.6		2.6	
	대졸 이상	2.6		2.7		2.6		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1.34	2.6	1.79	2.6	1.15	2.6	1.94
	200만 원대	2.6		2.6		2.6		2.5	
	300만 원대	2.6		2.6		2.6		2.5	
	400만 원대	2.6		2.7		2.6		2.6	
	500만 원 이상	2.6		2.7		2.6		2.6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7	1.72	2.7	0.92	2.8	15.47***	2.6	4.83**
	중하층	2.6		2.7		2.6		2.6	
	중간층	2.6		2.6		2.5		2.5	
	중상층(상층)	2.5		2.6		2.6		2.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	1.29	2.6	2.17	2.6	7.65***	2.6	3.01*
	임사·일용직 근로자	2.6		2.7		2.7		2.6	
	고용주·자영자	2.6		2.6		2.6		2.5	
	무급가족 종사자	2.5		2.4		2.3		2.3	
	실업자	2.6		2.7		2.8		2.7	
	비경제활동인구	2.6		2.6		2.6		2.5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0.56	2.7	7.61***	2.7	9.77***	2.6	3.98**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2.6		2.7		2.6		2.5	
	숙련 및 기술직	2.6		2.5		2.5		2.5	
	단순노무 종사자	2.6		2.6		2.6		2.6	
직업 안정성	정규직	2.5	0.34	2.6	0.43	2.6	8.07**	2.6	0.35
	비정규직	2.6		2.7		2.7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	5.18**	2.6	3.48*	2.6	6.36**	2.6	2.09
	중도적	2.6		2.6		2.6		2.5	
	진보적	2.6		2.7		2.7		2.6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1		3.1		3.1		3.1	
성별	남	3.1	5.43*	3.1	1.10	3.1	3.03	3.1	1.05
	여	3.1		3.1		3.1		3.0	
연령대	20대 이하	3.0	6.23***	3.1	4.21**	3.1	4.28**	3.0	5.08***
	30대	3.1		3.1		3.2		3.2	
	40대	3.2		3.1		3.2		3.1	
	50대	3.1		3.2		3.1		3.0	
	60대	3.1		3.1		3.1		3.0	
학력	중졸 이하	3.1	1.90	3.0	11.23***	3.1	8.25***	3.0	8.75***
	고졸	3.1		3.1		3.1		3.1	
	대졸 이상	3.1		3.2		3.1		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2.82*	3.1	3.00*	3.0	7.29***	3.0	1.90
	200만 원대	3.1		3.1		3.1		3.0	
	300만 원대	3.1		3.1		3.2		3.1	
	400만 원대	3.2		3.1		3.1		3.0	
	500만 원 이상	3.1		3.1		3.1		3.1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1	0.28	3.1	0.21	3.2	1.79	3.1	0.90
	중하층	3.1		3.1		3.1		3.1	
	중간층	3.1		3.1		3.1		3.0	
	중상층(상층)	3.0		3.1		3.1		3.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	2.54*	3.1	1.31	3.1	0.58	3.1	1.33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1		3.1	
	고용주·자영자	3.1		3.1		3.2		3.1	
	무급가족 종사자	3.1		2.9		3.1		3.0	
	실업자	3.1		3.1		3.2		3.0	
	비경제활동인구	3.1		3.1		3.1		3.0	
직업	관리자·전문가	3.1	5.69***	3.1	1.64	3.2	0.92	3.1	1.77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3.1		3.1		3.1		3.1	
	숙련 및 기술직	3.2		3.0		3.1		3.0	
	단순노무 종사자	3.0		3.1		3.1		3.1	
직업 안정성	정규직	3.1	0.00	3.1	0.07	3.1	0.46	3.0	0.01
	비정규직	3.1		3.1		3.1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	0.94	3.1	0.83	3.1	0.27	3.0	1.39
	중도적	3.1		3.1		3.1		3.0	
	진보적	3.1		3.1		3.1		3.1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9〉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7		2.7		2.7		2.6	
성별	남	2.7	1.63	2.8	1.89	2.7	0.39	2.5	0.18
	여	2.7		2.7		2.7		2.6	
연령대	20대 이하	2.5	5.89***	2.7	1.96	2.6	1.59	2.5	1.64
	30대	2.6		2.8		2.7		2.6	
	40대	2.8		2.8		2.7		2.6	
	50대	2.7		2.8		2.6		2.6	
	60대	2.7		2.7		2.7		2.5	
학력	중졸 이하	2.7	0.47	2.8	0.88	2.7	0.48	2.5	3.14
	고졸	2.7		2.7		2.7		2.6	
	대졸 이상	2.7		2.8		2.7		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	1.41	2.8	0.50	2.7	0.30	2.5	1.04
	200만 원대	2.7		2.8		2.7		2.5	
	300만 원대	2.8		2.7		2.7		2.6	
	400만 원대	2.7		2.8		2.7		2.5	
	500만 원 이상	2.6		2.7		2.6		2.6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7	0.89	2.8	4.47***	2.8	10.28***	2.5	0.73
	중하층	2.7		2.8		2.7		2.6	
	중간층	2.6		2.7		2.6		2.5	
	중상층(상층)	2.7		2.7		2.8		2.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0.49	2.8	0.23	2.6	4.67***	2.5	1.07
	임시·일용직 근로자	2.7		2.7		2.8		2.6	
	고용주·자영자	2.7		2.8		2.7		2.6	
	무급가족 종사자	2.8		2.6		2.5		2.7	
	실업자	2.6		2.7		2.8		2.7	
	비경제활동인구	2.7		2.7		2.7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1.42	2.8	0.46	2.8	2.23	2.5	1.8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		2.8		2.7		2.6	
	숙련 및 기술직	2.8		2.8		2.7		2.5	
	단순무 종사자	2.7		2.7		2.7		2.6	
직업 안정성	정규직	2.7	0.78	2.8	0.03	2.6	9.25**	2.5	0.92
	비정규직	2.7		2.7		2.8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	0.28	2.8	3.71*	2.7	1.66	2.7	6.12**
	중도적	2.6		2.7		2.6		2.5	
	진보적	2.7		2.8		2.7		2.5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2		3.1		3.3		3.3	
성별	남	3.2	6.63*	3.2	4.15*	3.3	4.23*	3.3	0.22
	여	3.2		3.1		3.2		3.3	
연령대	20대 이하	3.2	4.43**	3.1	10.96***	3.3	1.90	3.3	2.39
	30대	3.2		3.2		3.3		3.4	
	40대	3.2		3.2		3.3		3.3	
	50대	3.2		3.2		3.2		3.4	
	60대	3.1		3.0		3.2		3.3	
학력	중졸 이하	3.1	16.62***	3.0	17.45***	3.2	5.58**	3.2	12.31***
	고졸	3.2		3.1		3.3		3.4	
	대졸 이상	3.2		3.2		3.3		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1	9.77***	3.0	8.08***	3.2	1.28	3.2	1.91
	200만 원대	3.1		3.1		3.3		3.4	
	300만 원대	3.2		3.2		3.3		3.4	
	400만 원대	3.3		3.2		3.3		3.3	
	500만 원 이상	3.2		3.2		3.3		3.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2	1.54	3.1	0.92	3.3	1.08	3.3	1.43
	중하층	3.2		3.2		3.2		3.4	
	중간층	3.1		3.1		3.3		3.3	
	중상층(상층)	3.2		3.2		3.4		3.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	1.58	3.1	1.64	3.3	1.02	3.3	1.41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2		3.4	
	고용주·자영자	3.2		3.2		3.3		3.4	
	무급가족 종사자	3.2		3.0		3.3		3.4	
	실업자	3.2		3.3		3.3		3.2	
	비경제활동인구	3.2		3.1		3.3		3.3	
직업	관리자·전문가	3.2	2.12	3.3	5.86***	3.3	0.42	3.5	1.5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		3.1		3.2		3.3	
	숙련 및 기술직	3.2		3.1		3.3		3.4	
	단순노무 종사자	3.1		3.0		3.2		3.4	
직업 안정성	정규직	3.2	1.59	3.1	1.09	3.3	1.96	3.3	0.15
	비정규직	3.2		3.1		3.2		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	8.50***	3.1	1.06	3.3	2.45	3.4	0.34
	중도적	3.2		3.1		3.2		3.3	
	진보적	3.2		3.2		3.3		3.4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1〉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구분		2014		2010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9		2.7		2.7		2.7	
성별	남	2.9	0.23	2.7	0.48	2.7	0.16	2.8	0.00
	여	2.9		2.7		2.7		2.7	
연령대	20대 이하	2.9	5.07***	2.7	5.15***	2.7	1.77	2.7	2.80*
	30대	2.9		2.7		2.8		2.8	
	40대	3.0		2.7		2.6		2.8	
	50대	2.9		2.7		2.6		2.8	
	60대	2.8		2.6		2.7		2.7	
학력	중졸 이하	2.8	12.35***	2.6	11.70***	2.6	3.66*	2.6	11.41***
	고졸	2.9		2.7		2.6		2.7	
	대졸 이상	3.0		2.8		2.7		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	7.40***	2.6	3.50**	2.6	0.50	2.7	0.81
	200만 원대	2.9		2.7		2.7		2.7	
	300만 원대	3.0		2.7		2.6		2.8	
	400만 원대	3.0		2.7		2.7		2.7	
	500만 원 이상	2.9		2.7		2.7		2.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8	2.99*	2.7	0.35	2.7	3.28*	2.6	0.21
	중하층	2.9		2.7		2.6		2.7	
	중간층	2.9		2.7		2.7		2.8	
	중상층(상층)	3.0		2.7		2.8		2.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	2.88*	2.7	0.80	2.6	8.74***	2.8	0.97
	임시·일용직 근로자	2.8		2.7		2.7		2.8	
	고용주·자영자	2.9		2.7		2.7		2.7	
	무급가족 종사자	3.0		2.6		2.2		2.7	
	실업자	3.1		2.7		2.7		2.8	
	비경제활동인구	2.9		2.7		2.7		2.7	
직업	관리자·전문가	2.9	0.90	2.8	4.94**	2.7	6.42***	2.9	3.5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9		2.7		2.7		2.8	
	숙련 및 기술직	2.9		2.6		2.5		2.7	
	단순무 종사자	2.8		2.6		2.5		2.7	
직업 안정성	정규직	2.9	9.08**	2.8	2.31	2.6	0.26	2.8	0.28
	비정규직	2.8		2.6		2.6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	4.60*	2.7	1.03	2.6	1.23	2.8	0.24
	중도적	2.9		2.7		2.7		2.7	
	진보적	2.9		2.7		2.7		2.7	

주: 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2〉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구분		2014		2016		2017		2018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5		2.5		2.6	
성별	남	2.6	1.73	2.5	0.85	2.5	0.89	2.6	0.05
	여	2.6		2.5		2.6		2.6	
연령대	20대 이하	2.6	6.49***	2.6	4.39**	2.5	3.80**	2.5	4.35**
	30대	2.5		2.5		2.6		2.6	
	40대	2.6		2.5		2.6		2.6	
	50대	2.6		2.5		2.5		2.5	
	60대	2.5		2.4		2.4		2.5	
학력	중졸 이하	2.5	7.86***	2.5	10.02***	2.5	5.69**	2.5	10.37***
	고졸	2.6		2.5		2.5		2.5	
	대졸 이상	2.6		2.6		2.6		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	2.72*	2.5	0.75	2.5	3.94**	2.5	1.33
	200만 원대	2.6		2.5		2.5		2.5	
	300만 원대	2.6		2.5		2.5		2.5	
	400만 원대	2.6		2.5		2.6		2.6	
	500만 원 이상	2.5		2.6		2.6		2.6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6	0.65	2.5	0.43	2.6	2.32	2.6	1.96
	중하층	2.6		2.5		2.5		2.6	
	중간층	2.6		2.5		2.5		2.5	
	중상층(상층)	2.5		2.5		2.6		2.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임용근로자	2.5	2.25*	2.6	2.17	2.5	0.68	2.6	3.70**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2.5		2.5		2.6	
	고용주·자영자	2.6		2.5		2.5		2.5	
	무급가족종사자	2.6		2.4		2.5		2.5	
	실업자	2.9		2.5		2.6		2.6	
	비경제활동인구	2.6		2.5		2.5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1.40	2.7	6.59***	2.7	3.69*	2.7	3.78*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2.6		2.6		2.6		2.5	
	숙련 및 기술직	2.6		2.5		2.4		2.5	
	단순노무 종사자	2.5		2.4		2.5		2.6	
직업 안정성	정규직	2.5	1.19	2.6	0.87	2.5	1.80	2.6	2.21
	비정규직	2.6		2.5		2.5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	5.23**	2.5	0.96	2.5	0.44	2.6	0.18
	중도적	2.5		2.5		2.5		2.5	
	진보적	2.6		2.6		2.6		2.6	

주: 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